

평화교육 자료집 2

여성평화아카데미

2000년

강좌 자료집

(사)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후원: 한국기독교사회발전협회

평화교육 자료집 2

여성평화아카데미

2000년

강좌 자료집

(사)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후원: 한국기독교사회발전협회



글 차례

여성평화아카데미 2000 강좌 프로그램	5
21세기 평화의 문을 열며: 평화개념과 평화철학 (김윤옥)	7
세계화와 군사주의 (임철수)	20
한반도 국제정세에서 본 남북정상회담 (석통암)	39
평화의 관점에서 통일운동 보기 (김철수)	71
평화의 프리즘을 통해 본 남북관계 (조민)	83
우리 몸 속의 반공주의 회로판 읽기 (권혁법)	94
여성과 군사주의의 관계를 중심으로 (권인숙)	107
한국 여성평화운동의 과제와 전망 (정현택)	115
일상의 반평화와 여성의 삶 (김현미)	131
기저촌 여성과 평화 (김현선)	136
주한미군, 여성에게 무엇인가? (색올떡)	141
평화와 젠더: 일상의 공포 정치, 여성에 대한 폭력 (정희진)	150
평화운동과 인권운동의 연대 (김정수)	182
평화를 단돈다는 것 (정유진)	191
빠르기가 갈요하는 반평화와 억압 (김은영)	197
평화적인 갈등해결을 위한 방법	202

여성평화아카데미 2000 강좌 프로그램

<참>

◆ 일시: 2000년 4월 27일~7월 6일, 매주 목요일 저녁 7시~9시

◆ 장소: 여성사회교육원 청산교육장 (여성평화회의실 옆 천성빌딩 3층)

주 제	회 (날짜)	강 좌	강 사
평화 '평화'를 말하는가 ?	1 (4/27)	21세기 평화의 문을 열다: 평화제정과 평화철학	김 춘 욱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공동대표)
	2 (5/18)	세계평화운동의 발전취	이 집 현 숙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공동대표)
평화 와 통일	3 (5/4)	지구화와 세계군사화	김 진 권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4 (5/25)	동북아시아 평화와 한반도 미래	서 동 만 (외교인보연구원 교수)
	5 (6/1)	'평화'의 관점에서 통일운동 보기	김 창 수 (자주평화통일인족회의 정책실장)
평화 와 인권	6 (6/8)	평화운동과 인권운동의 만남	김 정 수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정책위원장, 아시아기독교여성 문화연구원 연구원)
	7 (6/29)	반평화 피해자의 목소리: 인권에 대한 성찰	장 유 진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사무국장)
평화 와 여성	8 (6/15)	군사주의, 그리고 여성	권 인 숙 (Clark University 여성학 박사과정)
	9 (6/22)	일상의 반평화와 여성의 삶	김 현 미 (연세대 사회학과 강사)
	10 (7/6)	한국 여성평화운동은 어디로 (평화단체 활동가들과 대담)	정 현 배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성균관대 사회과 교수) 김 현 선 (새출터 대표)

<가을>

♣ 일시: 2000년 11월 23일(목)~25일(토)

♣ 장소: 수유리 봉도 청소년수련원

“여성·평화·그리고 일상”

시간	11월 23일(목)	11월 24일(금)	11월 25일(토)
8:00-8:30	여성평화아카데미로 오는 길	기지개 펴기	일찍 일어난 사람 산책하기
8:30-10:00		아침 먹기	아침 먹기
10:00-11:00		조한미군, 여성에게 무엇인가 김현진(새움터 대표)	우리 안의 반공주의 회로한 빛기 권혁병(대전대학교 교수)
11:00-12:00		점심식사하 쉬기	같은! 권조와 해결의 길을 찾아서 김필수(평화여성회 교육위원)
1:00-2:00	등록/ 일정검토	평화와 선택: 일상의 공포정치, 여성에 대한 폭력 정희진 (여성상인인권연구회원)	맛있는 점심시간
2:00-3:00	특강, 평화의 프리즘을 통해 본 남북관계		모듬별 칸타소리아 발표
3:00-4:00	조민(통일연구원 교수)	여성평화의 눈으로 영화 통해 보기	종합토론 및 평가
4:00-5:00	영화로 말하는 평화이야기		
5:00-6:00		휴식과 저녁식사	오늘을 돌아보며 나는야 집으로 간다!
6:00-7:00	여유있게 저녁 먹기		
7:00-8:00	여는 강의, 여성과 목소리로 평화 말하기	'빠르게'가 강조하는 반평화와 억압 김은경(참여여성공간)	
8:00-9:00	이길형숙 (영화여성회 공동대표)		
9:00-10:00	어울마당	모듬별 합조 시간 (칸타소리아)	
10:00-11:00			
11:00	잠자기	잠자기	

21세기 평화의 문을 열며: 평화개념과 평화철학

김 윤 옥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공동대표)

1. 들어가는 말

어느 평화학자의 말이 “평화연구나 운동하는 데 특별한 준비도 예비 지식도 필요 없다. 공감에서 우러나오는 타인에 대한 관심.. 아마도 이것이 제일 필요한 것이다”라고 했다. 이렇게 본다면 평화 만들기란 가장 인간다운 인간 행위이며 바로 나 자신의 문제이기도 한 것이다.

대체로 세상에는 크게 보아 네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 1) 지금 그대로가 만족함으로 세상을 별로 바꾸고 싶지 않는 사람, 2) 자기에게 더 유리하도록 세상을 바꾸고 싶은 사람, 3) 타당한 일장에 놓인 사람들을 위해서 세상을 바꾸고 싶은 사람, 4) 세상이란 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 체념하고 있는 사람. 여러분은 어느 타입인가?

그러나 일은 이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다. 한 사람 안에 이 네 가지가 보통 혼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인간을 괴롭히는 다양한 문제가 있다. 더욱이 이들의 대부분이 상호 얽혀서 지구적 문제로 연관되며 부분적 해결조차도 쉽지 않다. 이것이 지구화의 실태이다. 요즘 지구화는 불가피한 과정이라며 무력감에 빠져서 체념하는 사람, 반대로 자기만은 어떻게 잘 살아남아 보려고 헤엄치며 회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기주의, 일국주의가 우세한 가치로 되어간다.

예를 들면 쓰레기 문제다. 편리한 생활의 결과가 대량의 플라스틱 쓰레기를 낳고 버릴 곳은 이제 어디에도 없다. 소각한다 해도 다이옥신 오염이 우려를 습격한다. 환경호르몬으로서 다이옥신 종류가 작용할 때 과거 독물농도의

100만 분의 1 정도의 미량이라도 미래 세대에 대한 걱정은 남는다. 재생? 한국의 제정으로는 무리일 것이다.

현명한 사람들은 인건비가 싼 아시아 어느 나라에 수출할 생각을 한다. 지금처럼 필리핀이나 중국에 폐차 직전 중고차를 가져가면 될 것이다. 환경규제가 아직 느슨한 필리핀이라면 아직 이 정도의 폐차는 달랠 것이고 마지막에 해체된다 해도 낮은 코스트로 재생이 되니 문제가 없다. 산업폐기물의 국외이전은 국제조약으로 규제되어 있지만 중고품이나 재생자원이라면 문제없으니깐.

이것은 실제로 행해지고 있는 일이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은 심각하다. 마닐라에서는 외출 시마다 얼굴을 손수건으로 닦아보면 대기오염으로 찌꺼기 묻는다. 재생되는 것은 돈이 될 물건 뿐으로 폐유나 플라스틱은 그대로 버려진다. 저코스트는 현장노동자의 건강과 주민의 생활환경을 손상함으로써 실현된다. 한국의 60년대 산업공해에 대한 대책 정도가 겨우인 필리핀에서는 환경호르몬은 전혀 문제되지 않으며 극히 미량의 오염을 조사할 측정기계도 거의 없다. 그리고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곳의 하천이나 바다의 오염은 양식 새우 등 수산물품이 되어 우리나라 소비자에게 돌아온다. 물론 현지 사람들에게 대한 해독이 더 심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21세기의 평화’란 무엇일까? 그것은 포스트냉전기의 평화, 지구화 시대의 평화일 것이다. 과거의 개념이나 감각을 재해석하고 현실을 올바르게 이해하며 지금의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는 과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연구와 운동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폭력”이 여기서 Key 개념이 된다. 폭력을 극복하고 사회의 구조적인 변화를 지향하는 방향성을 분명히 가져야 한다.

그리고 평화연구는 평화를 만들어내는 운동과 두 바퀴가 되어 나아간다. 평화연구의 전단은 대학이나 연구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광범위한 평화운동의 현장에 있다. 예를 들면 독립이라는 과제를 앞에 둔 동티모르 해방운동 안에, 또한 세계 각지의 옛 전쟁터에서 허리를 굽혀 대인지뢰를 하나씩 제거하고 있는 사람들의 영위 속에, 또한 전쟁이나 내전에서의 성폭력을 고발하는 여성들의 어려운 싸움 속에, 일본대사관 앞의 수요시위 400회를 넘은 위안부 할머니들 사이에.....

2. 전쟁의 부재에서 폭력의 부재에도

2-1 기아, 공해, 차별로 인한 불평화(peacelessness)

20세기는 세계대전과 전면핵전쟁의 위기의 시대였다. 두 번에 걸친 세계 대전과 핵폭탄의 투하, 냉전하의 핵군비 확장 경쟁. 나아가서 세계각지의 지역분쟁 심각화의 시대이기도 했다. 특히 냉전 하 미소 전면핵전쟁의 위기는 인류사회를 과멸로 몰아갈듯 했다.

평화연구나 평화운동은 이러한 인류의 생존의 위기를 배경으로 성립했고 존재해 왔다. 전쟁이나 분쟁의 방지와 해결이 그 주요한 과제가 되었던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평화의 과제는 전쟁이나 지역분쟁의 해결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물론 전쟁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빼앗기고 무상하고 재산을 잃는다. 그러나 전쟁이 아닌 상태에서도 지구상의 모든 곳에서 영양부족, 의료의 불비, 공해, 전쟁이나 분쟁의 경우에도 교전에 의한 직접적인 사상자수보다 환경파괴나 식량 의약품의 부족으로 간접적으로 희생되는 사람들의 수가 더 많다.

전투가 없이도 기아나 공해나 차별의 화중에서는 아무도 평화를 느껴지 못한다. 전쟁이 비상시, 즉 예외적인 경우라면 그것 이외는 평상시이다. 인류 역사에는 장기에 걸친 전쟁이 많이 있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는 평상시 편이 더 길다. 평상시이지만 평화롭지 못한 상태에 대한 해결, 이것도 평화문제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지게 되었다.

냉전종결후인 오늘날에도 지구를 25회 이상 멸망시킬 수 있는 거대한 핵군비가 아직 철폐되지 않고 있는 이상, 전면핵전쟁의 위기가 끝난 것은 아니다. 1998년 5월 인도와 파키스탄 핵실험의 용수도 지역핵전쟁만이 아니라 중동에 대한 핵확산을 우려하게 만들었다. 핵전쟁은 궁극적인 환경파괴이다. 이에 더하여 자원의 대량소비나 폐기물의 대량배출에 따른 지구환경의 파괴가 인류의 평화와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이것도 우리들의 공통인식이 되어있다.

이렇게 평화의 개념은 시대에 따라 확산되었다. 이러한 이념적 전개에 크

게 공헌한 이는 요한 갈통(Johan Galtung)이다. 요한 갈통은 1969년 오슬로국제평화연구소의 연구지 [평화연구 저널]에다 “폭력, 평화 그리고 평화연구”라는 논문을 발표, 여기서 제기된 것이 폭력에서 평화를 정의 내리는 방법론이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바람직한 것인 평화를 그 바깥의 요소들의 총화라고 단순하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그 반대의 개념에서 정의 내리라는 시도, 그리고 다음에서 보듯이 평화의 반대 개념을 전쟁이나 분쟁이 아니라 폭력으로 놓고, 나아가서 구조적 폭력의 발전으로 폭력을 광범위하게 개념화한데 요한 갈통의 착상의 독특성이 있다. 그러면 요한 갈통의 평화, 폭력개념을 소개하며 검토하기로 하자.

2-2 폭력의 부재로서의 평화

과거에는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나 분쟁이 없는 상태였다. 여기에 대해 요한 갈통은 평화를 폭력의 부재(absence of violence)로 놓고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인간이나 인간집단의 신체적 혹은 정신적인 자기실현의 현상(actual realizations)이 그 사람들의 잠재적인 실현가능성(potential realizations) 이하로 억압당하는 영향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는 폭력이 작용한다. 폭력이란 잠재적 실현성(the potential)과 현실(the actual), 혹은 달성할 수 있었을 것과 현실상태의 격차의 원인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 폭력이란 실현가능성과 현실의 격차를 확대하고 또한 이 격차의 축소를 방해하도록 작용하는 것이다.

아마도 제일 알기 쉬운 예는 수명일 것이다. 80세까지 살 수 있었을 인간이 50세 시점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사살되었다면 실현가능성(80세의 수명)과 현실(50세로 사망)의 격차는 30년간의 수명단축이다. 이것이 폭력으로 일어난 것이 된다.

폭력의 존재나 부재를 설명함에 있어서 요한 갈통은 권력과 지권의 대비를 든다. 18세기 결핵으로 인한 주검은 당시에는 피할 수 없는 것이었음으로 폭력이라고 생각되지 않았다. 그러나 현대에서 의학의 진보로 살아날 수 있는 결핵으로 누군가가 생명을 잃는다면 이것은 앞의 정의에 따라 폭력의 존재를 나타낸다. 제3세계에는 아직도 결핵환자가 많은데 이것은 선진공업국에 비해 의료 위생이나 영양상태가 큰 격차가 있기 때문이다. 이 격차의 원인이 폭력

인 것이다. 지진의 발생은 현시점에서는 피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지진이 피할 수 있는 것이 될 때, 어딘가에서 지진으로 사람이 죽는다면 그러한 격차는 폭력의 결과라고 결론짓게 된다.

2.3 개인에 대해서는 나타낼 수 없는 본래성

실현가능성과 본래성

여기서 요한 갈등의 사고방식의 전제인 “잠재적 실현가능성(potential realizations)”에 대해 검토하자.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실현될지도 모르는 정도의 가능성이 아니다. 인간의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인간집단에 있어서 폭력이 없다면 반드시 실현되었을 도달 상태 (what could have been)이다. 이러한 존재를 요한 갈등은 상정하고 있다.

물리학에서는 위치 에너지를 포텐셜 에너지라고 한다. 예를 들면 그것은 댐에 물이 가득 담긴 상태로 특별한 사고가 없는 한, 저기에 내재하는 낙차와 수량이 발전이라는 작업달성을 보장하고 있다. 이렇게도 확실한 실현가능성이 라면 이것은 오히려 “본래성”이라는 표현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실현가능성에서는 조건이 좋은 경우에만 실현될지도 모른다는 불확실함을 나타낸다고 이해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방해받지 않는 한 실현될 내재적 자원이거나 조건이 구비되어 있어서 훗날 그러한 상태에 도달한다면 그 도달상태는 본래적 모습인 것이며 이런 의미에서 “본래성”이라는 것이다.

본래성에는 영속가능성(sustainability)이라는 의미도 포함된다. 진화 과정을 통하여 인간들은 자연의 순환 속에서 영속되는 유지존속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서 생존해 왔다. 그렇지 않았다면 인류는 벌써 멸절되었을 것이다. 핵개발이나 지구환경의 파괴로 이제는 그러한 멸절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개인과 집단의 본래성

특정의 개인에 대해서 본래적 도달상태, 혹은 본래성의 발현도를 나타내는 것은 실은 아주 곤란하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의 본래 수명을 미리 정확

하게 알 수는 없다. 자칫 잘못하면 운명론의 막다른 골목으로 들어가 버린다. 폭력의 결과인 죽음조차도 전생에서 받은 숙명이라고 설명될 수도 있다. 개인에 대한 본래성의 이해나 그 달성도에는 당연히 심리적 주관적 요소가 크게 작용한다. 그것을 객관적 지표로 나타내는 일은 불가능하다.

본래성이 그 사람의 일생을 통한 최종적 도달상태인지, 생애의 다양한 시점에서의 도달상태를 지시하는지도 문제이다. 일생을 볼 때, 도달했는지 어떤 지 모를 시점, 즉 본인이 살아있을 때 특히 젊은 시절에 장차의 도달상태를 예측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집단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본래성의 지표는 얼마든지 생각될 수 있다. 요한 갈동이 예로 든 객관지표는 평균수명이나 사망률, 질병율과 문명도였다. 즉 요한 갈동은 본래성 혹은 폭력의 영향은 개인이 아니라 집단으로서 관찰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집단의 경우 그 구성원의 본래성의 평균적 발현 기대치로서 국가별의 평균수명이나 유아사망률 등 집단끼리의 비교가 어느 정도 가능해진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개인이 아니라 인간집단에서 본래적 도달상태를 생각해 보기로 한다. 여기서 집단에 대한 포괄적 조사, 특히 건강상태에 대한 역학적 조사의 중요성이 이해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집단에는 각종 공동체, 지역, 도, 시, 구 등 행정구역, 민족, 국가 등을 상정할 수 있다. 나아가서 직업, 나이, 성별 집단 등 다양한 부분집단도 있다.

3. 폭력의 단계의 변화와 본래성

요한 갈동은 본래적 도달상태를 “주어진 지식과 수단으로 달성 가능한 단계”라고 설명한다. 즉 그 시대에 존재하는 최신, 최상의 지식이나 수단을 충분히 동원 함유할 수 있는 집단의 도달한 단계로 생각한다. 앞에서 말한 결핵에 대해 말하자면 그 치료법이나 예방법은 인류전체에는 아직 다 미치지 못하고 있다. 많은 경우 현대사회에서 결핵은 빈곤과 결부되어 있고 이것은 폭력의 하나의 표현이다. 지구적 규모로 보면 본래적 도달상태는 일부 사회의 사람들에게서 멈추고 있는 것이다.

무엇이 폭력인가? 이것은 시대에 따라 다르다. 주어진 지식과 수단은 시

대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세계 어딘가에서 새 지식이나 수단이 생길 때마다 본래적 도달상태의 단계는 변화한다. 인류사회는 앞에서 말한 대로 이미 큰 격차를 안고 있다. 새 지식이나 수단이 전세계 사람들에게 신속하게 공유되지 않는 한, 거기에는 또한 다른 격차가 상승되어 새로운 폭력이 부가된다. 예를 들면 지금은 컴퓨터를 활용하지 못하면 취직하는 데 불리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는데 80년대까지는 이것은 문제로 인식되지 않았다.

4. 집단과 개인에서 본 폭력과 인권

“세계인권선언”은 1948년에 채택되었다. 그 전문의 서두에는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고유한 존엄과 평등으로 양보할 수 없는 권리를 승인하는 것은 세계에서의 자유, 정의 그리고 평화의 기초이다”라고 되어있다. 이 전반부는 국제사회에서 정착된 인권에 대한 정의이다. 고유의 존엄과 평등한 권리란 인간이 그 본래적인 자기 실현가능성을 방해받지 않는다는 표현인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인권의 본질이다. 따라서 폭력은 인권의 침해와 동의어라고 할 수 있다.

‘세계인권선언’에서 말하고 있는 인권은 인류사회를 전체로 두면서도 인간존재의 공동체성에 대한 관점이 충분하지 않다. 인권을 개인에게만 귀속시켜서 생각하는 경향이 짙다. 근래 집단적인 인권으로서의 발전에 대한 위리가 토론되고 있는데, 발전권은 국가의 권리라는 주장도 강하다. 다른 한편 그런 국가들이 인권침해를 하고있다는 모순도 표면화되고 있다.

폭력이 본래성의 발현을 저해하는 원인이라는 정의는 본래성의 발현주체로서의 개인과 집단의 양면을 포함하고 있다. 본래성은 개인에 대해 상정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말했듯이 본래성의 발현에 대한 개인경우의 객관적 검증은 어렵다. 본래적 도달상태의 지표로서는 집단단위의 도달단계로 표시할 수밖에 없다.

개인을 인권주체로 하는 것은 봉건사회의 속박에서 개(個)의 확립을 쟁취해 왔던 서구 근대의 당연한 논리이다. 요한 갈통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본래성이 개인을 주체로 하여 말해지고 있고 개인존중은 극히 중요하다. 그러나 인간은 개인으로만 살 수 없다. 집단 안에서 사회관계에 의해서 정신적으로

로도 물질적으로도 생존이 가능해지는 존재인 것이다.

5. 구조적 폭력과 적극적 병화

5-1 기아는 폭력인가

굶주리는 아이가 겨우 한 그릇의 밥을 얻었다고 하자. 거기에 어른이 와서 힘으로 그 밥그릇을 빼앗는다면 누구의 눈에도 이것은 폭력이라는 것이 보인다. 그러나 보다 널리 보이는 것은 원력에 의한 탈취가 없어도 많은 아이들 손에 그리고 부모들에게도 먹을거리가 없다는 현실이다. 식량부족은 영양불량과 직결하며 아이들의 성장을 저해한다. 심한 경우에는 죽음이라는 결과도 가져온다.

지금까지 세계 각지에서는 빈번히 심각한 기아상태가 있어왔다. 우리 가까이 존재하는 기아문제는 북한의 어린이들이다. 250만 명이 굶어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도 남한의 우리는 산더미 같은 음식쓰레기를 버리고 있다. 정권에 따라서는 굶지 않아도 되는 어린이들이 지금 북한의 막아소에서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있다. 4세 어린이가 2세의 육체를 가지며 이유식이 없어서 단백질이 부족하여 뇌의 생성이 저해된다고 한다. 이러한 구조적 폭력으로 북한 어린이는 지금 단백질 부족으로 인한 뇌 손상이라는 평생이 결정될 폭력을 받고 있다.

밥그릇을 빼앗아서 아이를 죽게 만든 것이 폭력이라면 돈이 없어서 혹은 국가정책이 잘못되어서 밥을 먹지 못한 아이가 병들어서 죽는 것도 폭력이다. 이것은 자연현상은 아니다. 사회의 구조와 밀접히 결부된 폭력이다. 요한 갈통은 이것을 '구조적 폭력'이라고 불렀다.

5-2 구조적 폭력의 발견

요한 갈통은 앞에서 정의한 폭력의 분석을 더 진전시켜서 일반적으로 폭력으로 인식되고 있는 인위적 직접적 폭력 이외에 구조적 간접적 폭력의 존재를 발견했다. 폭력, 즉 실현가능성의 발현을 방해하는 영향에 대해서는 가

해자, 피해자, 영향의 상태라는 3개의 요소가 있다. 거기서 아래의 여섯 가지 유형화가 가능해진다.

- 1) 물리적 혹은 신체적 폭력과 심리적 폭력
- 2) 어떤 행동을 금지하는 제재적 폭력과 그것과는 거꾸로 어떤 행동을 선택적으로 촉진하는 유도(誘導)적 폭력
- 3) 직접적 피해자가 존재하는 폭력과 사회에 대한 시위나 위협처럼 특정 한 피해자가 없는 폭력
- 4) 가해자가 있는 폭력과 가해자 없는 폭력
- 5) 의도적인 폭력과 의도적이지 아닌 폭력
- 6) 관찰할 수 있는 명시적 폭력과 보이지 않는 잠재적 폭력

이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가해자의 존재와 부재이다. 가해자가 있는 폭력을 인위적 혹은 직접적 폭력(personal or direct violence), 행위자가 없는 폭력을 구조적 혹은 간접적 폭력(structural or indirect violence)이라고 한다. 여기서 인위적 폭력이란 고립된 개인에 의한 폭력이라는 의미만이 아니다. 집단의 일원으로서의 조직적 행동이라도 그 폭력을 깊이 살펴보면 직접 손을 쓴 개개인의 행위와 결부된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전쟁은 인위적 폭력(의속적)으로 이해된다.

인위적 폭력의 행위자는 구체적인 개인이나 집단이지만 구조적 폭력에서는 폭력은 구조 안에 편입되어 있어서 불평등한 힘관계로서 또한 그것 때문에 생존기회의 불평등으로서 나타난다. 이러한 불평등을 적차라고 부른다. 적차에는 힘관계, 즉 결정권 내지는 자기선택권의 측면과 물자나 봉사가 얼마나 손에 들어오는가 하는 생활기회나 생존기회의 측면의 양면이 있다. '권력적차'와 '경제적차'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이다.

권력적차와 경제적차는 밀접히 관계가 있다. 대폭적인 소폭적차 때문에 물질의 분배가 불평등하게 된다. 교육기회도 평등하지 않고, 의료도 특정지역이나 계층에 편중된다. 이것은 물자분배의 결정권이 평등하지 않는 문제와 표리일체가 된다. 어느 경우에도 적차란 구조적 폭력의 현상이다. 구조적 폭력은 따라서 자본가나 불건영주에 의한 노동자나 농노의 계급적 착취 역할을

포함할 뿐 아니라 제국주의 국가들의 식민지 수탈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성차별이나 남아프리카의 인종차별을 비롯하여 인종, 성별, 장애 등에 관한 모든 차별도 피차별자의 자기실현을 방해한다. 따라서 사회적 차별도 구조적 폭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조적 폭력이 권력 의사결정권의 불평등으로 나타남으로 소수집단의 권리옹호를 포함한 철저한 민주정치의 실현은 구조적 폭력 극복의 중요한 과제이다. 이렇게 계급의 철폐, 식민지상태나 차별로부터의 해방, 민주정치의 실현 등 인간사회의 구조적 문제의 모두를 구조적 폭력의 극복이라는 과제에 통합하여 생각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격차는 다양한 사회 내부에 존재할 뿐 아니라 사회 상호간에도 있다. 특히 제3세계와 선진공업국을 사이의 거대한 격차는 전제로서 시정할 정조도 보이지 않는다. 이래서 요한 갈동의 구조적 폭력개념은 세계규모의 경제격차 문제에도 미치게 되었다.

5.3 적극적 평화와 소극적 평화

구조적 폭력을 요한 갈동은 또한 사회적 불공정(social injustice)이라고도 표현하고 구조적 폭력의 부재를 적극적 평화(positive peace)로, 그리고 여기에 대해 인위적 폭력의 부재를 소극적 평화(negative peace)라고 개념을 규정하였다. 지금까지 폭력이라면 인위적 직접적 폭력만을 상징해 왔다. 격렬한 기업간 경쟁 안에서 과포사하는 산업노동자를 '犠牲'라고 표현하는 등, 직접적이 아닌 폭력을 폭력이라고 부르는 것은 비유에나 그치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요한 갈동의 구조적 폭력의 발견으로 폭력 개념이 크게 확장된 것이다. 평화는 폭력의 부재임으로 폭력개념의 확장에 따라서 평화개념도 확장되어야 한다.

또한 적극적 평화가 사회적 공정, 혹은 사회정의를 의미하는데서 '정의와 평화'라는 두개의 병렬되던 말이 평화라는 하나의 의미내용을 가진 표현에 통합되었다. 일반적으로 '정의와 평화'라고 할 때의 평화는 소극적 평화를 말하며 여기에 적극적 평화를 합친 것이 요한 갈동이 정의하는 평화이기 때문이다. 그는 또한 소극적 평화에 분쟁연구(conflict research)가 대응하고 적극적 평화에는 발전(개발)연구(development research)가 상호 상당부분 중복부분을

가지면서도 대응한다고 지적한다. 즉 구조적 폭력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개발 발전에 관계된다는 관점이 여기서 열린 것이다.

6. 지속 가능한 시민연대의 사회로

6-1 지구화와 구조적 폭력

구조적 폭력의 존속 강화를 시도하는 세력, 즉 각지의 지배 엘리트들은 개개 분산되어 시민들과 마주하고있는 것이 아니다. 서로 결탁하며 지배체제를 만들고 나아가서 국제적인 지배구조를 형성해 왔다. 구조적 폭력은 직접적 인위적 폭력에 대해 사회구조에 편입되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로 구조적이라고 불리는데 그러한 폭력이 이제는 지구적인 구조가 되어 우리를 덮치고 있다. 미소간 냉전 종결 후, 90년대에 급속히 진척되었던 경제의 지구화는 구소련 제국과 몽구권이나 중국을 포함하여 지구상의 모든 지역사회에 시장경제를 침투해 나가는 것이었다.

70년대 이후 전전된 생산 유통 금융의 세계적 정보 네트워크화가 그 기술적 조건이 되었다. 시장경제에서 사람들은 본래적으로 평등하지 않고 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상품의 가치와 화폐량에 따라서 서열 지어지고, 여기에 지배와 종속의 관계가 나타난다. 97년 후반 이후에 심각한 경제위기에 있는 한국이나 태국, 인도네시아처럼 독립국가도 채무의 반환이 지체되면 정책이나 예산을 독자적으로 결정하지 못하게 되며 차관 수여국이나 IMF, 다국적은행 등 채권자측이 제시하는 구조조정정책에 예이게 된다. 그 결과, 복지예산의 축소나 실업으로 민중이 고통을 받게 되어도 돈이나 물자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선택지는 극히 제한된다.

이러한 지구화된 구조적 폭력을 극복해 가려고 할 때, 그 영위도 지구화된 시민연대가 되지 않을 수 없다. 구체적인 자력경쟁노력 안에서 얼마나 그 것을 의식화할 수 있는지 이 점이 시민들의 미래를 위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지구시민사회가 형성되어야 할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 지구적인 시민연대의 실현활동에는 서로 지원하며 투쟁을 효과적으로 할뿐만 아니라 함께 지구 시민임을 의식화시킬 역할도 있다. 또한 서로가 구조적으로 적대 당했던 원상

에도 눈을 뜨고 그 상황을 변화시킬 계기도 될 것이다.

6-2. 시민연대에 의한 지속사회를 지향하는 것이 평화

인류는 본래 집단이나 사회를 이루며 자연의 순환 안에서 그 일부가 되어 살아 온 존재이다. 본래의 사회는 천천히 변화를 하면서도 그것은 영속 가능한 사회였다. 그리고 “폭력이 본래성을 손상한다”라고 할 때의 본래성의 기본이 이 지속가능성인 것이다.

여기서 ‘지속가능’이란 상정할 수 있는 미래까지 인간사회가 영속 가능성을 의미한다. 개인에게는 자기의 몸, 정신과 사회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며 단 인간은 예외 없이 수명이 있음으로 집단으로서만이 영속가능성을 상정할 의미가 있다.

지구환경의 파괴로 인간사회의 존속이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다는 인식을 배경으로 92년 브라질에서 ‘지구환경 수뇌회의’가 개최된 것을 계기로 널리 사용하게 된 말 ‘영속 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것이 있다. 여기서 영속될 대상은 당연히 인간사회와 그리고 인간사회를 그 일부로 포함하고 그 존속을 지탱해 온 자연의 순환이다. 그러나 경제발전이나 경제성장이 영속을 저할 목적인 듯이 주장하는 이론도 있다. 제한 없는 경제발전이나 경제성장의 추구가 지구규모의 환경위기를 가져오고 인간사회와 자연의 영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는대도 말이다.

20세기 후반부터 다양한 부조리한 고통에 대응하여 발족한 시민운동의 대다수가 이제는 NGO나 NPO(Non-Profit Organization)로서 자기인식을 가지며 시민사회의 중요한 담지자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의 국제적 네트워크도 성장하고 있다. 예로 대인지뢰전면금지조약으로 결선했던 지뢰금지 국제캠페인(ICBL:International Campaign to Ban Landmines’ 1997년도 노벨 평화상 수상)은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폭력의 극복을 위한 다양한 시민운동의 폭이 세계적으로 연대할 때 지구화된 구조적 폭력의 감소에 큰 힘이 될 것이며 평화는 그런 곳에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분쟁을 해결하던지 미연에 방지하는 소극적 평화만이 아니라 긍정하고 영속 가능한 적극적 평화를 만들어

나갈 현실적인 방법이기에 때문이다.

나아가서 세계의 유일한 민족분단이라는 구조적 폭력 아래에 있는 우리가 평화행동을 생각할 때, 이와 같은 평화연구와 평화운동의 틀을 적용시키며 남북정상회담에서 경제협력에 이르기까지 시민들의 감시와 참여와 연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과제가 있다.

세계화와 군사주의

임 필 수 (사회진보연대 정책부장)

1. 미국의 '세계화' 전략: 금융세계화란 무엇인가
2. 세계화와 '신 종세력 부침서'?
3. 90년대 미국의 대외정책: '재편한 헤게모니'
4. 제3세계의 전략: Delinking Strategy vs Separatism?

1. 미국의 '세계화' 전략: '금융세계화'란 무엇인가

1.1 신자유주의와 금융세계화

□ '신자유주의'(neoliberalism)는 '금융세계화'(financial globalization)의 전략/정책/이데올로기를 규정하기 위해 전세계적으로 대부분의 국가들이 공유하는 용어법

□ 1970년대 미국 자본주의의 위기

- 서유럽과 일본의 산업적 잠재력이 재건되고, 기술적·조직적으로 미국 격 표준을 따를 정도로 되자, 1950년대와 1960년대의 거대한 팽창이 근거하고 있던 자본축적의 주요 중심들 사이의 협력적 관계는 강도 높은 상호 경쟁으로 대체됨.

- 또한 베트남 전쟁으로 인한 전쟁비용의 급증은 1968년부터 미국의 국제

수지 및 재정지출에 대규모의 적자를 발생시키고 달러의 위기를 야기함.

- 노동과 에너지의 투입가격 상승: 노동생산성 보다 빠른 임금상승, 오일 쇼크

- 이윤율의 저하와 수익성의 저하는 심화, 이를 만회하려는 이윤률의 확장 전략도 일정한 한계에 부딪침.

□ 금융세계화의 대응

- 지난 20여 년간 지속되어온 축적의 위기는 이러한 범인 자본주의의 구조를 금융적 축적에 걸맞은 형태로 변형시킴.

- 범인 자본주의의 기본적 틀, 즉 소유와 경영의 분리, 기업 구조의 수직적 통합은 유지되면서도, '금융의 형태를 띠는 자본가' 혹은 금리생활자의 이해가 우선시 되는 방향으로 모든 사회적 생산관계가 변형된 것

- 그 결과 국가와 금융의 타협은 붕괴되어 후자의 자율성은 극대화되었고, 금융과 산업과의 관계에서 전자의 우위가 달성되었으며, 산업과 노동에서의 타협도 붕괴함. 이러한 과정에서 광범위한 관리 조직들과 전문가 집단은 금융적 팽창에 복무하는 형태로 재조직됨.

□ 금융세계화의 구체적인 전개과정

1) 금융혁신과 탈규제: 새로운 '고도금융'(high finance)의 성립

- 기존의 규제를 피해 가는 새로운 금융상품, 새로운 신용창조 방식, 새로운 금융기관 발명

- 일반 상업은행보다 투자은행, 증권회사, 연금기금, 뮤추얼펀드 등 발전

- 국제금융업 발전함에 따라 규제완화 불가피

- 중앙은행의 독립됨. 기존의 공적 규제 철폐되고 사적금융(private finance)이 화폐권력을 장악

2) 국제통화제도의 붕괴: 국제 금융질서의 불안정화

- 71년 달러의 금태환 포기, 73년 브레튼우즈 시스템 붕괴, 달러 평가절하
- 79년부터 미국의 고달러/고금리 정책 실행 (달러의 공급을 규제하는 강력한 조치와 이에 근거한 고이자율 정책)
 - 이러한 강한 달러, 고이자율 정책이 금융 부문 탈규제와 결합되면서, 1980년대에 미국 자본주의 주도의 전세계적인 금융적 팽창을 촉발시킴. 당시 초국적 은행들(Transnational Bank: TNB)은 M&A와 콘소시움 형성을 통해서 기대화한 후, 제3세계에 '외채' 투자를 통해서 높은 수입을 얻음.
 - 85년 플라자합정으로 달러 가치 급락, 저달러/저금리 정책으로 전환
 - 그러나 앞서의 초국적 은행의 전략은 지속적으로 제3세계의 외채위기를 자극하였음. 특히 1982년의 멕시코 외채 위기 및 외채상환 유예선언은 미국 은행 체제 전반의 붕괴를 낳을 뻔했다. 당시 미국은 민간은행이 주도하여 고금리를 유지하면서도 상환시기를 변화시키는 (단기에서 장기로) 전략을 중심으로 하는 이른바 '메이커 플랜'을 발수했지만, 그것 자체가 위기를 제거하지는 못함.
 - 그러나 미국의 정책가들은 한 국가의 외채 위기를 이용하여, 그들의 자본이 그 나라에 침투할 수 있도록 국내적 생산의 사회관계를 재편할 수 있다는 교훈을 얻음. 이는 이후에 동유럽의 체제전환을 이끌어 내었던 이른바 '충격요법'(shocking therapy)과 구조조정 프로그램이라는 형태로 보다 체계화됨.
 - 미국연방준비이사회, 저금리 정책으로의 복귀, 주식시장 부양, 드디어 고도금융(high finance)의 만개
 - 그렇지만 미국에서도 금융 규제완화 이후 금융위기의 가능성이 심화되고 있음

3) 초민족적 자본(TNCs)의 축적방식 변화와 법인자본의 금융화

- TNCs의 전략 변화: 新투자형태(인수/합병, 하청, 라이선싱...)
- 기업금융(corporate finance) 기법의 발전: M&A 호황

- 다운사이징/리엔지니어링과 결합: 주가 부양 및 금융 이익 위주

• 이러한 상황에서 자본의 이윤은 그것이 주식 및 기타 금융적 활동을 통한 것과 생산 부분에서의 이윤 실현을 통한 것이 혼용되어 그 구분선이 애매모호해지고 있음. 전통적인 '해외직접투자'(해외에 공장을 설립하고 생산 및 고용을 창출하는 투자)와 '포트폴리오투자'(전통적인 자본투자) 사이의 구분이 모호해짐. 왜냐하면, 오늘날 초국적 법인 기업들의 인수합병(M&A)은 부분적으로 생산에 기반을 두지만, 동시에 생산의 팽창보다는 주식시장에서의 이윤 취득이 매우 중요한 목적이 되기 때문.

- 법인자본의 경영전략: 주식/채권 등과 관련한 금융 테크닉 개발 *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

- '소액주주운동'에서 '소액주주'한 기관투자가, 즉 고도금융을 의미. 이들에 의한 기업 장악

• 이에 따라, 생산부문에서는 정리해고 등으로 표현되는 다운사이징, 유연화와 반-생산의 도입 등의 착취도 강화와 자본의 비용절감이 진행됨. 그것의 목적은 생산의 팽창뿐만 아니라 '주가상승' 즉 이러한 '경영혁신'의 결과 예상되는 장래의 높은 경쟁력(hi-performance)에 대한 기대에 따른 주가 상승에도 부어짐. 그리고 '주주행동주의'에 의해 강화된 금리생활자들 및 기관투자자들의 권한은 끊임없는 단기 수익의 향상을 목적으로 경영층의 파괴적인 비용절감 노력을 부추김.

□ 금융세계화의 함의

- 자유주의자들은 이렇게 변화된 경제·금융환경에 적합한 정책/전략을 탐색. 신자유주의로 변신.

- 법인자본의 금융화, 금융 세계화는 지배적 자본본파가 축적의 원동력을 새로운 물질적 팽창에서보다는 고도금융을 통한 잉여가치의 분배 기술에서 찾고 있음을 의미.

- 그 결과 80년대 이후 소득·재산 분배구조는 '금리생활자'들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하게 변화. 분배구조의 불평등 엄청나게 악화. 중산층/하류층의 생활조건 불안정화 및 악화.

1.2 금융세계화와 미국의 대외경제정책

□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보편적 수렴'(universal convergence)

- 아메리카의 지대전략: 대국(중국, 러시아, 인도 etc)과 신흥공업국들은 '금융세계화'의 메커니즘 내부로 포섭, 나머지(주로 아프리카)는 배제.

- 따라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은 신흥시장(emerging markets)에만 적용되는 개혁안. 나머지 나라들에 대해서는 형식적 의미밖에 없음. 아프리카는 구조조정의 대상이 아님.

- 제3세계 외채문제 해결과정 속에서 등장한 '브래디 플랜'은 증권시장 부양을 통해 외채 문제 해결. 이에 따라 경제의 금융화 진전.

• 브래디 플랜의 요지는 민간채권은행 외에도 IMF와 세계은행, 일본이 채무국들에게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한다는 조건으로 공적인 외채탕감을 지원한다는 것. 즉 기존 외채를 탕감한 새 (장기) 외채로 전환하고 새 외채에 대해 미 정부와 국제기구들이 저금을 보증한다는 것. (새 채권은 2차 시장에서 유통되었고, Brady bond market을 창출함.) 이에 따라, 외채 위기를 겪던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증권시장이 부상하였음(브래디 본드 시장 + 주식시장). 80년대 후반, 미국이 저금리 정책으로 전환한 데다 90년대 초 주요 선진국 불황을 겪자 고수익, 고위험 좇는 투기적 국제금융자본이 라틴아메리카와 동아시아로 몰려갔으며, 더욱이 80년대 말 이 지역 국가들은 외국인투자 자유화, 자본시장 추가 개방, 공기업 민영화 등등 외국자본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 조성하였다. 이 때부터 주요 개도국에는 신흥시장(emerging markets)라는 이름이 붙는데, 여기서 마켓이란 일반적인 의미의 시장이 아니라 주식 및 채권시장을 가리킨다.

- 경제의 금융화 추세에 적합한 정책적/제도적 환경 조성 필요. 이것을 이른바 '워싱턴 컨센서스'라고 부르는데, 이는 제3세계의 구조조정안일 뿐만 아니라 선진국들도 채택해야 할 보편적 수렴치(universal convergence!)

- 거꾸로 말하자면 개도국을 위한 특별한 발전정책은 필요 없고 보편적으로 건전한 정책을 실행하면 된다는 것. → 세계경제의 '아메리카화'

1.3 금융세계화와 계급구조의 세계적 변화

□ '월드클라'의 등장: '신자유주의'의 '성공' 이데올로기

- 오늘날 금융세계화는 과거 범인 관리층의 일부를 "금융 조각자"로 변모시켰고, 동시에 컨설팅 현상과 같은 생산자 서비스 부문에서 전문 관리자들을 등장시켰. 단적인 예로 평가대행기관들(rating agencies)과 컨설팅 회사는 가상적 축적과 비대한 화폐자본의 요구로부터 도출된 국제적 행위 규준을 개발하는 데 종사함.

- 이들은 대다수의 봉급 생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입을 얻으며 점점 더 코스모폴리탄적 지향을 가지며, 자국내 정치에 대한 무관심을 표명하게 됨. 그리고 이들의 상대적으로 높은 수입은 일종의 "유효수요"가 되어서 보다 비싸고 질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에 사용함.

□ 노동자·민중에게 끼치는 효과: "노동의 불안정화" vs "가계의 금융화"

- 금융화는 생산 부문 및 그것에 대한 관리 부문을 축소시킴. 그 결과 모든 부문의 노동자들에게 일자리 축소의 위협이 항상적으로 존재하게 됨. 즉, 자본주의의 전반적 위기와 이에 따른 금융적 팽창은 "불안정 노동의 일반화" 경향을 낳는다는 것. (물론 산업부문, 부문 내 개별 기업의 조건 등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이는 하나의 구조적 경향의 양상을 띠며)

- 그러나 노동대중의 일부는 각종 펀드를 매개로 "가계의 금융화"를 추진하고, 이를 통해 금융적 팽창에 동참하는 양상을 보임. (이는 특히 중산부 국가의 경우 더 일반화된 현상인데, 예컨대, 미국 노동대중의 다수는 연금기금을 통해서, 금융화와 동참하는 양상.) 그리고 이들의 금융적 팽창을 위해서, 제3세계에서는 끊임없는 구조조정 압력이 가해지며 신흥시장이 형성됨.

cf) 1998년 현재 미국 전체 인구 중에서 주식에 직접 투자하거나 각종 기금 등을 통해 간접 투자는 사람은 미국 전체 인구의 48.8% 수준에 이른다. (문화일보, 2000. 1. 24일자.)

- 이는 결국 노동력 재생산 전반의 분절화 속에서 배제와 관리의 이중적 논리가 전면화됨을 의미. 즉 세계적인 수준에서 신자유주의와 구조조정을 수용하는 부문에 대해서는 관리와 통합이 추진되는 반면, 그렇지 못한 부문에 대해서는 배제의 논리가 작동한다는 것.

• 국내적으로 볼 때, 금융적 평창은 세계적 규준에 걸맞은 “투기적 감각”과 “상징-조작능력”을 보유한 소수의 노동력 및 이러한 “골드 칼라”의 재생산에 조응하는 대규모 불안정 노동력을 요구할 뿐이라는 것. 다시 말해, 이러한 금융적 평창의 수혜자들, 즉 대주주, 골드칼라, 금융화 속에서 일시적 성공을 거둔 금리생활자 가계 등에게는 세계적으로 상승의 소비가 제공되고, 형여와 달러의 사용에 적합한 정체성들이 형성됨. 그리고 생산부문의 일부도 이러한 고가 상품의 생산에 전략적으로 투자한다. 게다가 국민 국가 차원에서도 이들은 성공한 “국민”으로써 주요한 정치적 세력으로 인정받게 됨.

• 반면, 불안정 노동층의 경우, 의·식·주 전반에 걸쳐 알지, 질적 하락을 경험하게 됨. 극단적인 경우, 이들은 자신의 저소득에 걸맞은 낮은 질의 상품들 (종종 비공식적 부문에서 생산되는) 을 얻을 수밖에 없으며, 공적 교육의 붕괴로 인해 교육을 통한 계층 상승의 기회조차 얻기 힘들게 됨. 게다가 국가는 종종 이들을 “재조르고 무능력한 집단”으로 낙인찍으며, 정치적 배제의 논리를 펼침. (신보수주의) 또한, 이들에게 제공되는 몇몇 부분의 공적인 관리는 대부분의 경우, 노동력 재생산의 불안정을 제거하기보다는 그것을 영속화하면서, 이들의 저항에 대한 효과적 관리와 분할을 목적으로 함.

2. 세계화와 ‘신 중세적 무전서’?

2.1 세계화, 폭력과 무질서의 점증

-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 제3세계에서의 빈곤의 심화, 북반구 내부로의 빈곤의 역수입

- 북반구 국가의 빈곤의 심화에 따른 ‘통치성’(governance)의 위기. (별외와의 전쟁? 비 살상 무기?)

- 한편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이데올로기와 결부된 세계경제의 주변부에

위치한 민족주의 세력들이 군사력의 증강을 통해 최종적으로 세계경제 내에서 '정당한' 위치를 보장받으려는 전략을 취함.

- 제다가 제3세계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군사력 증강의 주된 방식은,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대량파괴무기(핵·생화학·미사일) 개발로 집중되고 있음.

- 다른 한편에서는 세계경제에 거의 완전히 배제된 지역에서는 약탈전쟁과 반동적인 볼리주의가 지속적으로 재출현하고 있음.

cf) 1970년대 미국의 무기수출 정책의 전환

- 닉슨 독트린(1969년), 향후 미국은 동맹국의 분쟁에 직접 개입하는 대신 자위력을 키워 스스로 국방을 책임지도록 지원하겠다는 것.

- 이에 따라 선방 반주변 국가들에 대한 무기판매와 군수생산시설투자를 통해 그 동안 미국이 독점했던 군사안보기능을 분할.

- 이는 오늘날 미국이 세계무기시장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게 만든 발판이 된 동시에 군수산업에 종사하는 초국적 기업의 세력 증대에 있어 결정적 계기로 작용.

- 이는 또한 1970년대를 기점으로 하는 제3세계의 군비팽창 및 무기도입 급증의 도화선으로 작용.

□ 현대자본주의와 신 중세적 무질서?

cf) 알렉 콕스, 『무질서의 제국에서 지경학과 문명들』, 『이론』, 1994 여름

"현대세계의 무질서는 초기 중세시대의 '전쟁상태'와 구조적으로 비교될 수 있다. 어느 경우에는 우리는 하나의 문명이 사회의 모든 수준에서 심층적 방어를 어떻게 조직해 나가는지 볼 수 있다. 즉 카롤링거 왕조의 사회는 바이킹 및 헝가리 약탈자들의 계속 재발하는 '중심 없는' 침략에 대항하는 기사들의 '중심 없는' 방어전술에 자리를 내주며 붕괴한다. 마찬가지로 세계사회는 시장경제의 다원적이고 중심 없는 공격에 직면하여 조직의 다양한 수준에서 붕괴한다. 그러나 동시에 모순적으로 이 무질서는 확률적으로 시장경제의 침

투에 유리한 요인을 이룬다. 무질서는 자유시장과 그에 저항하는 오랜 구획들(다른 규제양식들을 재생산하는 것들) 사이의 갈등이 무너진 형태이다.”

• 특히 폭스는 무질서의 행위자들(agents)이 급증하고 있다는 데 주목한다. 오늘날 무장력의 지리적 독점권은 더 이상 국가의 것이 아니며, 국가의 군대가 때로는 ‘사적’집단을 대신하여 행동하기도 하고(볼리비아 군대와 코카인 마피아), 마찬가지로 사적 군대가 국가 대신에 행동하기도 하며 (니카라과의 ‘콘트라스’ 반군과 미국), 더욱 복잡한 경우들도 존재한다. → 준 국가적 폭력과 범죄의 모호성?

• 이렇게 무질서를 점증시키는 활동은 기존에 국가법외의 구조를 파괴하며, 저항하는 하층들(무족들, 카스트들, 종파들, 지역들, 종교들)에 자리를 내주거나 새로운 전투무대들(테러리스트 그룹, 게릴라 등등)을 발생시킨다.

□ 요새화된 비지(飛地, enclave)와 민중학살

cf) 알렉스 폭스, 『무질서의 제국에서 지정학과 문명들』, 『이론』, 1994 여름

“현대세계의 문제는 지도자들이 억압 이외의 다른 수단에 의해 무사히 질서유지에 관여하고 있다고 확신한다는데 있다. 우리는 아마도 언제나, 부자들과 원세 있는 자들이 도시 중심의 군중들 속을 위협 없이 걸을 수 있는 가능성을 기꺼이 보장해 주었던 낡은 유형의 질서 잡힌 귀족제 국가를 아쉬워하게 될 것이다. 대신에 현대적 패권은 더 이상 자신들의 질서를 안전선 너머로 확장시키려 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안락함과 광범위 필요한 공항, 전화, 에너지 등급 ‘엑스플레이트’에 관심을 가진 때를 제외하면 무질서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 소수 부자들과 유복한 사람들을 무리로 집중시킨다. 또한 그들은 말쑥군들을 질서의 권으로 복귀시킬 수 있는 대학살에 대해 이색하지 침묵을 허용한다. 이러한 것이 새로운 차권, 즉 비도시(non-city)로서 정의될 수 있는, 혼돈 위에 흩어져 있는 요새화된 비지들의 위치-환경 체계이다. 즉 새로운 수송 및 원거리 통신 기법들에 의해 서로 연결되는, 그리고 이 중심 없는 세계 요새지의 기관들 주변에 막치린 배열되어 있는 군사적 제도들에 의해 - 불과

칼로 - 보호되는 요새화된 성체들이 점점이 박혀 있는 무질서인 것이다.”

□ ‘도시들 안의 도시들’(cities-within-cities): ‘세계도시들의 네트워크’, ‘성공한자들의 이탈’(secession of the successful)

cf) 테드 슈라이어, 「국경 없는 세계와 담장 쳐진 도시」, 『연대와 전망』, 1998. 5·6, 지식인연대

“담장으로 둘러 쌓였거나 아니면 경비원이 지키고 있는 ‘도시들 안의 도시들’도 점차적으로 일상화되고 있다. 울타리가 쳐졌거나 혹은 지하에 위치한 쇼핑물들은, 이미 도시의 거리들과 다른 공공장소들을 대체하고 있으며, 가난한 사람들과 유색민종이 들어올 수 없도록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미니애폴리스-세인트 폴, 샬롯, 팰머리, 디트로이트, 몬트리올과 델러스 등지에서 울타리 쳐진 쇼핑 공간들은 지하의 중앙통로를 통해 사무용 빌딩, 역, 주차장과 연결되도록 되어 있다. 그 결과는 ‘유사도시’(analogous city)이다. 이 도시들은 ‘가상 공간적 인종차별’을 통해 압도적인 수의 백인 중산층 계급 소비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이나 주변화된 사람들과 우연히라도 마주치지 않게 배려하고 있다.”

□ 민족체의 복귀와 분리주의(separatism)

cf) 장 로블랭, 「세계시장의 변모와 정치의 전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비판을 위하여』, 1997

“동쪽의 나라들의 해체과정에서 나타난 민족형질의 대대적인 복귀는 일의적인 방식으로 한 민족체의 ‘자립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세계시장으로의 편입형태로 나타난다. 자유화의 절차를 거친 후 경쟁질서로의 종속이 뒤따르고 있다. 과거의 동쪽 나라들 중에서 세계시장의 비효율로부터 이익을 얻고, 또 같은 나라안의 가난한 지역들을 저버리기 위해 자신의 독립을 요구한 것은 가장 덜 가난한 민족들이다. 이러한 사정은 크로아티아나 우크라이나의

경우에 분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서유럽 내부의 민족주의나 자치주의에서도 마찬가지로 뚜렷이 나타난다. 즉 이탈리아 북부의 파시즘 성향의 정파들은 남부를 포기하고 각자 나름대로의 자치공화국을 세우기 위해 투쟁해 왔으며, 스코틀랜드의 독립주의 세력은 런던이 수탈해가는 스코틀랜드의 석유지대 및 관광수입을 되찾을 것을 역설해 왔다.”

3. 90년대 미국의 대외정책: ‘저렴한 헤게모니’

(hegemony on the cheap)

- 그런데, 이처럼 다양한 형태의 민족주의와 분리주의의 대부분은 미국을 직접적인 타겟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도 아니며, 궁극적으로 세계경제로의 이탈 및 그에 대한 타격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미국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

- 그러나 이러한 무질서와 폭력의 확산은 미국의 세계적/지역적 지도력의 신뢰성을 의심받게 하고, 미국의 세계헤게모니를 정당화하는 미국적 ‘가치’(민주주의와 인권)를 위협하는 요인이라는 점에서 미국으로서는 간과할 수만은 없는 문제임.

- 게다가 제3세계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군사력 증강의 주된 방식은,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대량파괴무기(핵·생화학·미사일) 개발로 집중되고 있음. 이는 미국이 세계 군사질서를 자신의 통제 아래에 두고 있다는 환상을 어찌면 단번에 무너트릴 수도 있다는 점에서, 미국 대외정책의 중대한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는 것.

3.1 클린턴 행정부의 대외정책

□ 현실정치(real-politik)와 저렴한 헤게모니(hegemony on the cheap)

cf) ‘Two cheers for Clinton’s foreign policy’, Foreign Affairs, 2000 3/4,
Stephen M Walt

“냉전의 해체 이후 오늘날 미국의 군사적·경제적 압도적인 우위는 자신에게 거대한 행동의 자유를 부여했다. 미국의 지도자는 다른 국가들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크게 걱정할 필요 없이 자신의 광범위한 목적들을 추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미국에게 정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적들은 존재하지 않으며, 가장 명백한 적대국가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라크, 북한, 유고슬라비아는 약체이고 빈곤하며 고립되어 있다. 여기에서 미국의 ‘단극성’(unipolarity)이라는 중심적인 역설이 등장한다. 미국은 막대한 영향력을 누릴 수 있지만, 그 권력을 통해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해야하는지는 거의 모르고 있는 것이다.

한편 미국의 압도적인 우월성에 조응하여, 미국 시민들은 국제문제에 대한 관심을 잃어가고 있다. 어느 설문조사에서 미국인들이 대답한 ‘오늘날 미국이 당면한 문제’에 대한 응답에는 외교문제가 아예 순위에 오르지 못했으며, ‘미국이 당면한 외교문제는 무엇인가’라는 또다른 질문에 대해서는 1위가 “모른다”였다. 만약 이라크의 사우디아라비아 공격을 가정했을 때 지상군 사흘을 지지한 미국인은 절반 이하였으며, 한반도의 경우는 그 보다도 적었다. 또한 1994년에 당선된 공화당 의원의 2/3은 여권을 갖고 있지 않으며, 주류파의 지도자인 리처드 아미는 “나는 유럽을 방문을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왜냐하면 여권에 한번 다녀왔기 때문이다”라고 자랑스럽게 선언했다. 바로 이들의 의회가 국제기구 및 국제문제에 대해 미국이 약속한 분담금을 삭감하고 있는 것이다. (…)

1992년 당시 클린턴 후보자는 “순수한 현실정치(realpolitik)라는 냉소적인 계산법은 새로운 시대에는 부적합하다”고 선언했다. 그렇지만 클린턴 대통령은 권력정치의 팽대한 전가를 보여주었다. 그는 구 바르샤바 조약기구 국가들을 자신의 동맹으로 끌어들었고, 동아시아의 동맹들을 지지하면서 중국으로 하여금 미국의 입맛에 맞는 현재상태를 지지하도록 이끌어 내었다. 그는 대인 지리금지조약을 거부하였고 NMD 건설을 받아들였다.

미국인들은 그들이 현실정치를 실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싫어하지만, 미국이 세계 최고인 것은 좋아한다. 동시에 미국인들은 꼭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 역시 원치 않는다. 아마도 클린턴의 가장 위대한 업적은 적당한 비용으로 이러한 일들을 치르게 될 것이다. 클린턴의 전략은 ‘비용이 싼 헤게모니’(hegemony on the cheap)이며, 그것은 미국

인물이 지지하는 오직 유일한 전략이다. 미국인들은 고립주의를 원하지도 않으며 돈이 많이 드는 국제실자군을 원하지도 않는다. 이것이 바로 다음 대통령이 어느 당의 누가 될지가 관계없이, 클린턴의 후계자가 그의 전철을 따라갈 것으로 보이는 이유이다.”

□ 클린턴 행정부의 ‘개입과 확장’정책(engagement & enlargement policy)

·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선택한 전략은 철저하지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하였고, 그 구체적인 방식은 다각적인 것이었음. 그 다각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핵심지역에서의 ‘현실정치’ 전략의 유지

미국은 변화하고 있는 세계 속에서 자신의 ‘사활적’ 이해가 걸린 주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을 구분하고, 전자의 경우 이 지역을 자신의 영향력 안에서 굳건히 결속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음. 즉 기존의 군사동맹관계(특히 NATO와 미-일 동맹)를 강화·발전시킴으로써 자신의 ‘국익’을 군사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각각의 지역들에서 미국의 지도력을 위협하는 요소들(지역적 과위의 등장, 대량파괴무기의 확산)의 출현을 억제하기 위한 역내 동맹관계를 활용한다는 것. 이는 미국이 자신의 핵심 관심사가 걸린 문제에 대해서는 ‘현실정치’ 전략의 장수들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

2) 주변지역에서의 다자주의와 국제기관의 역할 부각

한편, 미국은 그 외에 부차적인 지역에 대해서는 과격화는 다른 접근방식, 즉 다자주의와 국제기관의 역할을 강조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오늘날 미국은 세계적인 갈등구도를 과거 동서 냉전구도로부터 ‘민주주의와 인권의 옹호자’(미국과 국제시민사회) vs ‘황폐국가와 근본주의자’(호전적 민족주의, 종교적 근본주의 등등)의 대립으로 전환시키는데 성공함. 이는 미국이 구사할 수 있는 전술들을 다양화시키는 결과를 낳았음. 예컨대 미국은 ‘국제사회 구상원의 공동의 책임’, ‘국제시민사회의 임무’라는 논리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면서, 제3세계에서 발생하는 분쟁들에 있어서 UN(평화유지군) 및 각종 NGO

들의 활동을 무각시키고 있는 것. (난민구호-평화유지-선거관리감시-전후 재발 프로그램 일한 등 분쟁의 '관리'와 '사후개발'을 위한 제반의 활동)

3) 강력한 대량파괴무기 '반확산 정책'

강력한 대량파괴무기 반확산 정책을 펼칠시키려는 목적으로, 이와 관련된 국제적 혹은 쌍무간 규범과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클린턴 행정부는 '화학무기협정'(Chemical Weapons Convention)을 비준시키고, '포괄적핵무기실험금지조약'(Comprehensive Test Ban Treaty)의 비준을 시도하였음. (CTBT 비준은 공화당 주도의 의회의 거부로 실패하였다.) 또한 구 소련방 소속 국가들의 핵무기 폐기를 주도하였고,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을 봉쇄하기 위해 대북 선제공격 방안까지도 검토한 바 있음.

cf) 또한 클린턴 행정부는 마약과 국제범죄, 테러리즘의 세계적 확산, 지구 환경파괴의 심화라는 문제가 미국 안보정책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오래 전부터 밝혀왔음.

3.2 미국의 신 전략과 NATO 확대

□ 미국의 새로운 군사전략의 모형: 1999년 NATO의 유고공습 및 NATO 확대(expansion)

cf) 마이클T. 클레이어, 'The Clinton Doctrine', "The Nation", 1999. 4. 19

"최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유고연방에 대한 공습 결정은 미국의 세계적인 수준에서의 전략이 결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드러낸 결정적인 계기였다. 미국의 새로운 전략은 세 가지 기본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그 첫 번째는 지난 2월 조지 테넷 CIA 국장의 발언 즉 "미국인들과 그들의 이익은 지역적 분쟁, 테러리즘의 폭동, 범죄적인 폭력 그리고 인종적 갈등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는 말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미국은 세계적 안보환경에 대해 매우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 구성요소는, 평

범위한 경제적 이해를 보장하기 위해 미국은 국제질서의 안정을 유지하는데 전략적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가정이다. 어떤 강대국 혹은 강대국들의 집단들도 이러한 국제질서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은 그 스스로 혹은 가장 신뢰할 만한 동맹국(즉 나토)와 함께 행동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 구성요소는 국제적 안정성을 획득하기 위해 미국은 다수의 적대자들에 대항하여 세계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동시에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충분한 군사력을 유지해야만 한다는 믿음이다.

이러한 세 가지 구성요소는 미국의 새로운 군사전략의 모형을 제공하고 있다. 이 전략적 모형은 클린턴 대통령이 앞으로의 6년간의 국방부 예산을 1120억 달러 총액할 것을 요청한 것에서 명백하게 드러난다. 이 예산은 원거리의 전투지역에 대한 “군사력 투입”(power projection)을 위해 전함, 화물수송기, 전투기 그리고 기타의 군사장비를 추가적으로 획득하는데 이용될 것이다.

미국이 나토를 서유럽의 방위동맹에서 미국의 통치를 받는 “지역 경찰”로 변화시키려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데들린 솔브라이트 미 국무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나토 외무장관 회의에서 미사일로 무장한 “정태국가”(rogue state)들이 과거 바르샤바조약기구가 그러했던 것처럼, 거대한 위협을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나토가 작전지역을 더욱 원거리로 확장하고 부상하고 있는 광범위한 위협에 대해 전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한 것이다. 이것이 아마도 “클린턴 독트린”이라고 명명할 수 있는 미국의 새로운 전략의 핵심일 것이다. 다시 말해, 미국(그리고 서유럽)이 진정으로 이해가 걸린 지역에서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 -그것이 아무리 덜 중요해 보여도-에서 그것이 강화되고 확산되기 전에 전투를 벌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4. 제3세계의 전략: delinking strategy vs separatism

- 따라서 제3세계에 있어서 무질서는 미국, 국제통화기금, 다국적기업들에 의한 지배라기 보다는 무엇보다도 먼저 내전 및 파괴상태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음. 그렇지만 평화의 유지는 ‘인민의 경제적 방위’로부터 분리될 수 없

으며, '민민의 방위'로부터도 분리될 수 없다. 그렇지만 '지리적' 민족국가의 방위로부터는 분리될 수도 있다.

□ '지역적 분리'(regional delinking), 아프리카의 대안적 전략?

cf) '지역적 분리'(regional delinking)에 대한 아프리카의 정치경제학자인 사미르 아민의 주장

Samir Amin, 'Adjustment or Delinking? The African Experience', London, Zed Press, 1990

"우리 시대의 도전에 대한 대응은 내가 "분리"(delinking)라고 이름 붙이고 제안한 것을 부과한다. 분리는 '경제자립국가'(autarky)의 동의어가 아니다. 오히려 외부적 관계가 내부적 발전의 논리에 종속된다는 것의 동의어이다. 분리는 "대중적" 내용물, 지배적인 자본주의와 상충한다는 면에서 반자본주의를 암시하지만, 발산하는 이해들의 다양성이 빼어는 것이다."

□ 외채탕감(debt repudiation), IMF와 세계은행에 대한 기금거부(defunding)

cf) Statement issued by Neville Gabriel, Jubilee 2000 South Africa secretary, 1 October 1999.

- 1999년 9월 IMF 및 세계은행 연례총회에서 미국 클린턴 대통령이 외채를 탕감하겠다는 발언에 대한 쥬빌리 2000 남반부 측의 성명

"1980년대 이후로 "외채탕감"(debt cancellation)에 대한 많은 원대한 성명을 들어왔다. 그러나 제3세계에서 외채위기는 과거보다 현재 더 심각하다. 따라서, 클린턴 대통령이 미국과의 쌍무적인 채무를 100% 탕감하겠다는 성명을 환영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경계한다. 우리는 그가 시인한 바, 포괄적인 외채탕감은 "도덕적이며 경제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점을 더욱 환영한다. 쌍무적인 채무를 아직 탕감하지 않은 다른 부유한 국가들의 지도자들은

동일한 선언을 해야하며, 빈국들의 모든 채무들을 폐기해야만 한다. 바로 지금이 그러한 일을 할 때이다.

클린턴의 성명은 주빌리 2000이 요구하는 외채탕감이 경제적으로 무책임하고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약화한다. 남아프리카의 주빌리 2000은 IMF와 세계은행이 구조조정 조건을 달지 않고, 다자적인 100%외채탕감을 시행할 것을 계속 주장할 것이다.

주빌리 2000은 기어를 이동시키고, 아파르트헤이트의 자금주들이 클린턴의 성명에 따라 아파르트헤이트 체제 하의 외채를 즉각적으로 폐기하도록 압력을 강화시킬 것이다. 지금은 아파르트헤이트로부터 이익을 얻은 독일, 스위스, 영국, 미국 은행들이 증오스럽지도 이윤을 얻는 행위를 중단시킬 때이며, 그들의 후원에 의해 고통을 받았던 것에 대해 보상을 받아야할 때이다. 왜 아파르트헤이트 때문에 희생을 당한 자들이 두 배로 지불해야 하는가? 우리는 위법적인 아파르트헤이트의 외채를 취소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클린턴은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 그가 상무적인 100% 외채탕감 약속에 침투한 구조조정 조건의 무과는 빈곤을 박멸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식이 아니다. 그것은 현실적인 외채탕감을 가로막고, 실업을 증가시키며, 사회적 서비스의 공급을 제한하고, 빈곤과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다. 또한 클린턴 대통령은 그가 제안한 "아프리카의 발전과 기회를 위한 안(案)"(Africa Growth and Opportunity Bill)을 폐기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법제화된다면, 아프리카에 부과된 조건들이 더욱 엄격해지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주빌리 2000은 빈곤국들에게 해로운 경제정책을 궁극적으로 부과하기 위한 외채탕감의 사용을 거부한다.

아직도 매우 적은 나라들만이 매우 협소하지 선택된 외채를 탕감 받도록 약속되어 있다. 외채로부터 자유로운 밀레니엄을 위해, 주빌리 2000은 제3세계의 모든 외채를 탕감하도록 요구한다. 단지 36개국의 외채탕감에 대한 클린턴의 제안은 우리의 요구에 매우 모자란 것이다.

클린턴의 성명은 발전원조(development aid)에 추가되어야 하는 것이지, 그것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 빈곤국가들에 대한 발전원조는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만약 원대한 외채탕감에 대한 몸짓이 의미와 있고, 단지 속이 들여다보이는 행동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빈곤국들에게 현실적인 추가

적 이익을 제공해야 한다.

주빌리 2000은 연공들의 연대를 위한 세계적 네트워크를 통합하고 강화시킬 것이며, 남-남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를 표현할 것이다. 주빌리 2000의 참가자들과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아시아의 강력한 사회운동 활동가들은 11월 18-21일 동안 요하네스버그에서 만나 제3세계 외채의 즉각적이고 총체적인 탕감을 요구할 것이다.”

cf) 'IMF와 세계은행의 기금거부' (Defunding the IMF and World Bank)

- IMF의 새로운 “빈곤감소와 성장 능력 함”(Poverty Reduction and Growth Facility)에 지속적으로 기금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남세자들의 거부운동.

- Camille Chalmers (PAPDA, Haiti), Dennis Brutus (Jubilee 2000 Afrika), Marina Dos Santos, Direcas Nacional (MST, Brasil), Carlos Pacheco (Center for International Study, Nicaragua)

“1999년 9월 윌슨 씨에게

세계은행의 정책에 의해 고통받고 있는 국가들의 시민들에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당신에게 편지를 쓴다.

- 현재 세계은행 대부의 65%는 부문 및 구조조정 차관을 위한 것이다
- 이러한 차관에 부가된 조건들은 경제성장을 불구로 만들며, 경제적 발전을 방해하며, 종속을 촉진시키며, 발전도상국가들의 비참함과 가난을 증대시킨다

- 구조조정은 여성의 사회경제적 부담을 엄청나게 증가시킨다
- 구조조정은 노동착취공장(sweatshops)을 촉진시키고, 조직하고 뒤흔튼 생활을 위한 노동자의 권리를 무정한다
- 구조조정은 농민들이 주도하는 농업생산과 식량의 자급자족 능력을 파괴한다

- 구조조정은 인구의 가장 취약한 부문에 대해 매우 파괴적인 충격을 준다

- 구조조정은 우리의 소비모델과 자연과의 관계를 변화시킴으로써 문화의 보전을 하라시킨다.

- 구조조정은 이러한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나라들의 외채 부담을 상당히 증가시켜 왔다

- 세계은행 정책 하에서 반영화는 증대되는 부채, 공격 비용의 사적 획득, 부와 권력의 집중, 실업의 증가, 공적 서비스에 대한 접근의 감소 등으로 귀결되었다.

실제적으로 세계은행은 IMF에 의해 부과된 거시경제학적 정책을 지지한다(세계은행의 대부조건에 대한 IMF와의 협정, IMF의 긴급패키지에 대한 세계은행의 자금기부). 따라서 세계은행은 다음과 같은 정책의 중대성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다.

- 충만하고 건전한 경제, 사회, 시민을 위해 우리나라들에서 경제정책은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가난한 자와 노동자들의 이해에 따라 형성되어야만 한다.

- 국가의 경제적 주권은 이러한 정책을 채택하는데 있어서 선행조건이다.

세계은행 기금의 대부분이 사적 자본시장에서 조달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인권과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을 지지하는 모든 이들에게 세계은행 채권의 구입을 보이콧할 것을 요청하며, 모든 공직기관들도 그렇게 하도록 복돋을 것이다. 나아가, 세계은행의 모든 기입국가들의 정부에게, 이러한 구조 및 부문 조정 차관이 중단되고, 세계은행이 제3세계에 대해 갖고 있는 모든 채무를 탕감하기 전까지, 더 이상의 자금을 제공하는 것을 중단하도록 요구한다.”

□ 세계 평화운동의 대응방향은?

한반도 국제정세에서 본 남북정상회담

서 통 만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1. 남북정상회담의 의의

○ 남북정상회담은 분단 이후 남북한 관계에서 가장 획기적인 사건으로서 남북 대립을 종식시키고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는 데 종래 어느 만남보다도 큰 의의를 지님.

- 분단 55년, 한국전쟁 발발 50년만에 처음 개최된다는 시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새천년을 맞이하며 남북한 사이에 과거의 불행을 청산하고 미래를 기약하는 행사를 갖는 것임.

-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한반도가 분쟁의 근원에서 평화의 발신지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

○ 김대중 정부하의 남북정상회담은 남북한 주도로 실현시켰다는 데 적극적인 의의가 있음.

- 김일성 주석 사망으로 유산된 94년 김영삼 정부 하의 남북정상회담은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중재로 실현된 것임.

- 남한 입장에서는 일관성 있는 대북 화해-협력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임.

○ 그 동안 담보상태에 있던 남북한 관계를 감안할 때 정상회담 합의는 일종의 '비약'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사태의 전전을 정확하게 파악, 설명할 필요성이 제기됨.

- 발표 시점이 총선 정국과 얽힘으로써 다양한 해석을 낳음.

- 북미, 북일 관계와 남북한 관계는 그 선후 관계 여부를 잘라내고 상당히 미묘한 상호관련성을 지니고 있었음.

2. 페리 프로세스와 한반도 냉전 구조 해체

(1) 김대중 정부의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정책

o 김대중 정부는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선언하며 이를 구체적으로 정의하였음.

- 남북한 교류와 협력의 확대, 북한의 개혁·개방을 위한 여건 조성, 북미, 북일 관계의 정상화, 대량살상무기의 해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군축의 실현 등으로 요약됨.

o 한반도 냉전 구조 해체 정책은 주변국과의 협력 속에서 한국의 역할을 확대해 가는 독자적 정책이란 성격을 지니고 있음.

(2) 대량살상 무기 확산 저지 및 한정된 현상 유지책으로서의 페리 보고서

o 페리 보고서가 상징하는 북한 미사일 문제에 대한 '포괄적 접근방식', 즉 이른바 '페리 프로세스'는 주한 미군 문제 및 평화협정 체결 문제와 북미 미사일 협상을 분리시키는 처리 방식이었다고 해석됨.

- 이는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서 선 북미, 북일 수교, 후 평화체제 구축 (주한 미군 문제 처리)이라는 경로임.

o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보장이 없다는 점에서 페리 보고서가 상징하는 대한반도 정책은 현상 유지를 전제로 한 것임.

- 페리 보고서와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정책과의 공유점은 북미, 북일 수교 및 대량 살상 무기의 해결, 두 가지임.

(3) 페리 보고서와 한반도 냉전 구조 해체 정책과의 조정

o 남북한과 미국의 관계에서 가장 민감한 이슈인 주한 미군 및 평화협정 체결 문제가 페리 보고서와 어떤 관련을 갖는가는 전혀 미지수임.

o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이 주한 미군의 철수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재위 내지 성격의 변화를 원한다고 발언함으로써 내외에 논란을 일으킨 바 있음.

- 페리 보고서 속에 주한 미군 문제를 넣음으로써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이라는 정로를 포함시키려고 했던 의도였다고 추측됨.

- 이는 북미 협상이 남북정상회담-남북기본합의서 이행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코스, 즉 남북한 관계를 기본 축으로 하는 코스임.

(4) 페리 프로세스의 실제

o 페리 보고서를 평가할 때, 한계를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정도라도 제대로 실현되도록 하는 노력이 중요한 상황이 되고 있음.

- 페리 보고서는 그 작성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이 상당 부분 반영되었음을 밝히고 있음.

- 미국과 북한이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간 것은 북한 폭격선이 나뚫던 상황으로부터 커다란 전환임.

o 페리 보고서가 상징하는 변화만으로도 그 동안 북한이 직면해 온 극대적 조건은 상당히 완화될 수 있음.

o 페리 프로세스도 실제 북미 협상 과정에서는 그 성사가 쉬운 일이 아닐 것이 드러나고 있었음.

- 의회에서 대북 정책에서 강경 입장을 취하는 공화당이 우세를 보이는 가운데 올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미국 국내정치 상황이 불확실한 상태임.

- 북한도 이 점을 의식, 일단 미사일 추가 발사 중단이라는 유화적 자세로 나온 것임.

- 북미 고위급 협상이 미국의 대북 태리 지원국 명단 해제의 지체로 늦어지고 있음.

- 일본 상황을 보더라도 북한 수교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님.
- 이미 일본 내에서는 북한 위협을 변수로 급속히 보수-우경화가 진행 중이며 북한 미사일 위협을 군비 증강 구실로 적절히 활용해 왔음.
- 유사법제화, 개헌 논의가 정치 일정에 오른 이상 다시 북한 위협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북한 수교 요건은 개선되었으나, 남치사건 문제로 반복한 정세가 확산되고 있음.

3. 북한의 대외 정책 변화와 남북정상회담

(1) 대결에서 협상으로의 국면 전환

- 북한이 남북정상회담에 응한 것은 북미, 북일 관계가 대립 국면에서 협상 국면으로 전환한 것이 크게 작용하였음.
- 북한도 이 과정에서 남한의 전향적인 대북 정책의 역할을 내심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비공식적인 레벨에서 그 뜻을 남한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북미, 북일 관계를 풀이 가는 과정에서 남한측 정책의 성실성을 인정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남북한 사이에 일정한 신뢰가 형성된 것임.
- 이탈리아와의 수교, EU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 필리핀, 호주와의 수교 움직임 등 서방국들과의 관계 개선은 북미 관계 개선 및 남한의 정책 전환에 따른 효과임.

(2) 남북대화 통한 티개 시도

- 북한은 일단 협상 국면에 들어가자 북미, 북일 관계 타결이 쉽지 않음을 절감하게 되었을 것으로 추측됨.
- 경제협력 확대의 상대는 당분간 남한밖에 없다는 현실 인식이 있었을 것임.
- 북미, 북일 관계를 타개하기 위한 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것

으로 여겨짐.

- 국제사회에 정상적 일원으로 참여하겠다는 체제 안정화에 따른 외교적 욕구의 일환임.

- 남북정상회담은 국제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될 세계적인 이벤트이며 북한이 국제사회에 정상적 일원으로 등장하는 데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음.

(3) 정치-군사 문제 해결과 남북대화의 병행

- 정상회담 합의에는 북한의 정세 전환을 위한 집단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됨.

- 당초 남북정상회담은 북한 입장에서는 적어도 주한 미군 문제의 일정한 타협을 포함하여 정치-군사적인 현안이 타결되는 것을 전제로 생각한 듯함.

- 북한은 98년부터 외세와의 공조작기 및 합동군사훈련 중지, 국가보안법 폐지, 통일운동 자유 보장 등 3개 선행조건 충족을 남북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었음.

- 북한은 주한 미군 문제나 3개 선행조건을 그 전제 조건으로 삼기보다는 이를 남북대화 및 남북한 교류-협력과 병행 추진하는 전략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임.

4.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주변국의 이해 관계

(1) 미국의 반응

- 미국은 원칙적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힘.

- 미국은 대량살상무기 확산 저지라는 미국의 대북 전략 목표가 남북정상회담으로 인해 손상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음.

- 윌브라이트 국무장관은 대량살상무기 문제에 미국, 한국, 일본이 앞으로 도 긴밀히 협조해야 한다고 밝힘.

- 미국은 주한 미군 주둔의 현상 변경을 원치 않으며 남북한 사이에 주

한 미군 문제가 논의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음.

- 코언 국방장관은 남북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주한 미군은 장기간 주둔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o 미국은 웬디 서먼 국무부 자문관을 서울에 파견, 정상회담에 임하는 미국의 입장을 밝혔다.

o 민주당 정부는 남북정상회담으로 인한 한반도 평화 기류가 미국 대선 과정에 유리한 변수로 작용하기를 바랄 가능성도 있음.

(2) 일본의 반응

o 일본은 지지 입장 이외에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입장 표명은 없으나 북일 수교 교섭에서 일본의 협상력이 저하될 가능성을 우려한다는 해석이 있음.

- 북일 수교에 따르는 대규도 경제 보상은 일본이 가진 최대의 협상 수단이며 남북경제 협력으로 그 메리트가 저하될 수도 있다는 견해임.

o 일본의 과거사 청산 문제에 대해 남북한 사이에 협력 관계가 형성됨으로써 수교 교섭에서 북한의 협상 입지가 높아지는 것을 우려할 수 있음.

o 일본의 국가 진로라는 보다 큰 구도에서는 대북 관계 개선을 둘러싸고 보수파와 온건파의 입장 차이가 있는 만큼,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도 두 입장 사이에 견해가 엇갈릴 것으로 추측됨.

- 향후 개헌 및 유사법제화가 정치 일정에 오른 이상, 북한 위협이란 변수가 계속 구실로 작용할지 주목되고 있음.

o 일본 내에는 일리 관계 타결을 통한 일본 자본의 시베리아 진출과 북일 수교에 따른 북일 경제협력을 결합하여 환일본권(동해) 경제협력으로 발전시키려는 흐름이 존재해 왔음.

(3) 중국의 반응

o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한반도 주변 4대국 중 중국이 가장 적극적인 지지 입장을 밝혔다.

- 남북정상회담 성사 과정에서 중국은 부분적으로 중재 역할을 했다는 설

이 있음.

- 북한과 중국의 정상외교 복원을 배경으로 북한은 대남 관계에서 자신감을 얻고 있음.

o 중국은 남북한 동시 수교국으로서 남북한 모두와 깊은 레벨의 접촉 채널을 유지함으로써 한반도 문제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해 왔음.

o 중국은 남북대화를 적극적으로 지지해 왔으며, 남북한 관계 개선을 통해 한반도에 대한 미, 일의 영향력이 감소되기를 원하고 있음.

- 중국은 일련해서 북미, 북일 수교를 통해 북한의 외교적 고립이 타개되어야 함을 주장해 왔음.

- 동시에 중국은 북미, 북일 관계 개선으로 북한에 대한 미, 일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확대되기를 원치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o 중국은 남북 경제협력이 활성화됨으로써 중국 동북지역의 경제발전 및 환황해권 경제협력으로 이어지기를 원하고 있음.

(4) 러시아의 반응

o 러시아는 대한 관계 일변도 외교를 반성하고 북한에 대한 접근을 강화함으로써 남북한 모두와의 채널을 확보하여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회복하려 노력하고 있음.

- 북한과의 상호우호조약 체결을 통해 냉전 종과 이후 완전히 단절되었던 양국간 안보 관계의 부분 회복도 꾀하고 있음.

o 러시아는 대북 경제지원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점에서 안보 문제를 포함하여 북한과의 관계 회복에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음.

- 러시아는 남한의 자금 지원을 통해 과거 구소련의 기술 지원으로 북한에 건설된 제철소 등 대규모 공장의 재건을 검토한 바 있음.

o 러시아는 대량살상무기 분야의 대미 협상력을 매개로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모색하고 있음.

- 최근 러시아는 미국이 NMD(국가미사일방어체계)를 포기한다면 그 대가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겠다는 제안을 한 바 있음.

o 오래 전부터 러시아는 중국, 일본과의 경제협력을 통해 극동 시베리아

가스전 개발 및 파이프라인 공사를 본격화하며 이를 남북한 원도 및 파이프라인 연결과 결합시킬 구상을 지니고 있음.

5. 한반도 국제질서를 둘러싼 전망과 과제

(1) 북미, 북일 관계와 남북한 관계의 상관성

○ 남북정상회담 합의에 따른 한미 간 갈등 원은 보다 큰 시각에서 재해석되어야 할 것임.

- 미국 내 대북 협상 노선 대 강경 노선의 대결이란 구도에서 보면, 남북정상회담은 협상론의 승리라는 점이 일차적으로 확인되어야 함.

○ 일본 내에서도 개헌 및 유사법제화를 둘러싼 보수파와 온건파의 갈등 관계란 구도에서 남북정상회담과 남북한 관계 개선을 평가할 필요가 있음.

- 남북 관계 개선은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 흐름을 완화시키고 온건파의 입지를 강화시켜 주는 계기가 될 수 있음.

○ 북한의 대미, 대일 우선 전략이 벽이 무뎠을 때 때문에 남북정상회담이 실현되었다는 데에 안주해서는 안 될 것임.

- 이러한 안이한 인식은 과거의 '조화와 병행의 원칙'을 답습하는 것과 다름이 없음.

- 대북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서는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조치 해제가 불가결한 전제임.

○ 남북한 평화공존과 남북 경제협력의 확대는 북미, 북일 수교를 통한 동북아시아 국제질서의 정상화 속에서 제대로 실현될 수 있다는 국민적 이해가 필요함.

- 북한 체제의 안전보장 차원에서 북미, 북일 수교는 불가결한 과제로 되어 있음.

(2) 북미, 북일 교섭에 대한 조정자적 역할

○ 미국의 대량살상 무기 확산 저지라는 관심사는 남북한 관계 개선과 상호 보완적으로 조정해 가야 할 것임.

- 미국의 대북 협상 수단은 경제 지원 등 적극적인 성격이 아니라 정치, 군사, 경제 제재의 해제 내지 완화라는 소극적 성격에 한정되어 있는 만큼,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음.

○ 북일 고심에서 협상이 곤란에 빠진 경우, 한국의 입장은 계속 중요한 기준 역할을 할 수 있음.

- 1965년 체결된 한일기본조약과의 관련 문제, 98년 발표된 한일공동선언에서의 과거사 청산 합의 등을 매개로 한국은 북일 수교 조건에 대한 발언권을 확보할 수 있음.

○ 남북 협력을 통해 북미, 북일 관계 정상화가 실현되도록 한다는 자세를 견지함.

(3) 남북 주도 틀의 형성

○ 남한은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이를 지속화시킴으로써 한반도 문제 해결의 남북 주도 틀을 형성해 가야 함.

- 남북정상회담은 그 동안 국제화 방향으로만 가고 있던 한반도 문제를 남북한 주도 방향으로 틀어간다는 의의를 가짐.

- 남한 입장에서는 우선 그 동안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해 왔던 대북 화해·협력 정책이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는 의미를 확인해야 할 것임.

○ 남한의 주도적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한미일 협력 틀을 재조정해 감.

- 한반도 문제의 국면이 북미 주도에서 남북, 북미, 북일 채널의 동시 가동으로 전환하고 있음.

-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공동 대처라는 방향에서 각각의 양국 간 현안의 비중이 증대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음.

(4) 정치·군사 문제 타결

○ 중장기적으로 정치·군사 문제에 관하여 미국도 포함한 남북한이 타결을 이루기 위한 준비 작업을 계속해 해서는 안될 것임.

- 주한 미군 문제, 평화체제 구축 문제 해결을 위한 '대타협'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 탈냉전 시대 한미 관계의 재조정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해 감.

- 남북한 군축을 대등한 입장에서 진행하기 위하여 전시 작전권 환수, 주둔국지위협정(SOFA) 개정을 위한 한미 간 논의를 준비해 나가야 할 것임.

(5) 미, 일과의 협력 속의 균형 외교

○ 미, 일 등 전통적 우방과의 협력을 견지하는 동시에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를 긴밀히 함으로써 대북 정책에 대한 지지를 지속적으로 확보해 감.

○ 중국은 남북정상회담 성사에 일정한 역할을 했음을 고려, 남북한 관계 개선에 지속적으로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함.

- 중국-대만 관계 악화가 한반도 문제와 직접 결부되어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임.

○ 러시아는 영향력이 크게 감소했다고는 하나 최소한 한반도 문제에 대한 비호적 성격의 견제 능력은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함.

- 정기적으로 동북아시아 다자간 안보협력 및 지역 경제협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

(6)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

○ 북한의 아세안 안보포럼(ARF) 가입으로 동북아시아 지역 다자간 안보 협력에 대한 북한의 자세 변화 가능성에 주목, 새로운 차원에서 다자간 안보 협력을 모색함.

- 북한은 동북아 다자간 안보 협력에 대해 전면 커무가 아니라 '시기 상조'란 입장을 밝히기 시작했으며, 이는 북미, 북일 수교 실현 여하에 따라 관

가할 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됨.

- 북한은 경제난으로 한미와의 재래식 군비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으며 독자적 방위력에만 의존하던 전략에는 한계를 느꼈을 가능성이 있음.

(7) 남북한 경제협력과 지역 경제협력

o SOC 건설 등 대북 경제협력을 위한 재원 조달은 남한의 경제력만으로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국제적인 협력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임.

- 대북 보상금 지불에 따른 북일 경제협력은 엄청난 규모에 달하는 것인 만큼, 한일간의 긴밀한 협의 하에 남북 경제협력과의 연계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대북 투자를 위한 국제컨소시엄 구성, ADB(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기구 활용, 다국간의 대북 차관단 조직 등을 모색함.

o 한중 경제 관계를 북한의 경제 재건 작업과 결합시키고 여기에 한일 경제 관계를 결합시킴으로써 북한을 매개로 한 중, 일, 남북한의 지역 협력을 모색함.

- 한중 협력 하에 북한이 중국의 개혁-개방 경험을 살려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며 여기에 남한의 고도성장 경험을 결합시킬 수 있는 협력 틀을 검토함.

-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한일경제협력의 경험을 남북한과 일본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함.

o 중장기적으로 남북한 경제협력이 본격화됨에 따라 단력이 물게 될 동북아시아 지역을 단위로 한 지역 경제 협력에 적극 대비함.

- 한반도를 통해 일본과 아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철도, 도로 등 물류망 형성이나 동아시아 정보네트워크 등 일련의 구상이 남북한 대치 상태로 인해 그 추진이 불가능했음.

- 환황해경제권, 환동해경제권 등이나 동아시아 에너지 공동체 등 동아시아 지역 경제협력을 위한 다양한 구상도 한반도 냉전 구조 지속이 그 실현에 장애의 하나가 되었음.

참고자료

최근의 미일중 관계: 일본의 태미, 대중 관계를 중심으로

서 동 만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1. 미일중 관계의 의의

가. 동아시아와 미일중 관계

○ 20세기 이후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제질서는 주로 미국, 일본, 중국의 3국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으며, 3국간 상호 관계는 21세기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장래에 대해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임.

○ 미일중 3국은 한반도의 남북한 각각과 정치, 군사,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들 상호 관계는 남북한 관계의 장래와 한반도 통일에 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임.

○ 70년대 미중 접근 및 일중 국교정상화 이후 소련에 대항하는 제휴 관계협력 관계를 맺고 있던 미일중 관계는 소련 해체 및 전 세계적인 냉전 붕괴 이후 새로운 구도를 보이지 못하고 유동적인 상태에 있음.

○ 불확실한 미일중 상호 관계로 인해 탈냉전 시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국제질서도 뚜렷한 질서를 형성하지 못하고 불안정한 양상을 드러내고 있음.

○ 최근 미일의 전역미사일(TMD) 개발 개시, 미국의 유고 중국대사관 폭격 사건 등으로 미일과 중국 사이에는 긴장 관계가 조성되어 일부에서는 동아시아 '신냉전' 도래에 대한 경계가 높아지고 있으며, 한반도 정세에의 그 파급 효과가 우려되고 있음.

나. 미일중의 상호 경제 관계

○ 미일중 상호 간 경제 관계는 정치·군사 관계를 넘어서 다른 어떤 국가보다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

○ 미국은 중국의 제2위 무역상대국, 제4위 대중 투자국이며, 중국은 미국의 제3위 무역상대국임.

○ 일본은 중국의 제1위 무역상대국이며, 중국은 일본의 제2위 무역상대국임. 중국은 일본 ODA의 제1위 수혜국임.

○ 미국에게 일본은 제2위의 수출상대국, 제2위의 수입상대국(제1위 캐나다)이며, 일본에게 미국은 제1위의 수출상대국, 제1위의 수출상대국임. 미국에 대한 일본의 직접 투자액(자산, 부채, 국제수지 총계)은 전체의 37.6%로서 제1위임.

○ 일본과 중국은 달러 보유고에서 전 세계 제1, 2위를 달리며 미국 정부 채권 보유에서도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다. 한반도와 미일중 각각의 관계

○ 미일은 남한의 우방국으로서 미국은 정치·군사적인 동맹 관계에 있고, 일본은 가장 긴밀한 경제 협력 관계에 있음.

○ 중국은 북한의 유일한 군사동맹으로서 북한에 대한 최대의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 있음. 중국은 수교 이래 남한과도 밀접한 교역 상대국으로서 우호 관계를 맺고 있음. 미일중 가운데 중국만이 남북한과 동시에 수교를 맺고 있음.

○ 미국은 북한과 국교를 맺지 않은 최대의 적대 국가로서 핵 문제 타결 이후는 미사일 문제로 계속 대치 상태에 있음. 그러나 미국은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을 통해 국제사회와 북한과의 채널 역할도 하고 있음.

○ 일본도 북한과 국교를 맺지 않고 적대 관계를 지속하고 있으며, 일본인 납치사건, 미사일 문제로 북한과의 관계가 악화하고 있음. 다만 일본은 냉전 시대의 부분적인 정경분리 정책에 따라 일정한 수준에서 북한과 교역 관

계를 유지하고 있음.

○ 미국은 북한과의 제네바 핵 합의의 체결 당사자로서 북한에 대한 경수로 지원 사업(KEDO)에 남한, 일본과 함께 이사국으로 참여하고 있음. 일본은 미국, 한국과 함께 대북 정책을 위한 협의회에 참여하고 있음.

○ 미국과 남한, 중국과 북한은 한국전쟁에서 서로 직접 군사적인 대결을 벌인 바 있으며, 한반도 휴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4자 회담에 함께 참가하고 있음. 일본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6자 회담을 제안, 이에 대한 개입을 원하고 있는 상태임.

2. 미일방위협력 지침과 일본의 대미, 대중 관계

가. 일본의 역할 확대와 미일 협력 관계

(1) '樋口(히구치) 리포트'에서 '나이 이니셔티브'로

○ 90년대에 들어서 탈냉전 시대 일본의 대외 전략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작업이 계속 되어 호소카와 연립 내각 당시 발표한 방위문제간담회가 이를 추진 94년 8월 이른바 '히구치 리포트'로서 발표되었음.

○ 히구치 리포트는 서술 상 미일의 2국간 동맹보다 다자간 안보협력의 상위에 두고, 자립적 방위를 강조하였으며, 아시아를 중시하는 논조가 두드러진 점에서 미국에 경제성을 불어넣으리게 됨.

- 냉전 이후 일본 군사력의 수준을 규정하는 '신방위대강'은 미일의 협의를 통해 작성되었으나, 내용적으로는 히구치 리포트를 수용한 것임.

○ 미국에서도 클린턴 대통령의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서 냉전 이후 동아시아 전략을 재정립하는 작업이 국무차관보 조셉 나이의 주도로 진행되어 95년 2월 '나이 리포트'로서 발표되었음.

○ 나이 리포트에는 일본의 독자화를 우려하는 인식 이외에도 89년 원안문 사태 이후 중국을 위협으로 재평가하는 인식, 91년 이라크 전쟁 당시 일본이 군사적 역할을 수행할만한 국내적 태세를 갖추지 못한 데 대한 비판, 94년 북한의 핵 의혹을 둘러싼 한반도 핵 위기 당시 일본의 후방지원 태세가 제대로 가동될 수 없었다는 데 대한 불만 등이 반영되어 있었음.

- 나이 리포트는 향후 20년에 걸쳐 아시아의 전방전개 능력으로서 10만 미군 병력을 유지한다는 것, 이의 유지와 운용을 지원하기 위해 미일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미일동맹의 역할을 종래 일본 방위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확대한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음.

- 이밖에 나이 리포트의 특징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다자간 안보협력의 적극적 의의를 정식으로 인정했다는 데 있음.

(2) 오키나와 미군 기지 문제

○ 나이 리포트에 입각하여 미일방위협력 지침 개정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오키나와 미군 기지 주변에서 미군에 의한 일본인 소녀 폭행 사건이 발생, 오키나와 미군 기지 축소, 이전 요구가 일본 전역으로 확산됨.

○ 오키나와 미군 기지 문제는 미일안보협력의 근간을 뒤흔든 사건인 만큼, 미국, 일본 정부 모두에게 큰 충격을 주었음.

○ 하시모토 총리는 미군 기지 사건으로 악화된 국민 여론을 지렛대로 하여 미국으로부터 일부 기지의 축소, 이전 약속을 받아냄으로써 오키나와 현 측과의 협상을 재개하였음.

- 기지 문제를 둘러싼 협상 과정에서 미국 내에서도 오키나와 주둔 미 해병대의 분포 이동론이 제기되는 등 탈냉전 시대 주일 미군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제기됨.

(3) 미일방위협력 지침 개정

○ 1996년 4월 클린턴 대통령이 방일, 하시모토 총리와 '미일안보보장공동선언'이 발표되었음. 미중일 관계에서 보면, 선언이 명기한 미일방위협력 지침 개정은 두 가지 계기를 포함하고 있음.

- 1. 미, 일이 탈냉전 이후 중국을 위협으로 인식하게 되고, 이에 대항하기 위해 일본의 군사적 역할을 확대시킨다는 것임.

- 2. 경제력에 겹맞게 정치-군사대국화 하는 일본을 미일안보 틀 속에 묶어둠으로써 미국으로부터 독자화 하려는 움직임을 견제하는 것임.

○ 미일안보 관계의 수정은, 미일 관계에서 보면, 미국이 일방적으로 주도하기보다는 일본과 미국이 각각 별개로 착수한 탈냉전 시대 대외 전략을 재

전도하려는 움직임이 상호 작용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것임.

나. 일중 관계의 긴장과 협력

(1) 중국의 반발

○ 미일방위협력 지침 개정에 대해 중국은 당초 냉정하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으나, 이를 둘러싼 논의가 구체화됨에 따라,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일본 자위대의 역할과 행동 범위를 확대하는 데 대해 경계를 표명하며 이것이 '중국 위협론'에 입각한 중국 봉쇄정책이라는 인식을 보이기 시작함.

- 중국의 아시아 정세에 대한 인식은 전 세계적으로 '一超多强'임에도 불구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는 '多極化'가 진전되고 있다는 낙관적인 것이었음.

- 중국은 타국에 대한 외국 군 주둔에는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아시아 지역 내 미군 주둔과 비밀안보 관계가 일본의 군사독재화와 핵무장을 견제하는 역할도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

○ 중국은 나아가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상정하는 '일본 주변유사'에 대만 이 포함되는지에 강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함. 특히 97년 8월 일본의 가지야마 관방장관이 대만 해협의 긴장 사태가 이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발언하자, 이것이 아시아 지역 내 '미일공동패권' 추구로 여겨질 수도 있다고 간주하게 됨.

- 중국은 종래 참가에 소극적이던 아시아지역 안보포럼(ARF)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미일의 신안보 관계가 냉전적인 것이라는 비난을 강화함.

(2) 대만, 중국 핵실험, 센카쿠(尖閣) 열도 문제

○ 95년 6월 리덩후이 대만 총통의 미국 방문에 반발한 중국은 95년 7월 대만 해협에 대한 미사일 발사 실험을 감행하였고, 이어서 96년 3월 대만 최초의 총통 직접 선거를 앞두고는 다시 미사일 실험을 강행, 미국은 항공모함 두 척을 대만 해협에 파견함.

- 94년 봄 히로시마 아시안 게임에 대만 행정원 부위원장의 참석에 대해 중국은 일본에 강력히 항의한 바 있음.

○ 95년 봄 일본의 반대 표명에도 불구하고 강행된 중국 핵실험에 대해 일본 국회는 항의결의를 하고 정부는 대부분의 무상자금협력을 동결하는 조

치를 취하였음.

- 중국은 일본이 미국의 핵우산 아래 있으면서 경제를 정치에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함.

- 1996년 11월 일본 우익 단체 구성원들의 센카쿠열도 점거 사건은 중국의 분노를 사고, 반일 감정은 홍콩, 대만으로까지 확산되었음.

(3) 일본의 대중 협력 재개

- 1996년 말부터 일본의 대중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 적극화되어 양국 총리의 상호 방문이 약속되고, 일본은 연기되고 있던 96년도 문 연 차관 1705억 원 제공을 결정하고 97년도부터는 중단된 무상자금 협력도 재개되었음.

- 위임 당초 중국에 대한 강경 정책을 천명하고 있던 미국 클린턴 행정부는 '건설적 관여' 정책으로 전환해 가고 있었음. 중국은 '시장 카드'로 대미 관계 개선을 꾀하였고, 미국 제제도 클린턴 행정부에 대해 대중 경제 관계 강화를 요구함.

- 일본은 미국이 중국에 대해 지나치게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데 대해서는 거리를 두고 있었음.

- 1997년 9월 하시모토 총리가 중국을 방문, 광저민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두개의 중국',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 미일 가이드라인은 특정지역을 상징하는 지리적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밝혔음.

- 하시모토 총리는 과거 일본이 만주사변을 일으켜 침략하였던 중국 동북 지역을 방문함으로써 과거사와 관련된 중국의 감정을 완화시키려고 노력함.

- 일본은 이미 약속한 연 차관 제공을 공식화하고 중국의 인프라 건설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하였음.

(4) 일미간의 대중 안보 인식 차이

- 일본이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이었던 때에는, 미일방위협력 지침 개정을 통해 중국에 대한 견제에서 미국과 보조를 같이하면서도, 미국과는 다른 중국에 대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인식이 반영되어 있음.

- 일본은 미국과는 달리 같은 동아시아 지역 내에서 중국과 지정학적으로 근접해 있음. 중국과의 군사적 갈등 관계는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미

국에 비해 훨씬 직접적인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일본은 중국의 경제 근대화 과정에 깊이 참여, 개발, 투자 및 교역에서 미국보다 훨씬 깊은 상호의존 관계를 형성해 왔음.

- 중국은 일본에 이어 동아시아 제2의 에너지 소비국으로서 이미 에너지 수입국으로 전환해 있으며, 장기적으로 일본과 중국의 에너지 협력 없이는 두 개의 경제 대국이 공존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됨.

- 중국의 경제 개발과 함께 환경 오염이 심각해지며 일본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게됨에 따라 중국과의 환경 협력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함.

- 70년대 이후 일본의 '종합안보' 개념은 중국과의 관계를 크게 의식한 것이며, 여기에는 미국과는 다른 안보 인식이 가로놓여 있음.

3. 동아시아 경제위기와 일미, 미중 관계

가. 일미 관계의 갈등

(1) 동아시아 경제위기와 일본의 기여

- 97년 후반 타이,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금융 위기는 한국까지 엄습하게 됨으로써 전통적으로 일본 경제와의 연관성이 강한 이 지역의 경제 위기는 일본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었음.

- 일본은 IMF를 통한 구제 금융 조치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으며, 타이, 인도네시아, 한국에 대한 신용 공여에서 총액 190억 달러에 달하는 기여를 하였음.

- 미국의 기여는 80억 달러 정도에 머물렀음.

- 일본은 국제 기구를 통한 자금 제공이 일단락되자, 양국 간 베이스로 타이와 인도네시아에 대해 IMF 지원과는 별도로 무역 신용, 투자 금융, 인도적 원조를 포함한 포괄적 지원책을 시행하였음.

(2) 일본의 아시아 통화기금(AMF) 제안

- 타이, 인도네시아에 대한 구제 금융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게 된 일본은 97년 9월 IMF에 대한 보완물로서 아시아통화기금(AMF) 창설을 제안함.

- 일본 정부는 AMF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을 공표하지는 않았으나, 총액 1천억 달러 규모로 이 지역 내 1국의 외환 위기가 다 국가로 확대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기금을 창설하자는 제안임.

o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IMF의 자금 제공 조건이 까다롭다는 이유에서 AMF 제안을 지지하는 태도로 나왔음.

o 미국은 IMF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고 제공되는 자금 틀은 이 지역에 '도일 해저드'를 야기함으로써 각국의 구조 개혁에 대한 외적 압력을 완화시키는 부작용을 낳게 된다는 이유로 반대 의사를 표명함.

- 미국의 반대 이유는 AMF 제안이 IMF의 권위를 약화시켜 결과적으로 이 지역 내 일본의 영향력을 확대함으로써 미국의 이익을 해칠 것이라는 데 있었다고 할 수 있음.

(3) 미국의 압력과 일본의 저항

o 일본의 AMF 제안이 미국의 맹렬한 반대로 수그러든 뒤, 97년 말부터 미국의 대일 경제 정책이 전환하기 시작함. 아시아 금융 위기에 대한 일본의 대외적 대응에 초점을 맞추었던 미국의 관심은 일본의 국내 경제로 향하게 되었음.

o 미국은 일본의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취약한 국내 금융 시스템이 아시아 경제의 회복에 대한 최대 장애라고 비판하기 시작함.

- 일본은 이에 대해 아시아 경제 위기가 일어난 원인은 아시아 경제의 시스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단기 자금의 급속한 이동을 통제할 수 없었던 데 있으며, 아시아 금융 위기가 곧이어 아시아와 달리 개방금융 체제인 러시아나 브라질로 확산된 데서 실증된다고 반박함.

- 일본 국내 경기 대책에 대해서도 소폭의 경기 무양쪽으로 대처하면서 막대한 재정 적자를 해소하는 재정 재건책이 우선한다는 입장을 고수함.

o 미국은 연화 환율 변동에 대한 대응책을 무기로 감세를 통한 일본의 국내 경기 부양 및 부실채권 정리를 통한 금융 개혁을 요구하는 공격적 자세로 나옴.

- 일본은 매일방위협력 지침 개정에 따른 국내법 정비(주변사태법 등 제정) 작업을 참의원에서 자민당의 과반수 미달이란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는 태

도를 보임.

나. 미중 관계의 접근과 일본의 대응

1) 일본의 쇼크

○ 98년 6월25일-7월3일 클린턴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과거와 달리 일본을 거치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일본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음.

- 일본 내에서는 'Japan bashing'이 'Japan passing'을 거쳐 'Japan nothing'에 도달했다는 자조적인 표현까지 나올.

○ 미국은 중국과의 공동성명에서 '건설적 전략 파트너십' 관계를 선언하고, 후호 관계를 무시하였음.

- 클린턴 대통령은 아시아 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보여준 중국의 위안화 가치 유지에 대한 책임감에 찬사를 보내고, 이에 반해 일본의 노력이 부족한을 비판하였음.

- 클린턴 대통령은 '三不 원칙'(두개의 중국, 대만 독립, 대만의 유엔 가입 등 세 가지를 지지하지 않음)을 확인함으로써 미국의 대만 정책에 대한 중국의 의심을 해소시키려 하였음.

- 미국 내에서는 탈냉전 시대 미국의 전략적 제휴 상대가 일본에서 중국으로 전환한 것이라는 극단적인 해석까지 제기됨.

2) 일본의 대중국 제스처

○ 일본은 미국에 대한 반발과 함께 98년 7월 장쩌민 주석의 일본 방문을 앞두고 중국에 배려하는 제스처로서, 미국과의 TMD공동연구 참가를 위한 기금을 99년도 예산안에 상정하려던 방침을 취소하였음.

○ 98년 7월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었던 장쩌민 주석은 중국 양쯔강 연안 지역에 일어난 대수해를 이유로 방문 계획을 연기함.

- 중국 측의 연기 방침은 나름대로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었으나, 일본측에 상당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킴.

(3) 일본의 '미야자와 플랜'과 국내 경기 대책

○ 결국 일본의 오무치 내각은 무실채권 정리를 통한 금융개혁에 나서고, 공공사업 확대 및 감세 조치를 포함한 전후 최대의 케인즈주의적 경기부양책을 발표함으로써 미국의 압력을 수용한.

- 여기에는 미국의 외압을 활용하여 일본 국내 경제 문제를 해결한다는 주체적인 측면도 개재되어 있음.

○ 일본은 미야자와 내각상 이름으로 아시아 금융 위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총액 300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준비하는 이른바 '미야자와 플랜'을 발표하고, 이를 장기적으로 '엔 국제화'로 연결시킨다는 의사를 밝힘.

- 이는 국내 금융 시스템 개혁에 착수함으로써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동시에, 엔 국제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아시아 경제에서 일본의 주도권 확보 정책을 양보하지 않겠다는 것임.

4. 미일의 TMD 개발연구와 NATO 음고 공격 이후

가. 미일 관계의 회복

(1) 일본의 TMD 공동연구 참가와 정찰위성 도입

○ 98년 8월 북한의 일본 상공에 대한 '인공위성' 발사는 일본 내에 '미사일 쇼크'를 불러일으키며 일본 전역에 충격을 줌.

○ 일본은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TMD 공동개발을 위한 연구에 정식으로 참가할 뜻을 밝혔음.

○ 일본은 북한 미사일 정보를 미군에 의존해야 하는 현실을 비판하고 일본의 독자적인 정보 수집능력을 높이기 위한 의도에서 정찰위성을 보유할 방침을 정하는 동시에, TMD 참가를 대가로 이에 대한 미국 측의 양보를 얻어냈음.

(2) 보수연립 정권의 성립

○ 참의원 선거 패배에 이어 금융개혁 관련법안 통과를 둘러싸고 수세여 물렸던 자민당은 자유당과의 연립 및 공명당과의 제휴를 통해 상황을 타개하

는 데 나섬.

- 자민당 내 주도권은 온건 리버럴 연합 추진 세력에서 보수 연합 주도 세력에게로 넘어감.

- 오부치 내각이 보수 연합 정권을 추진한 의도는 주도권 확보 이외에도 미일방위협력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한 참의원 과반수 확보에 있었음.

- 묵환의 '인공위성' 발사 사태로 야기된 일본 내 군사적 감정 흐름이 보수 연합 내각 성립에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해 주었음.

(3) 방위협력지침 관련 법안의 성립

- 일본 내에 형성된 보수적 분위기는 미일간 합회사항인 방위협력지침 개정에 따른 국내 제도적 정비 작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었음.

- 사민당, 공산당을 제외한 민주당, 공명당도 이를 기본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으로 돌아서게 됨.

- 방위협력 지침 관련법안의 성립을 계기로 경제 문제로 갈등 관계에 있던 미일 관계는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었음.

- 99년 5월 오부치 총리는 방미, 클린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일본이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동질적인 가치에 토대를 둔 우호 관계임을 강조하였음.

- 이러한 일본 측 자세는 다분히 중국과의 차이를 의식한 제스처어라고 해석됨.

나. 일중 관계의 악화

(1) 강제된 일본 방문과 역사 문제

- 98년 11월 강제된 주석의 일본 방문은 덩샤오핑의 방문이래 최초로 이루어진 중국 정상 방문으로 냉전 이후 일중 관계 개선에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었음.

- 이 방문은 92년 일본 원형이 중국 방문 이후 처음으로 실현된 중국 정상의 방일로서 시기적으로도 '일중평화우호조약' 체결 25주년에 해당함.

○ 오부처 총리는 김대중 대통령과의 한일 공동선언에서 표현한 수준으로 일본의 중국에 대한 과거사 사죄를 공동선언에 명기해 달라는 중국 측 요구를 거부하고, 구구로만 표현함으로써 중국 측의 불만을 사게 된.

· 일본이 이 쟁점에서 한중 양국에 대해 차별적인 대응을 한 것은 한중 양국이 일본의 과거사 문제로 공동 전선을 펴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였다고 볼 수도 있음.

○ 중국의 강세면 주석은 방일 기간 내내 일본의 과거사 문제를 거론함으로써 일본과의 불편한 관계를 숨기지 않았음.

· 중국은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자세가 일본 정치의 권람적 보수화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하고 이에 강경 대처한 것으로 보임.

· 중국은 일본이 미국과의 TMD공동연구에 참가하고 군비 증강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한 견제로서 역사 문제를 강조한 것으로 여겨짐.

12) 일중 '특수 관계'의 전환

○ 장쩌민 방일에서 일본과 중국은 공동선언을 채택, '평화와 발전을 위한 우호협력 파트너십'을 선언하였음.

· 일본은 중국의 WTO 조기 가입을 지지하고, 양국은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대량 파괴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 동아시아-중앙아시아-유럽을 잇는 '유라시아 랜드 브리지' 구상 등에 합의하였음.

· 양국 수뇌의 매년 상호 방문, 안보협의를 위한 국방장관의 상호 방문, 제4차 연 차관의 후반기 부분으로서 3천9백억 엔의 ODA 제공, 3년 간 1만5천 명의 청소년 상호 방문을 포함한 인적 교류 등에 합의하였음.

○ 장쩌민 방일을 통해 일본은 앞선던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 확인한 바 있는 대만에 대한 '삼불 원칙'을 선언하기를 거부함으로써 미국과는 독자적인 입장을 취하였음.

· 이러한 일본의 자세는 미일방위협력 지침 개정에서 설정된 '周邊有事'가 지리적 개념이 아니라 상황적 개념으로 대만 해협의 분쟁을 직접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일본 측 해명에 대한 중국 측의 의심을 증폭시킴.

○ 일본의 의도는 과거 냉전 시대 이래 일본의 중국에 대한 부채 의식에 의거한 이른바 일중 '특수 관계'를 지양하고, 대등한 입장에서 중국을 상대하

는 관계로 전환시키려는 데 있음.

-일본은 자신의 정치 대국화를 실현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일중 관계를 양국간 관계를 넘어서 미국, 러시아도 포함한 '대국간 관계'의 일부로 편입시키려 하며, 그 전 단계로서 중국과 정치적으로 대등한 관계를 꾀해가는 것임.

- 일본 정치의 보수화 외에도 일본에서는 일중 국교정상화를 성사시켰던 戦前 세대 정치인이 물러가고, 새로운 전후 세대가 등장함에 따라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3] 미중 관계의 악화

○ 플린턴 중국 방문으로 우호 관계를 과시하던 미중 관계는 미국 국내 정치의 변수가 작용하여 중국인의 미국 핵 기술 절취 문제, 중국 인권 문제가 표면화함으로써 다시 갈등 관계에 빠지게 됨.

○ 주중지 총리는 갈등이 심화되는 미중 관계에도 불구하고 미국 방문에 나섬으로써 미국 내 반 중국 정서를 완화시키는 데 일정한 기여를 함.

- 중국의 WTO 가입 협상은 성사되지 못하였으나, 99년 하반기까지 다시 협상에 들어가기로 합의하였음.

○ 중국은 미국 비난을 강화하여 미국의 유고 중국대사관 폭격에 대한 미국 측 해명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사태의 진상 조사를 요구함.

- 중국 내 반미 내셔널리즘이 확산되면서 중국 정부는 이러한 움직임이 정부에 대한 비판적 여론으로 바뀌는 것을 우려하고 있음.

○ 중국은 NATO의 유고 폭격 이후 미일방위협력 지침 개정이 동아시아의 NATO화로 연결된 것인지에 대해 심각히 우려하고, 향후 정세의 추이를 지켜보며 대응 전략 수립에 부심하고 있다고 여겨짐.

○ 중국은 폭격 사태 이후 미국에 대한 비난을 강화하며 장쩌민 방일 이후의 일본에 대한 비난은 자제하는 태도를 보임.

- 과거에도 중국은 미, 일을 양면의 적으로 삼고 동시에 비난하는 것은 피해 왔으며 미, 일에 대한 분리 대응을 피해 왔음.

○ 일본은 미중 관계 악화가 일본으로 확산되는 것을 우려, 사태의 진정을 꾀하며 관망하고 있다고 추측됨.

5. 평가 및 고려 사항

가. 평가

(1) 미국 주도의 3각 시소 게임

- 미중일 3각 관계에서 주도적인 행위자는 미국이며, 일본과 중국은 이에 반응하는 하위 행위자로 나타나고 있음.

- 미국은 미중일 관계에 대한 뚜렷한 비전을 가진 것은 아니며, 미국의 해계모니를 유지하는 동시에 일본과 중국의 아시아 지역 내 패권 추구를 저지한다는 세력 균형적 발상을 지니고 있음.

- 미국의 대일 전략은 군사적으로는 일본의 정치-군사대국화 요구를 부분적으로 수용하면서 동시에 미일동맹으로부터의 독자화 움직임을 견제하는 것임(부분 수용, 부분 견제).

- 이는 중국에 대한 철저한 군사적 견제와 맞물려 있음.

- 미국의 대일 전략은 경제적으로는 일본의 아시아 지역 내 주도권 추구를 철저하게 견제하는 것임.

- 이를 위해서는 일본을 건너 뚫어 중국과의 관계 개선도 서슴지 않고 있음.

- 중국의 위안화 가치 유지를 전제로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통해 일본이 주도하는 지역 경제협력에 대한 참가를 견제함.

- 대미 관계에서 오는 경제적, 군사적 합의 한계를 인식하여 일본은 미일 협력 관계를 견지하며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되, 실리를 확보하는 정책을 펴고 있음.

(2) 중국의 경제 성장과 일본의 군사적 역할 증대

- 정치-군사대국으로서 중국은 경제 대국을 지향하고 있으며, 경제 대국으로서 일본은 정치-군사대국을 지향하고 있음. 이러한 양국이 지닌 국력의 비대칭성이 양국 간 관계나 양국의 대미 관계에서 주된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음.

- 미국과 정치,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인 일본은 미일 동맹 전지를 전

제로 미국으로부터의 독자적 움직임이 장기적 추세일 수밖에 없으며, 정치-군사적으로 미, 일과 거리를 두고 있던 중국은 미, 일과의 경제적 연계 움직임이 장기적 추세가 되고 있음.

- 일본과 중국의 접근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일본의 미국에 대한 독자화로 비치고 있으며, 미국은 양국의 급속한 접근은 아시아 지역으로부터 미국 영향력의 후퇴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지니고 있음.

- 이러한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해서 일본은 미중일 간의 다자간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전략에 최대한 힘을 기울이고 있음.

- 장기적으로 공식적인 미중일 협력 관계의 틀을 형성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 기업인, 전문가, 관료 등이 참가하는 '트랙 2' 성격의 각종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음.

- 일본은 정치-군사대국이 되기 위한 필수적 조건을 유엔 안보리상임이사국 선출과 미, 일, 중, 러를 포함한 동아시아 4강회의 구성으로 간주하고 있음. 미중일 3자 협력 틀의 형성은 이러한 장기적 구상의 일환이기도 함.

3) 군사와 경제의 불일치

- 미국의 경제 대국 일본에 대한 경제적 견제와 군사대국 중국에 대한 군사적 견제는 거의 제로-섬적 양상을 드러냄. 반면 일본의 군사대국화 지향, 중국의 경제대국화 지향에 대해서는 부분 협력, 부분 견제의 이중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음.

- 일본은 미국과의 안보협력 틀을 유지하면서 정치-군사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되, 경제 대국으로서의 경제력을 활용, 중국에 대한 협력 관계를 확대해 가려 하고 있음.

- 일본은 대미 관계의 한계 속에서도 아시아 지역 내 일본의 경제적 주도권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일관해서 추진하고 있음.

- 일본은 자체의 군사대국화가 아시아 국가들에 미치는 거부감을 의식하여 그 완충제로서 다자간 안보협력을 최대한 활용하려 함.

- 반면 일본은 막대한 경제적 부담이 요구되는 환동해권 경제협력 등 지역 경제 협력에 대해서는 동남아시아와 한국에 대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금융 분야의 AMF 구상 이외에는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함.

(4) 상호 의존과 견제(경쟁과 협력)의 이중적 관계

○ 미국은 냉전 시대 동맹 전략과 군사력 우위 정책을 여전히 이 지역 전략의 기초로 하고 있으며, 중국과 일본도 이러한 기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를 더욱 강화하는 경향조차 나타내고 있음.

○ 미중일 관계는 냉전 이후에도 고전적인 세력 균형 관계가 중심이 되고 있으며, 이 지역 정세에 불안정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당분간 미중일 관계가 안정된 결서를 만들기는 어려우며, 유동적인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미중일 관계에서는 정치-군사 및 경제적 차원이 작용하는 가운데 냉전 시대와 같은 특정한 적을 상징하기도 곤란하다는 점에서 일정한 수준에서 협력과 상호의존이 증대되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음.

· 미중, 일중의 양국 간 관계에서 냉전 시대와 다른 군사적 신뢰 양상을 위한 안보대화 교류가 일정한 진전을 보이고 있음.

· 거시 지역적 차원에서 경제 협력은 무전하지만, 국지적 차원에서의 경제 교류가 전전되며 발병전에 따른 경제 협력 및 민간 교류가 확대되고 있음.

○ 상대적으로 가장 협의 한계를 느끼는 일본이 다자간 안보협력에 가장 적극적이며, 중국이 이에 대처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 소극적인 상태에 머무르고 있음.

○ 아시아 경제 위기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지역통화기구 구상이 제안되었으며,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4자 회담, KEDO가 형성되고 6자 회담이 제안되고 있음.

(5) 일본 내에서 상징되는 몇 가지 시나리오

○ 일본 내에는 현재의 미중일 관계를 정치-군사적으로 보다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미일, 이와는 거리가 있는 중국을 3점으로 하는 '이등변 삼각형'의 모습이라고 묘사하는 견해가 있음.

· 세 변은 연동하며 어느 한 변의 변화도 다른 한 변에 영향을 미치게 됨.

· 이 이등변삼각형은 한 쪽을 적으로 하는 냉전 시대의 동맹 관계와도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음.

○ 이러한 이등변삼각형이 장래 어떠한 모양으로 변화할 지에 대해서는

몇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함.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유동적인 관계가 지속될 것이란 시나리오 외에 다음과 미래가 예상되고 있음.

○ 첫째로 중국이 급속한 경제 발전을 이룩하고 군사적 근대화를 실현함에 따라 중국위협론이 현실이 되어 미일이 중국을 포위하는 동맹을 강화하는 관계로서 '더욱 폐각적인 이등변삼각형'의 모습을 띌 수 있음.

- 이른바 '신냉전'의 도래라 할만 한 것으로 일본과 중국의 군비 경쟁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이 미국에 버금가는 '초대국'으로 성장하여 미국과 대치하고 일본은 지역 대국으로서 하위 파트너가 될 수도 있음.

○ 둘째로 미국이 이 지역 내 영향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중국이 미, 일과의 국력의 차이를 좁히고, 일본은 미국에 대해 점차 정치적으로 대등해짐으로써 일본이 미, 중 양국에 대해 등거리의 '전방위 외교'를 전개하여 3국간에 '정삼각형'의 경쟁-협력 관계가 성립하는 것임.

-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따른 중일 간 경쟁과 함께 아시아 지역 내 미군의 성격 변화 등이 초점으로 부각될 것임.

○ 셋째로 중국이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고 일본이 정치-군사대국의 위치를 확립하는 가운데, 일중 관계가 접근하는 반면 미국 세가 퇴조함으로써 미국이 가장 멀리 위치하는 '미중의 위치가 뒤바뀐 이등변삼각형'의 모습을 가질 수 있음.

- 이 시나리오 하에서는 미군 철수와 일본의 핵무장이 필연적인 것으로 상정됨.

○ 위의 시나리오 가운데 신냉전 상황을 제외하고는 다자간 안보협력이 계속 모색될 것이며, 이 지역 내 평화와 안정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 것으로 여겨짐.

나. 고려사항

1) 남북한 평화 공존 및 한반도 냉전 구조 해체

○ 미일과 중국 사이의 대결 상황은 한반도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침으로써 남북한 관계 개선과 장기적으로 한반도 통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한반도 문제가 대결 구도의 구실이 되지 않도록 남북한 관계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함.

○ 거꾸로 한반도 평화와 남북한 관계가 미일-중 관계 변화에 균형자 역할을 할 수도 있음을 고려하여 한반도 냉전 구조 해체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함.

(2) '포괄적 안보'

○ 정치-군사적 경쟁 관계와 함께 경제적 상호의존 및 협력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아시아 경제 위기 이후 경제 분야가 국제 관계의 중요한 축이 되어 가고 있음을 감안하여 종래의 군사 안보 중심의 사고를 전환하여 경제 안보의 비중을 증대시킴.

- 정치·군사 관계에 대한 경제 관계의 상대적 독자성과 그 비중 증대가 정치·군사 외교에 치중해 온 한국 외교의 독자적 공간을 확대시킬 수 있음에 유의함.

○ 정치, 군사, 경제 이외에 환경 안보, 인간 안보 등 비전통적인 안보 분야를 포함한 '포괄적 안보' 개념을 확립, 정책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요구됨.

(3) 전략적 틀 속에서의 독자 외교 강화

○ 미국의 동맹 전략이 유지되는 가운데 장기적으로 일본의 독자적 움직임이 증대되고, 중국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여, 기존의 한미 동맹의 전략적 틀을 견지하되 한미 관계에서 한국의 비중을 높이고 한일, 한중 관계에서 독자적인 위상을 확립하도록 노력해 감.

○ 불안정한 미일중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하여 한국의 선택 범위를 넓히가기 위해 외교적 공간을 확대해 가는 한편, 대국간의 파워 게임에 끌려들어 감으로써 국익이 손상되지 않도록 실사구시 정신에 입각한 균형 있는 입장을 견지함.

(4) 다자간 안보협력 및 지역 경제협력

○ 다자간 안보협력은 현실적인 진전은 완만하면서도 그 당위성에 대한 인식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여 일관성 있게 추진하되, 그 실

현을 위한 방안을 가능한 것부터 착실하게 검토함.

- 다자간 안보협력을 위한 장기적인 시야에 서서 한일, 한중, 한러 군사대화를 진행시킴.

○ 이미 형성되고 있는 교역 분야의 지역 경제 협력을 금융 분야 등 다른 분야로 넓혀 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함.

(5) 시민사회 및 지적 네트워크의 구축

○ 국가 간 갈등 관계를 완화시킬 수 있는 시민사회 차원의 다양한 채널을 확대시켜 감.

- 일본이 갈등 속에서도 중국과의 관계에서 진행해 온 지방자치체, 청소년, 문화 등 민간 교류, 협력 등이 양국의 상호 이해를 넓히고 갈등을 완화시키는 데 기여해 온 점을 참고로 하여 기존의 한일 관계 뿐 아니라 한중 관계에서도 이를 위한 노력을 대가해 감.

○ 국제적인 상호 관계에서 인식 공동체(epistemic community) 형성의 중요성이 높이 평가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하여 공식 외교에 대한 '트랙 2'의 비중을 높이고 정책 담당자, 전문가, 학자 간 접촉, 의견 교환의 장을 넓혀가도록 함.

요약

20세기 이후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제질서는 주로 미국, 일본, 중국의 3국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으며, 3국간 상호 관계는 21세기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장래에 대해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미일중 3국은 한반도의 남북한 각각과 정치, 군사,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들 상호 관계는 남북한 관계의 장래와 한반도 통일에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불확실한 미일중 상호 관계로 인해 탈냉전 시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국제질서도 뚜렷한 질서를 형성하지 못하고 불안정한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더구나 최근 미일의 전역미사일(TMD) 개발 개시, 미국의 유고 중국대사관 포격 사건 등으로 미일과 중국 사이에는 긴장 관계가 조성되어 한반도 정세에의 그 파급 효과가 우려되고 있다.

미중일 3자 관계에서 주도적인 행위자는 미국이며, 일본과 중국은 이에 반응하는 하위 행위자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은 미중일 관계에 대한 뚜렷한 비전을 가진 것은 아니며, 미국의 헤게모니를 유지하는 동시에 일본과 중국의 아시아 지역 내 패권 추구를 저지한다는 세력 균형적 발상을 지니고 있다. 미국의 대일 전략은 군사적으로는 일본의 정치-군사대국화 요구를 부분적으로 수용하면서 동시에 미일동맹으로부터의 독자화 움직임을 견제하는 데 있으며, 이는 중국에 대한 철저한 군사적 견제와 맞물려 있다. 이러한 미국의 대일 전략은 경제적으로는 일본의 아시아 지역 내 주도권 추구를 철저하게 견제하는 것이다.

정치-군사대국으로서 중국은 경제 대국을 지향하고 있으며, 경제 대국으로서 일본은 정치-군사대국을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양국이 지닌 국력의 비대칭성이 양국 간 관계나 양국의 대미 관계에서 주된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과 정치,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인 일본은 미일 동맹 견지를 전제로 미국으로부터의 독자적 움직임이 장기적 추세일 수밖에 없으며, 정치-군사적으로 미, 일과 거리를 두고 있던 중국은 미, 일과의 경제적 연계 움직임이 장기적 추세가 되고 있다. 일본과 중국의 접근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일본의 미국에 대한 독자화로 비치고 있으며, 미국은 양국의 급속한 접근은 아시아 지역으로부터 미국 영향력의 후퇴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지니고 있다.

미국의 경제 대국 일본에 대한 경제적 견제와 군사대국 중국에 대한 군사적 견제는 거의 제로-섬적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반면 일본의 군사대국화 지향, 중국의 경제대국화 지향에 대해서는 부분 협력, 부분 견제의 이중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다. 일본은 미국과의 안보협력 틀을 유지하면서 정치-군사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되, 경제 대국으로서의 경제력을 활용, 중국에 대한 협력 관계를 확대해 가려 하고 있다. 동시에 일본은 대미 관계의 한계 속에서도 아시아 지역 내 일본의 경제적 주도권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일관해서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자체의 군사대국화가 미국이나 아시아 국가들에 미치는 거부감을 의식하여 그 완충제로서 다자간 안보협력을 최대한 활용하려 한다.

미국은 냉전 시대 동맹 전략과 군사적 우위 정책을 여전히 이 지역 전략의 기초로 하고 있으며, 중국과 일본도 그 대응에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 미중일 관계는 냉전 이후에도 고전적인 세력 균형 관계가 중

심이 되고 있으며, 이것이 이 지역 정세에 불안정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미중일 관계에서는 정치-군사 및 경제적 차원이 작용하는 가운데 냉전 시대와 같은 특정한 적을 상징하기도 곤란하다는 점에서는 일정한 수준에서 협력과 상호의존이 증대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우선 미중, 일중의 양국 간 관계에서 냉전 시대와 다른 군사적 신뢰 양성을 위한 안보대화 교류가 일정한 전진을 보이고 있다. 또한 경제 교류가 전진되며 탈냉전에 따른 경제 협력 및 민간 교류도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상호의존의 심화가 이들 관계가 갈등으로만 치닫지 못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일과 중국 사이에 대권 상황이 전개되면, 한반도 정세에 막대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남북한 관계 개선과 장기적으로 한반도 통일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에서, 한반도 문제가 대결 구도의 구실이 되지 않도록 남북한 관계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거꾸로 한반도 평화와 남북한 관계가 미일-중 관계 변화에 균형자 역할을 할 수도 있음을 고려하여 한반도 냉전 구조 해체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 정치-군사적 경쟁 관계와 함께 경제적 상호의존 및 협력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아시아 경제 위기 이후 경제 분야가 국제 관계의 중요한 축이 되어 가고 있음을 감안하여, 종래의 군사 안보 중심의 사고를 전환하여 경제 안보의 비중을 증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의 동맹 전략이 유지되는 가운데 장기적으로 일본의 독자적 움직임이 증대되고, 중국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여, 기존의 한미 동맹의 전략적 틀을 견지하되 한미 관계에서 한국의 비중을 높이고, 한일, 한중 관계에서 독자적인 위상을 확립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자간 안보협력은 현실적인 진전은 완만하면서도 그 당위성에 대한 인식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여 일관성 있게 추진하되, 그 실현을 위한 방안을 가능한 것부터 확실하게 검토해야 한다.

평화의 관점에서 통일운동 보기¹⁾

김 참 수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정책실장)

평화운동의 이념과 생명

어느 누구에게도 지구를 파괴하고 인류를 멸망의 길로 이끈 권리가 없다. 세계의 반핵평화운동가들은 자신들의 2세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세계가 없어져 버릴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지니고 반핵평화운동에 나섰다. 어떤 세대 전원이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결정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는 것이다. 이 이상 더 단순한 것이 있겠는가? 어느 누구에게도 그럴 권리는 없다. 이점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구는 부모가 당신에게 준 것이 아니다. 당신들의 어린이에게서 빌린 것이다.'라는 케냐 속담처럼 이 세대를 온전히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다.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핵폭탄을 투하한지 50년이 지난 지금의 시점에서 핵폭탄으로부터 인류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여전히 과제가 되고 있다. 중국과 프랑스의 핵실험 강행은 핵을 보유한 초강대국의 핵군비 경쟁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핵시대는 지구의 파괴와 인류의 멸망을 공상과하 소실이 아닌 현실에서도 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지금 지구에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와는 비교할 수 없는 많은 양의 핵무기가 있다.

반핵평화운동의 이념은 인류의 생명, 지구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삼대성이론'으로 잘 알려진 아인슈타인은 핵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초를 세운 사람이나 열렬한 반핵운동가이기도 했다. 그는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핵무기를 만들 것

1) 이 글은 줄거 '평화만들기, 통일이우기'에서 평화와 통일에 관련된 부분을 발췌한 것입니다. 별도의 강의록을 준비하지 못한 점을 이해해주셔서 바랍니다.

을 권의한 사람이다.

“한 적의 배에서 운반되어 항구에서 폭발되는 단 한 개의 폭탄이 주위를 둘러싼 지대와 함께 전 항구를 충분히 파괴시킬 수 있습니다.” (1939년 아인슈타인이 루즈벨트에게 보낸 편지)

이렇게 핵무기 개발을 주장한 아인슈타인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참상을 보면서 일생을 반핵운동에 보냈다. 아인슈타인은 핵전쟁에 대하여 “3차대전 이후 인류가 생존하여 또 다른 전쟁 즉 4차대전을 일으킨다면 그 전쟁은 무석전이 될 것이다.”고 경고하였다. 3차대전은 핵전쟁이 될 것이고 그 결과 인류의 문명은 완전히 파괴되므로 4차대전이 일어난다면 무석전이 되리라는 두서론 경고이다.

1982년에 바티칸에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어떠한 전쟁도 필연적으로 세계적 규모의 죽음, 질병, 고난을 초래할 것이고 여기에 의학이 효과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인류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은 어떤 형태의 핵전쟁에 대해서도 그것을 사전에 저지하는 것이다.”고 핵전쟁의 예방만이 인류의 살길임을 밝혔다.

아인슈타인이나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경고는 핵시대에 인류의 생존을 위한 복음이다. 핵시대는 인류에게 죽음의 피미를 생롭게 제시했다. 지금까지는 개인의 죽음, 나아가 개인의 집합으로써 집단의 죽음이 있었다. 개인과 집단의 죽음을 가져온 것은 질병이나 굶주림, 전쟁이다.

하지만 핵무기는 과거에 있었던 개인이나 집단의 죽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죽음으로 인류를 내몰고 있다. 그것이 바로 핵전쟁이다. 지구상에는 약 2만 메가톤(Mt)의 핵폭탄이 있다. 2차대전 6년 동안 사용되었던 폭약의 폭발력은 약 5Mt 이므로 현재의 핵보유량은 실로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파괴력이다. 전세계에 비축되어 있는 핵폭탄을 남녀노소 구별 없이 50억 인구에게 골고루 나눠준다면 한 사람 당 4t의 폭아가는 엄청난 양이다. 지구상에 있는 핵무기가 사용되는 것을 가정한다면 지구는 8번 이상 파괴되고도 남는다고 한다.

그리스 디오니소스 왕의 신하 가운데 다모클레스가 있었다. 다모클레스가 왕의 행복을 지나치게 찬양하자 왕은 그를 왕좌에 앉히고 그의 머리 위에 머리칼 한오라기로 칼을 매달아 놓았다. 행복의 절정에 있는 것 같은 왕도 항상 위협

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이다. 핵무기 개발 경쟁이 계속되는 한 인류는 언제 줄어들 줄 모르는 가는 메리카락으로 매단 디모클레스의 칼 밑에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

지구상에 있는 핵무기는 인류를 완전히 파괴시키고도 남다. 핵시대의 죽음은 이론적으로는 개인이나 집단, 죽음의 아닌 인류 전체의 죽음이 가능한 것이다. 인류는 스스로 이러한 비극을 준비해 온 셈이다. 핵무기에 의해서 공상소설에서나 가능한 일들이 실제로 가능할 수도 있게 되었다. 이러한 것을 E.P. 톰슨은 절멸주의라고 했다.

“절멸주의란 인류 대다수를 절멸이 되지 않을 수 없는 방향으로 향해 나아가는 사회의 특징입니다. 절멸의 수단이 축적되고 또 완성되어 사회전체가 절멸이라고 하는 최종목표로 향하는 구조의 결과가 절멸입니다.”(빈핵, 창작파비평사)

‘빈핵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속담이 있다. 빈핵을 강대국들의 국가이익이라고 한다면 초가삼간은 인류의 생존과 삶의 터전을 뜻한다. 강대국들의 국가이익에 의해서 만들어진 핵무기가 인류를 ‘집단지살’로 내몰고 있다. 미국 대통령이었던 아이젠하워도 1956년에 이미 인류의 집단자살에 대하여 우려하였다.

“우리는 오늘날 핵무기의 파괴력에서 과거의 전쟁에서 느끼는 공포와는 전혀 차원이 다르고 새로운, 치명적인 것을 보고 있다. 인류는 역사상 처음으로 그 역사를 끝내게 할 힘을 가지게 된 것이다”

그러나 아이젠하워 시대에도 핵무기 개발은 계속되었다. 그 결과 역사를 끝내게 할 힘은 강도가 훨씬 높아졌다. 반핵운동가들은 핵무기를 [죽음으로 가는 급행열차]라고 비유하고 환경오염을 [죽음으로 가는 완행열차]라고 하였다. 죽음으로 가는 급행열차는 조금도 그 속도를 늦추지 않고 있고, 완행열차의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다. 급행열차와 완행열차의 열차의 방향을 거꾸로 돌려 인류와 지구의 생명을 지키는 힘, 그 것이 바로 평화운동이다. 평화운동의 이념은 인류와 지구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평화의 개념과 평화운동의 영역

평화운동이 인류의 생명을 지키는 운동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정립하기 위해서는 ‘평화’라는 단어가 지니는 의미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평화의 개념을 살피는 것이 인류의 생명의 위태로워지는 현실 앞에서 자칫 공허한 논의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평화’가 어떤 사실을 설명하는 개념이라기 보다는 어떤 가치를 뜻하는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는 폭압적인 통치 아래서 국민들이 겪는 고통을 미화하고 허구적인 감상성을 불러일으켜서 군사독재를 합리화하는 차원에서 평화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 즉 사회의 모순에 대한 항거보다는 독재에 대한 굴종이 평화모음으로 악용된 것이다. 이것이 평화운동이나 평화교육을 혼란스럽게 하였다. 따라서 ‘평화’라는 개념을 분명히 함으로써 평화운동의 이념적인 지향을 뚜렷이 할 수 있다.

평화는 인간의 본질적인 능력이 실현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전인적 인간의 가능성과 행복을 보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평화는 인간의 분열과 소외가 극복되고 행복이 보장된 민주주의가 고도로 발달한 상태이다. 지금까지 많은 사상가들과 종교인들이 평화를 정의해 왔다. 이러한 노력에 기초해서 제2차 바티칸 공회의 ‘현대 세계의 사목헌장’에서는 평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만이 아니요 적대세력간의 균형유지만도 아니며, 전체적 지배의 결과도 아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평화는 정의의 실현이다. 더욱 완전한 정의를 갈망하는 인간들이 실현해야 할 그 질서의 현실화가 바로 평화이다.”

그러므로 평화는 폭력, 억압, 공포, 위협에 의해서 강요된 질서나 강자가 약자를, 물질적인 부를 가진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을 지배하는 질서가 아니다. 공동표지의 고요나 강요된 질서는 생명의 죽음만을 의미할 뿐 결코 평

화라고 말할 수 없다.

그렇다면 평화는 인간의 내면적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자연의 관계, 인간과 국가의 관계, 국가와 국가의 관계에서 생명이 서로 어울리는 상태를 뜻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인간의 내적인 자아가 성숙되지 않을 때 개인에 의한 사회의 균형이 파괴되는 행위가 발생한다. 어울림이 깨질 때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불평등이 발생하고, 인간과 국가의 관계에서 억압이 발생하고, 국가와 국가의 관계에서 종속이 발생하며, 인간과 환경의 관계에서 생태계의 파괴가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평화운동은 어울림의 파괴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으나 권리는 상대적 가치의 총화로서 구성된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평화문제 역시 역사적 조건에 의해서 본다면 당연히 상대화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역사적 과정 속에는 상대성을 거부하는 절대성은 성립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인류가 직면한 온갖 재난과 갈등 가운데서 상대적으로 평화운동의 영역을 규정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핵무기 위협과 환경파괴가 가장 핵심적인 것이다.

남과 북이 합의 체결에 의해 중단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 역시 평화가 아니다. 한반도의 역사적 조건 아래서는 분단상태의 지속이야말로 민족의 생명을 파괴하는 구조이다. 남북한이 분단되면서 반평화적인 상황이 만들어졌다. 남북한의 군비경쟁, 전쟁위험, 외국군대의 주둔, 핵무기의 배치 등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요인들은 분단 속에서 탄생하였다. 따라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는 평화적인 통일이 중요하다. 한반도의 통일은 남북한이 서로를 존중하면서 공존 공영하는 방식으로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한반도적 상황에서 비롯되는 한국 평화운동의 특수한 영역이다.

한국의 평화운동은 크게 네 가지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첫째, 생존권과 인권 차원의 접근이다.

한국교회여성연합회 등이 중심이 되어 진행해온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한인 피폭자 문제, 태평양전쟁유족회 등에서 전개한 태평양전쟁 희생자 문제, 정신대 문제대륙협의회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는 정신대 문제 등이다. 피폭자, 태평양전쟁 희생자, 정신대 등은 50년 전에 발생한 것이지만 핵과 전쟁, 식민지 지배 등 총체적 반평화적 구조의 산물이다.

피폭 50년을 맞이한 95년 두라야마 총리 등 많은 일본사람들이 미국의 핵공격을 비난하고, 일본이 반핵평화운동의 선봉에 설 것을 다짐하였다. 그러나 일본이 진정으로 반핵평화운동의 선봉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식민지 지배를 사과하고, 식민지 지배의 암흑한 결과인 피폭자, 태평양전쟁 희생자, 정신대 등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들을 앞장서서 해결해야 할 것이다.

둘째, 환경, 생태학적인 접근으로 미군기지 반대운동과 핵발전소 반대운동을 할 수 있다. 경기도 화성군의 미군군 루니 사격장의 사격훈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때문에 주민들은 미군기지 반대운동을 격렬하게 전개하였다. 전국의 미군기지 주변에서는 도시발전, 교통, 환경, 범죄 등의 차원에서 미군기지 반대운동이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영광 3.4호기까지 포함하면 한국에 11개의 원자료가 가동하며, 97년과 98년에는 올린 3.4호기가 가동을 시작한다. 원자료가 가동하면서 지금까지 크고 작은 방사능 누출사고가 발생하여 주민들의 시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핵폐기물 처리장 부지 선정을 둘러싸고 만연도, 굴업도 등에서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이 있었다.

셋째, 반전, 반핵, 군축운동이다. 앞서 언급한 한반도의 군사적 구조를 살펴본다면 반전, 반핵, 군축 운동은 한국평화운동의 핵심사안이다. 반전, 반핵, 군축운동은 청년학생, 지식인, 여성, 종교인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되어 왔다.

특히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한 방위비 삭감운동은 군사안보적인 차원의 평화운동을 국민들의 생존권과 결부시켜서 진행시킴으로써 점차 실효력을 얻어 가고 있다.

넷째, 통일운동이다. 통일운동은 한국 평화운동의 특수한 형태이다. 한반도에서 평화는 통일을 통해서 완성되기 때문이다. 간혹 평화를 소극적으로 해석하여 현재의 남북한 대치의 질서가 유지되는 것을 평화라고 규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분단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위협을 파생시킨 구조적인 요인이므로 한반도에서 평화운동은 필연적으로 통일운동을 포괄할 수밖에 없다.

한국의 평화운동은 생명을 지키기 위한 철학적 인식과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는 분단구조에 대한 사회과학적 인식의 통일에서부터 출발하였다. 이제 탈냉전시대, 통일시대를 맞이하여 한국의 평화운동은 그 동안의 철학적 인식

에 기초하고 사회과학적 인식을 발전시켜야 할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사회과학적 인식의 전환점으로써 한국의 평화운동은 지난 94년 3월에 코펜하겐에서 있었던 사회개발정상회담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회개발정상회담에는 냉전시대의 종식으로 대두되는 빈곤퇴치, 개발 등을 주제로 130여 국가 정상들이 참가하였다. 여기서 군사력에 기초한 과거의 무력안보에서 탈피하여 인간의 삶의 질을 중시하는 [인간안보]라는 새로운 개념이 제시되었다.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인간안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무엇보다도 남북한의 군사대결이라는 소모적이고도 어리석은 행위에서 벗어나야 한다. 한국의 평화운동이 인간안보를 논하기 위해서는 민족안보를 이루어야 한다. 민족공동의 안보구조를 정착하여 소모적인 군사대결을 줄이고, 거기서 확보된 재원으로 인간안보를 위한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발상의 전환은 미국의 매스빈 전 국방장관이 95년 2월 7일 한국그린크로스 주최의 강연에서 [냉전에 쏟았던 비용과 관리능력을 환경과 생태계에 투자하여 인류에게 희망을 주자]고 제안한 것과 일맥상통하다.

한국의 평화운동은 민족이 안보의 주체가 되어 현대사회에 나타나는 다양한 위험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민족안보 차원에서 새로운 개념의 정립이 필요하다. 이러한 개념의 재정립은 코펜하겐 사회개발정상회담에서 제기된 인간안보의 개념을 수용하되, 분단상황의 극복을 통하여 안보의 주체로서 민족을 설정하는 것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다. 민족이 주체가 되어 자원과 환경에 대한 생명의 철학을 정립하며, 세계경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통일시대를 이루어 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보장하는 것이 한국 평화운동의 지향점이 될 것이다.

한국에서 평화와 군축의 문제

'평화와 군축' 문제가 한국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연구의 소홀함에도 불구하고 매우 커지고 있다. '평화와 군축' 문제는 '전쟁방지'라는 정치군사적인 측면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비생존적 지출의 억제'라는 경제적 측면이 결합되고 여기에 도덕적인 명분까지 축적해 가고 있는 분야이다. 아울러 한국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여 분단상황에 대한 직접적인 진단과 분단의 극복을 제시하는 현

실성과 실현성을 지니므로 한국에서 '평화와 군축' 문제에 대한 논의는 그만큼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

분단체제가 굳어지는 것과 같이해서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었으며 이는 한미군사동맹의 강화와 한국에서 군사과시즘의 형성으로 귀결되었다. 한국 자본주의의 발전과 함께 한국사회는 각 분야에서 속도를 달리하면서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군사과시즘을 태워시키고 유지시킨 요소는 가장 완만한 변화를 보이면서 사회발전의 폭을 제약해 온 것이 솔직한 실정이다.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에 세계사를 강타한 사회주의권의 변화가 그동안 변화를 거부해 온 '군사적 긴장과 대결 상황'에 변화를 강제한 결과 분명 한국사회성격에 영향을 미친 조심스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군사적 긴장과 대결 상황'의 변화는 1차적으로 남북관계와 한미관계를 새로운 관계로 이끌어 낼 것이다. 그 결과는 당연히 지배권력의 통치방식에도 변화를 꾀하는 것이 되겠지만 반드시 역사발전의 법칙에 따른 긍정적인 변화라고 낙관하기에는 어렵다.

이렇듯 국제질서의 재편과정에서 '평화와 군축' 문제는 국제관계와 한반도 상황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동시에 '평화와 군축' 문제에 대한 연구는 예측할 수 없는 변화에 대한 학문적 진단과 전망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변화를 역사발전법칙에 따른 진보적 방향으로 규정하는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객관적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평화와 군축' 문제에 대한 연구와 운동은 지극히 초보적인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평화와 군축' 문제를 학문적인 영역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토양이 한국사회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이다. 한국사회를 지배해 왔던 빈공이데올로기는 여타의 연구나 운동영역에서도 예외는 아니었지만 특히 이 분야에 대한 연구와 운동을 결정적으로 가로막는 요소가 되었다.

한국에서 '평화와 군축'에 대한 연구가 독자적인 영역으로 구축되어 내용의 심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환경변화에 따른 조건성숙과 함께 연관 학문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동시에 필요하다. 즉 정치, 경제, 군사, 외교, 통일 다양한 영역에서 뒤엎혀 있는 '평화와 군축' 문제를 각 영역별로 접근하여 총체적으로 분석해 내는 태도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군축의 필요성에 대한 당위적 제기, 남북한의 군축방안에 대한 비교분석, 한반도 군사현황에 대한 평가 등에 그치고 있다. 이 또한 매우 초보적인 수준임을 부인할 수 없다. 유럽에서는 미소

군축협상이 계속되면서 군축이론도 발맞추어 진행되었다. 남북한의 군축문제도 머지않아 본격적인 협상무대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에 따라 연구수준도 깊어질 것이라는 것을 전망한다. 아울러 평화와 군축운동을 위한 사회적인 기반도 형성되어갈 것이다.

평화와 군축문제에 대한 연구는 이론, 실증적인 분석, 방법론으로 그 영역을 구분할 수 있다.

이론의 영역에서는 군축의 필요성, 군비경쟁의 원인, 전쟁의 성격과 억제 가능성, 군축의 사회경제적 영향, 통일과 군축의 상관성을 포괄한다.

실증적인 분석은 군비경쟁의 역사, 군사력 현황, 군산복합체의 형성, 무기거래, 군사훈련, 군사제도 등을 대상으로 하며 이론과 방법론의 토대가 된다.

방법론은 사실상 이론적 연구의 영역과 현실정치의 구분을 무의미하게 한다. 평화와 군축은 이의 실현을 통해 이론적인 발전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방법론이야말로 군축연구가 실현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는 것을 드러내주는 것이므로 군축연구의 핵심이다. 유럽에서 미소 군축의 역사나 군축연구에서 가장 큰 성과로 꼽고 있는 신뢰구축장치(CBM ; Confidence Building Measure)도 군축의 방법론을 이론화시킨 것이다. 방법론에서는 호스적인 국제질서 속에서 빛어지는 평화와 안보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핵심이다. 이는 남북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군축의 검증문제도 방법론에 해당하므로 국가간의 안전보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해결수단이 된다. 그러므로 연구의 독립성을 획득해야 하나 거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세 변화 속에서도 한반도에서 평화와 군축의 의미를 읽을 수 있다. 탈냉전과 북미관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통일정세가 호전되고 있지 않는 것은 정치적 대립과 군사적 대치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국의 코카콜라와 켈시콜라가 대북 진출의 우선권을 쟁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 그리고 한국의 기업들도 대북 시장 개척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교류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것을 남북한 당국자들과 미국 정부는 알아야 할 것이다. 한반도에서 군사적 대치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경제적인 협력과 교류는 매우 불안한 것일 수밖에 없다. 총부리 위의 코카콜라는 오래갈 수 없다. 94년 말에 발생했던 미군헬기 격추사건

이 만약 94년 상반기와 같이 긴장이 고조되는 시점에 발생했다면 한반도는 전시상황으로 돌변했을 것이다. 따라서 군사적 대치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군사적 대치의 해결이 곧 한반도의 통일의 정도를 가능하는 척도가 될 것이다. 설사 군사적 대치의 해결 없이 통일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예전의 경우에서 알 수 있는 지극히 불안한 통일 수밖에 없다.

평화군축이란 바로 통일의 평화적 환경을 만들자는 것이다. 군축의 필요성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군축은 전쟁을 예방하고 경제적인 효과를 가져 오기 때문에 항상 정당성을 가진다. 특히 분단극복과 평화를 최대의 과제로 여기고 있는 우리민족에게는 군축이야말로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는 차름길이므로 그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지금 남북한의 군사적 우열을 따지는 것은 쌍방의 군사력이 지니는 파괴력을 고려한다면 아무런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

세계가 변화하고 있으나 남북의 군사대결은 변하지 않고 있다. 세계의 변화에 발맞추고 진정한 세계화를 위해서는 당연히 과거 수십 년간 동포의 가슴에 저누어 왔던 총부리를 거두어야 한다. 그러나 세계적인 탈냉전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문민정부의 정책은 평화를 향하여 다가가져 않았고 있다. 여전히 이 땅의 젊은이들은 국가안보가 아닌 정권안보의 방패가 되어 사명감을 잃은 채 동족의 가슴에 총부리를 겨누는 서글픈 현실의 주인공이 되고 있다.

수천 명의 어린이들이 점심을 굶고 있어도 군사비는 줄여줄 줄을 모르는 상황이다. 대다수 국민들이 교통문제, 교육문제, 환경문제, 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동족을 살상하는데 사용되는 무기들은 계속 수입이 되어 외국의 무기상인들을 즐겁게 해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비확대론자들은 동북아시아는 냉전도 안 끝났고, 북한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김정일 체제의 안정을 위해서 도발을 할 지 모른다고 하면서 순진한 이상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할 것이다. 기껏해야 앞으로 군축을 위해서라도 지금 군사비를 늘여야 한다고 말할 것이다. 우리는 미래의 군축을 위해 지금 군사비를 늘여서 목돈 만들어 놓고, 그때 늘어난 군사비를 감축하여 환경이나 복지 등에 사용하자는 식의 발상 속에서 국민의 희생과 남북대결을 계속 감수해야 한다는 말인가? 동북아 군비증강을 이유로 끝없는 무한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우리민족이 휘말려 들어가

결국 예상되는 민족의 공멸을 막아서 기다려야 한다는 말인가?

한반도 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한 연대

한반도는 세계적으로도 유례없이 휴전상태가 40년이 넘게 지속되었다. 휴전은 평화가 아니다. 휴전은 전쟁을 잠시 멈춘 상태이다. 따라서 한반도에서 군비경쟁이 계속된다면 한반도에서 전쟁재발의 가능성은 높아진다. 다행히 북한과 미국, 북한과 일본이 대화를 함으로써 전쟁보다는 대화의 방법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가 분단되어 있다면 언제든지 분쟁은 발생할 수 있다. 한반도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필연적으로 주변 국가의 개입으로 확대될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의 분쟁을 근원적으로 억제하는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역사적으로 한반도의 문제에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세계 4대 강대국이 개입해 왔다. 1950년에 발생한 한국전쟁은 이들 4개 강대국의 대리전쟁과 같은 성격도 있었다. 한반도는 지리적인 특성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유일하게 4대 강대국을 마주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4대강대국들이 한반도 문제에 개입해온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에서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동북아시아에서 이들 4대 강대국들의 힘의 완충지대가 생기는 것을 의미한다. 통일된 한반도는 비동맹 중립국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한반도는 군사력 밀집지역이다. 휴전선을 경계로 하여 한미양국과 북한은 200만을 병력을 배치시키고 있다. 미국은 3만 7천명의 주한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다. 미국은 91년까지 한국에 핵폭탄을 600발에서 1,000발 정도 배치하였다. 미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하면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반도의 통일은 세계적인 군사력 밀집지대인 한반도에서 군축과 비핵지대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한반도와 같은 군사력 밀집지대에서 통일이 되어서 분쟁의 가능성이 약화되고, 비핵지대가 실사되며, 군사력을 감축하는 것은 그 자체로써 동북아시아 평화를 이룩하는 길이다.

일본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일본을 위협한다는 것을 구실로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다. 남한은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대비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증강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 북한은 한미 양국의 침략위협을 강조하면서 군사적인 대비를 강조하고 있다. 동북아시아에 군비경쟁의 악순환은 한반도의 분단을 명분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군비경쟁의 악순환을 단절시키기 위해서는 평화를 위한 국제연대가 절실하다. 국제적인 연대를 통하여 군사력 증강의 명분이 허구적임을 드러내야 한다.

한반도 민중은 한반도 통일을 위한 국제적인 연대를 절실히 요청하고 있다. 한반도의 분단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소련 등 전쟁승전국들이 일방적으로 한반도를 분할한 데서 비롯되었다. 한국은 전쟁수행국가도 아닌데 일본을 대신하여 분단된 것이다. 한반도 분단이 국제적인 성격을 띠다면 한반도의 통일도 국제적인 성격을 지닌다. 그러므로 세계의 평화애호민들이 한반도의 통일을 위하여 국제적으로 여론을 형성하고 지원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통일을 지향하는 한국의 민족주의는 개방적 민족주의이다. 한반도의 통일 온 민족주의적인 이념에 기초해서 진행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협소한 국수주의가 아니다. 하나의 민족이기 때문에 같은 민족끼리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민족주의는 세계 평화를 지향하는 민족주의이다. 우리는 한반도의 통일을 통하여 동북아시아와 나아가 세계의 평화가 정착되는 것을 희망하고 투쟁할 것이다. 통일된 한반도는 평화를 지향하는 세계의 평화애호민들과 연대하고, 국제사회의 평화를 쟁취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따라서 통일을 추구하는 이념은 개방적 민족주의이다. 우리는 개방적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국제적인 연대를 추구해 나갈 것이다.

평화의 프리즘을 통해 본 남북관계

조 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1. 평화와 통일

21세기 벅대 전세계의 시선이 한반도에 쏠린 가운데 남북한 정상회담(최고위급회담)이 평양에서 개최되었다. 이는 20세기 유례(遺例)를 청산하는 '민족적 사변'이며, 7천만 한민족의 가슴에 희망찬 고동을 울린 민족사적 쾌거였다. 한민족은 이제 피동(被動)의 역사를 극복하고 세계사의 주체로 우뚝 서는 민족 대장정의 시대를 개막했다. 역사적으로 한민족의 운명과 미래를 스스로의 힘과 의지에 따라 개척해 나갈 수 있을 길을 열어 놓았다.

역사적인 남북한 정상회담을 계기로, 불신과 대결의 분단시대는 막을 내리고 화해와 협력의 통일시대의 장(場)이 서서히 개막되고 있다. 통일은 어떠한 형태의 폭력도 거부하는 평화적 방법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비록 남북한 통일이 어느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민족사적 대의라 하더라도 폭력과 갈등을 동반하는 통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지난 세기말 세계적 차원에서 냉전체제가 붕괴됨으로써 대결과 갈등이 역사로 잠멸되었던 한반도에도 해빙 무드가 고조되는 듯했다. 그러나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불신과 대결구도가 증폭되면서 '짧은 만남, 긴 단절'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말았다. 상당한 기대 속에 발표되었던 남북 합의서는 빛을 보지 못한 채 거의 사문화되다시피 했다. 세계사적 변화에 부응하는 한반도 냉전체제의 해체를 위한 충분한 조건이 성숙되기에는 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분단 극복과 통일을 향한 한민족의 노력은, 한민족의 의사와는 무관한 분단의

고통과 전쟁의 참상을 겪어야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기반한 국제정치적 역학관계에 규정된 수밖에 없었다.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와 민족문제화 사이의 긴장적 관계는 외부적 요인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채 동북아 지역에 대한 강대국의 패권전략에 종속되었다. 한반도가 근대세계 체제에 편입된 이래 민족사의 자주적 발전 경로는 외세에 의해 방해받고 심각하게 왜곡되어왔다. 그 결과 마침내 폭력적이고 강제적인 민족 분단과 전쟁의 참화 그리고 종오와 갈등의 대궐구도 속에서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

분단과 민족상징의 근원(根因)이었던 어납적 대궐구도에 기반한 냉전체제가 붕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냉전구조는 험시리 해소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은 두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 우선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지역의 긴장완화가 주변국가와 이해관계에 미칠 긍정적 영향에 대한 뚜렷한 인식이 확산되지 않았다. 특히 이 지역의 패권국가인 미국은 한반도의 해빙 무드를 적극 수용할 입장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적절한 긴장을 유발하는 새로운 대궐 국면을 조성하고자 했다. 다른 한편, 우리 스스로의 책임을 성찰해 보지 않을 수 없다. 분단구조는 무력충돌과 분쟁 등의 항상적인 위기 국면을 내장한 일상화된 위기체제였다. 반세기에 걸친 대궐과 갈등구조는 불신과 냉전의식을 깊이 각인시켰다. 선과 악의 이대음로기적 가치체계, 적과 동지의 이원론적 흑백논리 등에 기반한 냉전의식·냉전문화는 정치사회적 영역에서만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의식과 일상적 생활세계에까지 침윤되어 한민족의 심성을 지극히 비정상적인 상태로 만들었다. 이처럼 반공·반북 이대음로기에 확고한 냉전의식·냉전문화는 민족문제에 대한 이해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합리적 접근의 통로를 차단했다. 이렇듯 지난 세기말의 남북관계의 긴장과 갈등의 재연은 민족의 화해와 화합의 길로 나아가는 역사 과정에서 '잃어버린 10년'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제 남북 냉전시대를 뒤로하고 남북한 공존공영시대를 맞이하였다. 역사적 시행착오를 극복하고 우리 모두 평화와 통일시대를 향한 민족 대장정의 길에 나서야 한다.

II. 통일원칙 및 통일방안이 접점

남북한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남북공동선언(2000. 6. 15)은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통일의 초석을 마련한 역사적 합의문이다. 합의 사항 5개항 가운데 통일의 원칙과 통일방안의 합의를 선언한 제1항 및 제2항은 특별히 주목을 끈 합의 사항으로 보다 면밀한 분석과 이해가 요구된다. 다른 3개의 합의 사항이 구체적, 실천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면, 제1항 및 제2항은 정치적, 선언적 차원의 합의 사항이다. 이 두 합의 사항은 만족할만한 실천 단계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인내가 요구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합의 내용에 대한 남북한간 그리고 남한 사회 내부의 인식의 차이로 말미암아 상충적인 견해와 주장이 제기될 수 있는 논쟁적 성격을 띠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따라서 '자주'와 '연방제 및 국가연합론'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남북공동선언 제1항의,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는 선언은 이른바 '자주'의 통일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나 많은 논쟁점을 내포하고 있다. '자주'는 '7.4 공동성명' 이래 남북한간 서로 다른 해석과 주장으로 인해 접점을 찾기가 힘들었다. 이런 점에서 '자주'에 대한 양측의 이해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으로 제2항의 통일 방안에 대한 합의도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의 공통성의 인정은 그 동안 남북 양측이 각각 따로 주장해온 통일방안의 공통분모를 찾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남북한 통일방안은 대개 자기중심적 입장에서 제안된 것으로 서로가 상대방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려는 노력은 부족했다. 그런 점에서 각각의 통일방안은 통일논의의 우위를 취하려는 의도로 비춰졌으며, 상대방의 진지한 접근을 기대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이러한 사정은 무엇보다 남북 대화·협력의 분위기가 무르익지 못한 상황에서 통일 문제가 실천적 접근 대상이 될 수 없었던 한계에 기인한다.

통일방법론과 통일형태를 둘러싼 통일논의의 비현실성과 국론분열을 초래할 수도 있는 과정적 속성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한반도 평화체제의 수립과 남북한 공존공영을 대북 정책의 목표로 삼은 김대중 정부의 입장은 통일

방안을 비롯한 통일문제에의 논의를 유보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남북공동선언을 통해 남북한 통일방안이 부각됨으로써 커다란 관심을 끌게 되었다. 따라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해 보다 합리적인 인식의 토대를 마련해야 할 단계라고 생각한다.

1. 통일원칙: 자주

한반도 평화지대화(平和地厓化) 및 탈군사회

남북한의 정치적 자주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한반도 평화지대화와 더불어 남북한 사회의 탈군사회를 지향해 나가야 한다. 남북한 모두 과대 성장된 군사기구를 과감히 축소시켜 나가는 것과 동시에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의 '탈군사적'인 평화의 틀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평화보장 없는 자주는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 평화와 자주는 별대야 맺 수 없는 관계이다. 사실 강대국의 영향력을 극복하기 힘들었던 우리의 경우,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시아의 평화가 구축되지 않는 상태에서 국가주권과 자주를 함유하기는 불가능했다. 거꾸로 약소국의 주권과 자주를 심각하게 왜곡시키는 패권적 지배구조는 안정적인 지역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메카니즘이 아니다. 이러한 평화 보장의 같은 민족적 연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민족적 연대가 결여된 비균형적인 국제구조는 남북간 상호불신을 해소하지 못하고 평화의 길이 아닌 또다시 갈등과 대결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할 수 있다.

한반도에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주한미군은 철수해야 한다.¹⁾ 국내총생산액 수준의 현격한 격차, 기술산업, 군사수준 등에서 북한을 월등히 앞서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존재는 냉전적 발상에 불과하다.²⁾

1) Martin Shaw, *Past-Military Society: Militarism, Demilitarization and War at the End of the Twentieth*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1991), pp. 184-190

2) 주한미군의 주둔을 전제한 상태에서 '전시작전권'의 회수를 주장하는 논리는 미국의 '자주권'을 훼손시키는 발상으로 비현실적인 제안이다.

3) 남북한 경제총량 중 국민총소득(GNI)을 비교하면, 남한은 북한의 '95년/21.9

더욱이 주한미군의 존재는 북한에 대한 엄청난 부담과 위협적 실체로, 주체사상에 기반한 유격대국가의 일상적 전시동원체제를 정당화시켜주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북한의 체제 유지에 대한 근본적인 위협적 성격만 사라진다면 주한미군 주둔에 의한 적당한 긴장 상태를 바라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모순 상황은 북한 주민의 고통 해소와 무관할 뿐만 아니라, 한민족의 장래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따라서 주한미군 주둔을 전제로 한반도의 평화와 북한체제의 민주적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주한미군은 전략 목표는 궁극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데에 있지만, 동북아에서 평화의 교관자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한반도 평화정착의 과정에서 미국은 자국의 국가이익을 지속적으로 보장받기 위해 남북간 군열과 미묘한 갈등을 부추기는 전략을 구사할 수도 있다. 주한미군의 철수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한반도 군축과 평화체제의 토대 구축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주한미군의 존재 자체가 평화의 걸림돌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남북정상회담의 결과에 한동안 당혹해 하는 모습을 보였던 때에는 한반도의 평화정착이야말로 미국의 세계전략과 국가이익의 심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의 세계전략의 내용과 형태가 불변적인 것은 아니다. 한반도의 평화구축을 통해, 완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 지역에서의 주한미

배, '96년/24.2배, '97년/26.8배, '98년/25.1배에 달한다.

통계청(<http://www.nso.go.kr>), '남북한경제사회상비교' 참조.

- 4) 한반도의 평화정착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무기판매시장을 잃는다는 점에서도 우려되는 현상이 아닐 수 없다. 한국은 1995-1999년 사이 무기수입에 60억 달러 이상을 지출하여 전세계에서 4위의 무기수입국 지위를 차지하였다. 미국은 이 시기 전세계 무기시장 점유율 48.0%에 달했다. 이러한 점유율은 1990-1996년 사이 미국이 전세계 무기시장에서 차지했던 점유율이 50% 내외였던 사실과 크게 달라진 상황이 아니다. 한국은 2000년에도 미국으로부터만 12억 7,475만 달러의 무기를 수입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FAS, 2000). (김현옥, "경제적 군축필요성 논의의 존재와 군축운동의 방향-군축단론의 대중화를 위한 시론", 한국산업사회학회, 2000년 비관사회학대회(제3회) '남북간 대립 사회체제의 통요와 새로운 갈등구조의 이해: 상생적인 민족공동체의 구성을 위하여', p. 155.

군의 철수는 불가피할 것이다. 이제 그러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힘이 우리 민족 내부에서 나와야 한다. 그러나 한 단계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완전철수론'을 주장할 필요는 없다. 지금은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시아의 평화구축을 위해 주한미군의 위상은 변화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철수 시기와 방법 등의 문제를 공론의 영역으로 끌어들이야 할 때이다.

주한미군을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따라서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설정하고 주한미군을 평화유지군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⁵⁾ 한반도에서의 평화유지군은 두 가지 형태로 접근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유엔평화유지군 형태이며, 다른 방안은 다국적 평화유지군 형태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유엔평화유지군의 경우 미국의 주도적 역할 아래 군소 국가들의 군사활동은 보조적 역할에 그치는 형태를 E1F⁶⁾ 것이라는 점에서 주한미군의 형식적인 형태 변화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유엔평화유지군의 임무와 권한은 유엔헌장 제6장을 준수하는 원칙을 적용하면 된다. 즉, 유엔헌장 '제6장'의 <분쟁의 평화적 해결>의 장은 국가간 분쟁을 오직 협상, 중재, 화해, 조정, 법적 해결 등 모든 평화적 수단의 장구를 통해서만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⁷⁾ 이처럼 한반도에서 분쟁이 재발되는 경우에도 유엔평화유지군은 오직 평화적 수단에 의한 분쟁 해결에만 그 역할과 권능은 제한되어야 한다. 이는 유엔헌장 '제7장'에 명시된 평화유지군의 '평화감행군'으로서의 역할⁸⁾은 한반도 문제의 해결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음으로 다국적 평화유지군을 창설하는 경우에는, 남북한의 참가는 말할 것도 없이, 한반도의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관계국가들로 구성된 평화유지군의 창설을 모색할 수 있다. 유엔평화유지군이 나 다국적 평화유지군 모두 한반도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하

5) 이철기, "주한미군을 평화유지군으로"

<http://www.peacekorea.org/usfk/usfk02.html> 참조

6) Charter of United Nations, Charter VI, Pacific Settlement of Disputes (<http://www.un.org/aboutun/charter/index.html>)

7) Charter of United Nations, Charter VII Action with respect to threats to the Peace, Breachs of the Peace, and Acts of Aggression (<http://www.un.org/aboutun/charter/index.html>)

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평화유지군의 병력 수와 규모는 상징적 수준으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반도의 군사적 밀집도가 높을수록 주변국의 긴장을 초래하며 거꾸로 남북한의 긴장과 갈등을 고조시키는 악순환 구조에 빠지게 된다. 그러므로 한반도의 평화지대화를 추구해야 한다. 한반도는 중국과 러시아의 대륙세력과 미국과 일본의 해양세력의 틈바구니에서 국가의 정치적 자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군사의 차원에서 어느 일방의 패권적 세력이 관철되지 않는 중립지대(中立地帶)로의 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남북한 자주는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지대화를 통해 정치적 중립을 견지함으로써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제 '무장된 평화'를 넘어 사회의 모든 부문에 있어서 전쟁을 선호하는 가치보다 평화적 가치를 조성해 나가는 한편 활발한 평화운동을 전개해 나감으로써 전 사회의 탈군사화를 지향해 나가야 한다.

2. 통일방안: '연합제' 및 '낮은 단계의 연방제'

<남북한 통일방안 비교>

	남 측	북 측
방안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
발안	김영삼 대통령 '94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제안	김일성 주석 노동당 제6차대회('80.10.10)에서 제의
원칙	자주·평화·민주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
과정	화해협력→남북연합(남북정상회담의의상설화, 남북국회대표가 통일헌법안 및 통일절차 마련)→통일국가(총선·통일국회·통일정부)	남북계정당, 사회단체, 해외민족단체 예비회담→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준비위원회→고려민주연방공화국
연합·연방	1민족 2체제 2정부 연방정부(無) 남지역정부 북지역정부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 연방상설위원회(연방정부) 최고민족연방회의 (남북동수의 대표와 적당 수의 해외동포대표로 구성) 남지역정부 북지역정부
주권	중앙정부가 없기 때문에 군사권·외교권·내정권은 지역정부에게 있음	군사권·외교권·내정권은 잠정적으로 지역정부에 있는 것으로 파악됨. 중앙정부에 해당하는 '연방정부'의 권한이 약하며 대부분의 권한은 지역정부에 있음
최종형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정상회담(2000.6)에서 남북통일을 지향하는 단계로 외교 및 군사에 관한 권한을 연방(연합)정부가 아니라 지름치럼 각각 남북의 '지역' 정부가 갖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의	이화성-통일국가는 잠정적,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통일국가 건설은 후대에게 남겨줄

남북한 양측은 연합제 안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의 공통성을 인정하였다. 이를 계기로 양측 통일방안의 과도기에 해당하는 연합·연방 안의 차이점은 중앙정부의 존재 여부에 있으며 이에 따라 군사권, 외교권, 내정권이 어디에 있는지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위 표는 김일성 주석이 91년 1월 신년사에서 통일 헌정형의 연방제를 잠정적, 단계적 연방제로 개념을 다소 수정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과 남한의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을 비

교한 것이다.

3. 과제의 이중성: 남북한 신뢰의 지속 및 국민적 합의 형성

대북정책은 민족문제이면서 국제문제이고 궁극적으로는 한국의 국내문제와 연계되어 있다. 우리 정부의 과제는 두 가지다. 하나는 정상회담을 계기로 형성된 북한과의 신뢰를 지속적으로 유지·증진시켜 나가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체제의 유지와 경제회복을 지원해야 한다. 다른 하나는 국민적 합의기반의 확충이다. 대북정책은 북한과의 문서상의 합의나 주변 4강의 지지 못지 않게 국내적지지 기반인 국민적 합의를 넓혀나가는 일이 성패를 가름한다. 남북관계에서 국민적 합의를 형성하지 못하면 북한의 일시적인 태도 변화나 조그마한 안보 불안도 사태를 원점으로 되돌릴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체제 생존이다. 핵과 미사일 문제는 바로 생존을 위한 전략이다. 북한 체제의 생존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국가는 미국이므로,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대미 설득과 더불어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입지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도파야 한다. 그리고 남북경협은 한국 경제의 난국을 돌파할 수 있는 기회이자, 민족경제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측면에서 기업인과 국민들을 설득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국민적 합의의 기반 문제가 제기된다. 이는 가장 절실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실천적 차원에서는 많은 난관들이 가로놓여 있다. 변화에는 항상 저항과 반대가 뒤따르기 마련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안보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는 입장에 대해 화해·협력과 평화의 안보적 가치와 효율성을 납득시킬 수 있어야 한다.

대북정책의 비판 논리는 ‘북한불변론’, ‘시기상조론’, ‘속도조절론’ 등이다. 이 가운데 ‘북한불변론’의 경우는 객관적 사실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하나의 신념 차원에서 제기되는 비판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여기에는 남침의 원죄와 냉전시대 북한이 저지른 명동적 오류들에 대한 깊은 불신이 깔려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우리사회의 대북 불신은 우선 북한 당국 자체에 책임의 소

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대결 구도 속에서 누려왔던 분단 수해층의 기록권 상실에 대한 막대한 우려와 변화를 외면하는 닫힌 심성구조도 문제삼지 않을 수 없다. "김정일과 북한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대북 화해·협력 정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때 전전한 비판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정치적 통기에 연계된 병목적 비판은 민족사회의 균열을 가져오게 하다는 점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이다. 이와 함께 대북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정당적 의도가 개입된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하며, 초당적 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여야간 포섭이나 상설적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도 고려해볼만 하다.

정상회담에서 5개 항의 협의를 도출한 것은 기대 이상의 성과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만큼 많은 과제를 안게 되었다. 할 일은 많은데 갈 길은 멀다. 무엇보다 원단계 남북관계의 성과를 어떠한 악조건이 발생하더라도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 상황으로 굳혀나가야 한다. 그런 점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반드시 성사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것은 북한은 남한 사회의 다양한 입장을 이용하려는 태도를 보려야 하며, 한국사회의 보수세력의 주장을 비난하거나 진보세력의 주장을 아편인수격으로 해석하는 입장을 지양해야 한다. 우리사회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북한의 관용 자세도 절실히 요망되는 상황이다.

III. 평화와 여성

1. 군축

군축분위기의 형성

<남북한 및 주변국 병력 비교>

구분	한국	북한	미국	중국	러시아
총병력	69만	117만	1,401,600	약2,820,000	1,159,000

한국은 199301997년 사이의 무기 수입 총량면에서 총 53억 4천 5백억 달러로, 세계 5위의 무기수입국이다.

국가별 주요무기 수입실적(단위: 백만\$, 1990년 불변가)

1. 사우디아라비아(9,834) 2. 대만(8,238), 터키(7,012), 4. 이집트(6,692), 5. 한국(5,345), 6. 중국(5,053), 7. 일본(4,554), 8. 인도(4,428), 9. 그리스(3,949), 10. 쿠웨이트(3,391)

자료원: SIPRI Year Book 1998.

2. 군사문화 극복과 여성

군사문화: 남성성의 왜곡

우리 몸 속의 반공주의 회로판 읽기

권 혁 범 (대전대 교수, 정치학)

1. 시작하며

영화 <공동경비 구역> 흥행의 성공은 단순히 작품성의 문제가 아니고 남한 주민의 머리를 빗눌러 왔던 분단 이데올로기로부터 해방과 관련되어 있다. 불과 몇 년 전만 같아도 엄연하게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고 북의 병사를 ‘미화’한 이 작품은 영화관에서 상영되기도 어려웠을 것이며 아마도 제작자나 감독은 지루하고 지극한 재관의 과정에 얹혀지게 되었을 것이다. 확실히 김대중 정부 하에서 이루어진 남북 관계의 급진전과 평화적 협상의 확대는 강고한 분단규율을 서서히 허물고 있다. 반공주의적 공격은 여전히지만 여전히던 치명적 효과를 발휘하고 있지는 못하다. 그렇다면 반공주의는 가고 평화는 오고 있는가?

내 생각으로는 현재 조성된 평화적 분위기는 현순간의 오해와 충돌, 국내국제적 조건의 변화로 쉽게 깨질 수 있으며 오히려 그 반작용으로 남북 코리아에 반협력적 반평화적 폭풍이 들이닥칠 수도 있다. 따라서 남북 관계의 개선을 위한 일회적인 사건이 지나치게 흥분하거나 기대하지 않아야 한다. 남한과 북조선의 관계가 몇 번의 만남이나 정치적 협상에 의해 해결될 수 없는 까닭은 코리아의 분단과 그것으로 인한 격렬적 감정을 유발 유지하는 냉전주의적 세계관이 정치군사적 대립을 넘어서 코리아 주민의 마음속에 내면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화해의 무드가 순식간에 공격적 증으로 바뀌고 국제적 충돌이 전면전으로 순식간에 확대될 수 있는 이유는 근본적으로는 문화화한 냉전주의적 가치체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 한가지 이유는 반공주의

를 핵심으로 하는 냉전주의적 가치관이 남한과 북조선에서 각각 국가안보 논리를 가치위계의 최상위에 자동적으로 위치시킴으로써 평화, 인권 및 자유 등의 보편적 가치의 유보를 정당화하는 사유체계를 남과 북한 주민 가슴속에 깊게 심어놓았기 때문이다. 사실 <공동경비 구역>의 결론은, 휴머니즘에 토대한 관계도, 분단 규율의 제화라는 구조적 조건을 해제하지 못하는 한, 한순간의 우발적 사고로 인해 상호살인이라는 엄청난 비극으로 끝나버릴 수 있다는 점이다.

제제, 제도, 정권의 변화는 남북의 통일과 코리아 평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그러한 변화는 소수의 정치적 결단이나 합리적 협상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어렵다. 그러한 변화가 일시적인 것으로 끝나지 않고 종전평화의 위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러한 거시적 변화를 강제하는 문화적 압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한마디로 냉전주의적 문화가 지배적인 상황에서의 정치적 합의나 선언은 한순간의 군사적 충돌이나 국제관계의 변화에 따라 휴지조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냉전형 문화를 탈냉전적 평화지향적 문화로 바꾸는 일이다.

2. 냉전문화와 일상적 반공주의

남한에서의 냉전문화란, 단순화한다면, 1) 분단이 우리에게 부과하는 압력에서 파생되는 일상적 수준에서의 언행 양식 그리고 2) 폭을 '작'으로 규정하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한 사고방식 및 정서를 의미한다. 그것은 냉전주의적 성격을 가진 정권이 반공 반북주의적 이데올로기를 국민들에게 오랫동안 강제적으로 주입함으로써 일어난 결과다. 그렇지만 그것은 문화확립으로써 사람들의 일상적 사고와 정서의 일부로 녹아있다.

물론 극우적 반공주의는 많이 약화되고 있다. 탈냉전, 현실사회주의의 실패, 북한의 기아 등은 현실사회주의의 위협성을 약화시켰다. 김대중 정권의 등장 그로 인한 남북한관계의 긴장 완화, 남한경제의 북한에 대한 완전한 우위 확보 등은 반공반북주의의 공간을 어느 정도 잠식해가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문제는 반공주의가 이제 정치/안보/군사의 영역으로부터 일상적

영역으로 깊게 스며들어 있다는 점이다. 이것을 문화화한 반공주의 혹은 냉전 문화라 부를 수 있겠다. 그것은 단순히 북한공산주의에 대한 적대적 비이성적 정치논리와 정서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한국의 반공주의는 단순한 북에 대한 적대적 감정과 비난이면서 동시에 그것과 교묘하게 결합된 고도의 계산적 이성적인 목적활동의 성격을 갖는다. 일종의 권력이성은 그것에 순응하고 굴복하는 대중의 처세술적인 (역사적 경험으로 볼 때 대중의 입장에서 사실은 매우 현명하고 합리적인) 사리판단을 북에 대한 적대적 감정 및 정서와 결합시킨다. 그것은 오랜 세월 내면화 과정을 통해 사회구성원의 정신과 가슴속에 투쟁한 정치 사회적 사고와 행위를 자동적으로 유발시키는 기제를 만들어놓았다. 그것을 난 내 연구논문에서 ‘반공주의 회로판’이라고 불렀다.¹⁾ 따라서 투쟁한 자국이 주어지면 사회구성원들은 혹은 그들을 대변한다고 자칭하는 주류언론은 ‘좌불오석의 개’처럼 이미 정해진 회로판을 따라서 자동적으로 조건반사적 대응을 하게 된다. 그것은 사상적 획일성과 단순성, 군사 통원주의적 심리, 대타적 감시자적 태도, 굴종적 순응적 태도, 반정치적 일원주의 질서 및 도덕주의에 대한 강한 동경과 요청을 유발한다. 물론 여전히 그것은 국가보안법의 현존과 반공주의의 이데올로기적 왜곡모니 확보라는 분단현실에 의해 뒷받침, 지속되고 있는 일상적 권력이다.

3. 반공표어에 드러난 반공주의 회로판 읽기

사람들이 그것을 읽건 읽지 않건, 의식적으로 수용하건 냉소적으로 지나쳐버리건 간에 길거리의 반공표어는 한국사회의 북한공산주의에 대한 핵심적 태도를 공식화하고 있으며 구성원들의 의식세계가 거기에 머물 것을 공권력

1) 내 연구논문 “반공주의 회로판 읽기-한국반공주의의 의미체계와 정치사회적 기능”이 실린 『달분단 서대를 열며』 (삼인, 2000)는 ‘남과 북의 문화통합’ 프로젝트의 팀의 3년간의 공동 연구로 탄생한 책이다. 이 논문과 내 자신에 대한 성찰적 에세이 “내 몸 속의 반공주의 회로 및 권력,” 『통일을 준비하는 사람들』 (포히나의 문화, 1999)에서 부분적으로 발표, 수정하여 이 글을 만들었다. 민족주의적 통일론에 대한 비판에 관심 있는 분은 최근에 발행된 내 책 『민족주의와 발전의 환상』 (숨, 2000)을 참조하길 바란다.

혹은 공권력의 후원을 받는 단체의 이름으로 주문한다. 그것에 반대되는 내용의 현수막이 거리에 장기간에 걸쳐 걸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교과서와는 상당히 다른 성격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반공표어야 말로 한국사회 반공이데올로기의 핵심을 담고 있는 데처다. 교과서의 세련된 반공주의 혹은 공산주의에 대한 비판적 이해가 오히려면 반공표어는 내피에 해당하는 것이다.

가. 반공표어의 제1차적 의미

이제 반공표어에 드러나는 반공 담론의 의미체계를 분석해보자. 그것은 다음 두 가지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 첫째 반공이 왜 필요한가? 둘째, 반공을 위해서 무엇을 요구되는가?

1) 반공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두 가지 답이 제시된다. 첫째는 북한의 침략에 대한 물리적 공포를 환기시킨다.

<붕괴 직진 북한체제 태남 도발 경제하자> <인민은 기아질병 김정일은 남침준비> <좌익폭력 사회혼란 북한오관 초래한다> <북한속성 변화 없다 위장평화 경제하자> <우리 모두 간첩사건을 계기로 대북 경각심을 강화합시다> 등의 표어는 6.25전쟁이후 한국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북한의 남한 침공에 대한 경계심을 일깨워준다. 번영과 평화의 바람 속에서도 북한에 대한 경계심을 누그러뜨려서는 안된 것임을 강조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물론 여기에는 북한정권의 책임도 있다. 북한의 남침 가능성과 과거의 여러 공격적 행위 그리고 6.25 전쟁의 생체험은 남한에서 반공의 무조건적인 필요성의 정당성을 강화해왔다.

둘째, 반공을 함으로써 얻게 될 이익 혹은 정반대의 경우에 초래된 손해를 강조한다. <폭력투쟁 방관할 때 민주안정 유실된다> <빈틈없는 대공태세 안정 속에 국가발전> <혼란 속에 간첩 오고 안정 속에 번영 온다> <신고하는 주민의식 선진조국 초석된다> <좌익폭력 믿어내어 민주안정 이룩하자> 등의 표어는 반공으로써 얻게 될 이익이 발전/안정/민주주의이고 그 반대는 혼란/좌익폭력/폭력투쟁 등임을 제시하고 있다. 반공이 단순히 공산주의를 반대하거나 그것의 침략성만을 강조하는 부정적, 수동적 태도 혹은 이념이 아니

라는 점을 보여준다. 반공주의는 그것의 치명적 약점인 부정적 통합성(negative integration)을 발전주의와의 결합을 통해 적극적인 긍정성으로 전환시킨다. 반공을 하지 않음으로써 일제 및 발전, 번영, 안정의 가치를 덧붙여 강조함으로써 반공 담론은 발전주의와의 친화성을 암시한다. <분분한 안보로 세계화로 이룩하자>는 구호도 마찬가지다.

과거의 반공담론은 대제적으로 개발 독재 및 권위주의를 정당화하는 기능을 하였다. 그러나 1987년 이후의 민주화 과정에서 노골적인 반공주의는 더 이상 북한의 위협이나 국가발전의 명분으로 민주주의 제약을 정당화할 수 없게 되어 버렸다. '민주주의'가 지배적인 담론으로 등장하자 반공주의는 재빨리 그것을 흡수하여 새로운 의미체계를 만들어냈다. <과익세력 경계하며 민주화합 이룩하자>, <민주위장 과익세력 다시 보고 신고하자>, <과익록력 떨어내어 민주안정 이룩하자> <민주의식 저해하는 불순행동 대적하자> 같은 구호들은 한결같이 민주주의에 대한 대중적 동의를 활용하며 오히려 반공주의를 강화하려는 세련된 시도이며 동시에 개혁에 대한 일정한 경계를 통하여 민주화 운동과 방향에서 진보성을 제거하려는 매우 교묘한 의미를 담고 있다. (정확히 말하면 '민주주의'가 아니라 '민주안정'이다. 분민정부의 반공 표어에서 '민주주의' 담론은 폐기모니를 강악하지 못했다.)

이러한 예들은 번영, 애국, 민주, 안정, 세계화 등 한국사회에서 중요한 목표로 간주되는 것에 대한 반공주의의 기여를 강조함으로써 반공주의를 정당화하려는 의도를 보여준다. 그것은 사회적 차원에서의 혜택 및 손해에 관한 것이지만 반공주의는 일종의 위협에 가까운 개인적 차원에서의 혜택 및 손해에 대한 내용도 포함한다. 가령 <한순간의 과정사상 후손에게 눈물된다> <슬거주면 같이 불행 신고하면 같이 불행> 등은 바로 이러한 개인적 차원의 손해에 대하여 호소하거나 철폐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2 한 연구는 반공주의가 시대별로 다른 이데올로기, 특히 1960년대부터는 발전주의와 결합하는 방식을 보여준다. 한지수, "지폐이데올로기와 재생산메카니즘," 한국정치연구회편, 『한국정치론』 (백산서당, 1989), 206면 그리고 박상훈, "통치야 산다"에서 '세계화'까지-지대 담론을 통해서 본 해방 50년의 한국정치, 한국정치연구회 심포지움 『해방 50년-한국정치의 구조와 동학 (자료집)』 (1995년 12월 2일, 중앙대), 41면 참조.

2) 그 다음으로 반공을 위해서 요구되는 태도와 방식을 살펴보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주로 북한에서 파견된 '간첩'과 남한사회 내부의 '좌익'에 대한 두 가지 차원의 자세로 나뉜다. <신고요원 따로 없다 우리 모두 간첩신고> <의심하면 다시 보고 수상하면 신고하자> <4천만의 신고정신 다져지는 국가안보> <간첩신고 너나 얹고 간첩자수 팍났었다> <간첩신고 너나 얹다 수상하면 내가 먼저> <온 국민의 신고정신 불순폭동 막아내자> <숨은 간첩 찾아내고 자수간첩 도와주자> <침투간첩 잡아내어 적화야육 분쇄하자> 등의 표어는 사회전체가 간첩에 대한 일상적 경계심을 조금도 늦추99지 않을 것을 강조한다. <설마하는 방심속에 불순분자 스며든다>에는 전체주의적 동원체제의 '국민'관이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다. 온국민의 신고요원화를 강조하는 반공주의는 당연히 모든 의심스러운 혹은 수상한 사람/행위에 대해 정계의 눈길을 빼지 말 것을 요구한다.³⁾

알기무 지하철 광고를 보자.

[귀 그림] "잘 보면 보입니다./ 그러나.../우리가 무관심하면 결코 보이지 않습니다./간첩선: 최고 1억 5천만원/간첩: 최고 1억원/좌익사범: 최고 3천만원/(폭력/계급혁명 선동, 불온 유인물 배포자)"

[도마뱀 그림] "잘 보면 보입니다./지금 당신 곁에도.../문명시대에도 간첩은 숨어 있습니다."

[양의 털을 쓴 늑대 그림] "주변에 혹시 이런 사람 없습니까? 짙은 순채도 양의 얼굴을 하고 있을지도, 가장 평범한 얼굴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조그만 관심이 모인다면 이런 사람을 찾아내기는 어렵지 않겠조. 알려주십시오."

3. 1970년대에 유행했던 '간첩식별법'은 지나치고 반복적인 간첩신고 표어에 대한 예리한 풍자였다. 몇 개를 소개하면 -사람이 많은 곳에 가서 '아, 이 많은 사람 중에 간첩은 나 혼자뿐이로구나!'하고 생각하는 자. -'우리 피착에 솔직하게 말합시다'하고 말을 건을 때, "사실은 내가 간첩이요"하고 말하고 즉시 후회하는 자. -간첩행위를 영웅으로 하는 자. -간첩면허증을 소지했거나 정신하러하는 자. [홍세화, 『나는 파리의 택시운전사』 (알라파마출판사, 1995), 238-239면.]

그 누구도 간첩의 가능성이 있고 의심하며 보면 멀쩡한 사람도 간첩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강조한다. 거기에 문을 벌 수도 있다는 '유혹'도 사람들을 유인한다. 거기에는 <신고하여 상금 타고 민주안정 국가발전>의 표어가 노골적으로 강조하듯 문을 벌 수 있다는 '유혹'도 사람들은 유인한다. 분단의 현실이 지속되는 한 간첩은 있기 마련이고 또한 정부의 입장에서 시민들에게 신고를 강조하는 것은 불가피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문제는 지하철 안내방송 등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강조해야 할 정도로, 시민들이 스쳐가는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을 눈을 다시 뜨고 경계, 관찰해야 할 정도로 간첩이 그렇게 '우글거리는가'하는 점이다. 그러한 표어와 구호들은 순수한 대공적, 안보적 목적을 위해 유포되기보다는, 후반부에 분석하겠지만, 의도와 관계없이 사회의 전체 구성원들에게 '집을 주고' 그들을 '울크리게' 하는 기능을 할 가능성이 높다.

'좌익'에 관련된 표어는 더욱 그렇다. <좌익폭력 사회혼란 북한으로만 쏠려 한다> <우리 현실 바라보고 좌익세력 경계하자> <좌익세력 경계하여 민주안정 이룩하자> <민주위장 좌익세력 다시보고 신고하자> 등의 표어는 모든 좌익을 경계하고 배척해야함은 물론 민주 세력이 좌익일 수 있는 가능성을 힘주어 강조한다. 따라서 남한 내부의 '왼북' '용공' '좌익'적인 모든 경향은 북한공산주의의 연장-소극적으로는 '불순분자'에서 적극적으로는 '간첩'의 가능성을 갖는다. 체제, 국가, 반공주의 이념 등에 대한 모든 비판은 일단 '용공' 혐의의 대상이다. <한순간의 좌경사상 후손에게 눈물된다>라는 표어 바로 밑에는 <간첩신고는 113,112로. xx경찰서>라고 쓰여있다. 더구나 <간첩은 표시 없다 너도 나도 살펴보자>고 할 때 좌경혐의자는 간첩의 가능성이 높다.

나. 반공표어의 제2차적 의미

반공표어에 드러난 제1차적 의미는 사실 텍스트를 읽는 사람에게는 남한 사회의 정치문화적 지형을 토대로 거의 자동적으로 제2차적 의미로 암시된다. 그것이야말로 반공표어가 수행하는 정치적 기능이며 원래의 의도적 목적이기도 하다. 또한 반공표어에 드러나는 반공주의 이데올로기의 주입으로 특징한

정치사회 심리적 현상이 결과되기도 한다. 그것을 정리해보기로 하자.

1) 사상적 명확성과 획일성에 대한 압력

모든 비판적 언행, 주류이탈적 언행은 '좌경' '불순' ' '용공' '친북'의 혐의로 즉각 연결된다. <민주위장 좌익세력 다시 보고 신고하자> <민주의식 저해하는 불순행동 배격하자><의심나면 다시 보고 수상하면 신고하자> <사회혼란 조장하는 불온문서 신고하자>고 할 때 민주적 주장, 불순한 행동, 수상한 행위 등은 좌익의 혐의를 자동적으로 받는 것이고 그 다음 순서로 친북용공 혐의와 간첩혐의까지도 받을 수 있다. 즉 수상-불순-좌익/좌경-친북/용공-간첩의 회로를 타고 우리들의 의심은 첫 번째 단계에서 마지막으로 자동적으로 이동한다. 수상한 사람과 간첩은 백지 한 장 차이인 것이다.

2) 사상적 단순성과 이분법의 요구

또한 반공주의 '좌'에 대한 알레르기적 반응은 스탈린주의에서 유럽식 사회민주주의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진보적 사상을 '좌익불순사상'의 카테고리로 단순화시킨다 <분별없는 좌경용공 북한오판 자초한다> <좌익세력 경계하여 민주화합 이룩하자> <좌익폭력 밀어내어 민주안정 이룩하자> <좌경용공 이적행위 경계하고 신고하자>등의 표어나 '좌익사범 신고는...'운운 할 때 자유민주주의 사회인 한국에서 이미 좌파적 언행의 공간을 완전히 죄악시, 불법화함으로써 사상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부정한다. 내가 보기에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1항과 제37조 2항을 위반하는 것이다. '좌경용공' 논리를 확대하면 좌파 사회민주주의자도 신고와 경계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유럽의 사회민주주의적 정당이 정권을 잡은 국가들과의 교류도 끊어야 한다. 이러한 반공주의의 렌즈에서는 분홍색, 주황색, 빨간색의 구분이 없다. 모두 다 '빨갱이'인 것이다. <민주노동당>을 신고하자!? 토니 블레어를 경계하자!?

따라서 전혀 좌파나 공산주의와 관계없는 영역에서의 지배적 담론에 대한 도전도 반공/용공의 이분법에 걸려들기 쉽다. 왜냐하면 반공주의처럼 기존 질서에 대한 도전자를 순식간에 완전히 수세에 몰아넣는 좋은 무기는 없기 때문이다. '그 사람 수상한데가 있어서...' '그 사람 사상이 좀 이상한 게...'라고

낙인을 찍어버리면 그 당사자는 아무런 근거 없이도 자신을 열심히 방어해야 하는 수세적 위치에 저절로 놓이게 된다. 그리고 자신의 대한 혐의가 풀려도 여전히 그에 대한 주변의 의심하는 눈초리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물론 과거에는 이런 혐의를 받으면 상당한 물리적 폭압의 대상이 되는 일이 빈번했다.) 당사자의 사상이나 행위가 ‘친북용공’ 혹은 ‘좌경’이냐에 관계없이 이런 낙인찍기의 효과는 발휘된다.

3) 배타적 감시자적 태도와 순응성

반공주의는 한국사회의 대다수 구성원들을 지배적 규범 지키기의 감시자로 만들어버린다. 24시간 자기 자신을 감시하고 남을 감시하는 태도를 항상 유지할 것을 강요한다. 체제 규범으로부터 이탈하려는 사람에게 ‘혹 이러다가 용공으로 오해받지 않을까’하고 겁먹게 (<좌경용공 이적행위 경계하고 신고하자> <국가발전 가로막는 용공책동 분쇄하자>), 이탈자를 목격하는 사람에게 ‘혹 저 사람이 북에서 내려온..’ (어떤 맥주 광고는 장난이 아니다!)이라고 생각하게 만들면서(<간첩은 표시 없다 너도나도 살펴보자> <우리 마을 간첩 있나 다시 한번 살펴보자>) 양측에게 심적 부담을 부과한다. 더구나 <밝아오는 선진조국 자수하여 동참하자> <속은 인생 어제까지 밝은 생활 오늘부터>라는 구호는 그것을 읽는 주체인 ‘나’를 간첩으로 가정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따라서 간첩이 분명히 아닌 우리도 그것을 읽는 순간 자신이 간첩으로 언제고 오인될 수 있다는 부담을 자신도 모르게 갖게 된다. 신고와 자수를 권유하거나 강제하는 반공구호가 과연 ‘간첩’ 잡기만을 위한 것인가? 모든 이웃은 잠재적 간첩이다! 나도 그 중의 하나가 될지도 모른다! 간첩신고정신(<의심나면 다시 보고 수상하면 신고하자>)은 형태의 이탈 행위가 억제, 통제되는 효과를 발생시킨다.⁴⁾ 그것은 장기적으로 체제 순응력을 강제하는 정치사회화

4. 다시 서준식을 인용한다. “‘간첩’을 입에 올리는 것은 아직 두렵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간첩’문제를 피해갈 수 없다....그것은 단지 감옥에서 너무도 긴 세월을 보낸 불쌍한 노인들과 억울한 조작 간첩들을 해방시켜주기 위해서가 아니다. 분단체제에 마지막 남은 이 급기에 우리가 도전하지 않으면 안될 진정한 까닭은 바로 우리 자신이 오랜 불안과 공포와 불신의 굴레에서 해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강준만, 앞의 책, 305면에서 재인용).

과정을 통해 불균형발전으로부터 오는 사회적 약자의 저항을 봉쇄하고 길들이는 역할을 수행한다.⁵⁾ 이러한 부담을 통해서 억제되는 것은 단순히 진짜 간첩의 첩보활동만이 아니고 모든 형태의 수상하고 이타적이고 진보적인 그리고 모든 영역에서의 기득권세력에 대한 도전적 생각과 행위이다.

4) 군사동원주의적 질서관

이 회로에서는 혼란, 분열, 해이는 즉각 불순책동, 북한의 도발 위험, 안보불안과 동일시된다. <혼란 속에 간첩 오고 안정 속에 번영 온다> <좌익폭력 사회혼란 북한오관 초래한다> <분별없는 좌경용공 북괴오관 자초한다> <너와 나의 방심 속에 무너지는 국가안보> <흔들리는 안보정신 경제불안 사회불안> 따위의 구호는 자동적으로 혼란과 방심과 분열에 대한 대항정서 다시 말해 질서, 안정, 안보, 단결, 번영을 즉각 요청하는 심리를 만들어낸다. 걸핏하면 언론이나 정부가 사회불안을 강조하면서 ‘안보의식 해이’ ‘기강 이완’이니 ‘우리 내부의 허점’ ‘뒤숭숭한 세태’ 운운할 때 뻔히 요청되고 강화되는 것은 ‘풀어졌더니 군기가 빠졌다’는 식의 군사주의적 질서의식이다. 최근에 남북관계의 긴장완화나 탈냉전의 분위기 속에서 오히려 약화되기 쉬운 이러한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서 동원되는 것은 여전히 북한에 대한 공포이다. <북한은 변함없다 위장평화 경계하자> <붕괴직전 북한체제 대남도발 경계하자> <인민은 기아절망 김정일은 남침준비>등의 구호에는 남한의 북한에 대한 경제적 정치적 ‘압승’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공포를 조장, 주입하려는 집요한 의도가 살아있다.

5) 공격성과 적대적 증오

6 25의 생체험과 그후에 일어났던 국지전 충돌 그리고 ‘김일성 때려 잡자’는 식의 반공교육은 한국사회 구성원들의 적대적 증오와 공격성을 극단적

5. 안철현, “제1공화국의 반공정책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논문집』 제15집 1권 (1994), 17면의 반공교육은 “체제에 대한 순응력을 고양시킴으로써 양질의 노동력을 제공케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분석은 과거에 한정되지 않는다. 탈반공적 사고가 공식적 반공주의를 포위하고 있는 90년대의 상황에서도 사상적 통제는 발전주의의 실리적 요구와 연관되어 있다.

으로 확대시켜 놓았다. ‘북한’과 ‘빨갱이’에 대한 증오심으로 출발한 이러한 성격의 반공주의는 이제 의견을 달리 하는 사람이나 집단 혹은 지배적 규범에서 이탈하는 사람에 대한 적대적 증오감을 유발한다. 우리 사회에서 사소한 충돌이 쉽게 극단적 욕설과 물리적 폭력으로 발전하는 것은 반공주의적 냉전 문화에 깔려 있는 이러한 공격성과 증오의 정서 때문이다. 그것은 의심과 경계의 요구와 결합하여 타자에 대한 비이성적 공격과 폭력을 정당화하고 유발한다.

4. 반공주의와 평화문화

앞서 설명한 내면화된 반공주의가 축이 되어 있는 냉전문화는 이제 더 이상 북의 공산주의에 대한 비판이나 거부만이 아니다. 그것은 불균등 분배로부터 오는 사회적 약자나 비관적 세력의 저항을 봉쇄하고 길들이는데 이바지한다. 이러한 사회적 심리가 아예 코리안의 심성의 일부로 전환되면서 모든 형태의 사회적 도전과 이탈을 두려워하는 사회적 차원의 문화가 굳건한 헤게모니를 확보했다. (“벽에 틈이 생기면 바람이 들어오고 마음에 틈이 생기면 마가 들어온다.”⁶⁾) 더 무서운 것은 우리 자신의 눈이 타인의 눈, 정확하게 말하면 소수집단에 의해 의도적으로 조작되고 생산된 ‘타인’의 시선에 의해 이미 대체되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반세기를 넘게 재생산된 반공주의 회로는 모든 불법적이고 부패한 현실을 코앞에서 보면서도 그럭저럭 순응하고 사는 버릇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세상이 다 그런 거지”), 그것에 대한 도전이 도전자 개인에게 쓸모 없는 고통과 번민을 안겨줄 것이라는 공포 (“너 혼자 그래봐야 너만 손해야. 세상이 바뀌겠냐”), 이것을 통해 유지되는 집단적 범죄 행위에 대한 동참과 인정 (“너나 나나 다 그렇게 뜯어먹으며 사는 거지. 도덕군자라고 별 수 있냐?”)의 정치 사회적 문화를 더욱 강화하는데 결정적으로 이바지하였다. 그것은 ‘공안’ 당국을 정점으로 국가권력이 강제적으로 요구하는 이데올로기의 차원을 넘어선 지 오래다. 그것을 단순히 교육부/국가정보원이나 극우언론이 강요하거나

6. 박홍/남용우, 『레드 바이러스』 (서울: 기독교청년문화연구소, 생명문화연구소, 1997), 1면.

조작하는 데서 발생한다고 보는 것은 단견이다. 이제 그것은 우리 몸 속에 녹아 있는 일종의 생체권력이다.

물론 서서히 냉전문화가 약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지만 남북간의 긴장 고조나 남한사회의 위기 시에 순식간에 전면으로 부상하여 안보 최우선성을 앞세우고 정당화하는 집단적 결집을 요구하면서 실천적 힘으로 전환한다. 나는 이러한 성격의 냉전문화가 북한사회에도 유사하게 뿌리를 내렸다고 본다.

반공주의적 냉전문화는 우리에게 두 가지 문제를 남긴다. 첫째, 앞서 길게 설명했듯이 다양성과 차이를 존중하는 민주주의적 사회와 시민의 형성에 치명적 장애가 된다. 감시하고 불안해하고 공격하고 적과 동지로 사람을 나누는 태도는 일종의 정신적 병리현상이다. 끊임없이 집단에 대한 소속감을 ‘국민’ ‘국가’ ‘민족’ ‘안보’의 이름으로 강박함으로써 다양한 정체성-성적 계층적, 개체적 정체성 등을 억압하는 것도 병리적이다. 그러한 병리 현상이 만연되어 있는 한 우리사회와 그 구성원이 건강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기는 매우 어렵다. 둘째 반공주의적 냉전문화가 우리사회의 주류적 문화적 토대가 되어 있는 한 안보/국가/군사주의가 항상 잠재적으로 갖고 있는 물리적 충돌에 대한 호응성을 제거하기 어렵다. 남한사회에서는 분단과 남북한간의 적대적 대결구조에 뿌리를 갖고 있는 군산학복합체가 여전히 힘을 갖고 있다. 그것은 전쟁을 원한다고 까지는 말하기 어렵다해도 전쟁의 가능성을 환기시키면서 자신의 존재의 이유를 정당화하는 세력이다. 따라서 유사시에 그것은 냉전문화의 뒷받침에 힘입어 ‘전쟁불사’의 상황으로 우리를 몰고 갈 위험이 크다.

따라서 우리는 남한사회의 정신적 건강함과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코리아의 평화를 위해서도 이러한 반공반북주의적 냉전문화를 다원주의적 평화지향적 문화로 바꾸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평화지향적 세계관이 내면화되는 이런 과정은 일회적 사건이나 도덕적 울분 혹은 정치적 비판에 의해서 쉽게 이루어질 수 없는 장기적인 과정이다. 그것은 인내심 있고 포용력 있는 교육과 홍보, 계몽 등에 의해 서서히 생겨나는 정치심리적 변화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그것은 사상의 자유, 다양성과 차이에 대한 존중, 비판적 이탈적 언행에 대한 관용, 폭력을 배제하는 합리적 타협과 협상의 존중, 민주주의적 질서의 내면화, 이웃과 생활세계에 대한 이완된 태도, 평화에 대한 일상적 욕망을 유

발하는 변화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변화과정에서, 차이를 차별로 전환하는 폭력적 가부장제적 질서에 반대하고 그것의 극복을 모색하는 성평등 운동이 매우 주요한 역할을 담당할 이유는 충분하다.

우리들 삶 속의 군사주의 : 여성과 군사주의의 관계를 중심으로

권 인 숙 (Harvard University 한국 연구소 Post-doc fellow)

1. 여성들은 군사주의나 군사화와 무관한 주체로 생각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남자들과 비교해서 군대에도 가지 않고, 비상시에 직접적으로 국방의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모성의 주체임을 강조하면서 근본적으로 여성을 전쟁이나 군사주의와는 거리를 둔 존재로서 규정하는 시각도 상당히 넓게 퍼져있다. 그러나 군사화 과정을 단순히 군대 내부에서 한정되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 사회적인 것으로 이해하려고 할 때 이런 무관심이나 분리의식은 다른 각도의 분석 거리를 제공한다. 한 사회는 일정한 성별영역구분, 역할구분 또는 바람직하다고 기대되고 요구되는 여성성이나 남성성의 구분과 상호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군사화 과정도 이런 사회구성의 맥락 속에 함께 자리잡고 있다. 그러하기에 당연하게만 보이는 이 관련 없음이나 여성의 존재적 거리두기의 철학이 오히려 여성의 군사주의와의 관련성과 군사화된 사회 속에서 여성의 역할이 드러나는 것을 가리고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즉, 이런 가시적 관련없음은 군사화가 진행되면서 같이 진행되는 성차별적인 분업, 영역규정, 그리고 기존의 가부장적인 남성성을 강화유지시키면서 억압적인 여성성을 재생산하는 실체에 대한 문제제기를 원천적으로 어렵게 하는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한편, 한국의 경우 남자들에게도 군사주의나 군사화는 일상적으로 쉽게 이해되는 개념이 아니다. 사실 군사주의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거의 쓰여지지 않아 왔다. 한국의 남성 정치 평론가를 만나서 이야기했을 때도 군사주의라는

말에 무척 낯설어 했다. 다른 지식인층 남자들도 마찬가지였다. 또한 내가 인터뷰했던 여성 모두가 군사주의라는 말을 들어보거나 써본 적이 없다고 대답했다. militarism의 또 다른 가능한 한국어인 군국주의에 대해서는 다들 히틀러나 2차 대전전의 일본을 떠올리면서 현재 한국현실을 설명하는데 적합하지 않은 낡은 개념으로 보고 있다고 반응했다. 관계된 말 중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쓰이는 말은 군사문화였다. 군인들의 문화가 사회 지배적인 통치문화로(홍두승, 1995, 변화순, 1995) 접목되고 확산된 것을 지칭하는 이 군사문화는 군사정권 아래서 오랜 세월을 보낸 한국사회의 여러 다양한 문화적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상당히 유효한 개념이다. 그러나, 군대문화의 시민사회로의 접목이라는 한정적 의미를 깔고 있는 군사문화는 사람들이 내면화시킨 이념이나 가치체계를 설명하는 데는 많은 한계를 지닌다. 즉, 북한을 극단적으로 적대화시키고, 이 집단에 대한 적개심과 공포심, 그리고 반복되는 전쟁가능성을 통한 긴장감 조성, 국가방어의 신성화, 미군주둔에 대한 대중들의 일반적인 지지, 국민개병제, 30년 이상의 군사정권의 지배가 가능했던 그 토대 등, 광범위하고 다양하게 이념과 가치체계, 세분화된 문화 등을 포괄하면서 총체적으로 진행되었던 한 사회의 군사화 과정을 군사문화라는 이미 한정되어 쓰여지는 개념으로 설명해낼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2. 여성과 군사주의에 대한 여러 생각들

1900년 초 이전부터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페미니즘에 영향을 받은 활동가나 학자들이 전쟁 도발에서 여성들이 어떻게 영향을 받고 역할을 하는지를 밝히려고 노력해왔다. 그러나 페미니스트 사이에서 여성과 군사주의에 대한 구조적인 설명을 피하는 연구는 상대적으로 최근에 시작되었다. 루덕 등은 자녀양육 등을 실천하는 여성들은 본질적으로 전쟁이나 군사주의와 거리를 두게 된다는 논리를 전개함으로써 평화운동의 주체로서 여성을 자리매김 했다. 미국에서 일어났던 “평화를 위한 여성파업”(1961-1970)은 실제로 모성이라는 공통점을 기반으로 일어났고, 영국에서 핵미사일 기지 건설에 반대해서 일어났던 그린햄 토크슨 운동(Greenham Common)(1982-89)은 여성만의 평화운동이었다. 환경론적인 페미니스트들은 여성-본성-평화의 관계를 강조하고, 캐롤 길

리건은 관계 중심적인 여성의 자아 형성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여성은 평화 그 자체나 평화적 해결 방법을 선호한다고 주장하였다.

정반대의 방향에서 일부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의 군대 참여나 게릴라 운동에 전사로 참여하는 것을 여성이 남성과 동등함을 얻어나가는 중요한 도구로 보기도 한다(Feinman, 1998, Stiehm, 1996, Hervert, 94). 이 관점에서는 동등한 군대 참여를 통해서 쟁취된 성적 평등이 한 사회의 민주화를 앞당길 수 있다고 본다.

이런 두 가지 흐름과는 다른 방향에서 일부 페미니스트들은 군대조직의 형성이나 유지, 그리고 한 사회의 군사화의 과정이 성별 분업화된 역할과 특성의 남성성과 여성성의 사회적 형성에 얼마나 깊이 의존하면서 진행되고 있는가에 관심을 쏟고 있다(Enloe, 1993, 1988, Elshtain 1987). 9).

3. 누가 군사주의자인가?

군사주의는 전쟁을 정상적이고 바람직한 사회적 활동으로 보이게 하는 가치관의 체계로서 또는 전쟁이나 전쟁준비와 관련한 사회적 실천이나 태도들의 총합으로서 이해되어 왔다. 사실상 전쟁이나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이데올로기로 보이는 이 부정적인 느낌의 군사주의는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믿고 내면화하고 따르는 신념들의 일정한 합의 형태를 띠기도 하는 이데올로기로 간주하는 것이 부적당해 보인다.

그렇다면 민주주의 질서를 오랫동안 가졌다고 하는 미국에서 이라크에 미사일 공격을 할 때마다 60% 이상의 국민들이 무조건의 지지를 보내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 많은 민족분쟁이나 종교적 분쟁이 군사적 대결로 치닫는 이유는 무엇일까? 엄청난 내전을 거친 이후에 독립한 알제리에서 아직도 내분을 집단적 폭력을 사용함으로써 해결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내전을 겪은 이후 남아프리카에 총기 문화가 크도록 번창해서 매일 19명의 사람들이 총에 맞아 죽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Cock, 1997) 군사주의 militarism의 일면적 규정, 즉 군사조직 존립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그 조직과 그 조직 성원들에게 힘을 부여하면서 전쟁과 전쟁 준비만을 정당화하기 위해 단편적으로 존재하는 이데올로기라는 규정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이 규정만으로는 한 사회 내

에서 또는 국제적으로 일어나는 군사적, 집단적 폭력에 대한 전사회적인 지지나 실천을 설명해내기 힘들다. 언제든지 군사적 대결로 치달을 수 있는 흐름과 동력이 내면화된 가치체계, 일상생활에서의 실천 없이 하루아침에 생겨날 수는 없다. 군사주의는 바로 그 내재된 가치체계와 일상적 실천 속에 자리잡은 이념을 의미한다. 재클린 콕은 현대의 민족이나 우방들 또는 집단의 이익을 도모한다는 명분 하에 갈등의 해결을 위하여 집단적 폭력(Cock, 1993)을 사용하고 그것을 정당화하는 이념의 줄기가 군사주의라고 규정했다. 신디아 인로는 이런 집단적 폭력을 가능케 하고 그러한 집단이 유지되고 힘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소위 말하는 전사로서의 남자다움, 그리고 그런 남자다움을 보조하고 보완하는 여자다움의 사회적 형성과 함께 이런 집단의 유지 보존을 위한 훈련과 단일적 위계질서, 역할분업들을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하는 여러 제도적 신념적 장치들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군사주의를 이해했다.

이런 관점에서는 반 군사주의자와 군사주의자의 경계선이 많이 허물어진다. 민족국가를 중심으로 형성된 현재 세계질서에서 군사주의를 설득시키고 대변하는 다른 표현들, 국가안보, 국가보위, 민족간의 힘의 균형 등이나 제국주의적 억압 속에서 또는 민족 내부 갈등 속에서 나타나는 게릴라운동,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한 정의 등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집단적인 폭력의 사용과 무장화는 쉽게 그 필요성과 정당성을 부인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군사주의자를 만나고 싶지 않고, 일상생활 속에서의 가치나 실천이 군사주의와 연결되어서 해석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일반적으로 군사주의는 민족주의나 가부장제와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고, 가부장제나 민족주의 속에 자리잡은 그런 특징들을 강화하거나 보강하는 신념체계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가부장제와 군사주의의 한 특성은 가부장제에서의 역할과 군사주의에 관련된 역할이 여성에게는 특히 큰 차이 없이 겹친다는 것이다. 이런 특성이 여성과 군사주의의 관련성을 드러나지 않게 한다. 예를 들어, 군인부인의 경우, 이들이 군대와 관련해서 하는 역할과, 가부장제에서 형성된 성별분업화된 여성의 역할과는 별 차이가 없다. 그렇기에 군대라는 조직이 군인부인들의 노동과 협조에 어떻게 기대어 유지 운영되는가는 제대로 인식되지 않아 왔다.

이런 끊임없는 군대조직과 관련된 군인 부인들의 무임노동은 별 문제 의

식 없이 도전을 받지 않은 채 많은 나라에서 지속되어 왔다. 가부장적인 성별 노동분업 속에서 당연한 듯이 형성된 자연스러움이 군인 부인들의 군대 조직에 대한 협조와 무임노동 제공을 가능하게 만들었다고 분석한다. 군인 부인의 경우에서 주목하게 되는 부분은 자연스럽게 비추어지는 가부장적인 성별분업이 어떻게 한나라의 군대조직을 지지하고 유지하는데 이용되고, 사실은 필수 불가결한 부분으로 자리잡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여성과 국가안보와의 가려어진 긴밀한 관련성을 비쳐볼 수 있는 좋은 경우라고 생각한다.

가부장적인 남성성과 여성성은 군사주의가 뼈대로 하는 남성성, 여성성과 큰 차이를 낳지 않는다. 그러나 군사화의 과정은 폭력적이고 전투력의 향상을 중심 목표로 훈련된 남성성을 옹호하고, 폭력적인 면을 가부장적인 남성성에 더하면서 동시에 기존의 가부장적인 남성성을 강화시켜낸다. 남성성은 항상 변화하지만 우리사회에서는 “남자는 군대를 갔다와야지 사람이 된다”라는 전제를 상당수 사람이 포기하지 않고 있다. 제 2의 학교로서의 기능이 상당히 인정되는 편이다..

남자가 강해야 하고 가족부양자로서의 책임감을 가져야 하며 힘의 논리에 적응하여 성공을 하여야 한다는 것 등은 가부장적인 남성상 속에서 계속 유지 보존되어온 성질이지만, 군대경험을 통해서 집단적으로 강하게 재교육되는 한국에서의 기본적인 남성성이다. 아직 높은 성폭력 발생비율이나 비대하게 성장한 유흥산업과 매춘업과 이런 집단적인 남성들의 군대경험과 그 속에서 형성된 남성성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를 검토해 보지 못했지만, 상식적으로 상당한 관련성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성성에 대한 이분법적인 규정, 매춘여성과 순결한 부인 등의 비교와 대립 속에서 한편의 여성에 대한 극단적인 성의 상품화와, 한 극의 여성집단에 대한 집중적인 성도덕에 의한 규제는 남성들의 군대 경험 속에서 양성된 가부장적이면서 여성이라는 성을 상품화, 대상화하는데 익숙해진 남성성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4. 일상성과 군사화: 그 헤게모니적 실재

군사주의가 개인이나 조직, 사회운동, 그리고 전체 사회를 형성하는데 끼치는 영향과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군사화는 핵심 개념이다. 즉 군사화는 이념 또는 가치체계로서의 군사주의의 일상화, 사회화를 일컫는다. 군사화는 전쟁이 벌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군사주의의 영향에 관심을 갖고 설명하기 위해서 새롭게 관심을 끌고 만들어져가는 개념이다. 특히 성변화된 군사주의의 영향을 해석해 내려는 페미니스트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개념이기도 하다 (Enloe, 1982, 1993, Moon, 1998, Chenoy, 1998).

사회화 과정으로서 군사화를 강조할 때 같이 살펴보아야 할 것은, 어떤 의식 상태에서 각 개인들이나 집단이 군사화 과정을 겪고, 가치로서 받아들이고, 또는 실천에 참여하게 되는지는 것이다. 만약 의식적인 군사주의자가 그리 많지 않다면, 군사화 과정에 가담케 되는 무의식은 이들 과정과 어떤 관련을 갖게 되는지는 것도 궁금해지는 사안 중의 하나이다. 군사화와 관련된 개념의 의식적 발달 없이 지속적인 군사화의 과정을 거친 한국의 경우 기존에 진행된 연구 중에서 거의 밝혀지지 않은 이 관련성을 밝혀 내는 것이, 그 사회적 과정을 이해하는 데 필요할 것으로 본다.

이러한 군사화의 과정 중에는 우리가 군사문화의 확산이라고 해서 문제제기를 해왔던 것도 많이 포함된다. 그러나 상당부분이 집단적인 문제의식 없이 진행되곤 한다. 실제로 지배집단은 군사주의를 표현하는 직접적인 담론을 거의 쓰지 않는다. 이런 담론들 중에는 우리가 거의 문제제기하지 않고 상식화해온, 다시 말해서 당연하게 여겨온 논리들이 의외로 많다. 많은 사람들은 국가방어의 필요에 대해 어느 정도 공통된 전제나 단일화된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 3세계의 국가나 민족의 경우, 제국주의의 식민화를 막기 위한 자기보호를 위한 무력의 확보나, 민족해방투쟁을 위한 적극적인 무장화의 필요성, 또는 일상시에도 강한 군사력이 평화를 위한 거의 유일한 길이라는 생각 등이 다수의 동의를 즉각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저변에 깔려있는 공통된 가치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은 어떤 식의 기준으로든 군사적으로 가장 긴장된 나라 중의 하나이

다. 냉전시대가 해체된 이후에도 변함없이 전쟁 가능성을 떠올리며 북한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 물론 현실적으로 2000년 현재는 80년대나 그 이전 70년대와는 많이 다르다. 일단 군부가 직접 통치하는 나라는 더 이상 아니다. IMF의 여파인지 아니면 언론에 조금 더 공개가 되어서인지는 몰라도, 군축 문제도 제법 거론이 되고 있고, 일정하게 동의도 얻고 있는 듯하다. 군의 비리도 더 이상 성역이 아닌 듯 조금씩 알려지고 있다. 이런 현상들은 한국사회가 탈군사화되어 나가는 징표들로서 읽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몇 가지 중요한 의문은 그대로 의미를 지닌다. 왜 우리사회에서는 군사주의나 군사화, 또는 이런 개념들을 대체할 만한, 즉 우리사회에서 광범위하게 진행되었던 군사주의적 질서를 파헤칠 개념이 생기지 않았을까, 또는 한국사회같이 군사적 긴장감이 강하고, 북한의 핵보유 여부가 계속 논란이 되고 주한미군 주둔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나라에서 왜 평화운동은 배안시당하고, 반전운동은 반미운동 이상의 의미로 확대되지 못했을까?

군대의 존재와 그로 인한 힘의 균형, 필요시에는 집단적 폭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전제에 대한 동의와 그 이전에 이들 주제들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도 느끼지 않았던 그 사실 속에 군사주의를 내면화하고 있는 우리들의 실체를 엿볼 수 있다. 결국 우리의 민족주의 의식 속에 그리고 전쟁의 경험을 통해, 그리고 분단 상황을 통해 신성화되어 버린, 가라앉아서 새삼스럽게 강조할 필요도 없어져 버린 집단적인 국가방어 등에 대한 동의 속에서 우리사회의 가장 중요한 조직화 경험의 하나였던 군사화 과정이 그 구체적인 실체를 별로 드러내 놓지 않고 진보적인 지식인들까지도 지배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5. 한국의 지난 역사와 현재의 문제 또는 문화적 흐름을 설명하려고 할 때 군사주의나 군사화라는 시각을 통해서 본 면면들이 우리사회의 모든 것을 설명해주거나 대변해 줄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더군다나 여성과의 관련성에서 군사주의의 영향력이 유교적 가부장제나 자본주의적 성별분업의 그것보다 더 클 것이라고 믿지는 않는다. 다만 건국 50주년을 맞은 이후 우리 현대사에 대한 재평가가 이러저러하게 행해지고 있는 요즈음, 우리사회를 평가하고 분석할 수 있는 하나의 카테고리로서 군사주의와 군사화라는 개념을

제기하고 싶을 뿐이다. 군사주의와 군사화라는 분석틀은 우리가 권위주의나 유교적 가부장제나 또 다른 여타의 분석틀에서도 접근할 수 없었던 국가방위라는 신성화된 전제와 그리고 군대라는 조직이 이 사회 속에서 어떤 정당성을 가지고 존재하고 사람들의 무의식 속에 자리잡은 이와 관련된 가치와 도덕이 양산해낸 문제들을 짚어볼 수 있게 한다. 또한 쉽게 상정할 수 없는 여성과 군사화와의 관련성이 그 두텁게 가려진 장막 속에서 이 사회의 성별분업과, 역할규정과, 그리고 여성억압의 폭력성을 가중하고 있음도 이 분석틀 속에서만 제대로 이해되고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첫 야당 집권 후 민주화로 나아가기를 같이 열망하면서도, 박정희 찬양론이 거침없이 등장하는 갈등하는 전환기에 이 분석틀은 참 민주화에 대한 한 좌표를 제시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한국 여성평화운동의 과정과 전망

정 현 백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상임대표, 성균관대 사학과 교수)

1. 여성평화운동의 객관적 조건들

이제 우리는 발상전환을 시도할 역사적 시점에 와있다. 80년대 말부터 탈냉전이라는 세계사적인 지각변동을 경험하면서, 세계적으로 현대사를 지배해온 '대립적인 사고방식'과 '적대적인 대치관계'는 종언을 고하게 되었다. 이는 한반도의 환경에도 영향을 끼쳐서, 1991년 11월에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었고, 1994년 10월 제네바에서 북/미 핵 합의문이 채택되기에 이르렀다. 이와 더불어 한반도 내에서 남북간의 긴장관계는 현저히 약화되었다. 또한 우리 역사상 최초의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면서 김대중정부가 들어섰고, 더불어서 '햇볕정책'이 추진되기에 이르렀다. 햇볕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정/경 분리의 원칙과 함께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었다. 이미 10만 명 이상이 다녀온 금강산 관광은 북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여주는 역할을 하였다. 또한 지난 4년간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던 '북한동포돕기 운동'은 우리로 하여금 북의 동포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한반도에서 긴장이 완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평화는 여전히 위협당하고 있다. 서해안의 남북간 교전사태라든가 금강산 관광객 역류사건은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북에 대한 경계와 불신을 심어주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여전히 북미사일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 미/일 신가이드 라인 역시 한반도 구성원 모두에게 위협적인 요소로 다가오

고 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평화운동은 통일운동과 연계되어 이해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항상 우리의 분단현실은 평화유지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평화운동은 항상 통일운동과 어우러져 진행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우리 통일운동을 바라보자면, 우리는 엄청난 변화들을 확인하게 된다. 이미 언급한대로 한반도의 분단고착화를 냉전식에서 탈냉전식으로 전환시킨 미국의 정책도 정책이려니와, 민간부분에서도 범국민적인 차원에서 북한돕기운동이 일어난 것 그리고 탈북자들이 이제 우리와 어울려 살게된 것도 크나큰 변화이다. 이에 못지 않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국민들의 대북관도 엄청난 전환을 경험하였다는 사실이다. 과거에 북한을 보던 국민들의 시각은 북의 공격이나 침투에 대한 방어의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국민들의 의식구조는 반공의식보다는 북한에 대한 경시나 대북우월의식에 토대를 두고 있다. 통일 후 우리 국민들이 취할 태도는 사실상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나 조선족 동포문제를 통해서 잘 드러났다고 생각한다. 급속한 산업화 속에서 정신적·문화적으로 이를 소화할 여력이 없었던 우리 국민들 사이에 만연한 천민 자본주의적 행태가 통일의 과정에서 혹은 통일이후에 북녘 동포들과의 관계에서도 잘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뿐 만 아니라 한국 자본주의의 양적 성장에 따른 물질적 소비수준의 증가와 함께 알파한 실리주의적 정신으로 무장한 국민들은 통일과정에서 부담할 수밖에 없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어서 이도 통일과정에서 심각한 문제로 다가올 것이다. 이들은 통일이 필요한가에 대하여 회의를 느끼고 있는 것이다. 아직 국민 대다수가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다양성과 다름을 포용할 줄 아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사회에서 '북한의 위기징후'에 관련된 소식이 들릴수록 우리는 걱정스런 마음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내외여건의 변화와 국민의식의 변화 속에서 우리 통일운동도 이제 발상전환을 모색해야할 시점에 이르렀다. 즉 현실사회주의의 붕괴와 함께 급진적인 통일운동과 통일논의는 이제 설득력을 잃게 되었다. 이제 와서 과거의 급진적인 통일론, 즉 반미 민족자주·미군철수·연방제통일에 대한 주장이

나 과격한 시위방식을 고집하면 할수록, 이는 국민들에게 관념적이고 감상적인 태도로 비쳐지는 현실에 이르렀다는 말이다. 또한 북한으로 경사된 운동적 관점도 대중이나 지식인사이에서 소외되는 상황이 되었다. 또한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의식도 다원화되었다. 통일운동이나 통일과정은 이제 시민사회의 대중적 지원을 통해서 발전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런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북과의 적대적 대결은 소모적이고 반통일적이다.

통일운동에 대한 발상 전환을 위해서는 먼저 통일방안 중심의 통일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는 남북 정치권력의 형식적 기계적 결합을 중심으로 한 통일과정 연구에서 탈피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선 제대로 된 통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통일의 주체세력 혹은 통일의 구심세력 형성이 중요하다. 우선 남한 내에서 통일의 개념과 의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확산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남/남 대화가 필수 불가결하다. 그렇지 않고서는 참된 내적 통일은 불가능하다. 이런 남남대화의 토대 위에서 통일은 남북한의 적대적 대결을 해소하는 것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공존공영의 원칙을 현실화하는 것이다. 공존공영이란 남북의 두 체제가 함께 살고, 남북의 두 체제가 함께 번영한다는 의미인데, 이 단계는 이미 통일이 시작된 것이나 다를 바 없다.

공존공영을 구체화하는 가장 우선적인 작업은 현재의 적대적 군사대결구조를 완화하고, 화해·협력의 정신 속에서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작업이다. 공존공영을 구체화하는 또 하나의 작업은 사회경제적인 통일의 모색인데, 이는 형식적·기계적 통합이 아닌 실질적인 결합으로 가는 길이라 할 수 있다. 공존공영의 원칙에 입각한 통일논의는 사회주의나 자본주의나 하는 도그마를 극복하고, 이는 남북한 양측의 상호변혁을 지향해야 한다. 이는 20세기의 대립구도를 벗어나서 미래지향적인 대안체제를 모색하는 것이어야 한다. 지금까지 통일운동 내에서 북한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과 분열이 있었던 것은 체제대안적인 관점에서 북한을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현재는 북한을 남한체제의 대안이라고 단언하는 사람은 드물지만, 북한이 대안적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통일이 무의미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은 극복되어야 한다. 북한이 대안적인 체제가 아니더라도 통일을 향한 노력, 혹은 더 정확하게는 평화 공존을 향

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흡수통일과 마찬가지로 적화통일에 대하여 반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명백히 제시되어야 하고, 어느 한쪽도 희생되지 않는 제3의 모델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렇게 통일운동을 공존공영의 평화체제를 모색하는 것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새로운 국제관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관념화되고 구호화된 반미를 넘어서면서, 민족자주를 모색하는 방안을 궁리하여야 한다. 물론 미국의 탈 냉전식 분단고착화 정책과 과거 남한의 냉전식 통일지향정책을 비판해야 하지만,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통일정세의 돌파구로 만들려는 주체적인 노력을 하지도 않은 채, 민족자주의 목표를 선명하게 과시하기 위해서 반미구호만을 무차별하게 주장하는 것은 결코 진정한 민족자주의 길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이제 자명해졌다. 이런 맥락에서 주한미군 철수문제도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면서 탄력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겠다.

2. 여성평화운동은 왜 필요한가

한국의 여성평화운동에 접근하려고 할 경우, 우리는 통일운동을 언급하지 않고는 평화운동을 거론하기가 어렵다. 통일운동은 평화운동의 중요한 일부를 이루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일운동이 평화운동과 동일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평화운동이 더 포괄적인 개념이다. 작금의 통일운동이 서서히 화해·협력 및 평화체제를 모색한다는 점에서 평화운동에 접근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자체로서 평화운동이 되기는 힘들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 한국의 현실에서는 통일운동이 서서히 평화운동과 결합하는 방식을 택해야 할 것이다. 지난 30여 년간의 독재체제 아래에서 우리의 통일운동은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이라는 무시무시한 탄압체제아래에서 지나치게 정치지향적인 운동이 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 형식적 민주화가 어느 정도 관철되고 보니 우리 통일운동의 정치지향성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평화운동의 확산 필요성이 커졌다. 최근 남성들 사이에서도 이런 자각이 높아지고 있지만¹⁾, 우리 통일운동의 한계를 먼저 자각한 것은 여성들이었다.

여성들의 경우 평화운동에 대한 감수성과 자각이 남성보다 훨씬 높다거나 여성이 생명을 잉태하고 키우기 때문에 여성은 본성적으로 더 평화운동에 적합하다는 주장은 잘못하면 본질주의로 흐를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여성을 둘러싼 성별분업을 더 고착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루딕(Sara Ruddick)은 이런 주장보다는 여성의 생활상의 실천이나 노동방식이 생명을 돌보고 배려하는 것에 가깝기 때문에 여성이 평화운동에 더 강한 감수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그녀에게 모성적 사고 그리고 여성들이 지닌 '돌봄의 윤리'는 군사주의와 같은 기존의 지배적인 사고방식과 실천들을 비판할 수 있는 가장 우월한 관점이자 일상생활의 평화를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정초지가 된다.

마찬가지로 여성이 평화운동의 적극적인 주체로 나서야 할 또 다른 당위성은 여성이 비평화의 가장 큰 피해자이기 때문이다. 특히 분단상황에 있는 한국에서 군사주의의 피해는 심각한 수준이다. 그간 우리는 분단사회가 가져다준 여성의 고통들, 예를 들면 강간, 미군범죄, 매춘의 일상화 등을 지적해왔다. 그러나 이를 넘어서서 군사화는 우리 일상생활의 삶과 사회관계 곳곳에 모세혈관처럼 스며들어서, 우리 삶을 폭력화·황폐화한다는 사실도 도외시될 수 없다. 물론 군사화된 사회에서 병역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남성들이 당하는 피해도 적지 않다. 우리는 많은 젊은 남성들이 불합리한 군대제도와 군대문화로 고통을 당하는 것을 부정할 생각은 없다. 그렇더라도 여성에게 있어서 군사주의의 피해는 훨씬 중층적이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군사주의를 새로이 개념화하고 문제시하려는 노력이 있다. 군사주의는 가시화된 폭력을 유발하는 기제만은 아니다. 군사주의는 내재화된 가치체계나 일상적인 실천 속에 자리잡은 이념이나 무의식적 관행을 의미한다. 인로(Cynthia Enloe)는 집단적 폭력을 자초하는 집단이 유지되거나 강화되는 데에 필요한 소위 말하는 전사로서의 남자다움, 그리고 그런 남자다움을 보조하는 여자다움의 사회적 형성과 더불어 이런 집단의 보존을 위한

-
- 1) 최근 일각에서 진행되고 있는 '평화연대'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바로 이에 해당한다.

단일한 위계질서, 훈련 그리고 역할분업들을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하는 여러 제도적 신념적 장치들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군사주의를 인식하였다.²⁾ 이런 군사주의의 특징은 여성 혹은 남성들 스스로가 자신이 군사주의에 물들어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점이다. 군사주의를 이와 같이 새로운 개념으로 고찰할 경우, 우리는 더 이상 여성이 군사주의의 피해자만이 아니라, 가해자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서민 여성사를 발굴하는 작업에서 젠더(gender) 역사가들은 여성 대중이 반드시 '전쟁'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만은 아님을 드러냈다. 우리의 경우 6.25라는 전쟁이 우리 국토에서 일어났으니 이런 경향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일본의 경우에 여성들은 전쟁을 통해 '공적 영역'에 참가하게 되고, 이는 여성에게 무엇인지 알 수 없는 흥분과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했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여성이 역사의 객체가 아닌 주체라고 하는 페미니즘의 패러다임 전환은 여성이 단지 전쟁 피해자가 아닌 능동적인 가해자였다는 인식을 불러왔다.³⁾ 정리해서 말한다면, 여성은 분명 군사주의와 전쟁의 가장 중충적인 피해자인 것만은 틀림없지만, 그렇다고 여성들 스스로가 피해자로서 면죄부를 받게 되는 것만은 아니다. 이제 여성들도 '우리 안에 있는 군사주의'를 스스로 읽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루딕 자신은 여성은 평화, 남성은 전쟁이라고 하는 도식적 분류를 반대하고, '돌봄의 윤리'나 평화를 사랑하는 일상적 실천이 여성에게 국한된 역할로 치부하는 주장에 반대한다. 이런 지적은 본질주의에 빠지기 쉽기 때문이다. 우리는 종종 남성보다도 더 군사주의에 충실한 여성을 발견하기도 한다. 또한 루딕은 남성성이 지닌 다양한 기질을 남성 스스로가 봉쇄하고, 공격적이고 경쟁적인 단일한 남성성의 모습만을 드러낼 것을 가부장제가 강요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⁴⁾

2) 권인숙, 우리들 삶 속의 군사주의: 여성과 군사주의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미 발표원고, 5면

3) 우에노 치즈코, 이선이 옴김, 내셔널리즘과 젠더, 박종철출판사 1999, 57-8면

4) Sara Ruddick, "Notes Toward A Feminist Peace Politics", Miriam Cooke & Angela Woollacott eds., Gendering War Talk, (Princeton University Press: New Jersey) 1993, op.cit., pp.112-113

이렇게 평화지향성은 남/녀 모두가 갖추어야 할 품성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이미 앞에서 말한 대로 생활환경이나 노동방식에서 여성이 더 진화력을 가졌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또한 여성은 권력의 배분과정에서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권력자의 전쟁관에 더 쉽게 '아니오'라고 대답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현 시점에서 통일운동은 과거처럼 일방에 의한 타방의 흡수통합이 운위되던 상황을 넘어서서, 쌍방간의 화해·협력에 토대를 둔 평화공존이 모색되고 있다. 이런 통일방식에서 서로 대화하고 이해하고 협력해 가는 과정에 더 익숙한 것은 여성이기 때문에, 평화·통일운동에서 여성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여성과 평화운동에 적극적일 필요를 제기하는 또 다른 근거는 여성이 처한 객관적 상황과 관련해서이다. 유럽에서 1970,80년대 활발해진 신사회운동의 주력부대는 가정주부와 연금생활자였다. 자본의 전지구화는 마르틴과 슈만이 '세계화의 뒷'에서 지적한 2대 8 사회로의 진입을 재촉하면서, 여성이 정규직에 진입할 기회는 더욱 제한되고 있다. 공/사 영역의 분리나 남성=생계부양자의 이데올로기와 함께 여성은 임금노동이나 시장경제에서 배제되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노동 뿐 아니라 사회적 역할에서 주변화되는 여성이 모색할 수 있는 역공은 대안사회 실현을 위한 운동에 적극적인 주체가 되는 일이다. 물론 대안사회 모색에서 전제가 되는 것은 시장경쟁력 강화를 우선으로 하는 시장경제의 포기나 완전고용의 환상으로부터의 탈피이다.⁵⁾ 신사회운동 내에서 평화운동은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이다. 특히 유럽에서는 평화운동은 생태계의 평화도 포괄하고 있으므로, 대안적인 사회와 삶을 실현하는 과정과 평화운동은 직결되어 있는 셈이다. 우리의 경우에 평화운동은 오히려 광범한 이슈를 포함하기보다는 한반도 내 평화체제의 정착과 일상생활의 평화를 회복하는 일에 집중해야 하지만, 바로 이런 작업이 대안사회 실현과 연결된다면, 여성은 대안적인 노동형태나 노동에 대한 대안적인 평가기준을 만들어가면서, 기존의 권력관계와 경제관계에 전복을 시도하고, 새로운 사회적 역할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다.

5) 김미경, 노동사회의 미래와 대안사회를 위한 여성주의 정책, 한국여성단체연합 대안사회정책연구소 창립 심포지움(2000.2. 23) 자료집 참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여성은 누구보다도 평화·통일운동에 유리한 위치에 있고 그래서 이에 앞장서야 할 처지이다. 그렇더라도 이것이 은연중에 여성은 평화운동, 남성은 통일을 둘러싼 정치적 운동으로의 역할분담을 촉진한다면, 이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인로가 말한 대로 사실상 군사주의·국제적 담합자본주의·인종차별주의·성차별주의·제3세계의 빈곤은 서로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⁶⁾, 남/녀 간에 은연중에 이루어지는 역할분담은 여성에게는 정치경제의 구조적 특성, 남성에게는 일상생활의 비평화와 군사주의를 제대로 포착하는 것을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평화·통일운동이 요청되는 현실에 대한 총체적 이해, 구조적인 차원의 문제해결 모색 그리고 일상적인 차원에서 일어나는 비평화의 관행에 집요한 싸움을 전개하는 일이다. 다시 말하면 여성운동이 남성들이 정치적인 차원에서 풀어보고자 하는 통일과 평화체제를 좀 더 평화주의의 관점에서 그리고 일상생활 속의 평화 실현과 관련시켜 풀어보고자 노력할지라도, 이런 평화운동이 통일운동으로부터 괴리될 경우, 결국 여성들은 앞에서 말하는 역할분리를 다시 받아들이는 악순환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 외에도 한 가지 더 언급해야 할 점은 우리 평화운동의 절실한 필요성은 분단현실과 군사주의 문화의 극복을 위해서 만든 아니라는 점이다. 한국처럼 이렇게 단기간에 집약적으로 산업화가 이루어진 사회는 경험하기 힘들다. 그러나 우리의 산업화는 다른 신흥공업국처럼 유례없이 속도가 빨랐다는 점만이 특징적인 것은 아니다. 우리의 경우, 산업화는 분단현실이나 군사주의와 강하게 결합하였다. 미국에게 남한은 항상 반공정책과 자본주의 모델이 성공한 쇼윈도우이어야 했다. 뿐 만 아니라 북한에 대한 경쟁심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은 천민자본주의 발전을 촉진하였다. 여기에서 개인의 인권이란 목적을 위해 애시당초 무시되는 군사주의와 결합된 공격적 약육강식의 사회 분위기가 뿌리내렸다. 냉혹하게 말하자면 경제발전은 군사주의와 분단의 선물이 라고 할 수도 있다. 바로 이런 단기간의 강제적 산업화는 국민들에게 정신적

6) Cynthia Enloe, *Bananas, Beaches and Base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0 참조

혹은 사회 문화적으로 이를 준비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그렇게 때문에 국민들은 산업화와 급격한 도시화가 가하는 압력에 균형 있게 견디어내기가 힘들다. 자본주의가 아래로부터 자생적으로 거의 수백 여 년에 걸쳐 진행된 영국에서조차도 산업화기간 동안 정신질환자가 많았다는 통계를 보여준다. 하물며 우리 사회는 오죽 할 것인가? 많은 외부적인 관찰자들은 ‘한국인의 일상생활이 얼마나 황폐하며, 얼마나 약탈적인 사회인가’에 대하여 경악한다. 물질만능주의, 인간에 대한 능멸, 이기주의가 팽배한 우리의 일상생활을 탈출하여 우리의 삶 속에 평화를 안착시키는 노력이 없이는 진정한 남·남대화 혹은 남·북 대화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짚고 넘어갈 점은 우리가 사용하는 평화개념은 전쟁을 종식시킨다는 의미의 소극적인 평화를 더 이상 의미하지 않는다. 우리 사회 곳곳에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 속에 때로는 가시적으로, 때로는 非가시적이지만 모세혈관처럼 퍼져있는 폭력들에 저항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폭력이란 물리적인 폭력만이 아니라, 구조적 폭력이나 감정적 폭력도 포함한다. 이 과정에서 우리의 평화운동은 갈등하는 국가나 사회집단간의 분리만이 아니라, 양 집단간의 상호작용을 활발하게 하여 공통의 이익을 증진하고 평화를 실현하는 적극적인 평화전략에 기초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켜지는 평화(protected peace)가 아니라 활동적인 평화(working peace), 평화유지(peace keeping)가 아니라 평화 만들기(peace making)를 지향하여야 한다.⁷⁾

3. 그간의 한국 여성평화운동과 그 활동

1)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활동

70년대부터 시작된 여성평화운동은 주로 기독교여성들에 의해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시 한국에는 제2차 세계대전 말기 일본 히로시

7) 김윤옥, 남북한의 평화와 화해를 위한 실천들, 여성·평화·화해를 위한 실천들, 여성·평화·화해 (한국여성단체연합 10주년 기념 국제여성평화심포지움), 109-114면

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폭에 의해 발생한 피폭자 2만여 명이 병고와 빈곤 속에서 고통받으면서 사회로부터 방치되어 있었다. 이에 한국교회여성연합회는 70년대 중반부터 우리나라의 원폭피해자문제를 사회문제로 또한 일본 제국주의 미결의 전후처리문제로 꾸준히 여론화하였고, 동시에 피폭자에 대한 치료와 생계지원을 계속해왔다. 이들에게는 특수치료가 필요한 피폭 후유증과 노동력 상실로 야기된 빈곤문제가 심각하였다. 그래서 여성들은 치료와 생계비 외에도 자녀들의 교육비 보조문제까지도 지원하게 되었다. 특수치료시설을 건립하려는 운동이나 평화센터 건립문제로 까지 논의가 확대되었지만 지금까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2) 반전, 반핵, 평화운동

한국교회여성연합회는 1985년 유엔 여성의 해를 맞아, 유엔이 내세운 주제인 평등·발전·평화 중에서 평화관련 사업에 힘을 집중하였다. 다양한 평화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 외에도 '반전, 반핵, 평화'라는 주제아래 <평화마당>이라는 대중행사를 개최하였다. 1987년 6회 <반전 반핵 평화마당> 행사에서 참가자들은 민족통일운동으로서의 반전 반핵 평화운동, 민족자주화와 민족생존구원운동으로서의 반전 반핵 평화운동으로서의 입장을 표방하고, 한국여성평화운동의 과제와 방향을 제시하였다.

1988년 3월에는 한국여신학자협의회가 통일문제 세미나를 개최하고, '민족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 여신학자 선언'을 발표하였다. 한국여성단체연합도 우리 사회의 비민주와 분단의 극복 없이는 진정한 여성해방이 달성될 수 없다는 취지 하에 통일과 평화의 문제를 여성운동의 주요과제로 채택하였다. 이어 1990년 5월에는 '조국통일위원회'를 만들고 통일운동의 방향을 평화군축으로 정하였다. 1989년 여연은 반핵평화위원회라는 이름아래 핵발전소 건설(핵발전소 11,12기) 저지운동, 군사기지 철수운동, 핵무기철수운동에 착수하면서, 반핵운동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내었다. 또한 <여성평화한마당>이라는 대규모 집회를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공동으로 개최하여, 성인 1500명, 어린이 500명이 참여하여 다양한 문화행사를 즐기면서, 평화운동의 의미를 되

새김질하였다. 또한 평화운동의 대중사업화의 일환으로 기독교민회도 '군축과 여성복지'활동을 위한 기금마련을 위하여 '여성평화 알뜰장'을 개최하였다. 또한 같은 해 충북여성민우회는 전쟁장난감을 무공해비누와 교환해주면서, 전쟁문화퇴치운동을 벌였다.

1991년에도 미국과 유엔의 다국적군에 의해 대이라크 전쟁이 개시되자, 교회여성연합회와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이같은 반생명적, 반평화적 전쟁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전쟁중지를 호소하였다. '페르시아만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걸프전쟁과 한국군 파병을 반대하는 어머니모임'을 결성하였다. 그 외에도 '걸프전쟁과 전쟁문화'에 대한 토론회, 어머니 편지 보내기, 전단 등을 배포하였다.

1994년 한반도의 핵사찰과정에서 북한의 핵사찰 불응이 국제적인 쟁점으로 떠오를 때, '94년 2월 여성단체연합 등 9개 여성단체가 중심이 되어 <패트리엇 미사일 배치를 반대하는 여성모임>을 결성하였다. 이들은 우리나라의 지형에도 맞지 않고 성능도 좋지 못한 패트리엇 미사일을 배치하려는 것은 냉전이후 사양길에 접어들고 있는 미국 군수산업의 제3세계에 대한 무기판매의 방식일 뿐이라고 비난하였다. 또한 94년 6월에는 평화를 기원하는 14개 여성단체가 모여 <평화를 만드는 여성연대>를 결성하였다. 이들은 대북 제재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방식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되기에 평화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호소하면서 남/북/미간 3자고위급회담의 조속한 개최와 북미수교·팀스피리트 훈련중지·북한 핵사찰 재개 등을 일괄 타결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3) 군축사업

1996년 통계에 따르자면, 남한은 국가예산의 22%를 국방비에 소모하고 있고, 국방예산의 25%가 미국 무기 구입비로 지출되고 있다. 22%를 웃도는 국방비는 급변하는 세계경제에서 우리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국민 복지예산의 삭감을 가져왔고, 그 결과 한국의 복지제도는 거의 후진국수준이

다. 평화의 철학자 바이제커는 서로 불신하고 있는 두 적대국가는 항상 상대방보다 강해야 안정감을 느끼나, 양자 모두가 상대방보다 강력할 수 있는 가능성은 영원히 오지 않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 먼저 과감하게 군축을 시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991년 9월의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남북한 당국의 불가침선언 채택 가능성에 힘입어 평화군축운동이 여러 형태로 집행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간접시설 확충 및 국민복지 수요충족을 근거로 방위비 삭감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기독교민회, 교회여성연합회, 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단체들은 국회회기 중에 방위비 삭감의 필요성과 이유를 설명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알리기 위해 '방위비 삭감 캠페인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국회회기 내 이런 국민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1천명 서명운동을 전개하였다. 국방부 후원으로 군사무기와 장비국제전시회가 준비되자, 교회 내 6개 여성단체들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가지고, 방위비 삭감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또한 1992년 9월에는 세계적인 군축과 평화운동 조류에 부응하여, 군비의 과도한 지출로 인해 상대적으로 과소지출되는 사회복지예산의 확대와 특히 여성복지 확대를 체계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방위비 삭감을 위한 연대모임>을 결성하였다. 또한 이 모임은 국방비 삭감의 필요성을 알리는 전단 형식의 편지 8000부를 제작하여 편지쓰기활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하였다. 또한 93년부터는 방위비 증액이나 삭감관련 자료정리 및 내용 비교분석, 방위비 예산의 심의과정 및 집행의 문제점 점검, 방위비 삭감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방안 등을 연구하는 연구활동을 진행하면서 방위비삭감과 여성복지 증대를 위한 활동을 장기적으로 기획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1997년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가 창립되면서, 방위비 삭감운동을 전담할 수 있는 조직체계가 생겨난 셈이고, 이 단체는 1998년을 '군축운동의 해'로 정하고, 다양한 연구와 교육사업을 수행하였다.

군축운동이나 방위비삭감운동은 평화운동의 중요한 일부를 이루는 것이지만, 이것이 현실화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여전히 불안한 남북정세 외에도 북한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은 여전히 국민 대다수에게 국방비 삭감은 전쟁 불안과 위기감을 고조시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여기에서

평화군축운동의 대중화가 어려운 지점이 있다. 전체적으로 사회가 보다 내실 있는 민주화를 경험하고, 국민의 의식이 향상되지 않는 한 이런 문제는 쉽게 해결되기가 어렵다. 따라서 여성평화운동은 방위비삭감과 군축과 관련하여 국민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하겠다.

4) 최루탄 추방운동

1987년에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정권유지가 불안해진 당국은 더욱 더 진압방법을 최루탄 발사에 의존하게 되었다. 최루탄 소요경비가 '84년에서 '86년까지 1백16억원을 웃돌게 되었고, 경찰의 심각한 피해, 최루탄 가스의 독성문제, 인명피해, 생태계 파괴, 피해보상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교회여성연합회와 한국 기독교 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는 '국민생명을 위협하는 최루탄을 추방합시다'라는 성명서를 채택하고 여성들이 최루탄 추방에 앞장설 것을 결의하게 되었다. 이 여성들은 정부 부처 등 100여 곳에 최루탄 사용금지에 대한 건의문을 발송하고, <최루탄 피해 고발센터>를 개설하고, 6월 12일에는 평화행진을 시도하고, 나아가서는 최루탄 제작회사 조사, 항의전화, 집회, 전단 배포, 서명운동 등으로 구체화되었다. 이러한 여성들의 평화운동은 노태우 대통령에 의해 6.29선언이 발표되는데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고 생각된다.

그 외에도 우리는 평화운동 중에서 통일사업과 관련된 수많은 여성들의 활동들을 기억하고 있다. 예를 들면 1991년에서 94년까지 4차에 걸쳐 진행된 남북 여성교류는 여성들이 이루어낸 가장 중요한 성과였다. 혹은 대한YWCA 연합회가 여러 사회단체와 함께 해낸 독립문에서 판문점까지의 '인간띠 잇기 대회'도 통일운동을 대중화하는 중요한 행사였다. 마찬가지로 97,98년에 여성들이 시도한 북한동포돕기운동은 많은 여성들에게 통일운동을 대중화시키고 북한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사회운동이 모은 모금액과 비교할 때, 여성이 거둔 액수는 대단히 작았고, 이는 여성들이 사회에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의 규모를 실감케하는 사건이었다. 또한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모금운동이 진행되다보니, 많은 여성들이 참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여성들의 성과로 수렴되지 않는 문제점을 노출하였다. 어쨌든 상기한 두 캠페인은 평화통일운동의 대중화에 크게 기여하였지만, 이 강의의 주된 관심은 평화운동이므로 여기에서는 간략히 언급하고 지나가고자 한다.

4. 여성평화운동의 과제와 전망

지금까지 다루어온 한국 여성평화운동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여성들이야말로 한반도 내에서 가장 먼저 평화운동을 시작한 집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여성들의 때 이른 통찰력과 실천은 바로 자신이 일하는 사회적·환경적 조건을 통해 누구보다도 평화를 사랑하게 된 여성들이 평화운동에 대한 감수성과 실천력을 가지게 되었음을 확인케 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여성들이 행한 평화운동은 여전히 소수의 운동에 머물고 있고, 대중화의 지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북한동포돕기운동이나 인간띠 잇기 운동 등에는 많은 여성들이 참여하였지만, 이들이 여성해방이라는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조직된 집단은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성들을 대중적으로 조직화할 수 있는 전술의 개발이 절실했다.

그러나 대다수의 여성들은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 격리되어 있다. 직장 여성의 경우 가사와 직업노동이라는 이중의 부담 때문에 이런 평화운동에 참여할 엄두도 내지 못한다. 또한 여성들 대다수는 여전히 비정치적이다. 그래서 여성평화운동의 대중화작업을 위해서 개별적으로 고립된 여성들을 끌어들이는 힘겨운 작업보다는 관변조직이건 페미니즘적 지향이 약한 조직이건간에 기왕에 어떤 조직된 틀 속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들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작업에 먼저 착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여성평화운동이 깊어져야 할 또 하나의 과제는 전체 평화통일운동 내에서 여성주의적 관점을 관철하려는 것이다. 통일운동은 늘 우리에게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지만, 이 운동은 남성위주로 진행되거나 미국/남/북간의 삼자관계의 역동성에만 관심의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이제 여성평화운동은 우리의 통일운동에 첫째로 평화주의적 관점을 추가하고, 둘째로 여성의 참여

을을 높이는 데에 노력을 경주해야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여성평화운동은 예리한 안목으로 그간의 평화통일운동이 지닌 문제점을 들추어내고, 우리의 일상생활에 미세하게 모세혈관처럼 퍼져있는 비평화적 요소를 발굴하는 데에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다. 무엇보다 그간의 평화통일운동이 지닌 지나친 정치지향성을 넘어서서 정치적 과제 외에도 일상생활 속의 비평화적 요소를 극복해 가는 노력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일상생활이 극심한 자본주의적 경쟁과 비인간화된 환경적 조건 속에서 얼마나 황폐화되었는가를 우리는 매일 실감하고 있다.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 은닉해있는 비평화에 치열하게 싸워나가야만 진정한 통일도 가능해진다.

상기한 평화운동의 발상전환을 염두에 두면서, 여성평화운동의 실천방안을 정리해보자.⁸⁾

- 1) 북한의 식량위기를 도움으로서 (민족)평화공동체 만들기를 전개한다.
- 2) 군축과 복지사회제도 정착으로 (민족)평화공동체 만들기를 전개한다.
- 3) 평화체제로 전환하여 (민족)평화공동체를 형성한다.
- 4) 남북한 여성들의 만남과 다양한 협력을 통하여 (민족)평화공동체를 조성해 간다.
- 5) 남북한 국민들의 적대감을 조장하는 법과 제도를 개선하여 (민족)평화공동체를 만들어 간다. 여기에서 적대감을 조장하는 법이란 무엇보다도 국가보안법이다. 이 법의 폐지를 통해 사회 내에서 그리고 남북간에 불화와 반목을 감소시킨다.
- 6) 평화연구와 평화교육을 강화하여 국민에게 평화의식을 심어준다.
- 7) '평화문화운동'을 전개하여 (민족)평화공동체를 만들어간다.⁹⁾ 특히 이는

8) 이는 본회 김윤옥 공동대표가 제기한 실천방안이다.

9) 김윤옥 대표가 '통일문화운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지만, 필자는 이를 '평화문화운동'으로 바꾸었다. 통일이 지나치게 강조되는 것에 조심하기 위함이다. 마찬가지로 '민족'이라는 용어도 가능하면 생략하고자 하였다. 민족문제를 끌어안는 것을 여성운동이 피할 수는 없지만, 지나친 사용은 자제되어

반군사주의 문화운동, 반복사상시정운동, 언론황포 감시운동, 자본주의 체제의 폐단을 줄이는 운동을 통해 새로운 대안문화를 만들어 가는 작업이다. 이를 통해 이분법적 사고의 극복, 적대적이라고 생각했던 타자와 의사소통하는 태도 그리고 상호이해의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

8) 국제적 연대를 통하여 다른 나라의 여성들과 더불어 평화공동체를 형성해가야 한다. 특히 동북아여성들의 평화운동이나 시민운동 단체, 미국과 유럽의 여성단체 혹은 해외동포여성들과 연대하여 우리의 국익실현이 타국에 비평화를 초래하는 결과가 되지 않는 방식으로 여성평화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그러나 앞에서 제시한대로 이런 8가지의 실천목표들은 훌륭하지만, 여성들이 이를 실천하고 대중화하는 것은 쉬운 작업이 아니다. 그래서 여성평화운동의 경우에도 실천을 위한 적절한 전술의 개발에 대한 치열한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 이것 없이는 여성평화운동은 탁상공론으로 끝나기가 쉽기 때문이다.

야 한다. 이를 위하여 정현백, 21세기 여성운동의 과제와 전망, 한국여성단체연합 대안정책연구소 창립 심포지엄 자료집을 참조할 것.

일상의 반평화와 여성의 삶

김 현 미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1. 일상을 정치화하기

일상의 영역은 전통, 규범, 습관, 생활양식, 언어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일상은 '문화'라는 이름 하에 총체적 삶의 양식으로 이해되어왔기 때문에, '일상' 속에 뿌리 깊은 권력의 작용과 억압의 형태를 '사회 문제'로 드러내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특히 '권력'이란 주로 공적인 영역, 즉 정치, 경제, 사회제도, 노동 영역 및 국가간의 분쟁 등 구조적인 문제에서 드러나는 힘의 불균형으로만 이해할 경우, 사적인 영역으로 간주되는 '일상적 경험'에 존재하는 폭력과 반평화적 요소는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되어왔다. '일상'을 정치화한다는 것은 개인의 경험 세계를 치밀하게 드러 다 봄으로써, 구조적인 불평등이 한 개인에게 어떠한 폭력의 경험을 하게 하는가를 분석하여, 개인적인 경험으로부터 '구조적 불평등'을 비판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다. 또한 이제까지 '사적'인 영역으로 간주되어 왔던 여성과 남성의 권력관계나 남근중심의 이성애 주의, 몸을 통한 정상과 비정상의 범주화(장애, 비장애/외모차별주의/연령차별주의) 등을 '구조적인 권력'의 문제로 인식하여, 보편적 인권 개념에 포함시키려는 정치적 실천이다.

2. 비정상적인 것의 일상성

문화 인류학자인 타시그(Michael Taussig)는 비정상적인 것의 일상성(the normality of the abnormal)이란 표현을 통해 라틴 아메리카의 군부 통치 하

에서 폭력이 일상화되어 '정상성'을 획득하게 되는 과정을 분석했다.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정권을 획득한 후, 그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과도한 폭력을 동원하고, 기준 없는 '처벌'에 의존하게 되면서 공포 문화가 조성된다. 국민들로부터 '동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면서 권력을 유지할 경우, 그 권력의 속성상, 대화와 타협보다는 피지배자에 대한 폭력과 비하를 통해 '권력'을 집행하고 거기에서 오는 쾌락을 즐기게 된다. 근대적 이성과 합법성보다는 '불예측성'과 '불확실성'이 일상 문화를 지배하게 되고, 사람들간의 상호 의심이 늘어나고 무력감이 팽배해진다. 이러한 '공포 문화'는 결국 공포를 일으키는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지배 권력에 효과적으로 저항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

급격한 근대화와 반공 이데올로기를 지배 이념으로 사용한 한국 사회의 일상화된 문화도 곧 잘 폭력을 무감각적으로 수용하는데 익숙해져 있고, 이는 전통적인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와 결합하여, 남성과 여성간의 '권력'의 차이를 확대시켜왔을 뿐 아니라, '폭력'(육체적, 언어적, 상징적 폭력)을 지배의 메커니즘으로 사용해왔다. 한국 사회의 가부장적 권력은 전통, 조국 근대화, 남성 가장, 반공주의란 이름으로 남성으로 상징되는 것에 대해 과도한 권력을 부여해왔고, 이러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여성과 여성적인 것을 '무권력화'시키는 사회적 장치들을 마련해왔다. 공적 영역에서의 여성 배제, 여성 비하적인 언어, 여성 몸의 식민화 등을 통해 관철돼 온 가부장적 폭력을 내재화 온 여성들은 종종 자신을 사회 변화의 주체로 인정하기보다는 무력한 체념자의 입장에 위치시켜왔다. 인간은 감정과 정서, 이성을 지닌 존재로서, 일상적인 경험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한다. 한국 사회의 일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개인 여성과 남성들에게 고통을 주어왔던 가부장제 권력의 반평화적인 요소들을 언어화해내고, 자신의 '인권'을 회복해야 한다. 즉 한국 사회의 여성과 남성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여겨져 왔던 한국 사회의 가부장적 일상 문화를 '비정상적인 것'으로 규정하면서, 새로운 삶의 정상성을 확보해야 한다.

3. 성별화된 폭력 (Gender-motivated violence)

가부장제 권력은 남녀간의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규율'들을 만들어냄으로써 '정상성'을 획득한다. '규율사회'의 질서는 공간의 분리, 시간의 관리, 구속, 감시, 처벌 등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사람들을 분류하고 정상과 비정상, 도덕적으로 옳고/그름의 범주로 나눈다. 정상과 비정상의 범주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인위적으로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상은 곧 폭력의 장소가 된다. 성별화된 폭력은 피해자의 성별성에 근거하거나, 바로 그 성별(gender) 때문에 당하는 모든 종류의 폭력을 지칭한다. 즉 여성을 '여성'답게, 남성을 '남성답게' 만들어내기 위해 동원되는 일상적 폭력이다.

1) 여성에 대한 폭력 (violence against women) : 여성(성인여성, 소녀, 어린이, 태아)을 죽이거나, 괴롭히거나 불구로 만들기 위해, 그들에게 가해지는 육체적, 심리적, 성적, 경제적인 모든 종류의 폭력을 일컫는다. 이러한 폭력은 여성과 남성간의 권력의 구조적인 불균형에서 비롯되며, 여성의 종속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행해진다. 나라마다 문화권마다 특정한 형태의 폭력이 존재하지만,보편적인 폭력의 양상들은 다음과 같다.

* 태아-유아 : 낙태, 여아 살해 등

* 어린이-소녀 : 영양부족으로 인한 성장발육장애, 음핵절개(이슬람사회, 아프리카지역), 어린이 매춘, 근친강간, 강간, 강요된 결혼, 자녀 매매, 신체적, 정신적 학대 및 폭행 등

* 결혼관계속의 여성 : 지참금살해 및 학대 (인도, 한국), 강제임신, 가정 폭력, 아내구타, 아내 강간.

이외에도 사회에 만연한 여성 비하적인 언어적 폭력이나 포르노그래피 등의 유통을 통한 문화적 폭력 등도 포함시킬 수 있다.

2) 성폭력 (sexual violence) : 권력이 '성적'인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과 성적 관계를 통해 매개되는 폭력 등을 포함한다.

폭력의 양상과 원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성 개개인의 특수한 상황에 기반한 사적인 문제로 보기보다는 우선 한국 사회에서 남녀간의 권력 관계가 '구조화' 된 방식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족제도로서의 가부장제, 공적영역에서의 여성 배제 등)

4. 여성의 일의 개념화

한국의 근대화 과정과 여성의 일: 초남성적 발전주의

여성의 일: '보상을 바라지 않는 헌신' '서비스노동' '감정노동'

5. 한국사회의 일상적 성문화와 여성 몸에 대한 비하

1) 성문화: 남성성기중심의 삽입성교는 기본적으로 공격적인 남성성과 폭력을 '미화'한다. 남성이 성적인 부분에서 주도적이고 지배적이어야 한다는 믿음은 여성의 몸에 대한 '권리'를 자신들이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2) 남근중심문화: 남근중심문화는 부계 혈연 중심주의와 아들 선호 사상의 외부적 표현이며

'남근숭배'의 주술 종교적 행위를 정당화해왔다. '남성의 성기'는 힘과 지위, 신통력의 상징으로서 일상 생활에서도 '드러냄'을 용인해왔다. 남자아이의 성기 노출을 당연시하거나, 노상 방뇨가 자연스럽게 이해되거나, 남자아이의 생산과 번식을 빌었던 상징물인 남근석의 존재들을 통해 일상화되어왔다. 또한 성기 노출을 통해 여성들을 위협하거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등의 성폭력 남성들도 '정신 이상자'라는 이름으로 처벌되지 않고 있다. 남성의 성기나 몸에 사회 문화적으로 긍정적인 의미를 과도하게 부여하는 것은 동시에 여성은 '남성 쾌락을 위한 보완품'이나 열등한 것으로 형상화해왔다.

3) 여성 몸에 대한 비하: '부정탄다,' '오염시킨다,' '유혹한다' 등, 여성의 시, 공간적 격리를 정당화해왔다.

4) 성폭력은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고 집행하면서 한국 남성들에게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큰 쾌락을 느끼게 하는 일상적 행위가 된다.

집단적인 남녀간의 힘의 불균형이 사적인 차원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된 것이 일상적인 영역에서의 '반평화' 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양성 평등의 문화는 가족제도나 정치, 노동, 섹슈얼리티 등 모든 영역에서의 여성 차별을 개선해야 확립될 수 있다. 한국 사회의 가부장적 근대화 과정은 남성들간의 경쟁을 통한 사회 발전을 상징하고 여성을 배제하고 여성을 남성의 사적인 소유물로 규정하여,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비인간적인' 삶을 강요해왔다. 최근 우리 사회는 많은 의식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특히 최근 '인권'과 '시민 사회'에 대한 논의는 개인이 자아 실현을 이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들에 대한 관심에 집중하고 있다.

기지촌 여성과 평화

김 현 선 (새움터 대표)

I. 기지촌 여성의 실태

<표> 경기도 기지촌 지역의 업소 및 기지촌 여성의 수(내국인/외국인)

1999년 11월 새움터 조사

지 역	정 부 통 계		실 태 조 사		팜푸집 (여성)	밀집지역 (여성)	동거여성	합 계
	클럽 수	여성 수	클럽 수	여성 수				
동두천시	44	84 133	48	133 250	6(31)	52(260)	100 90	524 340
평택시	38	150 163	82	545 308	5(30)		270 90	845 398
의정부시	16	56 51	18	90 29			110 65	200 94
파주시	-	- -	3	10 3			- -	10 3
합 계	98	290 347	151	778 590	11(61)	52(260)	480 245	1,579 835

1. 한국인 기지촌여성

1) 실태:

매춘, 경제적인 문제(빚 문제), 성병진료와 미군, 질병, 자녀문제, 범죄피해

2) 범죄피해

① 1999~2000년 사건들

· 신차금씨 살해사건-1999년 1월 동두천기지촌에서 신차금씨는 전깃줄에 목이 졸려 살해되었다. 그녀의 방벽에는 그녀의 립스틱으로 범인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whore"라는 글씨가 쓰여있었다. 미군이 용의자였지만 끝내 범인을 밝힐 수 없었다.

· 이정숙씨 의문사-1999년 9월에는 동두천기지촌에서 이정숙씨가 의문의 죽음을 당했다. 동거하던 미군이 용의자로 지목되었지만, 범인을 밝힐 수 없었다.

· 김성희씨 살해사건-2000년 2월 서울의 이태원 기지촌에서는 김성희씨가 목뼈가 부러진 채 살해되었다. 범인은 메카시 상병으로 밝혀졌고 재판이 이루어졌지만 8년 선고를 받았다.

· 서정만씨 살해사건- 2000년 3월 11일에는 의정부시에서 63세의 서정만씨가 갈비뼈가 모두 부러진 채 살해되었다. 미군이 용의자이지만 범인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

② 민족주의 진영의 접근의 문제점

가부장적이고 민족주의 중심적인 사회적 분위기와 관련단체들의 입장 때문에 미군이 범인으로 확실하게 밝혀질 때에만 이들의 죽음이 관심을 받을 수 있다는 현실은 문제해결을 더욱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2. 외국인 기지촌여성

1) 유입방식

한국의 성산업에 유입되는 외국인 여성 대부분이 ‘엔터테이너 비자(E-6 Visa)’를 이용한다.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3조에 따르면, 이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격은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 활동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 패션모델, 기타 이에 준하는 활동을 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다. 즉, 여기에 명시되지 않은 다른 일에 종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기지촌의 업소에 고용될 때에는 대부분 ‘댄서’라는 명목으로 들어오지만, 실제로는 연예 활동에 종사하게 되는 여성은 거의 없다. 대부분의 여성들이 미군 옆에 앉아서 술을 팔거나 여러 가지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고, 스트립쇼나 매춘을 하게 된다.

한국의 성산업으로 유입되는 필리핀 여성들은 대부분 한국특수관광업협회를 통해 들어오게 된다. 이 단체는 기지촌 지역의 업주 189명이 모여서 만든 법인으로, 문화관광부의 감독 하에 있다. 이 협회에서는 기지촌의 업주들이 몇 명의 필리핀 여성들이 필요한지를 주문하면 필리핀의 에이전시를 통해 여성들을 수입하게 된다. 현재 이 협회의 회장은 한국의 대표적인 기지촌 지역이며 현재 새움터가 활동하고 있는 동두천에서 도의원으로 당선되었으며, 작년 필리핀 여성 수입과 관련하여 사문서 위조 등으로 구속되었다가 이례적으로 4일만에 풀려났다.

2) 실태

-기지촌의 외국인여성들의 70%가 필리핀여성들이고, 20%는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 여성들이다. 그 외에도 페루, 볼리비아, 조선족,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여성들이 기지촌에서 일하고 있다.

-여권압수, 매춘, 알콜, 경제적 문제, 부양가족, 질병, 자녀

- 3) 외국인여성들을 유입하는 이유: 미군범죄와 반미감정, 경제적 이유

II. 기지촌여성들의 평화만들기

1. 자조조직 운동

1) 기지촌여성 자조조직과 운동의 역사

- ① 1970년대 군산의 미군범죄항의와 천막운동
1970년대 말의 임금투쟁
- ② 1980년대 송탄의 임금투쟁
- ③ 1980년대 동두천의 자조조직 활동

2. 새움터 활동

1) 목적: 기지촌매춘여성과 아동들과 함께 기지촌여성문제를 해결하고 인권보호와 자립을 위해 노력한다.

2) 활동

- ① 매춘과 관련한 법개정
- ② 매춘여성들의 권리 향상
- ③ 매춘여성의 문제를 사회에 알리는 활동
- ④ 매춘여성들에 대한 지원서비스
 - 현재 매춘을 하고 있는 여성:性病·매독·에이즈예방, 폭력예방, 건강과 사회적지원서비스, 법률상담, 위기상담, 교육서비스
 - 직업을 바꾸고자 하는 여성: 위기개입프로그램, 일시보호, 직업훈련, 직업재활서비스, 생계보호, 의료지원, 법률상담, 교육서비스

⑤ 사회적 낙인을 없애기 위한 활동

3) 운영에 참여하기

- ① 새움터 운영에 참여-회원회의
- ② 고문, 운영위원, 실무자로 활동

4) 범죄예방 자조조직

5) 목소리내기

- ① 1996년 기지촌여성 영화제
- ② 1997년 이영철 시집발간
- ③ 1998년 인순이 콘서트
- ④ 1998년 기지촌여성 인사동 전시회

주한미군, 여성에게 무엇인가?

새 움 터

미군이 한국에 주둔한 지 벌써 반세기가 넘었습니다. 북한 공산세력의 남침을 저지하고 남한 사회의 안정을 지켜주는 우방국의 든든한 울타리라는 평가에서,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기 위한 미 제국주의자의 획책이라는 비판까지, 미군의 한국 주둔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인식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그러나, 미국의 군대가 자유와 평화를 지킨다는 목적만으로 머나먼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 주둔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이제 거의 없을 것입니다. 미군의 한국 주둔은 자본주의 시장의 확대, 군수물자의 수출 등 미국의 국익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현재, 전국에는 약 100여 개의 미군기지가 주둔하고 있으며, 약 36,000명의 미군이 전국 각지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한국군에 비해 그리 많지 않은 인원이지만, 엄청난 자본과 기술력으로 무장한 미군은 상상을 초월하는 파괴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군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파괴력은 전쟁 상황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의 군대라는 이유만으로도, 한국 사회에 미치는 심리적, 정서적 영향은 엄청난 것입니다. 게다가, 분단 국가라는 한국의 현실이 주한미군의 주둔 필요성에 한층 무게를 실어주었던 것이 사실이며, 조작된 반공 이데올로기로 인해 1980년대 이전에는 미군 주둔의 정당성에 대해서 그 누구도 감히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1980년대 이후, 주한미군의 문제점에 대해서 비판 의식을 가지고 있던 많은 진보적인 학생, 시민들은 주한미군의 철수와 미군범죄의 근절을 외치며 지

금까지 싸워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힘겨운 투쟁을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한·미간의 불평등한 관계와 미군범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으나, 미군범죄의 가장 큰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기지촌 여성들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즉, 외국의 군인이 우리 민족 구성원에게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만 분노했지, 이러한 범죄가 특히 기지촌 여성들에게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기지촌 여성에게 자행되었던 수많은 미군범죄의 원인이, ‘한국과 미국’이라는 두 민족 사이의 모순 때문이라고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미군범죄와 기지촌 여성들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군대와 군사주의, 그리고 무력 갈등의 상황이 여성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대의 의미를 나름대로 정리하자면, 한 국가를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남성 위주의 집단이며, 그 힘의 원천은 살상 무기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군사주의란 이러한 군대의 문화, 즉 무력에 의한 제압, 철저한 상하 복종관계, 폭력의 정당화 등이 전 사회로 확산되어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자리잡은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군사주의가 그 세력을 확장하게 되는 시기는, 두 군대 집단이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해 충돌하는 무력 갈등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군대의 주둔, 군사주의의 확산, 무력 갈등의 상황이 여성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군대라는 조직은 철저하게 남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무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을 제압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힘의 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조직이기도 합니다. 강한 자에게는 복종하고 약한 자는 굴복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인 것입니다. 무력 갈등의 상황에서 이러한 원칙이 군대 밖의 사회로 폭발적으로 확대된다면, 사회적 약자인 여성이 당하게 되는 피해는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전쟁과 같은 무력 갈등의 상황에서는 많은 여성들이 집단 강간을 당하거나 군대 매매춘에 희생되어 왔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보스니아 내전까지 전쟁이 발생한 곳에서는 항상 여성에 대한 끔찍한 범죄들이 자행되었습니다. 일본군 성노예에서 보스니아 강간 캠프까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범죄들이 무력 갈등의 상황에서 저질러졌던 것입니다. 무력 갈등의 상황에서 발생한 이러한 범죄들은, 전쟁이라는 비이성적인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탈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전쟁의 과정에서 여성들에게 자행되는 잔혹한 범죄의 씨앗은 이미 평화로운 시기에 잉태되어 있었으며, 뿌리깊은 가부장적 편견과 군사주의가 그 근원에 있었던 것입니다.

마리아 올루직이라는 크로아티아의 여성학자는, 여성의 몸이 '민족 명예'의 상징적 저장소'로 작동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전쟁 중에 자행되는 집단 강간은 상대 민족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범죄 행위인 것입니다. 또한, 타의에 의해서 '순결'을 잃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여성 자신의 잘못으로 받아들여지고, 자기 민족 여성의 '순결'을 지키기 못했다는 것이 남성들에게 크나큰 치욕이며 자존심의 상처로 받아들여지는 가부장적 문화가 이러한 범죄를 가능하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게다가, 이러한 범죄에 의한 상처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오랫동안 치유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세비니아'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보스니아 내전을 배경으로 한 이 영화에서, 한 여성이 적군에게 강간을 당한 후에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웃과 식구들은 가문과 민족의 명예를 더럽힌 죄를 지었다는 이유로 이 여성을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결국 이 여성은 세르비아 군인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 여성의 아이만 살아남게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세르비아 수용소에서 집단 강간을 당한 여성들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Calling the Ghost'에서도 무력 갈등의 상황에서 여성들이 당하게 되는 피해와 그 상처를 치유해 가는 과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도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일본군에 의해 위안부로 끌려갔던 여성들이 다시 조국으로 돌아와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오히려 수십 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고, 기지촌에서는 아직도 많은 여

성들이 미군에 의한 성폭력과 범죄 피해를 당하면서도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못하며 고통받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기지촌 여성에 대한 미군범죄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강대국의 군인이라는 것과 피해자가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매춘여성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매우 심각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지촌 여성에 대한 미군범죄의 처리 과정에서도, 두 '민족' 사이의 문제로만 받아들여지고 '여성'에게 저질러지는 범죄라는 의미가 왜곡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1992년의 윤금씨 살해사건에서 올해 초에 발생한 서정만씨 살해사건까지 많은 기지촌 여성들이 미군에 의해 살해를 당했지만, 이러한 사건을 보는 시각의 대부분은 가해자가 '미군'이라는 사실에만 주목하였을 뿐입니다. 왜 기지촌 여성들이 미군범죄에 계속 희생되고 있는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여성들이 기지촌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피해자들이 기지촌에서 매춘을 하던 여성이라는 것을 애써 감추고자 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살아있을 때에는 '양공주'라고 멀리당하던 기지촌 여성들이 미군에 의해 죽임을 당한 후에는 '순결한 우리의 오누이', '민족의 딸'로 승화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항상 보호받을 가치가 있으며 도덕적 결점도 전혀 없는 존재라는 '피해자 규정'을 통해서 가해자의 행위를 더욱 비난할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여성'이기 때문에 당하게 되는 범죄라는 것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었으며, 여성들을 기지촌의 성산업으로 내모는 우리의 가부장적 편견에 대해서는 아무도 반성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부터 미군범죄에 희생된 여성들의 사례를 알아보고, 이러한 범죄가 계속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1990년대 이전에 발생한 사건의 경우에는 제대로 된 자료조차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또한, 그 이후에도 여기 언급된 사건 이외에 훨씬 더 많은 사건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1) 신원미상 미군에 의한 임신부 폭행사건 (1988년 9월)

미군에 의해 임신부가 구타를 당하여 아이가 낙태되었으나 사건은 미해

결 처리되었다.

2) 초등학교 3명 성폭행 사건 (1991년 1월)

경상북도 칠곡군에서 찰스 유진 버처 상병이 집으로 가던 한 초등학교생을 지프에 태워 성폭행을 하는 등 10세 미만의 여자 어린이 3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1991년 12월 징역 3년을 구형 받아 천안교도소에 수감되었다.

3) 독일의 한국 유학생 강간, 살해 사건 (1991년 10월)

독일에 주둔하고 있던 데릭 앤더슨 하사가 베를린의 한 공원에서 한국인 유학생을 강간한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해 살인을 저질렀다. 앤더슨 하사는 이 사건 당시 다른 살인 혐의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던 상태였으며, 미 군법회의는 1991년 11월 이 사건과 관계없이 다른 범죄 혐의로 22년 징역형을 언도하였다.

4) 윤금이씨 살해사건 (1992년 10월)

동두천시 보산동에서 윤금이씨가 케네스 마클 이병에 의해 살해되었다. 케네스 마클 이병은 1993년 4월 서울지방법원에서 무기징역을, 1993년 12월 서울고등법원에서 15년형을 선고받았으며, 1994년 4월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15년형이 확정되어 천안교도소에 수감되었다. 윤금이씨의 유족은 미국 정부로부터 7,100만원의 배상금을 수령하였다.

5) 김국혜씨 성폭행사건 (1993년 5월)

호프집을 운영하는 53세의 김국혜씨가 존 로저 살로이스 병장에게 구타와 성폭행을 당해 뇌골절상을 입었다. 김국혜씨는 3,900만원의 배상을 받았으며, 로저 상병은 1995년 1월에 형이 확정되어 천안교도소에 수감되었으나 같은 해 8월 김영삼 정부의 8.15 특사로 석방되었다.

6) 박 모양 폭행사건 (1994년 1월)

미군속 윌츠 윌리(46세)는 결혼을 미끼로 관계를 맺은 박 모양(25세)을 폭

행하여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고 태아를 유산시켜 폭력 혐의로 입건되었다.

7) 김분임씨와 두 자녀 살해사건 (1994년 6월)

미 플로리다주 포트월튼 소재 자택에서 김분임씨(33세)와 두 자녀가 그의 남편 에드워드 자크레브스키 공군중사에 의해 살해된 채로 목욕탕 욕조에서 발견되었다.

8) 조 모씨 성폭행사건 (1995년 5월)

의정부시 고산동 116번지(일명 뺑뺑) 야산 공동묘지에서 마이클 노웰 이병이 부대 근처 다이아몬드 클럽 종업원 조 모씨를 주먹으로 구타하고 성폭행하였다.

9) 왕인희씨 폭행사건 (1995년 6월)

경기도 동두천시 광암동 미군전용 로즈클럽에서 로버트 조제프 2세 병장이 종업원 왕인희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19바늘을 꿰매는 중상을 입혔다.

10) 천금숙씨 성폭행 사건 (1995년 11월)

대구의 한 주점 화장실에서 베넷 빌리 이병이 천금숙씨를 마구 때리고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경찰서로 연행되었다. 1996년 5월 베넷 빌리 이병은 단기 2년 6개월, 장기 3년형을 선고받아 천안교도소에 수감되었으나 1998년 8.15 특사로 석방되었다.

11) 에바다 농아원생 성추행 사건 (1996년 6월, 9월, 10월)

윌리엄스는 1996년 6월부터 10월까지 평택 에바다 농아원생 김 모군(12세), 최 모군(12세), 이 모군(16세)을 성폭행한 혐의로 1996년 12월 구속 기소되어 1997년 7월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윌리엄스는 항소하였으며, 1997년 12월 수원지방법원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석방되었다.

12) 이정숙씨 폭행사건 (1997년 5월)

이정숙씨는 자신이 투숙하고 있던 동두천시의 한 여인숙에서 동거하고 있던 테일러 라이오넬 안토니오 병장에게 폭행을 당해 전치 12주 이상의 진단을 받았다. 안토니오 병장은 서울지방법원에서 약식재판을 받고 벌금 100만 원에 처해졌다. 이 사건 이후, 이정숙씨는 새우터의 도움으로 치료를 받고 직업재활센터에서 근무하였으나, 1999년 9월 의문의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

13) 이현주양 성추행사건 (1997년 5월)

동두천시 한 모씨의 집에 차니 트레일 일병이 알몸으로 침입해 한씨의 외손녀 이현주양(6세)을 성추행하다 가족들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14) 허주연씨 살해, 방화 사건 (1998년 1월)

의정부시 고산동에서 핸릭스 티모시 제롬은 허주연씨를 폭행하여 사망하게 하고 자신의 범죄를 은닉하기 위해 사체를 불에 태웠다. 제롬은 폭행치사죄로 기소되었다.

15) 신차금씨 살해사건 (1999년 1월)

동두천시 보산동 자신의 방에서 신차금씨가 목이 졸린 채 숨져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사건 현장의 벽에는 'Whore(창녀라는 뜻의 속어)'가 쓰여져 있었으며, 피해자의 몸에서 발견된 정액에 대한 DNA검사 결과 외국인에게 많이 나타나는 염색체 구조가 나타났으나 범인은 아직까지 잡히지 않았다.

16) 이정숙씨 살해사건 (1999년 9월)

새우터 직업재활센터에서 근무하던 이정숙씨가 동두천시 보산동 자신의 방에서 숨져있는 것이 3일만에 발견되었다. 당시 동거하던 미군이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었으나, 미군 당국의 비협조적인 태도와 한국 경찰의 무성의한 수사로 인해 사인 불명의 미해결 사건으로 종결되었다.

17) 김성희씨 살해사건 (2000년 2월)

서울 이태원의 미군전용 아마존클럽 종업원 김성희씨가 크리스토퍼 메카

시 상병에 의해 살해되었다. 사건 수사 결과, 메카시 상병이 피해자에게 변태적인 성행위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18) 서정만씨 살해사건 (2000년 3월)

의정부시 고산동에서 서정만씨(68세)가 갈비뼈가 모두 부러진 채 숨져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목격자의 증언에 의하면, 사건 전날 피해자가 한 미군과 함께 방으로 들어갔으며 곧 싸우는 소리가 났다고 한다. 아직까지 용의자조차 잡히지 않은 상태이다.

위에 언급한 사례들을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여성에 대한 미군범죄의 대부분이 기지촌 지역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인에 대한 밀시와 성적 욕구를 해결하는 대상으로만 기지촌 여성을 바라보는 편견이 이러한 범죄가 계속되도록 만드는 이유일 것입니다. 미군 당국과 한국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는 매매춘을 금지하고 있습니다만, 기지촌의 성산업이 미군 병사의 사기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정책적으로 지원하여 육성하고 있습니다. 기지촌 지역이 관광특구로 지정됨으로써 클럽 업주들과 미군들은 다양한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그 곳의 여성들은 여전히 빛에 얹매어 있으며 미군범죄에 계속 희생되고 있습니다.

지난 1992년 윤금이씨 살인사건 이전에는, 미군범죄에 희생되는 기지촌 여성의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그리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윤금이씨 사건을 거치면서 미군범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새롭게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었지만, 기지촌 여성이 미군범죄에 계속 희생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그다지 관심이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미군’에 의해 저질러지는 범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겠지만, 이러한 범죄가 왜 기지촌 ‘여성’들에게 더욱 심각하게 벌어지는지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 주둔군지위협정(SOFA)의 개정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협상은 매향리 사건, 한강 독극물 방류 사건 등을 거치면서 그 어느 때보다 많

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이번 협상의 과정에서 미군 범죄의 가장 큰 피해자인 기지촌 여성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군의 요구에 의해 개발된 기지촌과, 그곳에서 미군에게 희생당하고 있는 여성들, 그리고 미군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혼혈아동 문제의 책임은 분명히 미군 당국에도 있습니다. 이번 협상에서 국가 주권과 환경권의 문제도 중요하겠지만, 기지촌 여성과 혼혈아동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 역시 매우 시급한 문제입니다.

남북관계의 급진전으로 이제 더 이상 한반도에는 미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한미군은 지금까지 냉전체제를 유지시키는데 큰 역할을 해왔으며, 분쟁의 소지를 제공하고 평화통일의 걸림돌이 되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게다가 많은 범죄와 환경 오염, 재산 피해 등으로 우리들에게 많은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을 가지고 있는 주한미군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보아야 하겠지만, 이들에게 피해를 입은 여성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더욱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군의 주둔과 군사독재를 거치면서 알게 모르게 우리 주변에 스며든 군사주의 문화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비판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의 와중에 여성들에게 가해지는 폭력의 씨앗은 지금과 같은 평화의 시기에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기지촌이라는 공간에서는 그 씨앗이 점점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기지촌이라는 특정한 공간의 일부 여성들에게만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러한 폭력이 우리 곁에 다가와 있을 수 있습니다. 남성들은 '평화를 원하는 자는 전쟁을 준비하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진정 평화가 계속되기를 바란다면 전쟁이 아닌 '평화' 그 자체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기지촌 여성들에게 평화가 찾아오는 그 순간, 모든 여성들이 진정 평화를 이루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평화와 성별 (gender) : 일상의 공포 정치, 여성에 대한 폭력

정 희 진 (여성과인권연구회 연구원)

“ 전쟁이 선포된 바 없어도, 여전히 여성들이 가까운 남성들에게 매를 맞을 때, 부인들이 슈퍼마켓 주차장에서 사라질 때, 매춘여성들의 시체가 강 위에 떠오르거나 버려진 건물 안의 냉마더미 속에서 발견될지라도 이는 인간의 고난의 기록에서 전적으로 무시되는데, 그 이유는 피해자가 여성이며 어떤지 섹스와 관련되어 있는 것 같기 때문이다. 여성들에게 일어난 일은 너무 특수하여 보편적이지 않거나 너무나 보편적이어서 특정할 수 없거나 둘 중의 하나이고 너무나 인간적이어서 여성적일 수 없거나 또는 너무나도 여성적이어서 인간적일 수 없든지 어느 하나를 뜻한다. ” - 캐더린 맥퀸

“ 무엇이 전쟁을 떠받치는가? 가부장제 또는 남성에 의한 지배, 폭력을 독점하는 국가체제, 궁극적으로 패권을 독점하는 초강대국 체제이다. ” - 요한 갈통

* *key words* : 젠더(gender, 성별 제도), 여성에 대한 폭력, 일상, 평화

*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peace by peaceful means)*

방법론의 변화, 사유 '방식'의 변화, 목적에 이르는 수단에 대한 철학의 변화, 질문 방식의

변화, 이는 평화 이슈가 기존의 패러다임(근대적, 남성 중심적)으로는 이

해, 해결되지 않음을 의미.

* 젠더(gender)와 폭력

모든 폭력은 성별적인 사회 현상. 이는 남성이 여성에게 폭력을 가한다는 의미 이상을 함의. 폭력은 성애화(sexualized), 성별화(gendered)된 형태로 나타남.

남성이 피해자라 할지라도 피해자, 약자는 언제나 여성적인 것으로 재현. 걸프전 당시 미군 폭격기 조종사들은 민간 건물과 시민들을 학살하기 전에 (하드 코어)포르노 테이프를 봄. 여성에 대한 고문은 흔히 생식기와 가슴 부위에 행해짐. 전투 중에 있는 병사들은 적들을 교수형에 처할 때 말기한다고 보고됨. 군사화 된 일상 용어(fuck, 오늘 내가 “쏟다”...) 미사일과 폭탄들은 모두 남근의 형태, 세계적인 기념비들은 모두 말 타고 있는 남성상, 남근 모양의 기념탑(에펠탑...)

여성의 시각 혹은 성을 고려한 시각(gender perspective) 시각에서 보면 폭력 인식은 기존의 대립 구도를 넘어서게 됨. 억압으로서의 폭력 對 정의로운 폭력(테모대의 폭력 등)에서 폭력 행위자는 모두 남성. 폭력 피해자인 여성, 사적 관계에서 더 큰 폭력을 당하는 여성들은 폭력을 다른 방식으로 사유함(제주 4.3. / 광주 민주화 항쟁의 예)

* 평화와 젠더

기존의 평화 담론은 군축 문제 등 공적 영역, 거대 담론 중심으로 논의, 적용됨. 개인(여성)의 일상적 경험과 대립시킴. (“군 위안부 개인의 성폭력 경험을 민족 모순에 대한 역사적 의식으로 승화하자”는 식의 담론이 대표적) 거대 담론, 공적 영역 중심의 평화 논의에서 여성은 이에 대한 ‘역할’과 ‘참여’가 강조됨. 역할과 참여에 대한 강조는 평화(통일운동 세력)운동의 논리나 반평화 운동(보수 세력) 논리나 같은 인식 구조임. 이 때 여성에게는 좋은 군대/나쁜 군대의 구분은 의미 없음. 군대를 포함한 현재의 남성 중심적 체제 자체가 여성에게는 반평화적임. “평화유지군의 위안부가 되기보다는 우리 스스로

평화주의자가 되자”

젠더를 고려하지 않은 평화 논의는 잘 이해되지 않을 뿐 아니라 무의미. 예) 현재 우리 사회는 국가인권기구 설치를 둘러싸고 많은 논쟁이 제기. 국가인권기구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과거 인권 침해 사례 조사와 이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보상 문제. 거창 양민학살, 문경 양민학살, 노근리 학살 등과 같이 대부분 국가에 의한 대량 학살과 전쟁의 성격. 이제까지 이 문제는 냉전 시각에 기초하여 미국 혹은 한국 정부의 잘못이거나 공산 세력이 저지른 ‘만행’으로 파악되어 왔음. 그러나 최근 관련 생존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양민 학살은 좌익, 우익 모두에 의해 자행되어 왔으며, 이는 기존의 시각으로는 이 문제의 진상 조사는 물론 해결 자체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줌. 한국 현대사의 양민 학살 문제를 근대성과 남성성, 폭력성과 관련하여 연구해야. 이 문제는 우리사회 일상에 만연한 폭력 문화, 군대 폭력, 학교 폭력 뿐 아니라 남성성에 의해 저질러지는 가정 폭력, 성폭력 등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와 연관.

*** 일상의 *反*평화, 여성에 대한 폭력**

국가간의 폭력은 중요, 그러나 성별간의 폭력은 더욱 중요. 이는 국가 간 폭력의 일상적 재생산 기제. 여성의 입장에서 일상이 전쟁 상태(별첨 자료 참조). 여성에 대한 폭력은

모든 사회문제 중에서 가장 비가시화 되고 개인적 문제로 취급되는 영역. 평화, 환경 등 관련 이슈에서도 언제나 제외되며 정치학, 사회학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음. 이는 여성의 경험을 간과하고 특정 성의 경험을 일반화하는 남성 중심의 인식 구조 때문. 예를 들어 정신대 문제는 전쟁의 부산물이 아님, 그 자체가 전쟁 상황.

여성에 대한 폭력이 일상적인 것은 피해의 심각성과 광범위성, 통역사성 때문만이 아니라 여성에 대한 폭력이 가족 제도를 원형으로 한 남녀의 일상적인, ‘자연스런’ 성 역할 그 자체에서 발생하기 때문. 남성이 여성에게 폭력을 가하는 행위는 일종의 성 역할이자 성 역할의 연속선상에 있음.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의 몸에 대한 사회적 평가는 남성의 필요에 의해 구성되어짐. 스트립 쇼와 성기 노출의 예처럼 이성의 몸에 대한 사회적 가치,

경험이 성에 따라 극단적으로 다름. 여성에게는 남성의 몸 자체가 공포와 폭력의 대상.

*** 평화에 대한 여성주의적 재해석**

이제까지 폭력은 전통적으로 전쟁 개념과 함께 존재. 평화를 위해서는 전쟁이 불가피하다거나 평화는 전쟁 전후(前後)에 있다는 식. 평화는 늘 정적인 고정화된 이미지. 전쟁은 능동적, 영웅적, 남성적인, 활력적인 이미지. 평화는 이런 자극적인 것들의 부재로 여겨짐. 그러나 여성주의는 이러한 이분법에서 벗어남. 여성주의자에게 평화란 여성이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권을 획득하는 것을 의미함(C. Enloe)

참 고 문 헌

-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편(2000), <여성과 평화>, 도서출판 당대
- 캐더린 맥키넨(2000), 조시현 역, “전쟁시의 범죄, 평화시의 범죄”, 스티븐 슈트, 수잔 헐리 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역, <현대사상과 인권>, 사람생각
- 요한 갈통(2000), 이재봉 외 역,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들녘
- 이정주(1999), “제주 ‘호미’마을 여성들의 생애사에 대한 여성학적 고찰 - ‘4·3’ 경험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여성학과 석사논문
- 김화숙(1999), “여성의 사회적 저항 경험에 관한 여성주의적 접근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어머니 활동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여성학과 석사논문
- 정유진(2000), “민족의 이름으로 순결해진 딸들? - 주한미군범죄와 여성”, <당대 비평> 여름 11호
- 정희진(2000), “‘아내폭력’ 경험의 성별적 해석에 대한 여성학적 연구 - 가족내 성 역할 규범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여성학과 석사논문
- 정희진(1999), “죽어야 사는 여성들의 인권 : 한국기지촌여성운동사”, 한국여성의전화연합편, <한국여성인권운동사>, 한울
- Enloe, C. (1993), *The Morning After : Sexual Politics at the End of the Cold War*, Univ. of California Press
- Hester, Kelly & Radford eds.(1996), *Women, Violence and Male Power*, Open Univ. Press: Buckingham
- Neft & Levin(1997), “Violence Against Women”, *An International Report on the Status of Women in 140 Countries*, Random House
- Theweleit, Klaus(1987), *Male Fantasies*, Minneapolis : Minnesota Press

<별첨자료 1>

여성은 어디에 있는가? : 여성의 지위에 관한 세계 140개국의 국제 보고서中

제8장 여성에 대한 폭력 (Violence Against Women pp.151-164)

번역: 여성과인권연구회

지구상의 대다수 여성들의 인생은 폭력의 위협으로 그늘져 있다. 아내 구타, 강간, 그 외에도 다른 형태의 공격들은 모든 문화, 지역, 인종, 민족, 계급의 경계를 넘어서는 보편적인 문제이다. 비록 이 문제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성에 대한 폭력적인 행위는 놀랄 만큼 많고,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여성은 남성의 재산으로 간주되어왔기 때문에 남성은 자신의 뜻대로 물리적인 힘을 동원하여 여성을 처벌할 자유가 있었다. 미국에서 아내 구타는 1871년 알라바마 법원에서 처음으로 폭력 남편에게 “아내를 때리는 것이 과거에는 특권이었을지 몰라도 이제는 더 이상 법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기 전까지 폭넓게 용인되었다. 오늘날에도 여성에 대한 폭력은 종종 무시되거나 자연스럽게 수용되고, 때때로 법이나 관습에 의해 지지받았다. 여성이 남성의 재산이라는 오래된 가부장적 인식은 가해자를 조금 처벌하면서, 여성에게 제한된 보호를 제공하는 근대법을 만들었다. 많은 국가에서 경찰, 재판관, 공무원들은 사적인 가족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에 개입하는 것을 꺼리면서 가정폭력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렇게 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이 놀랄 만한 일은 아니다. 피해자는 부끄러움과 당황스러움,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해야 할 뿐 아니라,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있다고 해도 아주 적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많은 사건들이 공식적으로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폭력 행위에 관한 믿을 만한 증거들이 별로 없다. 몇몇 국가에서 국가적 차원의 조사를 하고 있지만 정확한 측정 기술은 계속 개발되고 있는 중이며, 대부분의 수치들은 대략 짐작에 의한 것들이다. 성적인 공격에 대한 통계는 특히 제한되어 있다.

그럼에도 최근 연구들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 남부 아시아에서 조사한 600세대 이상 가구의 51% 가 태어난 지 1주일 동안 여아를 죽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 미국에서 살해당한 피해 여성들의 약 42%는 이전 또는 현재의 파트너에 의해 죽었다. 방글라데시, 브라질, 케냐, 태국은 50%를 육박한다.
- 파키스탄에서는 80%정도의 여성이 남편으로부터 학대받는다.
- 남아프리카에서는 83초에 한 명씩, 미국에서는 3분에 한 명씩 여자들이 강간당한다.
- 볼리비아 정부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 매해 100,000건 정도 행해지고 95%는 처벌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여성에 대한 폭력행위는 어른들에게만 행해지는 것이 아니다. 여아 살해와 여아 낙태는 딸보다 아들에게 굉장한 가치를 두는 미국, 인도, 남한, 그 외의 다른 나라에서 드문 일이 아니다. 아동기와 청소년기 동안 전세계를 통해 소녀는 성적 공격에 있어 무기력한 피해자이다. 매우 선진화된 국가에서조차 1/3 정도 되는 여성들이 아동기 또는 청소년 시기에 성적인 학대를 받았다는 기록이 있다. 미얀마, 태국, 그 외 아시아 몇몇 국가에서 매해 수 천명의 소녀들이 합법적인 직업이 있다는 약속으로 매춘으로 유인되거나 거리에서 유괴, 또는 부모에 의해 매춘굴로 팔리는 등의 방법으로 매춘으로 내몰리고 있다.

가나, 나이지리아에 있는 몇몇 부족에서는 tro-kosi라는 매우 심한 형태의 학대가 있는데, 이것은 가족 구성원이 행한 죄에 대한 대가로 어린 소녀들을 물신 숭배 사제에게 노예로 주는 것이다. 그녀가 빠져나오게 되거나 죽게 되면, 가족은 또 다른 어린 소녀로 대치한다. 가나의 남동쪽만 해도 이러한 어린 물신 노예들이 몇 천명에 이른다.

많은 국가에서 결혼은 폭력의 보호막이 되지 못한다. 몇몇 국가와 종교 전통에서 남편은 부인을 마음대로 다룰 수 있다. 아내 구타는 결혼의 일부로 받아들여지고, 전 세계 많은 수의 여성이 배우자에 의해 공격받을 뿐 아니라 그들에 의해 자살하거나 죽음에 이르고 있다.

폭력 형태가 보편적이긴 하지만, 약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앞날도 그리 어둡지만은 않다. 적극적인 페미니스트 운동이 있는 많은 국가에서 폭력을 줄이는 것이 여성집단 내에서 최우선 과제이다. 정부는 배우자 학대, 강간, 여성에 대한 폭력 형태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법을 제정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

가정폭력(Domestic Violence)

가정폭력은 전 세계에 걸쳐 나타나고 있으며 거의 모든 국가에서 여성 가해의 원인 중의 하나이다. 미국에서 아내 구타는 강간, 자동차 사고, 강도를 합한 것보다 더 많은 외상의 이유이며 여성 가해의 가장 일반적인 원인이라고 여겨진다.

많은 국가들은 배우자 폭력을 금하는 구체적인 법을 갖고 있지 않다. 그리고 법이 있는 곳에서도 그 법은 좀처럼 실행되지 않고 효력을 발휘하기에 너무 약하다. 강한 가부장적 전통을 가진 국가의 법은 종종 피해자가 아내 가해자의 편에 서기도 한다. 그러나 몇몇 국가에서 아내 구타는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고 엄청난 벌칙이 가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일반적이지 않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에서 피해자가 배우자일 때 폭력에 대한 벌칙은 1/3이상으로 가중 처벌된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가에서 배우자 학대는 일반적이고, 그것을 사적인 가족문제라고 생각하는 경찰과 법정은 이를 무시한다. 어떤 국가에서 남편은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아내를 “가르치고”또는 “훈육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아내가 간통을 범했다고 의심이 되는 경우라면 죽일 수조차 있다. 브라질에서는 남편이 아내가 다른 남자와 성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광경을 목격했다면 아내를 죽이는 것이 용서될 수 있다. 이것은 보통 명예 방어(defence of honor)라고 불리는데 남편이 자신의 명예를 유지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행했

다는 것을 증명하면 된다. 나이지리아 지방 관습과 법은 아내에게 “가르치는 것”이 흥터를 남기지 않고 병원에서 21일 이상 머무르게 하지 않는다면 남편이 아내를 “가르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터키에서 아내구타는 피해자가 공식적인 신고를 할 때만 범죄가 되는데 이것은 아내가 그녀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의료기록과 목격자를 동반해야 하기 때문에 매우 드물다.

* 남성 배우자에 의한 가정폭력 조사(1986-1993)

칠레/에콰도르/스리랑카/탄자니아 60%, 일본 59%, 과테말라 49%, 우간다 46%,

케냐 42%, 벨지움 41%, 잠비아 40%, 말레이시아 39%, 캐나다 27-36%,

미국 28%, 노르웨이 25%, 네덜란드 21% (역자 주 한국 61-49%)

결혼 지참금으로 인한 죽음(Dowry Deaths)

가정폭력의 가장 심각한 형태는 신부의 결혼 지참금 때문에 생긴 죽음이다. 남편과 남편 가족이 신부의 지참금에 만족하지 못하면 그들은 육체적으로 그녀를 학대하고, 죽이고 또는 자살하도록 만든다. 증가하는 이러한 죽음의 수를 줄이기 위한 시도로 인도 정부는 남편 또는 시집식구들이 결혼 후 7년 동안 아내의 사망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형법에 수정 조항으로 넣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부지참금에 의한 죽음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가정폭력 관련법(Laws Against Domestic Violence)

많은 국가에서 가정폭력법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또한 가정폭력법이 강하게 반대되는 곳 있다. 특히 남성 지배가 강한 전통을 가진 국가에서...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서비스(Service for Victims)

몇몇 국가에서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쉼터, 무료 법률상담, 다른 특별한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배우자 학대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몇몇 국가에

서 채택된 방법은 가정폭력을 조사하고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 경찰에 여성의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다. 1993년 남아프리카는 처음으로 성범죄 전용의 특별 법원을 만든 국가이다. 그러나 많은 국가들이 가정폭력에 개입된 공무원이나 경찰을 훈련시키는 특별 교육프로그램을 갖고 있지 않다.

강간(Rape)

강간과 그 외 다른 형태의 성적 공격은 아마도 세계적으로 가장 기록이 되지 않은 범죄일 것이다. 몇몇 국가에서 모든 사건의 5% - 25%만이 기록된다고 추정한다. 대부분 피해자는 부끄러움과 굴욕감을 극복해야 하기 때문에 그녀의 감정에 무감한 당국에 범죄를 기록하는 것 뿐 아니라 가족이나 친구들에게조차 이야기할 수 없다. 성적인 공격은 너무나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사건에 관해 믿을 만한 통계가 거의 없다. 알려진 바는 피해자의 많은 수가 아이들과 청소년이라는 것이다. 또 다른 강간의 일반적인 특징은 많은 경우 가해자가 낯선 사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아는 사람, 또는 친척처럼 피해자가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 미국의 강간 가해자 상황(1992-1993)**

아는 사람 53%, 모르는 사람 18%, 현재 혹은 전 남자친구 16%,
현재 혹은 전 배우자 10%, 기타 3%

부부 강간(Marital Rape)

부부간의 강간은 결혼 제도 그 자체만큼이나 오래된 것이다. 17세기 영국의 대법원장 Matthew Hale은 “남편이 법적인 아내에게 행한 강간은 죄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아내는 이러한 행위들에 있어서 그녀 자신을 포기하는 상호간의 결혼 동의와 계약 때문에”고 말했다. 많은 국가들이 결혼계약에 들어가는 여성은 남편과의 모든 성적 관계에 깰 수 없는 동의를 한 것이며, 강간은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를 강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정책을 채택했다. 이러한 태도는 몇몇 국가에서 부부강간

을 범죄를 인정하는 법을 시행한 1900년대 중반 때까지 지속되었다. 그러나
부부강간이 불법이라고 해도 많은 국가에서 범죄로 여겨지지 않고 있다.

전쟁 시기 집단강간(Mass Rape During Armed Conflicts)

전 역사를 통해서 내전 혹은 전쟁시 여성에 대한 강간은 세계 곳곳에서
기록되어 왔다. 이러한 사건은 (성욕의 분출이 아니라)정복이나 처벌, 민간인
들에 대한 테러를 목적으로 하는 계획적인 전략으로서, 자주 행해졌다. 여성
에 대한 폭력 행위가 일어난 나라에서 강간은 매우 치명적인 가문의 수치로
여겨졌기 때문에 여성은 폭력 행위의 제 1목표(타겟)이 되었다.

최근 방글라데시, 부룬디, 캄보디아, 라이베리아, 페루, 르완다, 소말리아,
우간다 등지에서 집단 강간이나 그 밖의 성적인 공격(sexual assaults)이 보고
되고 있다. 최근 일어난 강간 중에서 조직적인 강간으로서 가장 큰 규모의 충
격적인 사건은 구(舊) 유고슬로비아에서 일어났다. 2만명 혹은 그 이상의 여
성과 소녀들이 1992년 국가 붕괴에 따른 전쟁의 처음 몇 달 동안 집단강간
당했다. 회교도, 보스니아계 세르비아인, 크로아티아인들간의 갈등이 성폭행의
원인이었다. 주된 가해자인 보스니아계 세르비아인들은 민간인에 대한 테러뿐
만 아니라 잔인하게 회교도 여성들을 집에서 납치하여 인종 청소를 목적으로
강간할 것을 명령받았다. 1996년 국제 전범 재판소는 이 전례 없는 행위에 대
해 회교도 여성들을 강간한 몇몇 보스니아계 세르비아 병사와 군속, 경찰
간부들을 기소했다. 조직적인 강간과 그 밖의 성폭행을 국제법에 의한 전쟁범
죄로 규정한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1996년 후반 유엔은 국제적십자사와 적신월사(Red Crescent Society, 회교
국의 적십자사에 해당하는 조직)와 함께 전쟁시의 집단강간에 대한 새로운 시
각을 보여주었다. ‘모닝 애프터’라는 경구 피임약을 강간당한 여성들에게 지급
한 것이다. 이 치료 서비스는 강간으로 인한 위험한 낙태와 그로 인한 합병
증, 성병, 상처에 효과적이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2차 세계 대전의 부끄러운 잔재

Japan's Comfort Women: A Shameful Legacy From World War II

2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지 30년이 넘도록 일본군 위안부로 동원되었던 수 천명의 아시아 여성들은 끔찍한 기억을 간직한 채 살아가고 있다. 1970년대 한국을 중심으로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 중국, 네덜란드의 수많은 여성들이 강제로 일본군에 의해서 성노예로 납치되었다는 사실이 처음 보고되기 시작했다. 8만 명에서 20만 명의 여성들이 대일본제국에 의해서 매춘굴에 노예 상태로 있었다. 이렇게 군대에 의해 운영되는 위안소는 1932년 상하이에 처음으로 건설되어되었고 일본군이 그 도시를 점령하는 동안 강간을 줄인다는 명분으로 행해졌다.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많은 여성들이 오랜 질병이나 육체적 학대로 사망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죄의식과 수치심을 견디면서 그들의 가족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수 십년간 쓰라린 비밀을 간직하고 살아왔다. 그러나 70년대 중반 몇 명의 종군 위안부들이 이 강요된 매춘을 오랫동안 부인해왔던 일본 정부에 배상과 사죄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1995년 일본 정부는 '아시아 여성기금'이라는 재단을 설립하여 결국은 수많은 희생자들에 대한 배상을 민간 차원의 기부금으로 해결하려고 하였다. 다음 해 일본 수상은 공식적인 사과와 첫 번째 기금 전달을 제안했다. 많은 여성들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상 문제는 정부 차원이 아니라 민간의 기부금으로 충당되었다.

이와 관련한 흥미로운 사실은 전쟁 종결 직후(2주도 안 되어서) 일본 정부가 '레크리에이션과 오락 협회(Recreation and Amusement Association)'라는 단체를 조직하여 일본에 점령 중인 미군을 위한 특별 위안소를 만들었다는 점이다. 일본군 장교는 미군 병사들이 일본군들이 해외 점령지에서 한 것처럼 일본에서 행동할까봐 두려워했다. 대개가 18-25세 사이의 젊은 일본 여성들은 위안소에 고용되어 미군을 위해 희생할 것을 강요받았다. 일본 혈통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반 일본 여성들의 순결성이 양질의 상태로 보존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약 55,000명의 여성들이 정부의 이러한 대규모 매춘 정책에 동원되었다. 그들 중 많은 여성들이 만성 질병과 영양 실조로 살아남

지 못하고 죽었다.

강간 관련법(Laws Against Rape)

강간에 관련된 법은 각 나라마다 상당히 다양하다. 많은 선진국들은 강간 범죄의 기결수들에게 엄격한 법을 집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처벌은 피해자의 나이나 윤간 여부에 따라서 형량이 증가하기는 하지만 처벌은 벌금과 몇 년 동안의 징역형이 고작이다. 1990년 이스라엘에서는 가족 내 성적 범죄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하는 형법 수정안을 검토했다.

몇몇 국가들은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강간법을 제정해 왔다. 영국의 강간피해자들은 1976년 제정된 성적 방어법에 의해, 가명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법은 1992년 다른 종류의 성폭행 죄에도 확대되었다. 미국의 소위 '보호법'은 피해자의 성적 개인사나 행위, 라이프 스타일을 증언하는 것을 금지했다. 또한 강간 범죄에 대한 자동 기소(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피해 사실을 증명하지 않아도 기소하는 것)규정을 요구했다. 최근 미국 의회는 연방법원에서 새로운 관례를 제정했다. 가해자의 성폭행 전력에 관련된 증거를 재판이 도입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세계 각국의 많은 강간 관련법들은 효력이 약하고 강제력이 없는 경우가 많다. 고소된 강간범들은 거의 재판을 받지 않으며,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도 드물다. 루마니아나 러시아를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는 증거 확보에 대한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다. 피해자는 의료 기록과 저항했다는 증거 등 많은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뿐 만 아니라 피해자의 증언을 도와줄 목격자도 필요하다. 수단의 몇몇 부족 집단 사이에서는 강간에 대해 처벌하지 않는다. 대신, 가해자는 피해자가 임신했다면 피해자의 가족에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이집트, 과테말라, 모로코에서 강간범은 피해자 가족의 명예를 보존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그가 피해자와 결혼할 경우에는 처벌을 면할 수 있다.

강간 피해자를 위한 서비스(Services for Victims)

강간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법적, 그 밖의 다른 서비스들은 나라마다 매우 다양하다. 몇몇 국가에서는 피해자에게 쉼터, 치료 시설, 무료 상담 등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덴마크,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영국에서는 범죄 보상 프로그램이 피해자들에게 제공되며 정부에서 재정적인 보상까지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강간 피해자에 대한 사회복지 제도는 전무하다. 이러한 서비스들은 대부분 사적인 차원에서 혹은 무보수 자원봉사 조직에 의해 해결된다.

매매춘(Prostitution)

매매춘은 인류 역사가 시작될 때부터 존재해왔고 세계 곳곳에서 그 양상이 심각하다. 정확한 통계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인도에만 2백만 명의 매춘 여성이 있고 그 중에서 40만 명은 18세 이하라고 추정되고 있다. 태국은 성산업이 번창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다. 매년 태국의 10만 명 - 25만 명의 매춘여성들은 거대한 성산업의 기반 위에서 일하고 있다. 매춘굴, 마사지 팔러, 나이트 클럽으로 유입되는 섹스 관광객들은 엄청나다.

방콕과 그 밖의 섹스 자본들은 캄보디아, 중국, 필리핀, 남한, 타이완, 베트남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을 통해 수 만 명의 소녀들과 젊은 여성들을 공급받는다. 대부분 인근 국가의 가난한 농촌 여성들이다. 그들은 종종 악질적인 브로커들에 의해서 가정부나 웨이트리스 등 합법적인 직업을 약속받다가 결국은 속게 된다. 그들은 국경에서 밀수된(?) 후에야 자신들을 노예처럼 감시하는 포주에게 팔려왔거나, 직업 브로커에게 진 빚을 갚기 위해 오랫동안 포주를 위해 일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간혹 소녀들의 부모가 딸을 포주나 브로커에게 팔거나 포주가 그녀들이 미래에 벌 수입을 미리 부모에게 현찰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젊은 여성들은 대개가 현지어를 구사하지 못하고 불법 이민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현지에서 그들을 도와줄 기관을 찾을 수 없는 처지에 있다. 태국에서만 2만 명 넘는 젊은 여성들과 비슷한 조건의 현지 매춘굴에서 일하는 미얀마에서 온 여성들이 있다.

아시아만이 섹스 산업이 번창하는 유일한 곳은 아니다. 브라질 역시 약 14세 미만의 어린이들을 포함하여 약 50만 명으로 추정되는 매춘여성들이 있고 섹스 관광 산업이 발달한 나라다. 많은 브라질 소녀들도 탄광 마을이나 시골에서 온 경우이고, 그들은 이동비와 생활비를 다 갚기 전까지는 사실상 섹스 노예로 감시 받게 된다.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중동 아시아 국가들의 섹스 산업은 대부분 방글라데시, 인도, 필리핀, 스리랑카 등 가난한 나라에서 미고용 상태에 있는 젊은 여성들을 꾸준히 공급받으면서 성장하고 있다. 종종 해외에서 가정부나 가사노동자, 하녀로 일하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던 여성들이 끌려오기도 한다. 그러나 그들은 매춘부로 일하게 되면서 자신들이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설령 그들이 가정부로 고용되었다 해도 그들은 고용한 고용주에 의해 과도한 노동과 성적 학대에 시달린다. 또한 체불과 여권 압류 등은 다반사이다.

에이즈가 출현한 지난 십 년간 사람들은 더욱 더 젊은 매춘 여성을 찾게 되었다.(심지어 8-9세의 아동까지) 많은 남성들은 어린 여성들과 매춘을 하면 에이즈에 덜 걸리 것이라고 잘못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젊은 여성들은 에이스 바이러스인 HIV 감염에 더 취약하다. 성교시 그들의 피부와 질, 항문이 더 잘 찢어지기 때문이다.

매매춘과 법(Prostitution and the Law)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독일, 인도, 이태리, 나이지리아, 영국을 포함한 대다수 국가들에서 매매춘 자체는 불법이 아니며 다만 펌프, 호객 행위, 사창가 운영 등 그 밖에 매매춘과 관련된 행위만 불법으로 되어 있다. 예를 들어 방글라데시에서는 18세 이상의 여성이 매춘을 하는 것은 합법이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에서는 매매춘이나 이와 관련된 행위가 금지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법은 강제력이 없으며 성산업은 광범위하게 지속되고 있다.

네델란드와 스웨덴 등 단지 몇 명 나라에서만 섹스 산업이 법적 제재를 받고 있으며 정부에 의해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다. 빅토리아라는 호주의 한 주(洲)에서는 미국의 네바다주처럼 공창이 있다. 공창은 일반적으로 특정 지역에 제한되며 매춘여성들은 에이즈와 성병 등에 대해서 반드시 정기적인 검

진을 받아야 한다.

음핵절단(Female Genital Mutilation)

음핵절단은 젊은 여성의 클리토리스를 자르는 것으로서 고대의 관습이다. 가끔 음순을 절개하는 경우도 있으며 작은 구멍만 남겨놓고 주위를 뺀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4세에서 10세 사이의 여성을 대상으로 시술되지만 몇몇 지역에서는 태어나자마자 마자 혹은 여성들이 결혼할 직후까지 연기되기도 한다. 음핵절단은 종종 여성할례로 잘못 간주된다.(남성도 할례를 하듯이 여성할례도 당연하다는 식) 그러나 남성에게 행해지는 할례 과정을 비교해보면 남성은 성기의 전부 혹은 대부분을 제거하거나 가끔은 성기 조직 주변에 시술한다.

스스로 이 시술을 자기에게 행하는 여성을 포함하여 시술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음핵절단이 여성의 성적 욕망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결혼할 때까지 또 결혼 후에도 여성들을 성적 유혹에서 예방한다는 것이다. 음핵절단이 동성애를 예방하고 여성을 '아름답게' 한다는 주장도 있다. 몇몇 사회의 젊은 여성은 이 시술을 거부할 경우 사회적으로 매장되거나 결혼할 수 없다. 약 9천만명의 여성들에게 음핵절단이 시술되었으며 2백만 명이 넘는 여성들은 매년 강제적으로 이 시술을 받고 있다. 음핵절단은 이집트, 에티오피아, 케냐, 나이지리아, 소말리아, 수단 등 아프리카에서 보편적으로 행해지며 이들 나라들에서 전체 케이스의 3/4을 차지하고 있다. 몇몇 아시아 국가와 북미, 유럽, 그 밖의 대륙에서는, 음핵절단이 보편적으로 행해지는 나라들로부터 이민 온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서도 행해진다.

호주, 캐나다, 프랑스, 가나,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등지의 나라들에서는 음핵절단을 금지하는 특별법이 있고 음핵절단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기소하고 있다. 1993년 프랑스는 음핵절단을 시행한 이민자를 처벌한 첫 국가가 되었다. 같은 해 캐나다는 음핵절단을 학대의 한 종류로 포함시키면서 그들의 나라에서 강제로 시술을 당한 여성들이 고국으로 되돌려질 경우 정치적 수용소를 허락한 첫 국가가 되었다. 미국은 1996년 청원에 따라 음핵절단을 금지한 연방법을 통과시켰다.

음핵절단에는 두 가지 기본 형태가 있다. 일반적으로 둘 다 전통적인 시

술자(대개 나이 많은 여성)에 의해 행해지며, 소독되지 않은 면도날이나 칼, 유리 조각 혹은 그 밖의 날카로운 도구들이 사용되며 충분히 마취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시술된다. 음핵절단의 가장 일반적이고 간단한 형태는 클리토리스를 제거하는 것이다. 혹은 음순의 일부를 제거하기도 한다. 가장 심각한 형태는 성교를 못하도록 음부를 봉쇄하는 것이다. 이 때 클리토리스와 음순은 제거되며 소변과 월경혈이 통과 정도의 작은 구멍만 남겨두고 그 주변이 같이 꿰매지거나 어떤 경우에는 항문(catgut)과 음모(thorns)가 같이 꿰매진다. 여성이 출산을 하게 되면 아기가 통과할 수 있도록 그 구멍이 크게 벌어지게 되는데 출산 후에 다시 양열을 꿰매다. 이 과정은 임신할 때마다 반복된다.

음핵절단의 건강상의 위험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단 기간의 합병증으로는 그 순간의 고통을 포함하여 과다 출혈, 파상풍이나 그 밖의 감염으로 인한 사망 등이 그것이다. 특히 성교를 못하도록 음부를 봉쇄해버리는 경우에는 장기간에 걸쳐 합병증이 나타나는 데, 요도 혹은 항문의 상해를 포함하여 신경계 계통의 만성 질환이 재생산된다. 불임과 광범위한 몸의 상처는 제대로 걷는 것조차 방해하고 평생을 걸쳐 노동을 방해하며 극도의 고통 뿐 만 아니라 출산시 사망의 주요 요인이다.

음핵절단이 행해지는 나라들에서 정부 정책이나 법으로는 이를 금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1960년대 아프리카에서는 음핵절단을 반대하는 운동이 일어났고 지금도 전세계 많은 여성운동 그룹들이 이를 지지하고 있다. 나이지리아의 간호사와 조산사 협회는 음핵절단을 철폐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며 이 프로그램을 간호대학과 의과대학 교과 과정에 넣은 것에 성공했다.

* 아프리카에서 전체 여성 인구 중 음핵절단 비율

소말리아 98%, 에리트레아/에디오피아/시에라 레온 90%, 수단 89%, 말리 80%,

부르키나 파소 70%, 차드/아이보리 코스트/라니베리아 60%,

베닌/이집트/중앙아프리카공화국/기니/케냐/나이지리아/토고 50%,

가나 30%, 모리타니아 25%, 카메룬/니제르/세네갈 20%, 탄지니아 10%,

우간다/자이레 5% (이중 소말리아, 에리트레아, 에디오피아, 수단은 음부 봉합술)

<별첨자료 2>

A. '아내폭력'의 역사와 실태

시대와 지역, 종교, 인종, 계급, 교육 수준, 일부일처와 일부다처제를 막론하고 인류가 공통적으로 경험해 온 역사가 있다면 그것은 '아내폭력'일 것이다. 우리사회에도 '아내폭력'에 대해 언급한 기록들이 남아있는데, 조선 후기 유학자였던 이덕무는 “남편과 시부모가 성질이 포악해서 때리고 구박하여 집에 못 있게 하더라도 친정에 돌아가는 것은 배반이 아니겠는가”라고 적고 있고(이덕무, 1744, 조주현, 2000:23에서 재인용) 조선시대 여성들의 생활 지침서였던 내훈(內訓) 2권 부부훈에는 “남편을 아버지같이 섬길 것이나, 혹 그릇된 일을 간하였다가 매를 맞는 일 있더라도 노하기는커녕 전혀 원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였다(한국여성개발원, 1990:37).

서양에서도 '아내폭력'은 고대 바빌론 시대부터 현대 산업 자본주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계속 되어왔다(Stets, 1988:2-3). 로마 시대 남편들은 아내를 벌주고 죽이고 마음대로 이혼할 수 있었다. 중세 유럽에서는 기사와 귀족들이 자기 농노를 때리듯이 '정기적으로' 아내를 구타하였고 당시 여성들이 산채로 불태워졌던 이유는 '혼외의 아이를 낳았을 때, 자위했을 때, 아이를 돌보지 않았을 때, 남편에게 호통치거나 잔소리가 심할 때, (남편의 구타로 인한 것일지라도)유산했을 때'였다(Davis, 1975:252-264). '아내폭력'은 종교 교리, 법률 등으로 성문화(成文化), 보장되었는데 그 내용은 주로 아내의 의무와 역할에 관한 것이었다. '식사를 늦게 준비했거나 다른 남자와 말을 하는' 등 도리를 지키지 않은 아내를 남편은 언제든지 처벌할 수 있었다(Archer, 1994:312-313). 16세기 러시아에서는 남편이 언제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아내를 때릴 수 있는가를 명기한 가정 법령(Household Ordinance)을 선포하기도 하였다.¹⁾

1) William Mandel(1975), 델 마틴(1984) p. 60에서 재인용

현대 사회주의 국가도 예외는 아니다. 1980년대 소련 타지크 공화국에서는 첫날 밤 신부의 순결 검사 관습과 남편의 구타에 못 이겨 분신 자살하는 여성들이 1년에 30-40명에 이르러 그들을 '살아있는 등불'이라고 불렀다(하니 로젠버그, 1991:53-55).

18세기까지 '아내폭력'을 법적으로 규제하지 않다가 근세에 이르러 법 제도가 발달하자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아내폭력'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19세기 전까지 여성은 결혼과 동시에 재산과 개인적 권리를 잃었다. 여성의 법적 권리는 결혼 기간 동안 유예되거나 남편의 존재에 통합되었다. 남편과 아내는 '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공동 모의죄로 유죄 선고를 받을 수 없었다. '공동 모의'라는 것은 두 사람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죄목이기 때문이다.²⁾ 19세기 영국의 관습법(common law)은 '엄지손가락 법칙(rule of thumb)'³⁾이라고 하여 매의 굵기가 남편의 엄지보다 크지만 않으면 아내구타는 정당하다는 원칙을 발전시켰고 18세기 프랑스 법은 구타를 인정하되, 날카롭거나 위협적인 도구의 사용은 금지하고 때리고 차거나 뒤에서 누르는 것으로 제한했다고 한다.

서구에서 20세기 전까지 '아내폭력'이 공공의 관심사로 등장한 적은 두 번 있었다. 1878년 영국의 프랜시스 코비(Frances Power Cobbe)는 남편의 발길질(kicking)로 인해 사망하거나 불구가 된 리버풀 지역 여성노동자들의 연간 사상자 수를 기록하였다. 그녀가 쓴 '아내학대(Wife torture in England)'라는 논문은 '아내폭력'을 페미니즘의 문제로 제기한 최초의 시도로 알려지고 있다. 그녀의 논문은 이후 영국의 결혼소송법 가결에 많은 힘이 되었다. 이 법은 남편이 아내를 때려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아내에게 별거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하였다(Borkowski & Murch & Walker, 1983:3-4).

이후 페미니즘의 침체로 1920년대까지 '아내폭력' 문제는 주목받지 못하다가 1960년대 말 서구를 중심으로 한 페미니즘과 함께 다시 소생하였다. 그간 '아내폭력'은 동물학대보다도 관심이 없었다. 미국의 가족 문제의 연구자인

2) 1854년 바바라 리 스미스 바티컨의 "기혼여성과 법"이라는 팜플릿 중에서(캐롤 M. 앤더슨/수잔 스튜어트, 1998:53-54에서 재인용)

3) 여기서 대략적으로 잰다는 뜻인 '눈대중(rule of thumb)'이라는 말이 생겼다(리사 터틀, 1999:68-69).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에는 1939년 창간 이후 1960년대 후반까지 '아내폭력'에 대한 논문이 한 건도 게재되지 않았고(김광일/문경서, 1994:113), 가정폭력 중에서도 '아내폭력'은 부차적인 문제로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었다. 1962년 미국에서 아동학대가 사회 문제화되자 가정폭력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지고 아내구타도 주목받기 시작했다. 페미니즘은 여성폭력을 '세상 밖으로' 끌어냈고 이에 힘입어 '아내폭력'은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학문 연구의 대상이 되었다.

'아내폭력' 추방운동은 1972년 에린 피찌(Erin Pizzey)가 런던에 치즈윅 여성보호소(Chiswick Women's Aid)를 설립하면서 시작되었다(Dobash&Dobash, 1987:169). 그녀는 이 과정을 '조용히 소리질러라 이웃이 듣는다(Scream quietly or the neighbours will hear)'⁴⁾라는 책으로 출판하였고 그녀의 활동은 1974년 영국 의회에 가정폭력위원회를 설치하는데 큰 영향을 끼쳤다. 미국에서도 1974년 미네소타주 세인트 폴市에 미국 최초의 쉼터가 생겼고 75년 전미여성기구(NOW)에 '구타당하는 여성 특별위원회'가 설치되었다. 76년 델 마틴(Del Martin)은 여성주의 입장에서 '아내폭력'에 대한 최초의 정리서라고 할 만한 '매맞는 아내(Battered wives)'⁵⁾를 출판하였는데 이 책은 다른 학문 분과의 '아내폭력' 연구에 페미니즘을 적용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제 어느 분야의 연구자든지 가부장제를 이해하지 않고는 '아내폭력'을 설명할 수 없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 1980년대는 서구에서 소위 '반동(backlash)'의 시대를 맞아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여성운동은 법 제정 운동과 이 문제에 개입하는 의료, 경찰, 사회 복지 시설 등 지역 사회 네트워크, 가해자/피해자 교육 프로그램에 여성주의 시각이 관철되도록 노력해왔다.

서구 급진주의 페미니즘의 주요 이슈였던 '아내폭력'은, 90년대 들어서 전 세계의 보편적인 여성운동 의제가 되었다. 여성운동가들의 국제연대의 성과로 1979년 유엔이 정한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에 여성폭력이 빠진 것을 비판하여 1993년 '여성폭력철폐선언(Declaration on the Elimin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이 추가로 제정되었다. 특히 최근의 주목할 만한 상황은 '아내폭력'이 강간, 군 '위안부' 문제와 함께 인권 문제로 국제인권운동의 중심적

4) 『조용히 소리질러라 이웃이 듣는다』 (1986), 여성의전화 기획, 일월서각

5) 『매맞는 아내』 (1984), 박선숙 역, 홍성사

현안으로 등장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여성문제의 주류화(mainstreaming)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Cook, 1994:326 -339).

‘아내폭력’이 행해져 온 수 천년간의 역사에 비하면 지난 30년은 혁명적인 시기였다. 그러나 여성운동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내폭력’은 심각하고 법은 별다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⁶⁾ 미국에서 살해당한 여성들의 약 42%는 이전 또는 현재의 파트너에 의해 죽는다. 방글라데시, 브라질, 케냐, 태국은 50%를 육박하며 파키스탄에서는 전통적인 여성 억압 문화인 퍼다(purdah)의 영향으로 80%정도의 여성이 남편으로부터 학대받는다. 볼리비아 정부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 매해 100,000건 정도 행해지고 95%는 처벌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미국에서 아내구타는 강간, 자동차 사고, 강도를 합한 것보다 더 많은 외상의 이유이며 여성이 다치는 가장 일반적인 원인이라고 여겨진다. ‘아내폭력’ 경험률 조사(1986-1993)에 의하면 칠레/에콰도르/스리랑카/탄자니아 60%, 일본 59%, 과테말라 49%, 우간다 46%, 케냐 42%, 벨지움 41%, 잠비아 40%, 말레이시아 39%, 캐나다 27-36%, 미국 28%, 노르웨이 25%, 네덜란드 21%에 이른다(Neft & Levine, 1997:151-164). 지난 5년 간 미국에서 ‘아내폭력’으로 사망한 여성의 수는 베트남에서 사망한 미국인의 수와 비슷하며 미국의 소아마비 환자 모금 본부(March of Dimes)에 의하면 임신 중 남편의 구타가 기형과 유아 사망의 주원인이라고 보고하고 있다(리처드 겔즈, 1998:12-13). 일본 정부의 조사 결과 기혼 여성의 5%는 ‘아내폭력’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고 호소하였다.⁷⁾

특히 임신중인 여성은 학대 타겟 1순위이다. 미국 휴스턴과 볼티모어에서 저소득층 임신 여성 6명 중 한 명은 임신 중에 폭력을 경험했다. 구타당한 여성의 60%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임신 중에 3배 이상의 폭력을 경험한다.

6) ‘아내폭력’의 절망적인 만연과 뿌리깊은 피해자 유발론은 몇몇 여성주의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수잔 브라운밀러 조차 종전의 태도와는 다르게 여성의 피해자성을 강조했다(Susan Edwards, 1991:133), 에린 피찌도 나중에는 구타는 사회적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 문제이며 폭력을 휘두르는 남성도 문제지만, 남성에게 폭력을 ‘돌구는’ 여성도 책임이 있다고 하여 페미니스트 그룹을 실망시켰다(리사 터틀, 1999:70).

7) 조선일보, 2000년2월28일자, “H여성들, 죽도록 맞는다-기혼20명중 1명 ‘생명 위협’”

임신 중 구타는 이미 영양 실조와 과도한 노동 상황에 처해 있는 제 3세계 여성들에게 더 심각한 영향을 준다. 멕시코시티에서 무작위로 342명의 여성들을 조사했는데 20%의 여성들이 임신 기간 동안 위(胃)를 가격 당했다. 코스타리카 산호세에서는 남편에 대해 사법적 개입을 요청한 80명의 매맞는 아내들에 대한 연구에서, 49%가 임신 중에 구타당했다고 보고했고 이 중 7.5%가 구타로 유산했다(Heise, 1995:123).

우리사회에서도 '아내폭력' 발생률은 거의 대부분의 조사에서 과반수를 넘고 있으며, 구체적인 폭력 피해 상황은 다른 사회의 사례와 별로 다르지 않다.

B. '아내폭력'에 대한 여성주의적 논의

1. 여성에 대한 권력과 통제

초기 급진주의 페미니즘 고전에서는 폭력이 남성 지배의 중요한 영역이라고 보지 않았다. 보파르, 화이어스톤, 미첼, 밀레트, 로보담은 남성들이 이미 군대, 과학 기술, 대학, 정치 권력, 경제력 등 모든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현대 서구사회에서 굳이 폭력이라는 신체적 수단을 통제 기술로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Anne Edwards, 1987:15). 이들은 가부장제가 '세련'되어감에 따라 직접적인 남성폭력(male violence)은 남녀가 모두 공유하는 남성이데올로기(male ideology)로 개량화 될 것으로 보았다(줄리엣 미첼, 1984:109/Rowbotham, 1973). 이들의 논의에서도 다소 차이⁸⁾는 있지만, 초기 페미니즘 이론은 육체적인 것(물리적인 힘) 對 정신적인 것(이데올로기)의 구분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폭력은 이성적인 지배에 비해서는 야만적인 것으로, 남성 권력이 위기에 처했을 때 부차적으로 동원되는 도구 혹은 최후 수단으로 인식했다.

그러나 권력은 사용을 통해 영속화된다. 권력 관계로서 성별 체계(가부장

8) 케이트 밀레트는 가부장적 통제는 궁극적으로 물리적인 힘(force)에 기반하고 있다고 보았고 이러한 그녀의 통찰은 Griffin과 Daly에게 영향을 주었다.

제)는 한번 완성된 상태에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실천되는 과정으로서 폭력은 권력의 창조를 위해서건 유지를 위해서건 필요하다. 폭력적인 지배와 이성적인 지배는 대립물이 아니라 오히려 동일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근대사회의 특징인 집단 학살(genocide)과 여성 살해(gynocide)는 남성 중심의 이성주의, 합리주의의 또 다른 결과였고, 폭력은 권력이 위기에 처했을 때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목적 의식적인 인간 활동, 계획된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⁹⁾ 이성을 잃었을 때 폭력이 발생한다기보다는 폭력에 의해 이성이 실현되는 것이다.

급진주의 페미니스트들은 모든 여성이 피지배자로서 근본적인 공통점을 가진다고 보았다. 이들은 여성의 종속이 가부장제가 규정한 남녀간의 신체적 성차에 근거하기 때문에, 억압의 원인은 여성의 출산과 성행위에 대한 남성의 통제 곧 여성의 육체에 대한 남성의 통제에 있다고 보았다.¹⁰⁾ 따라서 여성 몸에 대한 통제는 계급이나 인종에 따른 여성 억압보다 더 근원적인 억압의 형식, 모든 사회적 모순들의 마지막 원인(메리 데일리, 1996:302-329)이다. 이처럼 보편적인 가부장제 개념은 보편적인 범주로서 여성 개념에 근거한다. 그러므로 '성적'인 폭력과 '신체적' 폭력 사이의 구분은 의미가 없다. 흔히 성적인 폭력이라고 간주되는 강간과 신체적인 폭력이라고 인식되는 아내구타는 다른 종류의 폭력이 아니다. 실제 피해여성들이 대부분 강간과 구타를 동시에 경험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의 신체에 대한 시선은 성애화 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의 몸에 대한 폭력은 섹슈얼리티의 문제가 되고 이는 성(차)별 제도의 산물이다.

남녀의 성 활동이 성별화(gendered)되어 있다는 것은 성기 노출과 '스트

9) 폭력에 대한 이 같은 입장은 독일의 파시스트 남성폭력을 탁월하게 분석한 Klaus Theweleit의 *Male Fantasies*에 잘 나타나 있다. Theweleit에 의하면 파시스트들의 폭력은 '다른 어떤 것'을 얻기 위한 치환된 행위 혹은 욕망의 도구가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것은 폭력, 전쟁 그 자체라는 것이다. 그는 폭력을 읽지 말고 보아야 한다고 제안한다.

10) 물론, 몸이 여성 동질성의 최소 단위가 되는 것은 신체 구조가 같기 때문이 아니다. 성차별 사회가 여성의 몸에 부여하는 사회적 평가 때문이다(장필화, 2000:138).

립 쇼'의 예처럼, 이성(異性)의 몸에 대한 경험이 성별에 따라 여성에게는 당하는 폭력으로 남성에게는 돈을 내고 구입할 수 있는 쾌락으로 인식되는 바로 그 차이를 가능하게 하는 권력 관계를 의미한다. 많은 사회에서 남성성의 정의는 성적인 정복과 폭력으로 나타난다. 대부분의 남성 섹슈얼리티는 젠더를 구현하는 노력에(진정한 남자라는 감정) 의한 것이며 남녀 모두 젠더에 기반한 문화적 의미 없이는 에로틱한 감각이 생기기 어렵다. 이처럼 남성과 여성의 권력 관계는 다른 권력 관계와 다르게 성애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식되어 이제까지 정치적 분석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그래서 여성폭력을 문제화하는 페미니스트들은 '무엇이 정치적인 문제인가, 그리고 그것은 누가 정하는가' 자체를 질문하기 시작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을 개인 인성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권력 행동, 정치적 행동으로 파악할 때 폭력은 남성 지배의 핵심적인 영역이 된다. 여성폭력은 성별 권력 관계의 일환으로서 시대와 문화에 따라 각기 다른 형태로 나타나지만, 그 본질은 모두 가부장제의 보편적인 여성 통제라는 점에서 같다. 그러므로 '아내폭력'은 가정폭력의 한 종류라기보다는 강간, 성 매매, 포르노, 음란 전화, 성기 노출, 성희롱, 근친 강간, 마녀 사냥, 신부 화장(bridal burning), 아내 순사(殉死), 음핵 절개, 전족(footbinding)등 여성에 대한 폭력의 한 형태이다. 대부분의 사회에서 폭력은 남성성의 일차적 요소인데, 이것은 성별 관계로서의 여성성과 대비를 통해서 의미를 갖는다. 성별 관계(gender)의 맥락에서 섹슈얼리티, 여성에 대한 폭력을 개념화하면 강간과 이성애 관계에서 '정상적'인 성교의 차이는 질적인 차이가 아니라 정도의 차이일 뿐이다. 여성폭력에 대한 급진주의 페미니즘 이론의 가장 핵심적인 통찰은 폭력과 폭력을 통한 위협, 공포는 권력 관계의 부산물이나 이차적인 것이 아니라 위계 관계의 구조적인 토대로서 남성 지배와 여성 종속의 중요한 동인(動因)이라는 것이다. 즉, 남성폭력은 그 자체로 독립적인 권력의 한 형태이다.

80년대 들어 서구에서 여성폭력에 대한 급진주의 페미니즘의 입장은 여성들간의 차이와 여성의 행위 주체성을 무시하는 '결정론'이라고 비판받기 시작했다.¹¹⁾ 그러나 여성에 대한 폭력을 성별 관계에 의한 권력과 통제의 문제

11) 여성은 계급, 인종, 종족, 문화, 성 정체성, 장애/비장애, 나이 등에 따라 개인이 가진 자원과 부(富)는 차이가 있으며 폭력도 다른 방식으로 경험된다는

로 제기한 것은 기존의 정치학과 권력 개념에 대한 새로운 해석일 뿐 아니라 특히 '아내폭력' 인식에 큰 영향을 주었다. '아내폭력'은 특별히 더 오랫동안 '집안 일, 개인적인 문제'로 간주되어왔기 때문이다. 주류 사회과학자들은 '아내폭력'을 아동학대, 노인학대, 형제간 폭력 등 가정폭력의 하나로 본다. 다른 가정폭력에서는 여성도 가해자가 되므로 이는 성별의 문제라기보다 역기능적인 가족 관계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혹은 스트레스, 분노 등 개인간 심리의 문제, 남성 몸의 생물학적 현상 등으로 분석해왔다. '아내폭력'을 가정폭력의 시각(family violence perspective)에서 볼 것인가, 여성주의 시각(feminist perspective)에서 볼 것인가는 이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두 개의 커다란 흐름이었다.

가정폭력의 시각에서 '아내폭력' 문제의 분석 대상은 성별 관계가 아니라 하나의 단위로서 가족이며, 성 차별주의는 '아내폭력'의 주된 요소('the' factor)가 아니라 많은 요소 중의 하나('a' factor)가 된다(Kurz, 1993:261-263). 가정폭력의 관점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해 가족의 기능과 역할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본다. 폭력 제재와 피해자 일시 보호도 해야하지만 비폭력적인 갈등 해결 기술, 부부 대화법, 가해/피해자에 대한 치료 등을 통해 바람직한 가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가족 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다기 보다는

것이다. 유색 인종 여성이 백인 남성에게 강간당했을 경우 그녀는 성 차별주의와 인종 차별주의를 동시에 경험한다. 남편으로부터 구타와 성적 학대에 시달리는 여성들에게 가정은 위험한 공간이지만, 노숙자 여성들은 그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환경에 처해 있다(Hester, Kelly & Radford, 1996). 레즈비언 커플간 가정폭력의 경우 피해자는 동성애 혐오 때문에 사회의 개입을 요청하기가 더욱 어려우며(Kerry *et al.*, 1986), 이 때 가해자는 '생물학'적으로 여성이다. 남성폭력은 그 자체로 여성에 대한 권력의 한 형태지만 다른 영역에서의 가부장제 통제 결과에 크게 영향받기 때문에 통제의 '기초'로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실비아 월비, 1996:215). 여성폭력을 성별 관계의 필연적 결과로 환원한다면 행위자로서 여성의 자율성을 인식하는 것에 실패하기 쉽다. 페미니스트가 강간에 대해 말해야 하는 것은 그것이 폭력이어서가 아니라 강간이 여성의 자발성과 즐거움을 침해하기 때문이며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어떤 의미에서 예스라고 말할 수 있을 때 존재한다는 것이다.

가족을 잘 운영하지 못하는 개인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자신을 구타하는 사람과 ‘인간적’인 대화가 얼마나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러한 입장은 일반적 통념이기도 해서 상식적인 차원에서 매우 설득력이 있다.

‘아내폭력’이 시대와 지역을 넘어 보편적으로 발생한다는 사실은 이 문제가 인간의 본성이라는 의미가 아니라,¹²⁾ 기존의 사회 분석 방법으로는 이 행동이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인간 행동의 다른 공통 요소, 사회적 모순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아내폭력’은 명확히 성별화된 폭력임에도 불구하고 성별의 문제는 가장 쉽게 간과된다. 가정폭력적 접근 방식은 왜 언제나 때리는 사람은 ‘남성’이고 맞는 사람은 ‘여성’인지를 설명하지 못한다. 남편이 스트레스 때문에 때린다면 왜 직장 상사나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은 안 때리는지, 술 때문에 때린다면 왜 아내들은 술을 먹고도 남편을 때리지 않는지, 분노 처리 기술이 미숙하기 때문이라면 왜 그 분노를 언제나 ‘집안에서만’ 표출하는지, 폭력 행위가 손실(형사상 제재, 이혼)보다 보상(분노 발산, 타인을 통제)이 크기 때문에 사용된다면 왜 여성들은 이 방법을 쓰지 않는지, 종교와 성격 차이 질투 등 부부 갈등 때문에 때린다면 왜 남성들은 이혼한 이후에도 전 부인을 때리는지를 설명하지 못한다.¹³⁾

12) 여성폭력이 보편적으로 발생했다고 해서, 그것이 역사성을 갖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여성 인류학자들의 노력에 의하여 여성폭력은 그 사회의 성별 분업, 성-성별 체계(sex-gender system)에 따라 발생 정도와 양상을 달리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비록 수적으로 적긴 하지만 여성폭력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에서는 성 역할 고정 관념이나 남녀 분리 문화가 존재하지 않았다. 산데(Peggy Reeves Sanday)의 156개 부족 사회 연구에 따르면, 47%가 강간이 없거나 극히 드물었다. 또 1960년대에 수집된 중앙 타이(Thai)에 관한 민족지에 따르면 아내구타는 극히 드문 현상이었는데 그곳에서는 성에 따른 노동 분업이 거의 없었다(Heise, 1995:130-133).

13) ‘아내폭력’이 위낙 보편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여성주의자들조차 ‘아내폭력’이 성별 관계 외 다른 사회적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남성 중심적인 주장을, ‘아내폭력’을 사회적, 역사적 시각에서 보는 것으로 착각하기도 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최근 한국사회에서 소위 IMF 경제 위기로 남성들이 실업으로 인한 불안과 스트레스 때문에 ‘아내폭력’이 증가한다는 담론이다. 이는 여성운동 단체나 여성주의 저널을 통해서도 많이 주장되었는데, 이러한 언설은 ‘스트레스 때문에 때린다’는 가부장적 통념을 더욱 강화할 위험이 있

‘아내폭력’처럼 남성 중심적(가해자 중심적) 시각이 가시적이고 체계적인 영역도 없다. 사회는 남성의 폭력 행동 자체에 대한 정치적인 분석과 비판보다는 남성이 폭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이유에 초점을 둔다. 남편은 아내를 때릴 수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기 때문에 언제나 ‘아내폭력’ 현상은 성(차)별적으로 해석된다. 피해여성과 가해남성의 경험이 해석, 재현, 담론화 되는데 있어서 이미 그 출발선이 다른 것이다. ‘아내폭력’은 현재의 가족 제도와 사회 구조를 지탱하고 있는 성별 관계(gender)에 의한 여성 문제들간의 연관성을 이해하지 않고는 설명하기 어렵다. ‘아내폭력’에 대한 질문은 (안 때릴 수도 있는데) ‘왜 때리는가’ 라기보다는, ‘때릴 수 있는 권력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여야 한다.

2. 공/사 분리 관념과 여성인권

남편의 폭력은 권력을 가진(가지려는) 자의 의도적인 통제 행위지만, 단지 가족 관계에서 발생한다는 이유로 제대로 이해되지 못해 왔다. ‘아내폭력’이 통역사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근대의 발명품으로서 인간의 활동 세계를 공/사로 구분하는 관념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여성폭력을 분석하는데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로크가 권위는 개인으로부터 나온다고 개념화한 것은 근대 국민 국가 성립에 매우 중요한 이데올로기였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근대적 인권 개념은 가부장제와 양립할 수 없는 것이었고 공/사 영역 분리는 여성을 개인의 위치로 승격시키는 것과 가부장제 사이의 모순을 해결하는데 유용한 전략이었다(Fox-Genovese, 1977, 하트만, 1988에서 재인용). 가족을 사회로부터 제외시켜 사적(私的)인 영역으로 만듦으로서¹⁴⁾, 남성 가장은 사회에 대해 가족의 이해를 대표하게 되었다.

근대 이전의 ‘아내폭력’이 결혼 제도의 여성 매매적 성격과 관련하여 소

으며(아내는 일자리를 잃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해서 남편을 때리지 않는다) 경제 위기 전후의 ‘아내폭력’ 증감을 비교할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문제적인 담론이다.

- 14)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여성의 사회 진출’이라는 말은, 여성이 생활하고 있는 가족은 사회가 아니라는 것을 전제한다.

유의 관념에서 주로 기인했다면, 현대 사회에서 '아내폭력'의 원인으로 가장 가까운 요소는 공/사 영역이 분리되었다는 인식이다. 남편이 아내를 때릴 수 있는 권리는 가정에는 권력, 정치, 인권, 민주주의,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논리에 근거한다. 공/사 분리는 성별 분리와 분업을 기초로 하는데, 직장 가정에서 성별 분업은 성별 권력 관계의 다른 표현으로서 이는 평등한 분업이 아니라 남성을 중심으로 한 여성의 배치이다. 여비서는 사무실의 아내 (office wife)이고 아내는 집에 고용된 노동자다(Bart & Morgan, 1993:230).

공/사 분리 이데올로기는 실상 공적인 영역의 시각에서 사적인 영역이 규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적 영역은 공적 영역의 창조물로서, 사적인 것은 공적인 것과 대립을 통해서 정의된다. 공적 영역의 정치적, 갈등적 성격에 비해 사적인 것은 동의가 전제되는 영역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적인 영역에서는 강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적인 것에 대한 이러한 관념은 구타당하는 아내에게 '왜 떠나지 않는가?'와 같은 질문을 하게 한다 (MacKinnon, 1987:100).

공/사 분리 제도를 통해 여성은 남성과는 다른 형태로 국가, 사회와 관계를 맺게 된다. 공적 영역은 남성들의 세계로 남성만을 주체로 세우기 때문에 여성이 공적 영역과 관계를 맺거나 경찰, 법 같은 공적 자원을 이용하려면, 가족 제도를 통해 남편을 매개할 때 가능하다. 개인(individual)은 성별화된 언어다. 여성의 경험이 사적인 문제로 할당되는 한, 여성은 사회적 주체/개인이 될 수 없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은 한 사람의 개인으로서 보다 '누구의 아내'일 때 정상성을 획득하고 보다 많은 자원을 갖게 된다. 이 점에서 폭력은 이미 가정 주부 모델 그 자체에서 때어낼 수 없는 일 부분이다(마리아 미에스, 1989). 가정적인 여성이 된다는 것은 남편의 폭력으로부터 외부의 도움과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별 여성은 전체 남성으로부터 보호의 대가로 한 남성과 결혼하는데, 바로 그 남성으로부터 학대당한다는 사실은 사회도 당사자도 인정하기 힘들다.

여성들은 사적인 영역을 남성과 다르게 경험한다. 여성들에게 사적인 공간은 휴식처가 아니라 노동의 공간이며, 구타와 아내 강간이 일어나도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곳이다. 사적인 영역에서 여성의 경험이 권력 분석에서 배제된 것 자체가 권력 관계의 결과였으므로 페미니스트 이론은 사적인 것은

더 이상 사적이지 않다고 본다(MacKinnon, 1982). 여성과 남성간의 불평등은 가장 은밀한 성관계에서부터 공적인 것이라고 간주되는 정치, 경제 활동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연속선이며 무엇이 공적이고 사적인가에 대한 규정은 권력을 어디에 놓을 것이며 그것이 무엇에 의존에 있는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라마자노글루, 1997:107). 즉 공/사 경계는 남녀의 '생물학'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을 사회적 주체에서 배제하여 비역사적인 존재로 간주하는 남성 권력의 산물로, 여성의 저항을 억압함으로써 유지된다.

이처럼 공/사 분리 관념은 여성폭력을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하는데 걸림돌이 었다. 여성폭력이 인간의 안전과 존엄을 공격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적 영역의 사소한 문제라는 인식은, 여성을 보편적인 인간의 범주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구타남편들이 '여자 하나 때린 걸 갖고 뭘 그러느냐', '나는 인간을 때린 것이 아니라 여자를 때렸을 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사회가 남성만을 보편적인 인간으로 인정하고 남성의 폭력을 방조, 지지하기 때문이다. 번치(Charlotte Bunch)는 인권 단체나 정부가 여성의 인권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지 않는 이유를 네 가지로 정리하였는데, 1) 성차별은 사소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문제, 또는 생존 문제 다음에나 나오는 문제라는 인식 2) 여성 확대는 문화적, 개인적 문제일 뿐 국가가 취해야할 정치적 사안이 아니라는 인식 3) 여성의 권리가 인권 문제 그 자체는 아니라는 인식 4) 여성 문제는 불가피하거나 너무 만연된 문제라서 노력해 봐야 성과가 나지 않는 문제라는 인식이다(Bunch, 1991, 신혜수, 1999에서 재인용).

여성폭력이 인권의 문제에서 제외되어 왔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기존의 공적 영역 중심, 남성 중심의 인권 개념은 물론 '아내폭력' 자체가 다른 시각에서 비판, 재해석되기 시작했다. '아내폭력'은 유사(類似) 국가인 가족에서 행해지는 통치 행위로 고문, 테러라는 것이다. 게다가 '아내폭력'은 국가 기관의 고문보다 더 심각하다. 남편은 공적 기관의 고문 가해자보다 더 임의대로 행동하고 남편의 폭력은 사회적 감시의 대상이 아니라고 간주되며, 가정에서의 고문은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므로 피해자의 폭로를 더 어렵게 한다(Cook et al, 1994). 여성폭력이 인권의 관점에서 접근되면서 국가 권력으로부터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했던 근대적 인권 개념의 한계가 지적되고, 이제까지 비정치적인 공간이라고 간주되었던 집안에서 개인들간의 억압 관계에도 인권

개념을 적용함으로써 인권의 범위가 확장되었다. ‘아내폭력’이 가족 문제가 아니라 인권의 문제로 제기된다는 것은, 여성을 가족 구성원으로만 한정했던 가부장제 질서에 대한 도전이며 여성을 사회적 개인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여성 정체성의 정치학에 새로운 차원을 열게 된 것이다.

3. 성 역할의 제도화와 ‘아내폭력’

‘아내폭력’은 여타의 여성폭력과 다른 맥락에 있다. ‘아내폭력’은 더 보편적으로 발생하며 전 생애에 걸쳐 피해가 지속된다. ‘아내폭력’ 현상에는 강간, 구타, 성 매매, 포르노, 성기 노출, 성희롱, 근친 강간, 지참금 살인(dowry death), 신부 화장, 아내 순사, 음핵 절개¹⁵⁾ 등 여성에 대한 폭력 거의 모두가 포함된다. 남성은 ‘가정에서라면’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실제로 한다. ‘아내폭력’ 발생은 가부장제 기초로서 가족의 역사적 전통에 기인한다. 남성은 가족을 통해 여성의 성과 재생산 능력을 통제한다. 가족은 여성을 이성간의 일부일처제에 묶어 두고 여성의 성 장치를 남성의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적절한 과학적인 것으로 재구성하는 가부장제 유지의 가장 기본적인 사회 도구이다(위던, 1993:53).

‘아내폭력’의 역사는 성별이라는 정치적 제도에 의해 여성이 아내, 어머니라는 기능/역할로 규정되어 온 가부장제의 성립과 궤를 같이 한다.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가족 안에서 여성의 권력은 여성의 사회적(공적) 권력의 패턴과 일치하지 않는데(Yllo, 1984:319) 이 점이 바로 각 사회마다 성별 권력 관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¹⁶⁾ ‘아내폭력’이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이

15) 음핵 절개는 결혼과 출산 활동에 고통을 준다. 음핵 절개의 일반적인 형태는 음핵과 음순 일부를 제거하는 것이지만, 성교를 못하도록 음부를 봉쇄하기도 한다. 이 때 소변과 월경혈이 통과할 정도의 구멍만 남겨두고 주변이 같이 꿰매진다. 여성이 출산하면 아기가 통과할 수 있도록 구멍이 벌어지게 되는데 출산 후에 다시 양옆을 꿰맨다. 이 과정은 임신할 때마다 반복된다(Neft & Levin, 1997:163).

16) 물론 어느 사회나 ‘아내폭력’이 질과 양에 있어서 똑같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를 실제로 정확히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폭력의 개념이 각 사회의 문화적 맥락과 개인의 의미화 정도가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네덜란

유이다. 공적 영역의 성별 관계와 가족 내 성별 관계의 불일치는, 여성이 공적 사회에서 어떠한 지위를 갖든지 간에 아내/어머니로서의 성 역할이 우선시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공적 영역에서 '향상된' 여성의 지위는 구조적인 성 평등의 증거가 아니라, 개별 여성들의 공/사 영역에 걸친 이중 노동에 의존하고 있다.

각 지역별 사례 연구들은 가족 내 역할 규범의 변화가 없고, 성 역할을 기반으로 하는 가족의 가치가 강조될수록, '아내폭력'은 공적 영역에서 여성의 지위와 관련 없이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국의 법적, 경제적, 교육적, 정치적 권리 등 공적 영역에서 여성 지위가 낮은 곳, 높은 곳 모두 '아내폭력'이 빈발한다는 연구(Yllo & Straus, 1984, Archer, 1994에서 재인용)는, 여성이 권력이 없어도 폭력이 발생하지만 사회적 지위가 높아도 가부장제 구조 붕괴에 위협을 느끼는 남편과의 갈등 때문에 폭력이 발생함을 시사한다. 린다 고든은 미국 보스턴 지역의 가정폭력에 대한 역사적 연구를 통해 여성운동의 성장이 '아내폭력'을 가시화 시키는데 큰 영향을 미치며 가족의 결속이 강조될수록 '아내폭력'은 사회적 관심사에서 사라진다는 사실을 밝혀냈다(Gordon, 1988).

에콰도르 사회는, 남녀는 본질적으로 다르며 남성 지배와 여성 복종이 이상적 가치라는 인식이 팽배한 사회인데도 여성들이 전통적으로 가정 내에서 경제력과 의사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에콰도르 사회의 뿌리깊은 '사나이 문화(machismo ethic)'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회보다 '아내폭력'이 덜 발생한다(Campbell, 1992:236). 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같은 남아시아 국가에서는 전통적으로 가족 이데올로기와 모성을 통해서만 여성의 권리가 논해져 왔기 때문에, 여성의 세력화가 가져다 줄 책임과 자유 보다 (기존의 제도가) 훨씬 더 여성을 움직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의 권리는 공적 영역을 중심으로 공적 영역'에서' 논의되기 때문에 사적 영역은 여성의 권리 담론으로부터 가장 영향받지 않는다(Coomaraswamy, 1994).

드에서는 폭력 피해자가 배우자일 때 1/3 이상 가중 처벌받기 때문에 '아내폭력'이 감소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미국의 경우 여성운동의 오랜 역사와 법적, 복지적 대책이 전국적으로 잘 정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구타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심영희, 1995:100).

이처럼 ‘아내폭력’의 현실은 계급, 인종, 직업, 학력 등 여성들간의 차이가 ‘아내폭력’의 발생과 대응에 별로 의미를 가지지 못함을 보여준다. 가부장제의 기본 성격은 여성의 정체성, 지위, 역할(기능)을 남성과의 관계로부터 규정하는 것인데, 그러한 과정이 ‘자연스럽게’ 실천되는 장소가 바로 가족이기 때문이다. 가족 제도는 여성을 개별적 인격체가 아닌 (남성을 위해 존재하는)동질적, 비역사적, 자연적 집단으로 정체화 한다. 가족은 여성을 ‘진정한 여성’으로 만들고, 남성을 ‘진정한 남성’으로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장치이다. 가족은 특히 사적인 존재로 간주되는 여성에게는 더욱 ‘합당한’ 정체성을 부여한다.

가족 안에서 권력의 분배는 남녀의 성 역할과 관련되어 규정되는데(이재경, 1995:59), 이 때 남편과 아내는 개인이지만 동시에 서로 다른 성별 그룹의 일원이므로 그들의 역할 규범은 평등하지 않다. 또한 역할 규범을 둘러싼 두 사람간의 갈등, 상호 작용은 사적인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로 인해 폭력이 발생해도 그것은 ‘부부 싸움’이 된다. ‘아내폭력’을 문제 있는 개인간의 이해 갈등의 산물로 파악하는 시각은, 갈등 상황 자체가 성 역할로부터 발생한다는 점을 간과한다. ‘아내폭력’이 ‘부부 싸움’이라는 인식은 가족 내에서 남성과 여성의 성 역할이 평등하거나, 불평등하더라도 성 역할은 ‘자연의 이치’ 차원에서 당연하다는 생각을 전제한 것이다. 그러므로 가부장적 역할 규범에 충실하여 부부 관계가 ‘안정적’이어도 관계가 불평등하므로 폭력이 발생할 확률이 높고, 역할 규범을 따르지 않아 ‘불안정’해도 그로 인한 갈등 때문에 폭력이 발생하게 된다. 결국 현재의 가족 제도에서 ‘아내폭력’은 극단적이거나 일탈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 자체에 내재해 있다.

여성과 남성은 모두 가부장제 사회의 주체로서 가족 내에서 자신의 성 역할에 충실함으로서 사회가 부여한 정체성을 유지하려고 하고 또 (남녀가 동일하지는 않지만)그로부터 권력을 얻는다. 특히 여성은 성별 분업 원리에 따라 가족 내 지위가 곧 사회에서의 지위가 되기 때문에, 피해여성들은 생명을 위협하는 폭력 앞에서도 아내/어머니로서 성 역할을 좀처럼 포기하지 않게 된다. ‘아내폭력’은 아내가 폭력을 유발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성 역할에 충실, 집착함으로서 지속된다. ‘아내폭력’은 가부장제의 기본 성격과 맥락을 같이 하기 때문에 매매춘과 더불어 가부장제 프로젝트의 최후 보루가 되고 있다.

평화운동과 인권운동의 연대

김 정 수 (평화여성회 정책기획위원장)

1. 개념 : 상호 보완적인 개념, 가치, 과정

(1) 평화(peace, shalom, 화평)

- 적극적 평화-소극적 평화
- 폭력 : 물리적 폭력, 잠재적 폭력, 문화적 폭력, 구조적 폭력
- 샬롬 : 삶의 온전성, 총체성 - 정의와 평화
- 화평 : 경제적 평화 + 정치적 평화

(2) 인권(human rights)

- 인간의 기본권, 어떤 인간인가의 문제
- 1793년 프랑스 인권선언, 1948년 프랑스인 르네 카생이 기초한 세계인권선언을 유엔이 채택.
 - 사르트르 “프랑스 인권선언에 등장하는 인간은 추상적 인간” - 이 추상적 인간을 구체화할 때 문제가 발생 - 프랑스 인권선언에는 모든 인간이 평등하며 천부의 인권을 타고난다고 되어 있으나 이 때의 인간은 여성이 아니라, 남성이며 흑인이 아니라 백인.
- 인권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둘러싸고 동서 냉전시대는 물론이고 아직도 서방진영과 동방진영, 자본주의 선진국과 후진국, 기독교문명권과 이슬람교와 유교 문명권 사이에 갈등을 빚고 있는 것도 프랑스 인권선언과 유엔의 세계인권선언에 등장하는 인간의 ‘추상성’ 때문

- 1998년 세계인권상황(세계인권연맹)

* 인권이 지켜지고 있는 나라 -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서유럽국가, 일본, 베트남, 필리핀, 남아공화국, 코트드부와르, 몽골, 코스타리카 등

* 인권이 철저히 억압받고 있는 나라

* 인권이 제도적으로 침해당하고 있는 나라

* 인권이 일상적으로 유린당하고 있는 나라 - 한국, 중국, 브라질, 러시아, 인도

* 어쩌다가 인권이 유린당하고 있는 나라

- “아시아적 가치”와 인권 논쟁

2. “Peace is a Human Right”(평화는 인권이다)

- 1999년 헤이그 평화회의(The Hague Appeal for Peace) - 표어

- 인권의 한 영역으로 간주될 때의 평화는 소극적 평화에서 적극적 평화 모두를 포함한다. 전통적으로 인권은 평화(운동)의 한 영역으로 간주되어 왔지만(개념적 차원), 그럼에도 실천에 있어서 두 운동은 결합되지 못했었다. 두 개의 별도의 운동의 영역으로 나뉘어져 발전되어 왔던 것이 한국의 경험에서도 마찬가지.

- 냉전시기 국제평화운동, 반핵운동 등 역시 인권운동과는 별개로 전개되어 왔음

네덜란드의 평화운동단체인 ENNAT(European Network Against Arms Trade)의 마틴 브록(Martin Broek)은 과거 1970년대 말과 80년대 초반을 휩쓴 유럽의 반핵평화운동은 대체로 공포(fear)에 의지해 있었다고 함. 즉 두 블록 간의 불안정한 힘의 균형이 무너지면 핵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평화운동의 주요 동인이었던 것. 그리하여 동서독이 통일되고 동유럽 사회주의권의 변화와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해소된 후에는 이러한 운동이 많은 지지자를 잃을 수밖에 없었다고 함. 이리하여 공포에 기초하여 움직였던 80년대 유럽의 대규모 반핵평화운동은 나토의 유고슬라비아 폭격을 목격하면서 아무런 반대를 하지 않았다는 것.

- 여기서, 평화개념은 전쟁의 방지와 부재라는 소극적 차원으로 이해되고

있음.

- 그런데, 마틴 브룩에 의하면 냉전 후 소규모의, 그러나 그 양상이 다양하고 참혹해진 국지전, 민족분쟁이 끝이 보이지 않게 이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과거의 평화운동 진영보다는 개발기구와 인권기구들에 의해서 새로운 평화활동의 계획이 세워지고, 이것이 평화운동의 새로운 주류가 되고 있다고 함. 즉 이들 기구들은 종종 중재단체를 결성할 수 있는 분쟁지역에서 기초수준의 활동을 벌였으며, 여성에 대한 성적 폭력문제를 이슈로 삼고, 재난구호의 수준을 높였으며, 이에 대한 군사분야의 가능한 역할을 논의했으며, 소규모 군비와 지뢰를 줄이는데 성공적인 로비를 벌였다는 것.

- 냉전 이후 변화된 분쟁의 양상 : 강대국 중심의 핵무기 경쟁과 대결 보다는 지역적 차원에서의 민족, 종족 분쟁, 여기서 사용되는 소규모 무기(small arms)에 의한 피해, 소년병사들에 의한 살상의 참혹함, 전선과 후방의 개념이 사라진 전쟁터에서 시민(여성, 어린이, 노인)의 희생(종족, 인종분쟁에서 주 공격대상은 무장병력이 아니라 시민 그 자체) 등으로 냉전 이후의 무력분쟁에 의한 사상자 등 희생자의 80% 이상이 시민이고, 여기서 피난민과 이주민, 강제이주자의 80%는 여성이 됨

3. Women's Rights are Human Rights (여성의 권리는 인권이다)

- 이 표어는 지난 1995년 베이징 여성대회와 그 이후 표명된, 인권에 있어서 gender의 측면과 이를 인권운동에서 핵심부분으로 만들려는 노력을 강조한다. feminization of the human rights movement(인권운동의 여성화)는 여성의 인권침해를 사실로서 확인하고, 그 사실 뒤편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는 것, 즉 살아남은 사람들의 침해받는 희생에 대한 보상 뿐 아니라 가해자와 그들의 책임을 밝힘

① 무력분쟁에서의 여성에 대한 폭력을 인도주의법(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에 적용시킴 (사례①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니아에서 집단강간과 살상, ②일본군 중군위안부 생존자)

②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의 여성의 음핵절개, 지참금 살인 등 여성에 대한 관습적 폭력

- ③ 북미, 유럽, 남미 여성들에 대한 가정폭력, 강간, 성희롱 등
- ④ 이슬람 근본주의에 의한 여성인권 침해(명예살인)
- ⑤ 서남, 동남아시아의 여성과 소녀납치와 강제매춘

4. Peace is a Women's Right (평화는 여성의 권리다)

- 시민의 인권과 여성의 인권 침해의 문제 - 특히 여성의 성을 매개로 한 전시 폭력(조직적 강간, 강제임신, 성노예 등)은 오늘날 전쟁과 테러리즘에서 전략으로 채택되고 있는 상황.

- 베이징 행동강령은 “무력갈등 상황에서의 강간이 전쟁범죄(war crime)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人道에 반한 범죄’(crime against humanity)이며 인종학살(genocide)”라는 것을 확인

- 여성의 권리로서의 평화를 촉진하기 위해 베이징 행동강령의 “여성과 무력갈등”에서 채택한 6개 행동전략

① 갈등상황에서 의사결정 수준에 여성을 참여를 증대시킨다. 무력 등의 갈등, 외국점령 상황에서 사는 여성들을 보호한다.

② 과도한 군비를 감축하고 무기사용 가능성을 통제한다 - 군사자원과 관련산업의 평화적 목적으로의 전화, 군축을 통해 얻어진 재원을 사회경제적 발전, 특히 여성들의 발전에 사용될 수 있는 기금으로 마련한다.

③ 비폭력적 형태의 갈등해소 방법을 발전시키고 갈등상황에서 인권유린을 줄인다. - 국제인도주의법 조항들을 존중. 평화유지, 갈등예방을 위한 외교, 평화중재, 협상 등의 사안과 관련된 의사결정 수준(국내, 국제 차원)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을 강화하고 여성의 동등한 대표성을 보장한다.

④ 평화의 문화를 양성하기 위해 여성의 기여를 증대시킨다. - 교육, 훈련, 공동체 활동, 청소년교환프로그램 등을 통한 평화적 갈등해소와 평화, 화해, 관용의 증진

⑤ 국제적으로 보호가 요청되는 난민여성, 이주여성, 국내이주여성들에 대한 보호, 원조, 훈련을 제공한다. - 이를 위한 장단기적 계획, 기획, 실행, 감시, 평가 등에 여성들이 충분히 참여할 것을 보장하는 방도를 취한다.

⑥ 식민지, 신탁통치 지역의 여성들에 대한 원조를 제공한다.

5. 평화운동과 인권운동의 만남 : 인간안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 그간의 안보논의 - 국가 안보, 군사안보 등 군사력 중심의 안보개념,
 - 냉전 이후 개별 국가의 안보는 향상되었지만 그 안의 시민의 삶의 조건과 질은 더욱 열악해 지면서 새로운 안보개념, 즉 “인간안보human security, people-centered security” 개념을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는 특히 보편적 인권의 측면에서 그 내용이 포괄되고 있다. “Peace is a human right(평화는 인권이다)은 결국 평화의 보장이 인권확보에 필연적이라는 것인데, 21세기에는 평화운동과 인권운동이 교차되면서 전개될 것을 보여준다

<안전보장의 제 개념비교>1)

	안전보장 주체	객체	위협 의 원천	수단	목적
전통적 국가안보	국가	국가	국외/군사적	군사력	국가(국민)의 생존
인간안보	국가/ 국제사회 (UN)	개인	구조적 사회문제 (빈곤, 인권억압, 환경파괴, 범죄, 군사화) 내전	인간중심의 개발, 평등의 배당	개개인의 생존 능력, 예방외교
사회안보	국가/사 회	사회	사회 내의 집단	사회통치정책 다문화주의 정책	사회의 정체성 유지
지구규모 의 안보	국가/ 국제사회 (UN)	지구	분쟁, 전쟁, 자연문명	예방외교 (조기경보, 조사) 개입	인류의 생존
여성안보					

1) 栗栖薫子, 인간 안전보장, 일본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 117호, 안전보장의 이론과 정책 1998년 3월 98쪽, 김창수, “인간안보의 관점에서 바라본 평화운동과 인권운동의 연대” 2000 제주인권학술회의 발표논문집 54쪽에서 재인용.

- “인간안보” 개념은 다음을 포괄한다.

①안보의 척도로서 ‘국가’보다 인간 개인과 이들의 공동체를 받아들인다.

② ‘국가안보(State Security)’는 필수적이지만 개인의 안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충분치 못하다고 인식한다.

③ 군사적인 것뿐만 아니라 비군사적인 것(국가내부의 전쟁, 소형무기의 유포, 인권침해, 범죄와 마약 등)도 위협으로 간주한다.

④ 개인의 안전과 안녕을 지구적 안보의 총체성을 이루는 데 필수적인 것으로 이해한다.

⑤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를 대체하지는 않으며 보완한다.

⑥외교의 영역에 새로운 수단(즉 인터넷을 통한 의사소통, 정부와 비정부 기구, 국제비정부기구간의 연맹 등)을 받아들인다.²⁾

- 인간안보는 “두려움”과 “결핍”으로부터의 자유와 해방이 이루어질 때 가능한 것

-공동안보 : ‘적과 함께 하는 안보’(스웨덴 수상 올로프 팔메에 의해 주장)

“누구를 위한 안보인가”라는 질문은 안보의 주체와 목적을 묻는 것이자 안전을 보장받아야 할 ‘우리’가 누구여야 하는가에 관한 질문이기도 하다.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는 세력은 ‘적’으로 규정된다. 올로프 팔메는 “적과 대적하는 안보가 아니라 적과 함께 하는 안보를 이룩해야 한다. 국가안보체제는 상호공명의 위협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공존에 의거해야 한다”라고 한다.

6. 확장된 정체성에의 요구

- 공동안보의 관점 :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는 요인이 다면적인 것이기 때문에 모두 적으로 규정할 수 없다는 것. 즉 ‘확장된 정체성’을 요구하는 데, 즉 더 큰 우리와 우리 삶의 형태 전체를 전제로 하는 것이며 그에 따라 협소한 ‘적’개념을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³⁾

- 적을 만들어내는 우리의 정체성 - ‘단일민족’이라는 ‘단일정체성’(single

2) Paul Heinbecker, ‘Human Security,’ Peace Magazine (99. 7.)

<http://www.peacemazine.org>.

3) 이대훈(1998), *세계의 화두*, 개마고원, 202쪽~

identity)

- 단일민족에 기반한 단일정체성은 남성부계 혈통주의를 기초로 하여 여성, 외국인, 장애인 등 소수자를 소외시키고 타자화시키는 기능을 해왔음.

- '확장된 정체성'에 대한 논의

① 백낙청은 남과 북의 주민과 해외의 조선족(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 등)을 포함하는 '다국적 민족공동체(multi-national ethnic community)'⁴⁾에 대해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그가 말하는 '다국적민족공동체'는 한(韓) '민족'을 기반으로 한 공동체적 정체성을 표방하고 있으며 그 공동체가 "민주적이고 자주적이며 개방적인 사회의 건설"을 통한 세계사적 의의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한민족중심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동체적 정체성이 확대된다면 적어도 국내외에 거주하는 조선족에 대한 차별의식을 감소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본다.

② 임지현은 민족주의 담론의 생산자인 남과 북의 권력에 일방적으로 종속되었던 민중적 주체의 회복이라는 면에서 "다중적 정체성"(multiple identity)⁵⁾을 제창한다. 다중적 정체성의 지향점은 전일적 민족적 정체성에 가쳐 억압되었던 성과 계급의 다른 정체성의 복원을 통한 민중의 다중적 주체성의 회복에 있으며, 이는 21세기 자본의 논리에 포섭되지 않는 민중 사이의 수평적 연대를 지향하는 민주주의의 논리에 입각해 있다고 한다.

7. 여성(인권)과 민족문제

- 여성평화운동에서 그 동안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던 문제 - 여성인권과 민족문제가 중층적으로 반영된 것들, 예) 주한미군범죄 피해여성문제와 일본군 중군위안부 문제

① 주한미군범죄 피해여성문제 - 반미, 민족운동, 통일운동에 여성의 인권 문제가 도구화되었던 경험 : 인권운동과 평화운동을 어떻게 통합적으로 이루

4) 백낙청, "21세기 한민족공동체의 가능성과 의의", 흔들리는 분단체제, 창작과 비평사, 188, 199쪽.

5) 임지현, "한반도 민족주의와 권력담론-비교사적 문제제기", 당대비평 2000년 봄호(통권 10호), 삼인, 203-206쪽.

어 낼 것인가의 과제를 던져주는 운동 (정유진씨의 강좌 참고) - “인간 존재의 문제”에 대한 깊은 연민으로부터 출발해야. 이는 ‘우리 자신은 누구인가’라는 자기 존재에의 질문, 즉 정체성에 대한 질문과도 연관된다.

② 정대협운동에 대한 비판 :

- 한국여성운동이 ‘성차별’과 ‘민족차별’ 사이에 서있는 위안부 문제를 민족주의적 언설로 포괄하려고 함. 여성운동이 민족민주운동 속에서 인정받기 위한 전략’으로 민족담론을 고수(우에노 치즈코, 내셔널리즘과 젠더)

- 한국 정대협의 활동이 국제적인 연대운동 속에서 여성문제로 고조된 것에 비하면, 국내 여성운동이나 인권운동에 미친 영향은 극히 적다(아마시다 영애)

- 이에 대해서 정현백 교수는 한국에서 종군위안부 문제가 ‘민족의 치욕’으로 간주하여 덮어두려는 목소리가 사라진 것만도 중요한 성과이며, 여성운동에게는 지금까지 현실과 직결된 산적한 문제들, 예를 들어 가정폭력, 성폭력, 실업가장의 생존문제 등이 더 급박한 과제로 다가오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기에 애초부터 종군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보상이나 ‘역사바로세우기’ 작업은 여성운동의 화급한 현안으로 부각시키기는 어려운 실정이었다고 보며. 그런 점에서 역사적 발전단계가 다른 한국의 상황을 ‘국민국가’ 형성이라는 근대 프로젝트 과제를 달성한 선진국 여성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즉 역사발전의 비동시성을 읽어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

- 한국여성운동은 민족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인가? 정현백 교수는, “분단이 과도한 군비지출과 여성복지의 감축, 이산가족의 슬픔, 군사주의 문화의 일상화는 여성이 당하는 고통의 몫으로 남아있다. 더구나 한반도의 다른 반쪽이 추위와 굶주림으로 허덕이는 현실 그리고 향후의 통일방식이 남북한 여성의 삶과 지위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것임을 예감한다면, 여성운동은 여전히 민족문제를 도외시 할 수 없다. 따라서 한국사회의 민족담론이 지닌 타민족에 대한 배타성, 한국적인 문화와 혈통주의에 대한 집착을 문제삼으면서, 새로운 민족담론을 만들어 가는 데 여성운동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야 한다”고 한다.

6) 정현백, “민족주의와 한국페미니즘”, 여성단체연합 통일정세 공유 및 통일에 관한 입장마련을 위한 워크샵, (2000.6.16) 발표논문.

8. 인권과 평화에 대한 감수성 기르기

- 타인 속에서 자신을 보고 자신 속에서 타인을 보는 능력과 비판적 깨달음 없이는 인권이라는 원리가 성공하기를 바랄 수 없다.⁷⁾

- 즉 인권과 평화에 대한 감수성은 자신을 객관화하고 일상의 문제를 구조의 지평에서 바라봄으로써 일상성에 빠지지 않고 일상을 변화시켜 나갈 비판의식을 키우도록 한다.

- 감수성은 훈련을 통해 키워질 수 있는데, 이는 지속적인 인권과 평화교육을 통해 가능하다. 평화교육의 생활화, 일상화가 현재 인권과 평화운동의 지평을 결합시키는 촉매의 작용을 할 것.

- 인권과 평화에 관한 명상, 영상매체를 인권과 평화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인권과 평화에 관한 학습, 인권침해와 반평화의 현장 방문하기, 인권과 평화단체 방문하기 등등

- 인권, 평화, 생태학(환경), 생명의 문제에 대한 총체적인 인식의 확대, 지평의 확대 속에서 각기 역할의 전문성을 가지고 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 여기서 진정한 연대가 형성될 것

7)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편역, 아시아의 인권교육: 호주·인도·홍콩 편, 사람생각, 1999, 13쪽

평화를 만드는 것

정 유 진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누군가를 타자화하며 억압하는 문화 속에서 참다운 해방과 평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

고통

우리가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은 어느 순간에도, 어떤 권력이
나 법으로도 짓밟혀서는 안 될 인권의 '불가침성'에 대한 믿음과 존중 때문이
다. 그들의 증언을 듣는 것은 '인간으로서 차별 없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
리'를 숙고한다는 것을 뜻한다. 또한 그것은 인권과 평화를 배우고 실천하는
귀중한 과정이며 증언하는 이와 듣는 이의 새로운 관계 가능성을 의미한다.
하나의 가능성은 또다른 가능성을 낳게 된다.

그러나 인권이 도구화되었을 때 이러한 가치는 사라지고, 피해자의 증언
은 투쟁의 결의를 드높이기 위한 또 하나의 수단(반미의 논리를 더욱 탄탄하
게 하는 '자료')으로 전락한다. '증언에 귀 기울이기(고통과 만나는 것)' 전에 피
해자가 미군을 반대하고 있다고 편의대로 상정하고 그의 고통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데올로기로서 증언을 듣는 것이다. 그러면서 투쟁을 열심히 하는 것
이 '증언을 듣는 것'과 동일하다는 식의 착각을 만들어낸다.

그러한 과정에서 인권은 이데올로기에 밀려나게 된다. 피해자와의 관계
역시 단순화되고 만다. 피해자는 미군철수 논리를 지원하는 매개, 도구로서
위치지워질 뿐이다. 인간의 문제는 이미 소외되어 있다.

피해 당사자들이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 느끼는지 그들의 고통을 나누려

는 마음 없이 일방적으로 선언하는 ‘미군철수’의 구호가 공허하게 느껴지는 건 바로 그 때문이다. 범인도 밝혀지지 않은 채 아들의 죽음을 가슴에 묻고 사는 어머니, 이미 주거 불능 지역으로 판정난 곳에서 10년이 넘도록 미군과 싸우다 4번이나 자살을 시도했던 매향리 지역 주민, 미군기지 기름유출로 지하수가 오염되어 인근 마을에서 몇 개월 동안이나 식수를 길어다먹어야 했던 의왕시 왕곡동 주민들...

그들에게 ‘당장 이루어질 것 같지도 않은’ ‘미군철수’라는 당위적 선언은 어떤 의미로 전달되는가? 나는 ‘미군철수’ 구호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문제 제기 방식과 문제를 인식하는 태도에서 주객이 전도되었음을 지적하는 것이다.

미군범죄를 ‘불평등한 한미관계에서 파생되는 산물’이므로 ‘한미관계의 정상화/미군철수’가 대안이라고 단순화해선 안 된다. 미군범죄를 이해한다는 것은 ‘언제, 어디서, 미군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facts)을 아는 것이 아니다. 노근리 등 미군의 양민학살 희생자는 차치하고라도 해방이후 10만 명이 넘는 미군범죄 피해자¹⁾가 있었는데 왜 세기가 바뀐 오늘날까지 이 문제는 사회 문제화되지 못하는 걸까? 무엇이 그들을 침묵하게 만들었는가?

미군범죄를 이해한다는 것은 그들의 고통과 만나는 것이다. 그들의 경험과 대면하는 일이다. 반 백년이 넘는 긴 시간동안 그들의 상처가 왜 침묵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을 강요한 억압의 구조, 우리의 내면을 성찰하는 것이

1) 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1967년부터 1998년 말까지 발생한 미군인 범죄(미군속 범죄 포함)는 50,082건이며 범죄에 가담한 미군(미군속 포함)은 56,904명이다. 경찰에 접수되지 않은 사건까지 감안한다면 실제로는 더욱 많은 범죄가 일어났음을 짐작할 수 있다. 위의 통계를 근거로 1945년 9월 8일 미군주둔 이후 현재까지 발생한 미군범죄는 약 10만 건으로 추정된다.

살인, 강간, 강도 등 강력범죄가 집중되었던 45년부터 67년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이 발효되기 전까지 발생한 범죄는 정부 차원의 기록조차 남아있지 않다. 필자는 수차례 법무부 검찰4과에 자료를 요구했지만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이 발효되기 전의 자료는 폐기 처분되었다는 답변이 전부였다. 주한미군범죄에 대해 미국의 공식적인 사과가 한 번도 없었다는 것과 1998년 현재 미군인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재판권 행사율이 3.9%(미군속 재판권 행사율 24.6%)라는 사실은 미군범죄를 인식하는 한미 양국 정부의 태도를 드러낸 일례이다.

다. 피해자의 고통을 나누려는 마음, 그들의 고통에 귀기울이는 것이 한미관계 정상화를 위한 투쟁과 동일한 것은 아니다.

다양한 폭력(외국군대의 범죄, 정부의 무대책, 가부장제, 군사주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무관심과 편견 등)이 만들어 낸 개인의 상처를 민족주권만 회복되면 해결될 '작은 사안'으로 치부하는 것은 옳지 못한 태도이다. 인간의 고통을 덜기 위한 운동에 서열과 등급을 매길 수 없다고 생각한다. 개인의 문제는 작은 것이고 민족의 문제는 큰 사안이라는 이분법적 사고, 소수의 인권과 다수의 인권을 나누는 분할의 구도 속에 이미 폭력은 내재되어 있다. 사람의 고통을, 인권을 무시하는 방식으로서는 평화와 인권을 실현할 수 없다. 현재 사람이 겪고 있는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제도의 변화를 모색하는 태도가 운동의 순서이고 인간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한다.

연민(憐憫)

인간이 지닌 영혼의 가장 중요한 능력은 연민이라고 어느 시인은 말했다.

<영혼은 정신의 밑바닥에 숨어서 작동하는 진실이라는 것의 영위(靈位).>

연민이란 '상대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데서 오는 슬픔'이다. 흔히 연민을 '상대의 고통을 동정하는 감상' 정도로 여기며 구차한, 건강하지 못한 감정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철저하게 잘못된 해석이다. 고통을 이해하고 함께 나누려는 것은 사람에 대한 따뜻한 이해에서 출발하는 귀한 감정이다.

'고통'을 무시한 방법으로 진실에 닿을 수 있는가? 고통을 배제한 언어와 행동은 인간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미군 문제를 거론할 때 '고통'에 대한 강조는 남성중심적 민족주의 운동 집단으로부터 '감정적이다, 민족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왜소화하지 말라'는 비난을 받는다. 이러한 논쟁은 한국에서 뿐 아니라 오키나와나 필리핀 등에서도 동일하게 제기된 바 있다. 나는 인간의 구체적 감정에서 진실이 나온다고 믿는다. 그들의 고통을 나의 것으로 느끼는 소중한 감정이 없기 때문에 인간을 쉽게 수단화하고, 목표를 이룰 때까지 사람이 겪는 '과정'을 간과하는 폭력이 생기는 것이다. 고통을 사소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그저 있을 수 있는 일,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무심한 감성이 나는 무섭다. 인간을 짓밟는 폭력에 분노하지 않는 운동은 새로

은 폭력을 구성하는 위험에 가까이 있기 때문이다.²⁾ 삶에 대해 성찰하지 않는 태도는 고통에 무감할 수 있는 정서를 만든다. 고통을 방치하는데 익숙한 사회 운동 역시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나는 개인의 감정과 의지, 그의 존엄성과 가능성이 파괴되는 것에 대한 분노에서 ‘평화’에 대한 갈망이 더욱 성숙된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갈망의 공감이야말로 사람이 사람으로 숨쉴 수 있는 세상을 향한 연대의 힘이 아닐까? 변화가 요구되는 모든 문제는 결국 현실을 안고 살고 있는, 살아 있는 몸을 가진 개개의 사람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보장되는냐 마느냐 하는 인권 문제이기 때문이다.³⁾

평화 = 평등 = 생명

평화로의 길은 없다. 평화 그 자체가 길이다. -- 간디(Gandhi) --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 뿐 만이 아니라 폭력을 줄이고 폭력에 저항하는 것을 말한다. 폭력이란 인간의 정신적, 육체적 가능성의 실현을 가로막는 모든 것이다. -- 요한 갈통(Johan Galtung) --

이는 평화란 어떤 행위의 결과물이 아니라 ‘집단의 노력’을 동반한 ‘지향과 과정’임을 뜻한다. 평화는 진행형의 과제인 것이다. ‘평화정착’이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지만 나는 평화란 어떤 정치적 격변을 통해 정착되는 성질의 것

2) 한나 아렌트. 1999년, 『폭력의 세기』, 101쪽, 이후

“감정의 부재는 합리성을 일으키지도 않으며 조장하지도 않는다. “참을 수 없는 비극”에 비추어 볼 때 “초연함과 냉정함”이 오히려 “두려운” 것일 수 있는데, 이를테면 그것이 통제의 결과가 아니라 이해력 결핍의 명백한 징후인 경우에 그렇다.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감동’해야만 하며, 감정적인 것의 대립물은, 어떤 의미에서도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감동에 대한 무감성”으로서, 대개 병리적인 현상이거나, 아니면 감상으로서, 느낌의 도착이다”

3) 제주4.3연구소 엮음. 1999년, 『동아시아의 평화와 인권-제주4.3 제50주년기념 제2회 동아시아 평화와 인권 국제학술대회 보고서』, 181쪽, 역사비평사

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평화를 전쟁의 반대 개념으로만 한정지으면 평화의 폭넓은 의미를 놓치는 우를 범하게 된다. 전쟁이 종결되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전쟁보다 더한 고통을 경험하는 이들이 세상엔 많기 때문이다. 50년 넘게 미공군 폭격 훈련의 불모로 시달리는 매항리 주민들, 단일민족의 우수성을 교과서에 명시한 나라에서 평생을 편견 속에 살아야 하는 혼혈인, 보험가입 조차 거부당하는 장애인, 학대받는 아동,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했다는 이유로 온갖 차별을 받고 사는 여성, 남편의 구타 속에 하루하루가 지옥인 여성, 버려진 노인.... 이들의 삶이 평화로울 수 있는 날은 언제일까?

왜 개인의 인권이 가장 소중한 것인가 하는 질문에 여러 답변이 가능하겠지만 나는 '한 사람의 삶의 평화가 깨졌을 때, 그와 함께 그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다. 누구나 저마다 살아온 길이 다르듯 개인이 느끼는 고통의 무게나 삶의 상처 또한 모두 다르다. 그것은 정체성의 문제다. 정체성이 다름으로 해서 생기는 많은 문제들을 '민족(전체)'이라는 틀로 묶어 획일화하는 것은 바르지 않다. 그것은 인간을 짓밟는 폭력의 다양함과 폭력의 사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폭력을 줄이는 방안 또한 내놓을 수 없다.

인간으로서 가능성이 파괴되었을 때의 고통, 상실된 가능성의 가치를 누가 무엇으로 대체할 수 있단 말인가? 죽음은 정신과 육체가 영원히 분리된 상태를 말한다. 인간이 자신의 정신적, 육체적 가능성을 잃었다는 것은 죽음과 가까이 있음을 뜻한다. 고통은 인간의 희망(가능성)을 앗아간다. 개인의 고통, 개인의 삶의 평화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 때문이다. 한 사람을 하찮게 생각하면 그 한 사람이 모여 구성된 민족도 보잘것없는 것이 된다. 한 사람이 갖는 생명의 의미를 귀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노근리' 문제와는 달리 한국군의 베트남 양민학살 등 타민족이 경험하는 여러 가지 폭력의 문제에 무감할 수 있는 것이다. 한 사람을 간과하는 민족주의는 초라할 뿐 아니라 인간을 쉽게 대상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하다.

나는 인권을 도구화하는 폭력과 사회 운동에 서열을 매기면서 인권을 부산물로 취급하는 위계적 사고 체계를 비판한다. 진정한 평화는 구체적 개인의 인권을 중시하고, 인간의 삶에 고통을 주는 폭력에 못견뎌하는 심성이 성숙될

때 비로소 경험하게 되는 '귀한 선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한 감성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평화를 만드는 과정인 것이다.

평화는 인권에 대한 믿음에서 출발하고 진실은 구체성에서 나온다. 사람의 고통을 외면한 채 추상적 관념에 역설하는 방식의 사회운동은 더 이상 새로운 진전을 가져올 수 없다. 개인이 맺게 되는 사회적 관계에 주목하지 않는 한 '변화'란 요원하기 때문이다. 개인이 일상에서 부딪히는 경험은 더 이상 개인적인 것이 아니다. 사람의 얼굴이 있는 운동만이 승리할 수 있다.

미군이 단순히 외세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세가 현지인들을 타자화하고, 그들을 타자화하는 과정에 폭력이 개입되어 개인의 일상을 파괴하고 고통을 주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인권을 침해하는 폭력에 저항하는 힘이 거세어질 때 더욱 많은 이들의 공감과 연대를 모아낼 수 있다고 믿는다. 21세기를 평화와 인권의 세기로 지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빠르기가 강요하는 반평화와 억압

김 은 정 (장애여성공감)

1. 몸을 몸으로 사고하기 - 누가 장애인인가?

한국사회에서 장애인은 사회적인 맥락과 분리되어 있고 본질적인 범주로 이해되어 왔다. 따라서 장애인의 문제는 여타 사회운동의 맥락과는 분리된 채, 협소한 의미의 사회복지의 영역에서 다루어져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구조적인 사회 모순이나 무력갈등, 폭력의 존재와는 무관하게 그 자체로 불쌍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로 여겨져 왔다.

90년대 말에 이르러서는 다양한 이유로 다양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긍정적인 정체성의 정치학(positive identity politics)을 내세운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즉 장애를 단순한 불행이나,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장애를 사회와의 연관성 속에서 파악하고 장애를 가진 몸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주장함으로써 새로운 몸의 범주, 정상성의 해체를 주장하게 된 것이다. 그러한 움직임을 주도한 장애를 가진 여성들은 기존의 장애운동방식이 권리옹호, 권익확보, 생존권투쟁, 빈민운동의 맥락에서 이루어졌던 것에서 나아가 비장애인중심의 사회, 정상신체중심주의(Able Bodyism)에 대한 비판을 가하게 되었다. 사실상 장애인의 존재 자체와 그 삶의 질곡은 다양한 사회모순과 구조에서 기인한다. “다른 몸” 자체가 억압을 불러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장애인이라는 범주는 바로 “정상”이라고 간주되는 몸과 그러한 몸을 통해 달성되는 일정범위의 속도(pace), 움직임(mobility), 생산력(productivity), 이미지의 권력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변함없이 사회운동 내에서 “장애, 장애인”이라는 주제는 감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주제로서 지나치게 특수한 영역으로 타자화되어 있는 듯하다. 비장애인에게 장애라는 이슈는 너무나 조심스럽기 때문에 특별한 지식과 전문성을 요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장애는 평화나 인권의 문제, 사회적 모순과 분리된 맥락에서 발생하지 않는다. 핵물질과, 전쟁, 내전, 지뢰, 환경오염 물질, 성폭력, 고문, 구타, 산업재해, 교통사고, 질병 등 장애의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리고 당사자가 자신을 장애인으로서 정체화하든지 안하든지 간에 장애는 대부분 명백히 개인의 존엄성과 잠재적 자기실현가능성, 평화가 달성되지 못한 상황의 결과로서 발생한다. 그리고 장애의 존재는 많은 사람에게 위기를 불러온다.

반군사주의, 여성, 평화운동, 반전, 반핵, 인권, 환경, 통일운동들의 맥락 안에서 몸과 장애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인권의 억압과 폭력, 환경의 영향으로 인해 발생한 몸의 변화, 그 변화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하루하루의 삶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평화가 전면적으로 부정될 때 생겨나는 피해는 죽음이 아니면 극복될 둘 중의 하나로 결론 나지 않기 때문이다. 반폭력의 적극적인 작동의 결과로 창출되는 새로운 몸이 있고 그 몸으로 유지해 나가는 하루하루의 일상이 있다. 그것은 육체적인 것, 정신적인 것으로 분리되어 생각되어지기 어렵다. 광주민주화항쟁을 경험한 사람의 일상에 대한 서사 혹은 원폭 피해자, 고문 후유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비위생과 영양 결핍 등으로 인한 질병, 그로 인한 장애, 산업 사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업재해, 교통사고, 성폭력, 가정폭력, 만성질환으로 장애를 가지게 된 사람들이 있다. 정현백의 주장처럼 평화를 ‘단순히 지키는 것,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는 개념으로 본다면, 우리는 평화가 부정된 결과를 어떻게 끌어안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즉 단순히 더 이상 평화가 부정되는 상황을 방지하는 것, 반평화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반평화의 결과로 창출되는 변화, 새로운 몸, 그 몸의 경험이 수용되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이다.

원폭이나 전쟁, 군사폭력 등의 정치화된 사건들의 희생자들의 경험뿐만 아니라, 비정치적인 영역에서 발생한다고 보여지는 장애인의 경험 또한 정치적인 의미를 통해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장애는 본질적인 개념으로서의

장애가 아니라 특정한 몸의 특징과 변화, 손상의 결과가 한 사람의 기능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고 개인의 삶에 제한을 가져오게 될 때 비로소 장애가 된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장애는 신체적인 손상(impairment), 활동(activity)의 제약을 가져오는 장애, 참여(participation)에 제약을 가져오는 장애의 세 가지 차원으로 분류하고 있다. 장애를 규정하는 데에는 필연적으로 한 사회의 문화적 구조, 규범과 규칙, 인간적, 물리적 환경 등이 포함된다. 장애에 대한 이러한 정의 방식은 ‘장애화(disablement)’라는 용어를 통해 드러나듯이 개인의 몸이 장애를 야기하는 활동, 참여의 제한, 환경의 제약과 만나서 장애를 구성하고 있다는 시각이 바탕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속도와 생산성의 폭력성 - 분리(Segregation)

장애를 가진 사람과 그 사람과 일상에서 관계를 맺고 있는 여성들의 존재방식을 통해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인 생산성과 속도에 대한 통찰을 얻고자 했던 힐리어(Hillyer)는 한 사회의 시간 운영방식을 통해 그 사회의 지배적인 문화적 가치가 전파되고 강화되는 방식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생물학적인 몸이 사회의 일반적 속도의 전제가 된다면, 이탈된 사람의 몸은 사회의 일반적 가치로부터 떨어져나갈 수밖에 없다. 우리의 문화가 사회조직원리로서 기계적인 시간개념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의 미세한 신체적, 심리적 필요에 귀를 기울이고, 이에 따라 한 사람의 삶의 속도를 재조직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업이다.

비장애인 중심의 세계에서 인식의 차원으로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체화되어 있는 규정된 속도는 이러한 속도를 달성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것이 된다. 장애인 및 노약자, 임산부를 위한 편의시설증진법이 생기기 이전에는 5층 이상의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5층일까? 이러한 기준은 성인남성이 한번에 올라가기에 힘든 거리를 상정하고 있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이 허용되는 시간은 비장애인 성인의 보폭과 속도로 정해져 있으며, 유치중고등학교의 수업시간, 직주거리, 노동시간, 지하철의 환승 통로의 거리, 점심식사시간, 휴식시간 등 모두 “정상적인” 몸의 기준이 없다면 획일적으로 정해질 수 없는 시간규정에 의존하고 있다.

속도는 필연적으로 이동성과 생산성과 관련이 있다. 한 사회가 가진 획일적인 속도는 이러한 속도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배제하고 사회의 가치 있는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며, 분리시키고 있는가에 따라 재조명되어야 한다. 정상의 몸은 신체적 외형의 정상성과 더불어 평균적인 체력과 평균적인 양의 다양한 음식섭취 능력, 잘 수 있는 능력, 이동할 수 있는 능력, 일정한 시간을 앉아 있을 수 있는 능력, 인체에 부적합한 환경을 일정시간 견디어 낼 수 있는 능력, 무게를 들어올릴 수 있는 능력, 차단과 주의집중능력, 시청각 등의 감각능력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정상인 몸과 능력, 생산성을 상정하는 사회는 모든 구조 자체를 그것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짜 놓았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은 언제나 사용한 것만큼의 에너지를 재생산할 시간을 허용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노동에 종사한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자신의 속도와 생산성을 조절하는 데에 결국 실패하고 노동시장에서 퇴장하여 병자 혹은 노인의 세계로 입장하게 되는 것이다. 생산성은 우리 문화 안에서 기계적인 시간과 연관되어 있어서, 개인적인 시간, 기질적 시간(organic time)에 우선 순위를 두거나 다른 속도로 변화하는 것은 곧 생산성의 하락으로 간주된다. 만약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장애로 인한 속도의 저하가 나타나지 않거나 매우 생산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장애인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몸의 변화, 달성할 수 있는 속도의 변화 혹은 몸의 어떤 상태가 삶을 철저하게 다른 것으로 탈바꿈시킬 때, 그래서 다른 종류의 인간으로 분류되게 할 때, 우리는 평화를 달성할 수 없다. Hillyer는 장애가 사람들로 하여금 몸의 현실적 조건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깨닫게 하고 배우게 하는 통찰에 기반해 장애와 속도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고 하였다. 언제 어떻게 몸이 피로해지는가, 어떤 약에 영향을 받는가, 언제 근육이 수축하게 되는가, 심지어 호르몬 주기와 식물에 두드러기가 나는 것들까지 모두 사람의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무시하기 쉬운 신체적 단서들(미세한 것에서부터 심한 것까지)에 대한 민감성을 요구하고 있다.

3. 수용시설이 존재하는 시대를 살아가며...

사회가 가진 근원적인 폭력성으로 인해 장애를 가진 많은 사람들은 시설에서 살아가고 있다. 근대에 이르러 “다른” 사람들,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수용시설이 생겨났고, 이는 곧 감시와 통제의 역사와 맞물려 있었다. 개인성이 존중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감옥과는 또 다른 의미에서 사회의 최후의 보루로서 여겨지는 아동,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 여성, 행려자, 결핵환자 수용시설은 한국에서 모두 800개를 웃돈다. 이러한 시설에 대한 입장정리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는 더 이상 평화를 논하기 어려운 시점에 와 있는 것이다.

많은 여성들이 폭력에 의해, 질병에 의해, 가난에 의해, 사고와 나이 등에 의해 장애를 가지게 되거나 보살핌을 얻지 못함으로서 시설에 가게 된다. 시설이라는 주거형태 속에서 개인은 삶에 대한 통제권을 완전히 잃게 된다. 시설은 곧 분리를 의미하며, 이러한 일시적이거나 장기적인 분리가 과연 개인을 위한 것인가, 사회의 유지를 위한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던져보아야 한다.

미국의 평론가 조지 윌은 “나는 여성이 될 수는 없다. 나는 또한 흑인이 될 수 없다. 그러나 나는 오늘 집에 돌아가는 길에 장애인이 될 수 있다”라고 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위험을 배제할 수 있을까? 어떤 상태가 되면 더 이상 우리는 평화의 존재자체를 잊게 될 수 있을까? 우리는 무력갈등을 없애고, 만연한 폭력을 없앨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어떻게 그러한 상황을 겪고 난 뒤에 계속되는 삶을 가능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변화된 몸으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가를 모색해야 한다. 이는 바로 다른 몸을 가진 사람들의 삶을 통해 얻어지는 통찰을 통해서만 가능할 수 있다. 대인지뢰에 희생된 사람의 삶, 한쪽 다리가 없어진 사람의 삶이 어떤 변화도, 삶의 어떤 영역에서의 퇴장도 없이 사회 안에서 자신의 의지를 실현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지뢰를 없애는 운동만큼이나 필요한 듯 하다.

평화적인 갈등해결을 위한 방법¹⁾

재구성: 김 정 수, 박 수 선 (평화여성회 교육위원)

갈등이란 무엇인가?

갈등(葛藤)은 양립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이해관계나 목표가 상충되고 있는 상태이다.

갈등은 개인, 그룹, 조직, 공동체, 국가 사이에서 가치, 필요, 이해, 의도를 둘러싼 강한 불일치와 충돌로 종종 정의된다. 갈등은 기본필요가 충족되지 않거나 개인이나 그룹이 다른 개인이나 그룹이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간섭하거나 방해할 때 발생한다. 갈등은 종종 자원과 권력의 분배와 사용을 둘러싼 갈등을 내포한다.

사람들이 '적대자'를 자신에게 복종시키도록 승리하거나 강제하기 위해 경쟁할 때, 갈등은 종종 강화 혹은 약화된다. 갈등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갈등 상황에 대한 감정을 심각하게 느끼게 된다. 다양한 연구 가운데서 사람들이 가치와 문화의 차이를 참아내거나 더불어 살지 못할 때 갈등은 보다 빈번하게 된다.

갈등해결의 여러 가지 수단-과정

폭력적 방법 : 전쟁, 테러, 범죄 등

1) 이 자료는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한국여성단체연합, 자주평화통일 민족회의, 미국친우봉사회(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 공동주최로 진행하고 있는 '갈등해소 전문가 훈련' 과정에서 갈등분쟁 해결 전문가인 강영진씨의 <갈등분쟁 해결 트레이닝 매뉴얼> 자료에 기반해 재구성한 것이다.

강제적(일방적 문제해결) : 소송 등을 통한 명령/강제집행, 집단행동을 통한 압력 등, 억압
자발적(협동적 문제해결) : 당사자간 협상, 합의 만들기, 전문중재인의 중재, 시민참여 정책결정
등

갈등-분쟁에 대처하는 다섯 가지 방식

1. 경쟁-대립형 Competing

- 자신의 목표만을 배타적으로 추구(제로-섬)
- 자기주장이 강하고 경쟁적 자세
- 자신의 입장을 고수, 힘에 의존
-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는 대신 상대와의 관계를 희생시킴

2. 절충-타협형 Compromising

- 자신이 추구하는 것을 상대의 목표와 절충, 타협적으로 해결
- 자신의 실익 및 상대와의 관계를 적절히 조화시키려 함
- 문제해결 방법이나 태도는 경쟁형↔순응형, 회피형↔협동적 해결형의 중간

3. 회피-보류형 Avoiding

- 문제가 있어도 이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회피하거나 보류
- 갈등상태에 있는 자신의 목표-실익 달성을 추구하지 않음
- 더 큰 갈등을 우려해 당장의 문제해결을 연기하기도 한다.

4. 순응-양보형 Accommodating

- 자신의 이해관계보다는 상대의 요구에 맞춰 갈등해소 추구
- 자신의 실익보다는 상대와의 관계를 더 중시
- 상대와의 경쟁-대립 회피

- 자기주장을 잘 못하거나 안 함

5. 협동적 문제해결 Collaborating

- 윈-윈 방식의 문제해결 추구
- 상대방과 함께 해결책 만드는 협동적인 문제해결 과정
- 서로 자신이 추구하는 것(실익)을 상대방에게 이해시킴
- 각자의 목표(실익)를 충족시키며 효과적인 상호관계 형성

갈등 해결과정의 의미

당사자 상호간 의사소통을 통해 기존의 목표를 조정하거나, 정신적-물질적 자원을 재분배하거나, 구조를 변화시킴으로써 양립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이해관계, 가치관 등)를 양립 가능한 상태로 바꾸는 과정.

목표조정

당사자간 상호이해의 결과 그 동안 추구해온 목표를 바꾸거나 새로 설정함으로써 상호 양립 가능한 관계로 변하게 된다(오해 해소, 감정적 보복의 포기, 상대와의 관계 속에서 기존의 목표 재조정, 입장에서 실익으로의 목표 전환 등)

자원 재배분

당사자간 물질적 정신적 자원의 이동(보상, 사과 등) 또는 재분배의 방법과 절차에 합의함으로써 배타적이었던 목표가 양립 가능한 형태로 바뀌게 된다.

구조변화

당사자들의 목표가 양립 불가능하게 하는 구조(틀, 환경)를 바꿈으로써 양립 가능한 상태로 만들 수 있게 된다(기술발전, 파이의 확대, 상호관계 조정, 구조개혁 등)

협동적 문제 해결의 과정

1. 갈등이 존재함을 인정하고 이를 해결하기로 동의한다.

최소한 어느 한쪽이라도 갈등을 인정하고 대화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빠를수록 좋다. 이것은 일정 정도의 자의식과 문제 안으로 '들어가는 것 turning-in'을 요구한다. 당신이 이미 감정적으로 된다면, 이를 인정하고 누그러뜨리는 방법을 사용하려고 노력해 본다. 이것이 불가능하면 (포기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감정이 누그러들 때까지 문제를 다루는 것을 연기한다.

2. 문제의 성격을 규정한다.

양측 모두 자신들이 이해하는 문제에 대해 설명해 본다. 그 다음, 자신이 바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해 의견을 같이 한다. 양쪽의 이야기를 돌아가면서 들어보고 자신의 감정, 바라는 바, 요구하는 것 등을 열린 마음으로 정직하게 말한다. 또한 상대가 말하는 것을 부연 설명해 본다. 이리하여 갈등을 불러일으킬 근본적 문제와 관심사에 도달하도록 애쓴다. 관심사를 분명히 하고 먼저 공동의 기반이 되는 동의의 영역을 명백히 한다. 또 양측이 동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해둔다.

3. 해결방안에 대한 아이디어 모으기(brainstorm solutions)

갈등을 해결할 실제적, 비실제적 생각들을 나열해 본다. 이 지점에서 생각들에 대한 평가를 내리지는 않는다. 비판은 창의적 생각의 흐름을 막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각자가 기꺼이 변화를 가져오고 상대방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질문을 새로이 구성해 본다.

예: “.....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라면, 당신과 나는 어떨까요?

“당신과 내가 확실히를 할 수 있으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 본다.

4. 해결방안들을 평가해 본다.

가능성 있는 해결방안들의 결과에 대해 고려해 본다. 어떤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책임질 수 있는 것인가? 어떤 제약이나 한계가 해결방안들을 다른 것보다 더 현실적이거나 '실행할 수' 없게 만드는가? 성공할 가능성이 낮거나 너무 비실제적인 것(시간, 돈, 개인적 에너지나 너무 요구되는 것)은 포기한다.

5. 하나의 해결방안을 선택한다.

여기서 계속할 질문은 다음과 같다. “이 해결방안은 양측을 만족시킬 것인가? 이것은 양측의 요구에 부응한 것인가?” 양측이 선택한 방안에 대해 동의하고 이를 선택하기 위해 취해온 과정에 대해 만족하게 느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6. 해결방안을 실행한다.

이 방안이 작용하도록 하는 계획은 무엇인가. 어떻게 이 방법이 작용하도록 계획을 세울 것인가? 이것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 것인가? 실행계획을 적어보는 것도 유용할 것이다. 이 계획의 실행에 대해 후에 평가해 볼 시간을 정해본다.

갈등해결 방법으로서는 협상의 4원칙

1. 사람과 문제를 분리한다.

사람과 문제를 분리하지 않으면 문제 해결이 어렵게 된다. 상대에 대해 안 좋은 감정이나 부정적 태도, 금이 간 관계 등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분쟁, 갈등 사안과 별도로 해결해야 한다. 어떤 사람, 집단의 행동을 이해하는 두 변수는 <상황>과 <성격-태도>인데 자신의 행동은 '상황'으로, 타인의 행동은 그 사람의 '성격'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다. 방안 : '입장 바꿔 생각하기' 상대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선부터 단정, 넘겨짚기, 편견, 지나치게 일반화시키지 말아야 한다.

상대를 적이 아니라 인간으로 보기(상대방의 내면에 있는 인간성 확인)

주어를 사람이 아닌 문제로

문제되는 것을 이야기할 때 가급적 상대방을 주어로 하지 말고 그 문제 또는 문제되는 상황을 주어로 한다.

- 타동사보다는 자동사를 쓰고 수동태로 표현한다.
- 상대방에게 문제가 벌어진 경위나 상황을 설명할 여지를 남겨 놓는 화법을 사용.
- 상대를 비난하기보다는 문제가 벌어진 원인과 상황을 파악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게 한다.

도대체 일을 어떻게 했길래 이 모양이야? → 도대체 일이 왜 이렇게 된 거야?

당신네들 우릴 무시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우리 주민에게 한 약속을 그렇게 번번이 어길 수가 있습니까? → 우리 주민에게 약속한 일이 왜 지켜지지 않는지 알 수 없군요. 여러 번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은 무시당하는 기분입니다.

상대의 태도-자세가 아닌 문제되는 행동, 사건에 초점

- 사소한 일에도 분노하는 등 상대의 가벼운 언행에도 필요 이상으로 격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그 이면에 그 사람의 부정적인 태도나 자세가 깔려 있다고 보기 때문
- 지나친 일반화의 오류(확대해석) → 문제를 필요 이상으로 확대-악화 → 상대의 반발만 사는 역효과
- 문제라고 여기는 상대의 행동이나 벌어진 일 자체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렇게 된 상황을 이해한다.

“또 늦었군... 맨날 늦어, 맨날... 게을러 터져가지구...”

“당신 하는 일이 매사 그런 식으로 대충대충이니 내가 화딱지 안 나겠어?”

“그렇게 성의 없이 일하면 다음부터 우리랑 일 못할 거요”

상대방도 문제에 초점 맞추도록 유도

- 자신이 처한 상황, 사정, 실익-관심사-우려 등을 상대방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I-massage”로 전달한다.

- 상대방의 근원적인 우려, 공포, 관심사, 희망 등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 자신에 대해 상대방이 갖고 있는 어떤 과정으로 부정적 태도를 갖게 되었는지 알아보고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
- 상대방의 감정 표현에 발끈하고 맞대응하지 않는다. 그 대신 상대방의 감정, 기분을 인정해주고 배출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준다.
- 상대방이 강한 감정을 갖게 된 원인을 알아본 뒤 오해가 있었다면 풀도록 한다. 필요하다면 별도의 의제로 설정해 함께 해결할 길을 찾는다.

상대의 오해, 편견, 부정적 인식을 바로잡을 기회 만들기

상대의 강한 감정에 대처하는 기법

- 적극적인 듣기, 공감, 인정해주기, 배출하도록 해주기 등
- 그 원인과 형성과정을 이야기하면서 필요할 경우 현안 쟁점과는 별도로 혹은 연계해서 하나의 이슈로 삼고 함께 해결해나가도록 한다.

2. 입장에서 실익으로

입장: 어떤 문제에 대해 당사자가 생각하는 해결책

논리적인 근거, 정당성, 감정적 대응 등으로 꽉 채워져 비집고 들어갈 틈이 거의 없다.

상대방에게 거부감과 반발만 사기 쉽다.

상대방의 입장과 상충돼 협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실익, 관심사: 어떤 문제와 관련해 당사자가 진정 원하는 것, 이루려고 하는 것

당사자의 구체적인 이익이나 현실적 필요, 관심사, 우려, 희망사항 등으로 이뤄져 있으며 배타적이지 않다.

상대방에게 쉽게 이해되고 받아들여지며 마음을 움직이기도 한다.

대체로 협상을 통해 상대방의 실익과 양립 가능하다.

협상은 입장이 아닌 실익을 놓고 하는 것

입장에서 실익으로 전환하면...

- 자신의 메시지를 상대방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자신이 왜 그런 입장을 취하고 그런 요구사항을 내거는지를 상대방에게 이해시킬 수 있게 된다.

- 상대방을 이해하게 된다.
- 서로 마음의 문을 열게 된다.

*“나 전달법(I-message)” : 나를 주어로 자신의 느낌, 바람, 필요, 우려, 관심사, 상황 등을 그대로 전달하는 방법

예: 무슨 기집애가 뭐 한다고 이렇게 밤늦도록 싸돌아다니니? 좀 일찍 일찍 다녀!

네가 늦도록 안 들어오니 엄마는 너한테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긴 게 아닌가 하고 계속 마음을 졸이고 있었구나. 무슨 일로 이렇게 늦었니?

*상대방을 입장에서 실익으로 전환시키는 질문법

- “왜?”

무엇 때문에 000을 요구하시는 건가요?

그 문제가 000씨께 왜 그렇게 중요한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원하는 대로 왜 해주실 수가 없는지 알고 싶군요.

-주의사항: ‘왜?’라고 물을 때 자칫하면 따지는 것처럼 들릴 수 있으니 주의해야.

왜보다는 ‘무엇을 위해’ ‘무슨 이유로’의 형태로 묻는 것이 좋다.

3. 상생적인 대안 만들기

분쟁, 갈등은 당사자들이 받아들일 만한 해결책이 만들어져야만 해결된다.

당사자들이 추구하는 실익에 기반을 두고 사람이 아닌 문제에 초점을 맞춰 함께 상생적, 호혜적인 대안을 만들어나간다.

탄력적 통합적 대안 창출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새로운 통합형(절충형) 대안을 창조하는 데서 해결의 길이 열리는 경우가 많다.

문제해결의 틀, 각도 바꾸기

한정된 파이를 가지고 싸우기보다는 파이 자체를 키움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주어진 틀 내에서는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찾기가 힘들 수도 있다. 문제가 발생한 구조 자체를 바꿈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4. 객관적인 기준 적용

문제해결을 위한 기준-원칙-절차 마련

- 쟁점 자체에 대한 해결책을 찾으려 하기보다는 우선 어떤 기준이나 원칙 하에 또는 어떤 절차로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부터 협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경우가 많다.

객관적인 기준 채택

문제해결의 관점이나 방식 근거 등에서 당사자간 입장이 크게 다를 때 먼저 어떤 기준을 적용해 문제를 풀 것인지 협의하도록 한다.

이미 만들어진 선례나 그 분야의 관례, 외부 전문기관 등에서 만들어놓은 연구결과나 데이터 등을 확인해 적용한다.

가용한 기존 기준이 없을 경우 당사자들이 함께 만들거나 양측이 동의하는 중립적인 기관 등에 의뢰한다.

공정한 절차 만들기

문제해결의 원칙부터 합의

※적극적 청취 기술

적극적인 듣기의 목적, 기능

- 말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지금 자신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주의 깊게 듣고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된다.

- 말하는 사람의 본뜻이 듣는 사람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 갈등-분쟁과정에 쌓인 감정을 분출함으로써 심리적으로 이완되고 내적인 긴장을 해소하게 된다.
- 당사자는 자기 이야기를 하는 동안 스스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돌이켜보는 기회를 갖게 된다.

적극적인 듣기 요령

- 말하는 사람에게 시선을 집중하고 상체도 약간 그쪽으로 기울인다.
- 이따금 눈을 서로 마주친다.
- 말하는 이의 이야기에 대한 관심 및 이해의 표시로 고개를 자주 끄덕인다.
- 이야기 내용에 따라 적절한 표정을 지어 보이며 공감을 표한다.
- 불분명한 대목에 대해 효과적인 질문을 함으로써 말하는 이의 메시지가 정확히 전달·이해되도록 한다.
- 따지는 식의 '닫힌 질문'이 아니라 '열린 질문'을 통해 당사자의 입장과 감정 및 쟁점에 대해 보다 정확하고 풍부한 정보를 얻는다.

당신이 보고 있는 것 (말없이 대화에 참여하는 기술)	당신이 듣는 것 (말로써 반응하는 기술)
눈 접촉: 상대방에 초점 맞추기	말로 용기를 주기, 예: “응, 응” “좀더 상세히 설명해 보렴.” “맞아!” 등
상대방에게 몸을 기울이거나 고개를 끄덕이기	상대방이 말하는 것에 동의하기
잠자코 앉아 있기, 물건을 가지고 만지작거리거나 놀지 않기	상대방이 말한 것을 다시 말해보기
말하는 데 끼어들지 않기.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완전히 끝마치게 하기	상대방이 느끼는 것을 반성해 보기
관심을 가지고 침묵하기 : 상대방이 응답할 시간을 주기	열려진 질문을 던지기. 예: “그래 무슨 일이 일어났지?” “너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 들었니?” 등

